연구보고 R499 / 2005. 1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5-13-01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도농간 소득격차 완화방안 (2차 연도)

경제활동기회의 농촌지역간 차이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 시 현	연 구	위	원
	성 주 인	전 문	연 구	원
	신 은 정	연 .	구	원
한국노동연구원	이 승 렬	부 연	구 위	원
호남대학교	김 상 호	부 .	교	수
단국대학교	허 승 욱	부 .	교	수
전남대학교	나 주 몽	조 .	교	수
밀양대학교	이 하 성	부	117	수

주관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협력연구기관: 한국**노동연구원, 호남대학교**

단국대학교, 전남대학교

밀양대학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5-13-01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도농간 소득격차 완화방안(2차 연도): 경제활동기회의 농촌지역간 차이 분석(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 담당

박 시 현 연구 위 원 연구 총괄, 제1장, 제3장-1,5, 제4장-1,5,6, 제5장, 제6장 집필 성 주 인 전문연구원 이론 검토 및 조사, 제2장, 제5장-1 집필

신 은 정 연 구 원 사례 분석 및 자료 수집·정리, 제5장 집필

이 승 렬 부연구위원 제4장 초안 집필 김 상 호 부 교 수 제3장 초안 집필 허 승 욱 부 교 수 중부권 사례조사 나 주 몽 조 교 수 호남권 사례조사 이 한 성 부 교 수 영남권 사례조사

머 리 말

참여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인 국가균형발전은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통해서 비로소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식 아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는 협동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도농간 소득격차 완화방안」이라는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 완화 문제는 결국 농촌지역의 문제라 할수 있다. 농촌지역의 낮은 소득을 끌어 올림으로써 도농간의 소득격차를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활동기회의 농촌지역간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보고서는 네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관련 이론 검토와 농촌지역 간의 소득 격차 발생 요인 분석, 농촌지역에서 고용활동의 지역간 차 이 분석, 농업 관련 경제활동의 농촌지역간 차이 분석이다. 각 부문별 분석 결과를 종합함으로써 농촌지역간 경제활동기회의 현상과 차이 발생 요인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협동연구사업의 기본 취지에 따라 이 연구에는 한국노동연구원 등 많은 외부 기관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이들연구진에게 감사드린다. 또한 이 연구 추진 과정에서 도움을 준 평창군, 당진군, 순창군, 금산군, 성주군, 함안군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이 연구 결과가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05.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정 섭

y 연구 배경과 목적

이 연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협동연구사업의 일환으로 2004~06년의 3년에 걸쳐 수행 중인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도농간 소득격차 완화방안'연구의 2년차 연구 결과물이다.

1차 연도의 연구에서 「도농간 소득 및 발전 격차의 실태와 원인」이 란 부제목으로 도시근로자가구와 농가의 소득 자료를 이용한 도농간 소득격차 실태와 도농간의 생활환경 격차 실태, 도농간 제조업 및 서 비스업의 격차 실태 분석 등을 행하였다. 1차 연도의 연구를 통해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는 여러 측면에서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1차 연도의 연구에서 도시와 농촌간의 비교 분석을 다뤘고, 도농간의 소득격차는 농촌 측의 소득 증대를 통해 달성될 수 있기에, 2차 연도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활동기회의 농촌지역간 차이 분석」을 부제로 설정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농촌지역간에 경제활동기회가 어떻게 차이가 나고, 그 차이가 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이다.

연구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먼저 농촌지역 개발전략 및 격차 발생에 관한 이론과 해외 정책 동향을 파악하여 우리나라 정책 수립에 참고가 될 만한 시사점과 이 연구를 진행하는 관점을 얻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경제활동기회의 농촌지역간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고 그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피기 위해, 농촌지역간의 소득격차 발

생 요인 분석, 농촌지역에서 고용활동의 지역간 차이 분석을 행하고, 마지막으로 농업 관련 경제활동이 농촌지역간에 어떻게 차이가 나는 가를 살펴보았다.

y 협동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협동연구사업의 기본 취지에 부응하여 이연구에는 많은 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연구 총괄 아래 농촌지역간의 소득 격차 발생 요인 분석은 호남대학교에서, 농촌지역 고용기회의 지역간 차이 분석은 한국노동연구원이,그리고 농업 관련 경제활동기회 조사에서는 단국대학교, 전남대학교, 밀양대학교 교수진이 참여하였다.

여러 기관이 연구에 참여하여 발생할 수 있는 논지의 일관성과 연구 결과의 정합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 설계에서 분석 결과의 해석에 이르기까지 연구 참여기관 사이에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사례지역에 대해서는 공동 조사가 행해졌다. 또한 최종 보고서는 주관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 참여진이 대표 집필하였다.

y 이론과 접근 방법

경제활동의 지역간 차이(보통 지역간 발전 격차로 표현되지만 이연구에서는 경제활동의 지역간 차이라는 용어를 사용)를 규명하는 것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과 정책의 오랜 숙제이기도 하다. 가장대표적인 접근방법이 외생적인 발전론과 내생적 발전론이다. 최근에는 외생적인 요인으로 취급되었던 기술 개발 능력을 내생적인 요인으로 취급하는 영역혁신 모델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방법들은 각기 나름대로의 사례 연구를 통해 이론의 적합성을 검증하고 있지만 현실 세계에서 지역의 경제활동기회는 외생적 요인과 내생적 요인이 혼합되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유럽연합지역의 농촌지역경제활동 여건에 대한 종합적 비교연구 차원에서 진행된 '유럽연합 농촌지역에서 농업과 고용(RUREMPLO)'연구 결과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경제활동기회의 지역간 차이에 관한 선행 연구 등을 검토하여 도출한 이 연구의 문제 의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농촌지역간의경제활동기회 차이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접근 방법은 무엇인지, 둘째 내생적인 관점에서의 농촌지역 발전전략이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적합한지, 세째 혁신이론 등에서 주장하는 농촌발전요소가 우리의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지, 넷째 농업에 바탕을 둔 경제활동이 산업지구라든가 클러스터 등으로 발전하여 농촌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등이다. 이와 같은 문제 의식 아래 진행된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y 시·군 단위 지역간 소득 격차 요인

제3장에서는 이용 가능한 시·군 자료를 활용하여 시·군 지역에서 소득 격차가 어떠한 요인에 의해 발생되는가를 실증적으로 밝혀 보고 자 하였다. 이 부분은 경제활동기회의 농촌지역간 차이를 거시적 측면 에서 조망해 본다는 의미가 있다.

추정 결과, 먼저 지역경제이론에서 전통적으로 강조되어 온 집적경제(제조업 고용자 수와 사업체 수, 주변 지역 경제력) 요인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역 소득에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탄력성 추정치에서는 주변 경제력과의 거리가 가장

높은 값을 보여 주고 있었으며 시·군의 성장 요인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성장기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제조업 고용자 수의 증가와 주변 경제력으로 나타났다. 정주환경여건 변수를 추가하여 추정한 결과에서는 정주환경과 지역소득과는 유의할 만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않았다. 산업구조 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농업 비중은음으로 유의하게 추정되어, 농업 비중 증가가 지역소득의 증가에 부의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결과를 해석하면 농촌지역간의 경제활동 차이는 지역 내에 내재하는 문제보다는 외생적으로 주어진 도시와의 거리, 제조업의 발달정도, 농업 비중 등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v 고용기회의 지역간 차이

제4장에서는 농촌지역에서의 고용기회가 지역별로 어떻게 다르고 그 차이가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노동부의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지역별 일자리 창출과 소멸을 추계한 결과에 의하면 지역별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구미시, 평택시, 아산시, 거제시, 이천시, 울주군처럼 최 근 3년간 연 평균 5,000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는 농촌 지역 (통합시 포함)이 있는가 하면, 울릉군, 양구군, 영양군, 옹진군, 장수군, 화천군, 진도군 등과 같이 200명 이하의 고용이 창출되는 농촌 지역도 있었다. 일자리 창출이 많은 지역이 일자리 소멸도 많아 이들 지역에 서 경제활동이 역동적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농촌지역의 고용 창출 요인 분석 모형에서는 인구가 일을 끌어오는 효과보다 일이 인구를 불러오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결과가 도 출되어 고용기회의 확보가 농촌지역개발의 중요한 전제조건이라는 사 실을 알려 주었다. 또한 인근 지역의 상황(인구를 대리변수로 한 경우)이 고용기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제2장에서 살펴본 외생적인 요인에 의해 지역의 고용이 영향 받은 것과 맥을 같이하고 있었다.

사례 조사에서는 농촌지역의 기업 입지 요인이 지역 밖에서의 압출 (push)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 받으며 농촌 지역의 장소적 이점(원료 자원, 기술노동력, 기타 지역자원)을 좇아 입지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소수의 사례 조사결과를 전국에 일반화시키기는 어렵겠지만, 농촌지역에 기업이 입지하는 데는, 도시 근교라는 입지특성이나, 저임금, 저렴한 지가 같은 저비용 요인이 주되게 작용하고 있음을 짐작케 해주었다.

y 농업 관련 경제활동의 지역간 차이

제5장에서는 농업 관련 경제활동의 지역간 차이가 내생적 요인에 의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밝혀 보고자 하였다. 사례지역은 전국 군지역 중 농업활동이 왕성하면서 나름대로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 평창군, 당진군, 순창군, 해남군, 함안군, 성주군을 선정하였다.

사례 지역 연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농업부문 종사자 수가 감소하고 있었다. 농업분야의 고용감소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주력 산업이 지역 내에 발달하느냐에 따라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인구 증감 정도가 결정된다고 하겠다. 농촌지역에서의 고용 창출은 외생적인 요인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는 제3장과 제4장의 연구 결과는 제5장에서의 사례 연구를 통해서도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농업 관련 경제활동은 지역적으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그것은 지역의 입지적 요인, 지역농업 특성, 농

업외 산업의 발달정도, 농업과 결합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만한 자연 자원 소유 여부 등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농업 관련 경제활동이 지역의 신규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정도는 극 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례 지역 모두에서 농업 관련 경제활동 주체들이 지역 내·외적으로 나름의 네트워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활동에 비해서 성과는 미미하였다.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모임들은 농업관련 경제활동 업체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반면, 사업체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진 지역 밖 관련 업체, 소비자 등과의 네트워크가 실질적인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 관련 경제활동이 지역 내에서 산업간 연관관계를 형성하여 농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다만 원래부터 지역에 존재하던 산업을 바탕으로 최근 수요에 맞추어 지역 내산업을 재조직화하거나, 지역 내 자원이나 노동력을 활용하여 새로운산업을 창출해 가려는 노력은 향후 농업 관련 경제활동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전반적으로 농업관련 경제활동의 지역간 차이가 나타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지역의 경제력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농업관련 경제 활동은 지역의 경제활동을 보완하는 일종의 틈새 시장이라 할 수 있 었다.

y 연구의 시사점

각 장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농촌지역의 성장이 지역 밖에서 이루어지는 외생적 요인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는 외생적 발전론이 우리나라의 경우 매우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농촌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한 농업 농촌 내부의 노력이 한계가 있다는 점이기도 하다. 결국 농촌지역의 경제 성장은 국토 발전 정책의 큰 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고 하겠다.

두 번째, 대부분의 지역에서 혁신 주체의 형성이 미약하고 이들의 노력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정도에 이르고 있지 않다는 분석 결과 에서,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 정도에 따라 지역 경쟁력이 좌우된 다는 선진국의 경험이 우리나라에서는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세 번째 농업 관련 경제활동을 통한 클러스터 형성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사실로부터 정부의 클러스터 정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 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클러스터의 형성 가능성은 정책적으로 만들 어지는 시스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살 아남는 경제활동이 지역 내에 존재하고, 그것이 산업으로서 기능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음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내생적 발전론을 순수하게 자립적인 지역발전모델로 이 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우리나라처럼 1일 생활권으로 전국이 통합되고 중앙의 힘이 강력한 국가에서의 지역개발 전략은 외생적인 발전 전략과 내생적인 발전 전략을 적절하게 혼합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y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연구의 한계로서 여러 기관이 참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연구 결과 의 정합성 문제, 계량모델 구축과정에서의 자료 제약 및 그로 인한 설 명력의 제한 등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한계와는 별도로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군별 고용보험데이터의 유용성, 지역 성장 회귀식이 갖는 의의 등을 밝혔다.

또한 제3차 연도에서 수행해야할 과제가 농촌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전략과 정책 방안 제시에 있다는 것을 아울러 밝혔다.

ABSTRACT

A Study on the Disparities in Economic Opportunities among various Rural Areas

This study is the second year report of the three-year collaborative research entitled, "A study on mitigation of income gap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through th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strategies". This study is organized by the Korean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The ultimate purpose of the study is to search an policy alternatives for reducing the income gap between rural and urban areas.

This present study analyses on current situations and main reasons of economic disparities in rural areas with focusing on the issue of economic opportunities, such as employment, and figures out possible strategies to revitalize a declining rural economy.

The study is consisting of four parts,

- 1) A theoretical review of regional development theories and empirical studies on rural development cases in the developed countries.
- 2) A quantitative analysis of current economic situations and the reasons of income gaps between rural areas,
- 3) A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reasons of employment disparities in rural areas, and case studies on location decision of business enterprises in a rural area,
- 4) A case study on the reasons of disparities in economic opportunities among rural areas. Six different areas were compared.

The results of the above analyse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rural development is basically facilitated by exogenous advantages. As the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on factors determining regional income at each rural city or county level, the exogenous variables turned out to influence rural development significantly. The variables include accessibility to big cities, GDP proportion of manufacturing industry, and so on. There is some evidence of self-revitalization that tries to identify or utilizes endogenous resources. However, the self-effort for regional revitalization was not enough to create new employment opportunities or strengthen the local industrial infrastructure. Instead, the self-effort helps the unemployed support themselves, this would relieves the local economy from continuous declining.

Secondly, the lessons from the empirical case studies in developed countries are partially relevant to Korean rural context. For example, regional competitiveness comes from innovation capacities in region. However, most of the rural areas have very limited number of innovative actors so that local innovative actors' efforts are not enough to promote regional competitiveness.

Thirdly, in addition, most of the economic activities of farm households are not diversified, and industrial linkage effects among economic actors or institutes at the local level are not clearly shown. However, there are a few areas where business network have been closely connected within a place. The local employment has been increased with local organizations' public supports such as the chilly-source processing industry in Suchan-gun. It is not certain that forward and backward linkage industry accumulation occurs naturally within the place so that the linkage would evolve into the industrial cluster

In conclusion, the significance of indigenous resources in substantiating spatial development in rural areas should not be ignored. The indigenous resources are necessary, but not sufficient to accelerate rural development. The indigenous resources are more important, when the rural area tries to induce various exogenous resources for the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Therefore, rural

development plan should be reflected of the rural reality by means of a comprehensive perspective. Policy-makers need to consider direct spill-over effects of exogenous development centers into targeted rural areas at first hand. They also need to promote niche-markets capitalizing place-specific resources that are endemic to each rural area on a complementary basis.

Researchers: Shi-Hyun Park, Joo-in Seong, Eun-Jung Shin

Seung-Yeol Yee, Sang-Ho Kim, Seung-Wook Heo,

Ju-Mong Na, Han-Sung Lee

E-mail address: shpark@krei.re.kr

차 례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 배경과 목적1
2. 연구 내용4
3. 연구 방법9
제2장 농촌발전이론 검토와 연구의 쟁점
1. 지역발전 이론의 검토13
2. 선진국의 농촌발전전략 논의와 추진 동향21
3. 연구의 관점과 문제제기40
제3장 지역간 소득 격차 발생요인 분석
1. 분석의 목적 및 의의50
2. 설명변수 선정을 위한 이론 검토52
3. 회귀방정식 추정59
4. 지역 소득 성장 요인76
5. 분석 결과 종합81
제4장 고용기회의 농촌지역간 차이 분석
1. 분석의 목적 및 의의87
2. 농촌지역간 고용기회의 차이89
3. 지역별 고용기회의 결정112

4. 고용 창출 사례 연구118
5. 분석 결과의 종합131
제5장 농업 관련 경제활동 기회의 농촌지역간 차이 분석
1. 분석의 개요133
2. 분석 내용139
3. 분석 결과의 종합179
제6장 요약 및 결론
1. 주요 연구 결과 요약185
2. 종합 및 시사점191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194
부록 1. 지역 소득 결정요인에 관한 회귀분석 자료197
부록 2. 농촌 노동시장 특성에 관한 지역별 비교200
부록 3. 유럽의 RUREMPLO 프로젝트 개요219
부록 4. 경제활동 기회의 농촌지역간 차이에 관한 사례 연구
우편조사표234
부록 5. 경제활동 기회의 농촌지역간 차이에 관한 사례 연구
심층면접 조사표243
참고 문헌254

표 차 례

제2장	
班 2- 1.	주요 지역발전이론 및 그에 따른 농촌개발전략 19
班 2-2.	RUREMPLO 사업의 지역발전에 관한
	SWOT 분석을 위한 요인들36
제3장	
丑 3- 1.	지역소득 변동 설명변수의
	이론적 배경, 구성 및 출처62
班 3-2.	한국 시ㆍ군 소득 결정요인의 회귀분석68
丑 3-3.	한국 통합시ㆍ군 소득 결정요인의 회귀분석71
丑 3-4.	한국 통합시・군 기타 소득 결정요인의 회귀분석·74
丑 3-5.	한국 일반시, 통합시, 군 지역 성장요인의
	회귀분석78
丑 3-6.	모형별 탄력성 추정치의 종합82
제4장	
丑 4- 1.	지역별 사업체 종사자수89
班 4- 2.	지역별·사업체규모별 종사자수 구성90
丑 4-3.	지역별·업종별 종사자수 구성 ······91
班 4- 4.	지역별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추이, 2001-0495
丑 4- 5.	지역별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변화율 추이, 2001-04
	95
丑 4-6.	지역별·사업체규모별 피보험자 구성, 2004 ······· 96

班 4- 7.	지역별·업종별 피보험자 구성, 2004 ·····97
丑 4-8.	최근 4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별 지역분류99
丑 4-9.	고용보험 피보험자
	제조업 비중별 지역 분류100
班 4-10.	지역별 일자리 창출・소멸・순고용
	변화 추이, 2002-04101
班 4-11.	최근 3년간 업종별 평균 일자리 창출, 2002-04 102
班 4-12.	최근 3년간 업종별 평균 일자리 소멸, 2002-04 103
班 4-13.	최근 3년간 업종별 평균 순고용 변화, 2002-04 104
班 4-14.	최근 3년 평균 일자리 창출 수에 따른 지역분류·106
丑 4-15.	최근 3년 평균 일자리 소멸 수에 따른 지역분류 · 106
丑 4-16.	최근 3년 평균 순고용 변화에 따른 지역분류 107
亞 4-17.	최근 3년 평균 순고용 변화율별 지역분류110
丑 4-18.	인구와 고용의 상호영향성 분석결과, 2003115
丑 4-19.	함안군 농공단지 고용현황, 2005124
丑 4-20.	최근 3년 「군북농공단지」와
	「산인농공단지』현황125
班 4-21.	농공단지에 사람이 모자라는 이유127
丑 4-22.	농공단지 근로자의 과거 거주지128
丑 4-23.	농공단지 근로자의 현재 거주지128
제5장	
丑 5- 1.	사례 지역의 농업 관련 지표 비교135
班 5- 2.	지역경제 현황 조사 내용137
班 5-3.	농업 관련 경제활동 조사내용(일반 및 심층 조사) … 138

丑 5- 4.	사례 조사 표본의 지역별 구성139
丑 5- 5.	사례 조사 표본의 사업체 유형별 구성139
丑 5-6.	사례 지역 총인구의 변화140
丑 5-7.	사례 지역 인구연령구조의 변화141
丑 5-8.	사례 지역의 주·야간 인구 비교 ······142
丑 5- 9.	사례 지역 산업별 종사자 수의 변화143
丑 5-10.	사례 지역 업종별 고용 현황147
丑 5-11.	사업체 종사자 수와 고용보험 가입자 수 비교 150
丑 5-12.	농업 관련 경제활동 주체의 특성151
丑 5-13.	지역별·사업체유형 구성비 ······152
班 5-14.	지역별 사업체의 주요 경제활동153
丑 5-15.	다원적 경제활동주체의
	지역별·사업체 형태별 구성비155
丑 5-16.	다원적 경제활동업체의 최근 3년간 매출 실적 156
班 5-17.	다원적 경제활동업체의 매출액 향후 전망156
丑 5-18.	다원적 경제활동업체의 특징156
丑 5-19.	지역별・사업체 유형별
	최근 3년간 매출액 증감여부157
班 5-20.	사업체 유형별 매출증가요인158
班 5-21.	최근 3년간 매출이 증가한 업체의 특징159
班 5-22.	지역별・사업체 유형별 향후 직원 채용 전망 159
班 5-23.	지역별ㆍ사업체 유형별 향후 매출액 전망160
班 5-24.	지역별ㆍ사업체 유형별 신규사업분야162
班 5-25.	지역별ㆍ사업체 유형별 입지요인163
班 5-26.	원료 구입 및 직원 채용시
	지역 내 자원 활용 비중164
班 5-27.	생산제품의 판매처165

班 5-28.	사업체 대표의 혁신수용태세171
班 5-29.	사업체 유형별 최근 3년간 혁신 노력 172
班 5-30.	지역별・사업체 유형별
	홈페이지, 특허출원, 직거래 여부173
班 5-31.	홈페이지, 특허출원, 직거래 여부와
	최근 매출 실적174
班 5-32.	홈페이지 보유업체의 직거래 판매 여부174
班 5-33.	지역별·사업체 유형별 모임 활동 정도175
班 5-34.	지역별·사업체 유형별 모임 지역176
班 5-35.	매출증가업체의 정보원 177
丑 5-36.	지역별ㆍ사업체 유형별 업체들가 공동의 활동 178

그 림 차 례

제 1	장												
	그림	1-1.	연구의	1 구	성								5
-	그림	1-2.	연구	부문	-별 7	접근 ㅂ	방법 …	•••••	•••••	•••••		•••••	· 10
제3	}장												
-	그림	3-1.	추정	단계	및	모형				•••••			· 66
제4	·장												
	그림	4-1.	순일지	라리	창출	수에	따른	지역	구분				108
	그림	4-2.	일자리] 칭	-출괴	- 일자	리 소	멸의	상관.	도			109
	그림	4-3.	순일지	라리	창출	률에	따른	지역	구분				111
	그림	4-4.	함안균	- フ	업체	변화	, 199	4-2004	1	•••••	•••••		119
제5	장												
	그림	5-1.	지역	내 ;	거래	관계,	A타	입					166
	그림	5-2.	지역	내 :	거래	관계,	B타역	일					167
	그림	5-3.	지역	내 :	거래	관계,	C타약	일					168
	그림	5-4.	지역	내 ;	거래	관계,	D타	입					170
	그리	5-5	과려	기괴	-이 :	결제화	·도 기	여도					177

제 **3** 장

연구의 개요

이 장에서는 보고서의 전반적인 틀을 기술한다. 경제·인문사회연 구회의 협동연구사업으로 채택된 배경과 1차 연도에서 수행한 연구 내용 등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독자들이 이 보고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 장에서 행하고자 하는 연구 내용과 전체 연구에서 차지하 는 위치 등을 언급한다.

1. 연구 배경과 목적

1.1. 연구 배경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래 국가균형발전이 국가의 중요 정책 목표로 대두되면서 도농간 격차 해소 방안이 정책의 중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과 지방, 지역과 지역간의 균형발전뿐만 아니라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통해서 비로소 완성될 수 있기 때 문이다.

이러한 인식 아래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에서는 협동연구사업의 일

환으로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도농간 소득격차 완화방안」이라는 과제를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개년 동안에 추진하기로 하였다.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도농간 소득격차 완화방안」연구의 최종 목적은 제목그대로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는 농촌이 도시에 비해 소득 수준이 낮기때문에 발생한다. 따라서 이 과제의 실질적인 연구 목적은 농촌지역에서의 소득 증대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농촌지역의 소득 증대를 통해 도농간의 소득 격차가 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1차 연도 연구에서는 「도농간 소득 및 발전 격차의 실태와 원인 분석」이란 부제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시·군의 소득 관련 통계 미비로 인해 도시지역과 농촌지역간 소득을 직접비교할 수 없어, 도시근로자가구와 농가의 소득 비교를 통해 간접적이나마 도농간 소득 격차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둘째로, 인구 및 생활환경 자료를 활용한 도농간의 생활환경 격차 실태 분석과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였다. 셋째로, 도시와 농촌의 경제활동 기회 격차를 도농간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격차 실태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통계자료만을 통해서 파악할 수 없는 도농간의 발전 격차 실 태 및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민 조사표에 의한 정주생활 여건 인 식의 지역간 비교 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비록 소수이지만 사례 지 역 조사를 통하여 상공업의 발전실태 및 요인 분석과 농업 관련 산업 발달의 지역 차이 및 요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1차 연 도 연구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1.2. 연구 목적

이 연구는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도농간 소득격차 완화방안」의 2차 연도 연구에 해당한다. 여기에서는 연구의 초점을 경제활동기회의 농 촌지역간 차이 분석에 한정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1차 연도의 연구에 서 도시와 농촌 간의 비교 분석은 어느 정도 되었다는 판단 아래, 2차 연도의 연구에서는 농촌 쪽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연구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논의를 선명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2차 연도 연구에서는 「경제활동기회의 농촌지역간 차이 분석」이란 제목을 부제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부제에 따라 2차 연도 연구에서는 농촌지역간 경제활동기회의 차이가 발생하는 현상 및 그 요인을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농촌지역 개발전략 및 격차 발생에 관한 이론 및 해외 정책 동향을 파악하여 우리나라 정책 수립에 참고가 될 만한 시사점과 이 연구를 진행하는 관점을 얻고자 한다. 다음으로 경제활동 기회가 농촌지역간에 어떻게 차이가 나타나고 그 요인이 무엇인지를 3가지 측면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첫 째는 계량적인 방법론에 기초하여 농촌지역간의 소득격차 발생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두 번째는 농촌지역에서 고용활동의 지역간 차이가 나는 현상과 요인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농업 관련 경제활동이 농촌지역간에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를 살핀다.

세부 항목별 연구는 일견 별도의 연구 주제처럼 보인다. 그러나 각항목별 결과들을 종합함으로써 농촌지역간의 경제활동기회가 왜 차이가 나는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그리고 중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2. 연구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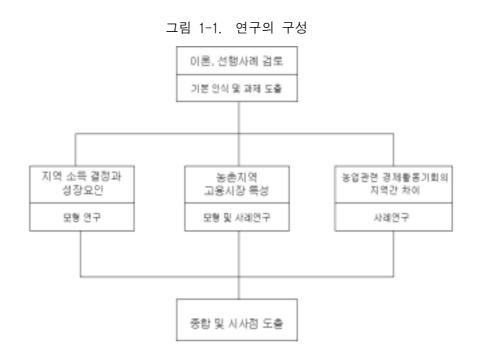
이 연구는 크게 5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는 이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주요 쟁점을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이론과 선진 국의 사례를 문헌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는 각 주제별 실증분석을 행한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전체 연구 결과를 종합하며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는 부분이다.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각 연구 부문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방법론은 무엇인지 간략히 밝혀두고자 한다.1

2.1. 농촌발전이론 검토와 연구의 쟁점

여기에서는 주로 지역의 성장 및 발전에 관한 이론과 정책을 소개한다. 특히 내생적 발전론의 배경이 되는 제3이탈리아의 특징과 유럽 및 일본의 논의 동향과 주요 관점을 살펴본다. 또한 외생적 관점과 내생적 관점을 결합한 혼합적 접근법(네트워크 접근법)을 통해 유럽의 농촌지역 고용 창출에 관해 사례 조사를 한 'EU 농촌지역에서 농업과고용(RUREMPLO)'연구 프로젝트의 결과를 살펴본다. 이러한 문헌검토 결과에 기초하여 이 연구에서 다루어야 할 주요 쟁점을 정리한다.

¹ 구체적인 분석 방법론이나 활용할 자료, 분석 항목 등에 대해서는 각 장의 서두에서 자세히 서술하기로 한다.



2.2. 지역 소득 격차 발생 요인 분석

제3장에서는 이용 가능한 시·군 자료를 활용하여 시·군 지역에서 소득 격차가 어떠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우선, 관련 이론에 기초하여 지역소득 결정에 관련되는 변수들을 선정한 후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이상의 변수들이 소득 결정에 미치는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주요 설명변수로는 집적경제, 각종 기반시설, 산업구조 등과 관련되는 2차 자료를 활용하게 된다.

이러한 작업에서는 농촌의 어메니티(amenity) 자원이나 장소성, 문화, 협력, 혁신활동 등 지표화하기 어려운 변수들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을 통해 2장의 서두에서 논의할 집적경제 모형 등 전통적 지역발전모형에서 설명하는 바가 여전히 유효하게 나타나고 있는지 여부를 실증적으로 파악한다는 점에서의미를 가진다 하겠다.

이 부분은 1년차 연구에서 수행하였지만 그 결과가 미흡한 소득격차 발생요인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는 의미가 있다.2 경제활동기회의 농촌지역간 차이를 거시적 측면에서 조망해본다는 의미도 있다. 이 부분의 분석 결과와 미시적인 관점에서의 농촌지역의 경제활동요인 분석을 종합함으로써 농촌지역간의 경제활동기회 격차 발생 요인을 더욱 실제적인 모습으로 그려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이 부문은 우리나라에서 지역간 소득격차 발생요인을 시·군 단위 통계를 사용해 실증 분석한 최초의 시도라는 의미도 아울러 가 지고 있다 할 것이다.

2.3. 농촌의 고용시장 특성과 농촌 소재 기업의 입지 요인

제4장에서는 농촌지역에서의 고용기회가 지역별로 어떻게 다르고 그 차이가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나타나는지를 살펴본다.

나아가 농촌 입지 기업에 대한 사례 조사를 통해 농촌 경제활동의 장점이란 여전히 저임금이나 싼 지가 등과 같은 저비용 요인에 머물 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농촌 고유의 장소적 매력이 작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밝히고자 한다. 즉 지역 자원의 활용, 지역 내 관련 기업과의

² 1차 연도에는 시·군 지역 GRDP자료가 있는 경기, 강원, 경북, 경남 4개 도의 시·군자료를 바탕으로 GRDP와 인구, 농림생산액비, 총사업체수, 광 공업부가가치, 지방예산액, 전업농수 등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계, 지역 노동력의 활용 등의 요인이 기업의 입지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함으로써 앞서 내생적 발전론과 관련하여 살펴본 선진국의 경험이 우리의 경우 어떻게 나타나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제4장의 연구 결과는 제2차 연도의 연구 주제인 경제활동기회의 농촌지역간 차이를 이해하는 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이 과제의 궁극적인 지향점인 도농간 소득격차 완화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판단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결국 도시와 농촌의소득 격차 완화는 고용기회의 격차 완화이기 때문이다.

2.4. 농업 관련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본 내생적 농촌발전 가능성

제5장에서는 사례 지역을 선정하여 농업 관련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내생적 발전론 관련 논의에서 제시되는 주요 명제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사례 연구 대상으로 농업 관련 경제활동에 주목코자 하는 것은, 그 밖의 산업기반이 취약한 농촌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내생적 농촌 발전론의 골격이 다듬어지는 데 주요 실증적 기반을 제공했던 '제3이탈리아(Third Italy)' 등의 성공 사례가 바로 농업 부문의 기여를 바탕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나라 농촌의 경우 그러한 선진 사례와는 현격한 거리가 있으리라 예상하지만, 내생적인 농촌 발전 전략의 가능성을 타진한다는 면에서 이러한 작업이 의미가 있으리라 판단한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농업 관련 사업체나 조직들이 농촌지역에서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데 어떠한 장소적 매력이 작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메니티라든가 전통 지식과 기술, 나아가 몇몇 서구 사례에서 논의되는

관계자산 등이 강점으로 작용하는지 여부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관련 주체들의 혁신적 역량이나 혁신 창출 노력, 지방정부 등 공 공 부문의 역할, 관련 산업의 전후방 연관 관계, 그리고 전문화된 산 업지구나 클러스터로의 발전 가능성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2.5. 분석 결과의 종합 및 결론

제6장에서는 제2장부터 제5장까지의 논의 및 분석 결과를 종합하고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는 제2장에서 제시한 몇 가지의 물음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종합할 것이다. 즉, 우리나라 농촌지역 경제활동기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러한 요인을 설명하는 데에 적실한 이론은 무엇인지,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혁신이론을 통한 농촌지역발전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지, 있다면 그 조건이 무엇인지, 농업 관련 경제활동을 통하여 지 역 내 산업연관이 형성되고 클러스터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등 이다. 제6장에서 제시한 정책 시사점은 이 연구의 마지막 연도인 제3 차 연도에서 수행하게 될 정책 대안 마련의 기본 바탕을 형성해 줄 것 이다.

3. 연구 방법

3.1. 세 부분 실증 연구의 관계

이 연구에서 행할 세 부문의 실증연구간 관계는 <그림 1-2>의 모식도처럼 나타낼 수 있다. 먼저 지역소득 격차 발생 요인과 농촌지역간고용기회 차이는 전국적인 통계자료에 기초하고 있으며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문제를 바라보는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다고 하겠다. 다만이용 자료와 분석 내용에서 지역소득 격차 발생 요인이 농촌지역간고용기회 차이 분석보다 넓은 범위를 형성하고 있다.

지역소득 격차 발생 요인은 내생적인 변수가 포함되어 있지만 모형의 기본은 지역성장 회귀식을 기반으로 하는 외생적 성장 모형에 기초하고 있다. 한편 농업 관련 경제활동기회의 지역간 차이는 6개 사례지역의 분석 결과를 통해서 일반화를 시도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분석의 틀은 주로 내생적 발전론에 기초하고 있다. 포괄하는 연구 범위나 이용 자료 면에서는 폭이 좁지만 구체적인 사항을 심층적으로 파고든다는 점에서 미시적인 접근 방법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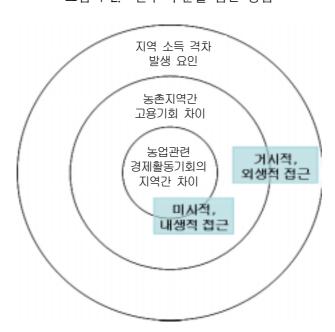


그림 1-2. 연구 부문별 접근 방법

3.2. 주요 개념 정리

3.2.1. 경제활동 기회

이 연구에서는 1차 연도의 연구 경험에 비추어 경제활동 기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1차 연도에서는 도농간 소득 및 발전 격차라 는 용어를 부제로 사용하였는데, 소득이란 용어는 논의의 초점은 선명 하게 해 주지만 이용가능한 자료의 부족으로 제목에 어울리는 결론 도출이 쉽지 않았다. 또한 발전이라는 용어는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논 의의 범위 및 초점을 흐리게 하여 이 또한 바람직한 결론 도출이 쉽지 않았다. 그래서 제2차 연도에는 소득이라는 용어보다는 애매하지만, 발전이라는 용어보다는 구체적인 경제활동기회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제목에서 오는 연구 수행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논의를 분명하게 하고자하다.

이 연구에서 말한 경제활동기회란 지역의 고용 창출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농업 관련 경제활동기회란 농업을 바탕으로 한 경제활동이 지역의 고용 창출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 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3.2.2. 농촌지역

이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을 1차 연도의 연구에서와 같이 도농복합시와 군으로 설정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 연구에서 일반시를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니다. 분석의 목적 및 내용에 따라 일반시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지역소득의 격차 발생 요인 분석과고용기회의 지역간 차이분석에는 광역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분석대상으로 함으로써 더욱 일반적이고 의미 있는 결과를 얻고자 하였다. 그러나 주로 관심의 초점은 농촌지역간의 비교에 두었으며 그 대상은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3.3. 연구 수행 체계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 연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관 협동 연구로 추진되고 있다. 다양한 분야의 연구기관 등이 참여함으로써 더 욱 종합적인 견지에서 문제를 살피고 대안을 찾아보고자 하는 의도에 서이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관들이 참여한다. 제3장의 지역소득 결정과 성장 요인은 호남대학교가 담당한다. 제4장의 농촌지역 고용기회의 지역간 차이 분석은 한국노동연구원이 담당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의 농업 관련 경제활동기회 조사에서는 단국대학교, 전남대학교, 밀양대학교 연구진에서 대학이 소재하는 인근 지역 조사를 담당한다.

이처럼 여러 기관이 연구에 참여하기 때문에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통일하며, 논리 전개의 일관성과 연구 결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연구 설계에서 분석 결과의 해석 단계에 이르기까지 참여연구기관간의 여러 차례 협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최종 보고서는 책임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 참여진이 대표 집필한다.

2 3

농촌발전이론 검토와 연구의 쟁점

이 연구를 총괄하는 이론적인 문제의식을 분명히 하는 것이 이 장의 주된 목적이다. 이를 위해 지역발전을 설명하는 몇 가지 주요 이론들을 제시하고 그러한 이론들에 근거한 여러 가지 농촌발전전략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이후의 분석을 위한 관점을 제시할 것이다.

1. 지역발전 이론의 검토

1.1. 지역발전에 대한 네 가지 설명 모형

어느 지역의 성장 또는 저발전 정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인 우위를 지니고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에 의해 좌우된다. 지금까지 그러한 능력에서 지역 간에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을 설명하고자 여러 가지 이론적 모형들이 개발되었다. Terluin(2003)은 그러한 모형들을 크게 네 가지로 범주화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① 전통모형(traditional models), ② 집적모형(pure agglomeration models),

③ 지방환경모형(local milieu models), ④ 영역혁신모형(territorial innovation models)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구분에 입각해서 각 모형들에서 강조되는 내용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3

가. 전통모형

전통모형은 신고전파 성장이론(neoclassical growth theory)과 수출기반이론(export base theory)의 양대축으로 구성된다. 우선 신고전파 이론에서는 지역의 소득(Y)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노동(L)과 자본(K)을 꼽는데, 이들 생산요소의 지역간 이동성(interregional mobility)에의해 지역간 발전의 격차가 자동적으로 해소되어 균형 상태에 이른다고 본다. 즉 자본은 저임금 노동이 풍부한 곳으로 이동하고 노동은 그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게 마련인데, 자본에 대한 수익(이자) 및 노동에대한 대가(임금)가 지역간에 동일해지는 순간까지 그러한 흐름이 지속되므로 결국에는 지역간 격차가 해소된다는 것이다.4

수출기반이론에서는 경제활동을 두 가지 부문으로 구분하는데, 타지역 수출을 위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반활동(basic activities)과 지역

³ 이하의 논의는 Terluin(2003)의 내용을 근간으로 정리하였다.

⁴ 이는 지역 내 투자는 한계적 투자효율(marginal efficiency of investment)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설명에 바탕을 두고 있다. 요컨대 자본이득의 최대화를 위하여는 모든 부문과 지역에 있어 투자의 한계적 효율성 또는 자본의 한계수익률(rate of return)을 동일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며, 자본과 노동 등 생산요소는 각각 한계생산성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게 되므로 궁극적으로 지역간 소득 균형화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유한 지역의고임금은 저자본 생산성을 의미하는 반면, 빈곤한 저임금지역은 고자본 소득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 경우 자본의 한계수익률이 동일해지도록 투자가저임금지역에서 이루어져서 결과적으로 지역간 균형이 달성된다는 것이다 (김용웅 1999).

내 소비를 겨냥한 비기반활동(non-basic activities)이 그것이다. 이 이론에서 강조하는 바는, 기반활동 부문의 성장이 지역 내로 자금이 유입되도록 하며, 그에 따라 지역 내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서 비기반 부문의 성장을 이끌어낸다는 것이다. 케인즈 경제학의접근법을 지역발전을 설명하는 데 끌어들인 것이다.

나. 집적모형

집적모형(pure agglomeration models)에서는 자본과 노동이 특정 입지로 집중한 결과 그것이 산출에 영향을 준다는 데 강조점을 둔다. 그러한 집중으로 말미암아 외부효과(external effects)와 규모의 경제(scale economies)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예컨대 집적 모형의 범주에속하는 주요 이론인 성장극이론(growth pole theories)에서는 선도적인발전추진적 기업(propulsive firm)의 역할을 강조하며, 그러한 기업이다른 산업과 기업의 활동을 촉진하는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s)를 발휘한다고 한다. 그래서 이처럼 전후방 파급효과를 통해 관련 산업에영향을 주는 기업을 성장극(growth pole)이라 지칭한다. 그것은 규모의경제를 갖추고서 타 산업 부문과 지역경제에 대한 외부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한편 경제공간상의 기업이나 산업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성장극이론은 이후 성장거점(growth center)이론으로 발전하게 되는데,후자는 지리적 공간상에서 발전의 효과를 낳는 도시의 역할에 더욱주목하게 된다(김형국 1996).

집적모형에서 강조되는 또 다른 대목은, 집적 효과로 인해 지역 격차가 완화되기보다는 오히려 강화된다는 점이다. 즉 어떤 지역이 선도지역으로 올라서서 성장하게 되면, 그 발전의 효과가 주변부로 파급되지 않고 자체적인 우위를 강화시켜가는 과정(self-reinforcing process)

이 진행된다는 것이다. 이를 누적적 인과(cumulative causation) 과정이라 하는데, 지역 격차가 생산요소의 지역간 이동의 결과 자동적으로 완화된다는 전통모형의 설명은 이로 말미암아 그 현실 적합성을 잃는다는 것이 집적모형에서 주장하는 바이다.

누적적 인과 과정은 다음과 같은 양상으로 진행된다. 우선 부유한 지역의 경우 경제활동과 인구가 집적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큰 시장이 존재한다. 그로 인해 추가적인 기업 활동이 일어나게 되며, 규모의경제가 강화되고 노동시장 역시 다양화된다. 또 생산이 확대되면서 낙후지역(lagging regions)의 (고급 숙련) 노동력이 부유한 지역으로 유입되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생산자 서비스도 확대된다. 이러한 누적적과정으로 인해 낙후지역에는 더욱 부정적인 영향이 일어난다. 인구와자본이 유출될 뿐만 아니라 기반시설, 교육, 공공시설 등을 일정 수준이상으로 유지시키는 데도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5

다. 지방환경모형

어느 장소에 뿌리내리고 있는 문화와 환경 등의 요소를 중시하는 지방환경모형(local milieu models)에서는 노동과 자본 투입을 통한 산출에 영향을 주는 또다른 요인으로서 그 지방의 숙련노동력과 기술적·조직적 노하우, 사회적·제도적 구조 등을 언급한다. 특히 내생적성장 모형(endogenous growth models)에서는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않

⁵ 이러한 누적적 인과과정으로 인해 저발전 지역이 계속해서 뒤떨어지게 되는 것을 뮈르달(Myrdal)은 역류효과(backwash effect)라 지칭하였다. 분극 (polarization)도 유사한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이와 반대되게 발전지역 이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누적(trickling-down) 또는 파급효과(spread effect)라 이름한다. 이에 대해서는 김형국(1996), 김용웅(1999) 참조.

으면서 중소기업들이 집적된 지역들에 관심을 가지며, 이러한 지역경제는 흔히 기업가정신, 유연적 생산 등의 특징을 가지며, 공동의 활동기구가 존재하여 지역발전에 촉매 역할을 하기도 한다. 산업지구 (industrial districts)가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에 있는 대표적인 이론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지역 내에서 두터운 산업간 연관관계를 나타내는데, 그러한 연관관계는 지방의 역사와 문화에 뿌리를 가지고 있는 관습과 규칙, 규정 등에 의해서도 상당 부분 형성되게 되는 것이다.

노동의 조직에서 나타나는 변화에 대한 이론들도 이러한 지방환경 모형에 포함된다. 즉 노동력이 갖는 기술, 비용, 이동성 및 수량 등의 면에서 지역 간에 존재하는 차이가 기업의 입지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수익을 낳는 데 보다 유리한 조건 을 갖춘 지역들에서 투자가 더 활발히 일어나는 반면 그렇지 못한 지 역은 투자가 위축된다고 한다.

라. 영역혁신모형

영역혁신모형(territorial innovation models)은 앞서 세 가지 모형에서 설명한 자본, 노동, 지방의 환경·문화(local milieu) 이외에도 혁신의 확산이 중요한 성장 동력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이때 혁신은 기업의 제품, 생산 과정, 조직 등에서의 혁신과 산업·지역·국가 차원의 사회적·제도적 혁신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를 갖는다. 새로운 생산방식을 위해서나 새로운 시장으로의 진입을 위해서는 이러한 혁신에 적응하는 기술적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이 이 모형에서 주장하는 바이다. 지역경제의 발전이란 새로운 기술 습득을 통해 자원을 새로운 활동 분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 여하에 달려 있다는 것이 영역 혁신모형의 중요한 시각이기 때문이다.6

1.2. 요약

지금까지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설명하는 이론들에 대해 크게 네가지 모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표 2-1>에서는 이상에서 논의한모형들을 요약하고 있다. 각 모형별로 그 이론적 바탕이 무엇인지, 어떠한 변수들이 지역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지, 실제 그것과 연관되는 농촌개발전략이 어떠한지 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이론적 모형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현실의 지역개발전략과 관련지어 조명해볼 필요가 있겠다. 우선 위의 이론들 중, 노동과 자본 등의 생산요소 이동으로 지역 격차가 완화될 수 있다는 신고전경제학이나 수출산업에 바탕을 둔 기반활동이 지역 성장에 대해 갖는 역할을 설명하고 있는 케인지안 경제학의 접근법은 국가경제의 성장 매커니즘을 지역 발전을 다루는 데 적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국가 발전에 대해 이들 이론이 지니고 있는 가정들이 지역의 성장을 설명하는데도 여전히 적실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이러한 논의에서는 실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지역발전전략 자체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역정책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살펴볼 모형들은, 집적모형, 지방환경모형, 영역혁신모형 등 세 가지를들수 있다.

⁶ 제품주기이론, 혁신환경(innovative milieux), 포터의 국가 경쟁력 이론, 스토퍼의 '돈으로 거래되지 않는 상호의존성(untraded interdependencies)'의 집합체로서의 지역 이론 등이 이러한 영역혁신모형의 범주에 들어간다.

구 분 이론적 바탕 생산함수 농촌개발전략 신고전성장이론 전통모형 Y = f(L, K)수출기반이론 누적인과모형 외생적 전략(각종 하부구조, 집적모형 성장거점이론 Y = f(AE, L, K)서비스 지원, 분공장 설립 등) 신경제지리학 지방환경 내생적 전략(커뮤니티 주도의 내생적 발전론 Y = f(LM, L, K)모형 농촌 개발, 전통 자산 마케팅 등) 영역혁신 지역혁신 관련 이론 Y = f((I, LM, L,내/외생적 접근의 모형 (포터, 스토퍼 등) K) 절충(지역혁신체제 등)

표 2-1. 주요 지역발전이론 및 그에 따른 농촌개발전략

주: 생산함수의 약어는 다음과 같음.

Y: 소득, L: 노동, K: 자본, AE: 집적경제효과, LM: 지역의 제반 환경, I: 혁신 자료: Terluin(2003)을 바탕으로 재구성

여러 가지 지역발전모형들 각각은 나름의 이론적 틀에 입각하여 현실을 진단하고 그에 따라 도출한 정책 처방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를 테면 누적적 인과과정에 의해 지역간 불균형이 완화되지 않고 갈수록심화된다고 집적모형에서 문제를 진단한 결과, 그에 따른 처방으로 저발전지역에 새로운 성장거점을 육성하는 등 '통제된 불균형(controlled imbalance)'에 의해 문제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도가 나타나는 것이다.7한편 전통적인 자본, 노동 등의 생산요소 외에 각 지방이 지니고 있는

⁷ 대표적인 불균형성장론자인 허쉬만(Hirschman)이 이러한 통제된 불균형 전략을 주창하였다(김형국 1996). 프리드만(Friedmann & Douglass 1978) 등이주장한 바 있듯, 일련의 도시체계를 주변지역으로 확대해가는 국가도시화정책(national urbanization policy)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고유의 특성이나 여건 역시 지역발전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주장하는 지방환경모형의 경우에는 그 지방의 전통 자산 등을 발굴해서 이를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전략이 추구되게 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론들 각각이 모두 현실의 지역발전 경험의 소산이며, 개별 이론의 옳고 그름을 판가름할 절대적인 잣대가 아니라는 것이다. 지역정책에서 국가가 갖는 역할이라든가 기술 수준, 근대화 및 산업화 수준 등에 따라 대두되는 지역 문제의 양상이 국가마다달리 나타날 것이며, 그에 따라 지역정책의 초점도 달라진다. 다만 지역정책의 추진을 누가 어떤 식으로 주도할 것이며, 농촌의 지역개발을 어떻게 촉진할 것인지 등의 과제를 놓고 그 주안점에 따라 ① 외생적발전전략(exogenous development approach)과 ② 내생적 발전전략 (endogenous development approach) 등으로 지역정책을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Lowe et al. 1995; Terluin 2003). 그리고 이들 세 가지 접근법은 각각 앞서 살펴본 집적모형, 지방환경모형, 영역혁신모형에 상응하는 지역발전전략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실제 농촌 지역발전을 놓고 이러한 접근법들이 어떠한 양상으로 변모해왔으며, 그 각각에서 주로 제시하고 있는 정책 처방은 어떠한지 등을 보다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주로 유럽이나 일본 등의 논의를 중심으로 하여 이러한 농촌 발전전략의 전개 양상에 대해 절을 달리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2. 선진국의 농촌발전전략 논의와 추진 동향

2.1. 근대화 패러다임 하의 외생적 농촌발전전략

외생적인 지역발전전략과 관련되는 전통적인 시각에 의하면, 도시화와 산업화는 밀접히 상호 연계되는 과정이며 그래서 자본과 노동이계속해서 도시에 모여들게 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근대화 발전의 과정에서 농촌이 발휘하는 역할이란 도시에 식량을 공급하는 것에지나지 않게 된다. 도시는 지역경제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며 인구와산업활동 등이 집중되는 반면, 농촌은 앞선 기술의 시장 지향적인 농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접근법 하에서는도시 중심의 분극화된 공간들을 국가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균형발전으로 이해된다(Lowe et al. 1995).

정체된 농촌 지역은 활력 있는 중심도시 및 성장 부문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며, 결국 농촌 발전의 문제는 그것이 안고 있는 주변성 (marginality)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것으로 모아진다. 농촌이 주변성을 갖는다는 것은 지리적으로뿐만 아니라 기술적·사회경제적·문화적으로도 성장 중심지인 도시로부터 거리가 있음을 의미하므로 경제적·사회적인 근대화의 흐름에 연결되는 것이 그러한 주변성 극복의과제가 되는 것이다. 농촌 발전에 대해 외생적인 관점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이며, 주요 정책 처방 역시도 농가 소득 증대와 자본·노동의 이동성 증대를 위해 농촌의 각종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농가의 구조를 개선하거나 농업 생산을 근대화하는 등의 모습으로나타나게 된다.

국가의 지원에 의해 농촌의 서비스, 농업 생산방식과 기술 등을 근대화하는 일은 유럽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농촌 개발정책의 주된 특징이 되었다. 외생적 발전전략에 의한 유럽 농촌 개발의 전개 과정을 Lowe et al.(1995)에서는 크게 두 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그 첫 단계는 토지 개혁이나 농지의 규모화 등에 의해 농가 구조를 개선하는 일이었다. 이는 용수나 관개시설 개선, 농가 하부구조정비 같은 시책과 연계하여 진행되었다. 상업적인 농가 경영 단위를육성하고 생산 확대를 위한 기술을 채용하는 것, 소규모 한계 영농을줄이는 등 농업 인구를 감축하는 것 등이 이들 정책의 목표로 할 수있다. 또한 그것은 보다 광범위한 지역·국가·세계 시장 속으로 농촌을 통합시키는 노력의 일환이라 하겠다.

농업 노동력이 다른 부문으로 이동하는 데 이들 시책이 기여한 것은 분명했다. 그러나 농촌 지역에서 인구 자체가 유출되는 등 부정적인 결과가 이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었다. 그래서 농촌개발정책의 두번째 단계에서는 농촌의 신규 고용원을 유치하는 데 주력하게 되었다. 도시에 있던 기업체들이 농촌에 이전토록 하거나 분공장(branch plants)을 설립토록 유도하는 시책이 그것이다. 3 그 일환으로 금융·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교통·통신망 개선, 산업용지 공급 등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이 주로 이루어졌다(이는 프랑스, 아일랜드, 영국 등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몇몇 지역의 경우 제조업뿐 아니라 관광 개발에 역점

⁸ 이처럼 전국을 하나의 개발 단위로 간주하고 선진지역에서 낙후지역으로 공업의 이전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중앙정부 주도의 시책을 펼친다는 데 외생적 농촌개발전략의 특징이 있기도 하다. 이는 결국 공업화가 낙후지역으로 외연 확대되는 누적효과(trickle-down)를 노리는 것인데, 입지 선정에서 누락된 곳은 더욱 침체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갖는 것이다(다까노 도시후미 2002).

을 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 무렵에 이르러 이러한 외생적 모델에 의한 농촌 개발은 여러 가지 한계에 맞닥뜨리게 된다. 농업의 집약화와 산업화 정책의 경우 무엇보다 국내 시장의 포화로 한계에 부딪쳤고, 환경 오염 등 생태적인 한계도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고 1970년대 들어경기 침체 결과 농촌의 많은 분공장들에서 폐업이 속출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외부의 투자를 유치한 지역일수록 외부 환경 변화에따라 더욱 심한 부침을 거듭하는 양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각종 정책 인센티브 제공에 의해 농촌에 입지한 산업은 주로 저임 금의 자본집약적인 특성을 지녔으며,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도 미미했다. 기술 이전이나 연계효과가 미흡했고 새로운 기업 운영관리의 노하우도 전달되지 않았다. 수익이 재투자되는 경우도 드물었다. 이러한 외부 의존적 개발, 성장 없는 산업화 등은 지역 내의 지속 가능하고 자율적인 경제개발에 반하는 것이었다(Amin 1993; Lowe et al. 1995 재인용).

2.2. 내생적 농촌발전전략의 등장과 전개

2.2.1. 내생적 농촌발전전략의 개요

내생적 농촌발전론은 이상의 외생적 전략이 낳은 효과가 미약하고 각종 문제가 드러나면서 1980년대 이후 강조되기에 이르렀다. 내생적 접근법에서는 경제개발의 효과가 농촌지역에 남아야 하고, 지방적 가치를 중시해야 함을 주장한다(Slee 1994). 특히 농촌경제의 다각화 (diversification), 상향식 개발, 지방기업에 대한 지원, 적절한 훈련 제

공 등을 강조하였다(Lowe et al. 1995).

내생적 발전 전략에서는 무엇보다 그 지방의 자원(자연, 인력, 문화등)을 가지고 지방 스스로의 추진력에 의해 지역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강조하였다. 대단위 기업이나 산업보다는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농업 및 수공업이 중시되었고, 지역개발을 위한 공공 분야의 투자도 경제적 하부구조 개선 일변도에서 벗어나 주민의 교육, 보건, 사회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치중한다. 이처럼 내생적 개발전략은 경제성장이나 산업의 발전보다 주민의 소득 및 복지의 증진에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에 복지지향적 지역개발(welfare-oriented regional development)이라고도 한다(김용웅 1999).

이러한 내생적 발전전략은 엄밀한 사회과학의 이론적 모델에 바탕을 두고 등장했다기보다는 실제의 현실에서 추동된 면이 강하다. 무엇보다 기존의 외생적 접근법이 성공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대안적인 전략 모색이 필요했고, 인구가 늘거나 고용이 증가한 몇몇 농촌지역의사례로 말미암아 정책적으로 내생적 접근법을 추구할 현실적 필요성을 낳게 된 것이다. 9 결국 내생적 발전 전략이란 어떠한 엄밀한 이론적 기반을 갖기보다는 바람직한 개발 방식에 대한 가치 판단에 바탕을 둔 접근법이라 하겠다(Lowe et al. 1995).

이처럼 정책 당국의 필요성에 의해 내생적 발전전략이 추진된 것은 분명하지만, 그 밖에도 그러한 전략의 선회와 연관지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론적・실천적 배경들이 있다. 지역주의 운동이라든가 농촌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 '자립'의 개념을 중시하는 움직임 등이

⁹ 그래서 과거 외생적 농촌개발을 추진했던 각종 지역개발기구들 스스로가 상 향식의 내생적 발전론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입장으로 돌아서기도 했던 것 이다(Slee 1994).

그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3이탈리아(the Third Italy) 같은 몇몇 농촌지역의 성공 경험들은 지역개발 분야의 많은 연구자들로 하여금 전통적 지역발전이론과는 구별되는 이론적 탐구가 필요함을 인식시켜주었다. 제3이탈리아 사례는 이 연구의 방법이나 내용과 관련해서도 몇 가지 중요한 쟁점들을 제기하므로 좀 더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2.2.2. 제3이탈리아의 산업화 경험과 시사점

가. 제3이탈리아 산업화의 특징

내생적 발전론 전개에 중요한 전기를 제공한 것은 이른바 '제3이탈리아'지역의 산업화 경험이라 하겠다. 제3이탈리아는 전통적 산업지역 또는 도시지역으로 분류되지 않던 이탈리아 북동부 및 중부지역을 일컫는데, 이들 지역의 소도시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난 산업화는 단순히 기존 도시지역 산업의 입지 확산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라 하겠다.

물론 이탈리아에서도 1970년대 이후 전통적인 성장지역에서 주로 대량생산체제에 바탕을 둔 대기업 중심 산업이 위기를 겪으면서 임금이 낮은 주변 지역으로의 산업 분산이 일어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화는 주로 도시의 고비용 등을 해결하고자 저임금 도시 주변지역으로 기업의 입지가 이동한 결과이다. 반면에 제3이탈리아의 산업화는 중소기업에 바탕을 두어, 새로운 형태의 기업 간 협력 및 생산조직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성격의 산업화이며, 특별히 이를 확산산업화(diffuse industrialisation)로 명명한다.10

¹⁰ 비용, 가격 등의 이유 때문에 저숙련의 단순 노동을 분공장 형태로 주변부

제3이탈리아 지역 산업화의 경험은 지역발전이론과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무엇보다 도시화(인구 집중)를 수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업화가 일어난 점이 중요하다. 이로 말미암아 통상 도시화와산업화가 병행하는 것으로 본 전통적인 이론들의 설명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발전과 저발전, 성장지역과 쇠퇴지역, 근대 부문과 전통 부문, 도시와 농촌, 대기업과 소기업 등 전통적 설명법에서취해 온 이분법을 벗어난 발전 사례가 제3이탈리아의 경험에서 중요하게 지적되는 점이라 하겠다(Garofoli 1992; Saraceno 1994).

이러한 제3이탈리아의 산업화는 해당 지역, 국가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성공 사례 중 하나로 손꼽히면서, 많은 논자 들이 그 요인에 대해 논의하게 되었다. 특히 경쟁력의 바탕으로서 지 방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회·문화적·제도적 조건들에 주목하는 논의들이 나타났다(Amin 1998). 지역 내의 상호 작용 네트워크, 학습 을 가능케 하는 제도 등이 기업들의 경쟁력을 제고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 지역에서는 신뢰에 바탕을 두고 대면접촉을 통해 오가는 암묵적 지식(tacit knowledge)이 경쟁력의 기반이 되었다.11

로 이전시키는 기업(cost-driven company)이냐 아니면 우수한 제품의 질을 통해 경쟁력을 획득하고자 숙련 노동력을 갖춘 입지를 선호하는 기업 (performance company)이냐에 따라 해당 산업의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진다. 후자의 경우 전통적인 관리·과학·생산 기능의 분리가 엄격하지 않고 공급자와의 보다 긴밀한 연계를 특징으로 하는 점에서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한다(Amin 1993; Lowe et al. 1995).

¹¹ 어느 곳에서나 얻을 수 있는(ubiquitous) 코드화할 수 있는 지식(codified knowledge)과 달리 암묵적 지식은 지리적 근접성(proximity)에 기반하며 작업장에서의 기술이나 실천적인 관행 등의 형태로 존재한다.

나. 제3이탈리아 산업화에 대한 진화경제학적 설명

제3이탈리아 산업화의 경험을 놓고 앞서 살펴보았던 신고전이론이나 집적 경제 등과 같은 전통적 설명 모형의 한계를 지적하면서12 연속적인 진화의 선상에서 농촌지역 발전 과정을 설명하는 논의들이 나타났다(Esposti and Sotte 2002). 진화론적 설명법에서는 어느 지방에뿌리내리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 외적인 환경과 상호 작용하면서 나름의 공간조직을 낳게 되고 원래의 고유 특성들 중 일부가 선택되어 시간적인 진화를 겪게 되는 과정에 주목한다.13

제3이탈리아의 예를 들자면, 노동집약적이며 자가 고용 전통을 가지는 소기업들이 성공의 주역이었는데, 이들 기업은 바로 이 지역에 폭넓게 존재하던 대가족의 소작농가(sharecropping families)에서 발원하였다고 한다. 가족노동에 기반을 두고서 장인적 기술을 갖춘 농가들이 소기업으로 발전해 가면서 제3이탈리아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형성된 것이다. 사회적 갈등 최소화, 강한 기업가 정신, 새로운 시장 기회를 찾는 데 적합한 다양한 지식, 그리고 그것의 확산 등 제3이탈리아를 특징지은 요소들이 모두 창업 의욕 높은 농가들의 특성에서 발원한 것이다(Becattini 2001; Esposti and Sotte 2002). 기업 또는 산업 생

¹² 전통적 접근법에서는 농촌의 산업화가 임금 등 생산요소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일어났음을 강조한다. 또 농촌에 많은 기업들이 집중함으로써 나타나는 지방화 경제(localization economies)의 효과라든가, 도시와 인접함으로써 농촌이 얻게 되는 도시화 경제(urbanization economies)의 효과 등에 관심을 집중해왔다.

¹³ 어떠한 사회적·지리적 특성을 가지는 농촌지역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여러 단계를 거쳐 진화하게 되는데, 원래의 지역적 특성들이 선별적으로 다음 단계로 이어지면서 최종적으로는 농촌으로서의 특성이 사라지는 과정으로서 농촌의 산업화를 고찰하는 것이 이러한 진화적 설명의 한 방식이다.

산을 위한 인력을 공급하는 데 농업 부문 노동력이 적지 않은 역할을 발휘하였다는 14 발견은 농촌발전론 관련 논의의 진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였다.

2.2.3. 일본의 내발적 발전론과 자립경제론15

자립적 지역발전을 중시하는 것도 내생적 농촌발전론에서 흔히 취하는 입장이다. 외부 의존적인 기존의 지역개발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관점이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자립적 발전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의 내발적 발전론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유럽의 농촌발전론과 비교할 때, 일본의 내발적 발전론은 국가 주도의 성장전략에 대한 더욱 강한 비판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일본의 1960년대 및 1970년대 전반은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한 고도성장기로 특징지을 수 있으며, 이 시기의 지역개발정책은 전형적인 외생적 개발정책의 성격을 띠었다. 농업의 경우에도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농업구조정책이 주조를 이루어 규모화나 효율화에 잘 대응하기 힘든 한계농가나 중산간지역에서는 이농과 과소화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외래형 개발에서 소외된 몇몇 오지지역을 중심으로 1960년대부터 실천적 차원에서 자립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기도 했다.

¹⁴ 일례로 신발산업으로 특화된 지역의 사례 연구에 의하면 전체 기업 중 50% 이상이 이러한 소작농가에서 출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¹⁵ 이 연구에서는 'endogenous development'를 '내생적 발전'이라 옮기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 '내발적(內發的)' 발전이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쓰인다. 국내의 경우 이 두 용어가 논자에 따라 혼용되고 있는데, 원어가 동일한 데서 알 수 있듯 양자는 근본적으로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겠다. 한편일본의 내발적 발전론에 대한 이하의 설명은 박경(2002) 및 지경배(2003)의 논의를 주로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일촌일품운동의 모태를 이룬 오이타현 오야마의 NPC 운동16 등이 그 것이다. 이는 1970년대 후반 일촌일품운동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여기에 1970년대 후반부에 시작된 '지역농업'의 움직임도 더해졌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들이 일본에서 나타난 지방의 자립적인 발전 노력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 주도의 개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지방 단위의 노력에 대해 고도성장의 모순을 지방에 전가해서 해결하 려는 성격을 지녔다는 혹평이 존재하며, 지역농업정책 역시 기존의 농 업구조조정정책을 수정한 것이 아니었다는 비판도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실천적·정책적 움직임과 별도로 내발적 발전론에 대해 이론적으로 제시한 학자들은 근대화 과정에 대해 보다 비판적인 견지에서 문제를 접근하였다. 1976년에 내발적 발전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제기한 츠루미 카즈코(鶴見和子)의 경우 내발적 발전을 서구모델의 근대화론에 의해 유발된 폐해를 해결 혹은 예방하기 위한 사회변화의 과정으로 정의하며, 서구 근대화론의 대안으로 제기하였다. 서구 근대화론에서 간과해 온 지역 고유의 자연환경이나 문화·전통 등의 요소들에 주목하여 이들 요소를 지역 문제 해결의 실마리로 삼고자 하였다.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이 스스로 주체적으로 문제 해결에임하는 내발성(자율성)을 강조한 츠루미의 입장은 내발적 발전론을 정

¹⁶ 가난한 농촌이었던 오이타현(大分縣) 오야마정(大山町)에서 촌장의 주도로 1961년 시작한 NPC(New Plum and Chestnut) 운동은 말 그대로 매실 (plum)과 밤(chestnut)을 심어 주민들의 소득을 높여보려는 시도였다. 미곡 증산이 정책의 중심이던 당시에 이러한 신규 농산물 생산 노력은 획기적인 것으로, 이것이 큰 성공을 거두면서 오야마정에서는 이후에 제2차 NPC (New Personality Combination) 운동과 제3차 NPC(New Paradise Community) 운동 등이 전개되기도 했다(김형국 2002).

책으로서가 아니라 사회운동으로 접근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오이타 현 일촌일품운동이 지자체 주도의 정책 추진으로 내발성을 잃었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맥락 때문이다.

지역개발론의 입장에서 내발적 발전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킨 것은 미야모토 켄이치(宮本憲一)이다. 그는 고도경제성장 이후 신산업도시나 대규모 공업지대에 의존한 외래형 개발은 지역산업과의 연계가 부족하고 경제활동의 성과가 지역에 귀속되지 않는 것은 물론 공해에의한 사회적 부담을 증가시킨다고 비판한다. 따라서 대기업과 정부의사업으로서가 아니라 그 지역의 기술, 산업, 문화를 토대로 하여 지역내 시장을 주요 대상으로 지역 주민이 학습하고 계획하고 경영하는 것을 내발적 발전의 중요한 원칙으로 제기하였으며, 자립경제의 구축을 위해 산업개발을 특정업종에 한정하지 않고 복잡한 산업 부문에걸쳐 부가가치가 일체의 단계에서 그 지방에 귀속되도록 지역산업 연관을 도모하는 것을 중시했다. 또 경제적 목적만이 아니라 환경, 쾌적성, 인권 등의 이념을 추구할 것을 내발적 발전의 중요한 원칙으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일본의 내발적 발전 사례가 주민의 환경보전운동이나 인권운동을 출발점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정과도 관련된다.

이러한 이념적, 운동론적 배경에서 지역의 자립을 강조한 츠루미나 미야모토의 논의와 달리 이후 키요나리 타다오(淸成忠男)나 호보 타께 히꼬(保姆武彦) 등의 내발적 발전론 논의에서는 자립을 강조하면서도 정부의 지원 등 외생적 자원의 활용을 강조하는 경향을 띤다. 즉 키요나리는, 내발적 발전의 요체는 지역산업 활용형 산업의 현대적 재생이라고 정의하며 지역산업 진흥전략으로 이입대체, 이출대체, 이출재 재이입 저지, 기존산업의 활성화, 신산업 창출 등과 함께 새로운 지역내외 유통 네트워크의 형성 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는 자급자족 성격의

지역운동 논의를 넘어선 것이라 하겠다.

2.2.4. 내생적 농촌 발전론에 대한 평가

이러한 내생적 농촌 발전론을 놓고는 여러 가지 상반된 평가가 내려지기도 한다.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내생적 발전 전략의 추진 자체가기존의 외생적 접근법을 완전히 대체하지 못한다고 지적되기도 한다. 지역개발을 추동하는 주된 결정요소는 여전히 외생적인 힘이며, 그러한 개발 과정에서 지방의 내생적인 동력이 약간의 색채를 입힐 뿐이라는 것이다(Slee 1994). 물론 내생적 발전론에 대해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역발전이 외부의 힘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이러한 결정론적인 시각에서 놓치고 있는 것은, 외생적 발전이든 내생적 발전이든 지방적 요소가 개입되게 마련이라는 점이다(Lowe et al. 1995).

한편 내생적 발전론 논의에서는 지역 내의 동력에 바탕을 둔 개발 전략과 자립경제의 중요성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내부적인 수요와 자원에 의존하는 개발전략이 강조되는 것이다. 이는 앞서 일본 의 내발적 발전론을 다루면서도 살펴본 바이다. 그러나 이처럼 지역 내부적인 수요를 겨냥한 개발 전략은 개방경제체제 하에서 지역의 경 쟁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으며, 내부적인 수요 유발 자체가 곤란한 저발전 지역에는 적합하지 않다. 또 폐쇄경제가 아닌 한 주민의 생활 을 위해 외부로부터 재화와 서비스의 구입이 불가피한데 이러한 점을 간과할 우려가 있다(김용웅 1999).

최근 들어 내생적 발전론에서 농촌발전의 단위로 영역성을 강조하는 것이 지역 자체적이며 협소한 자급자족운동으로 머물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방향으로 논의가 모아지고 있다. 이는 자립경제 관련

논의에서 나타나는 비현실적인 점들 때문이기도 하다. 결국 경제의 세계화에 발맞추어 어떻게 지역의 영역성을 살리고 동시에 경쟁력을 확보하느냐는 문제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내적인 지역 자원 활용 여부 자체보다는 개발 과정이 지방 내부 또는 외부 중 어느 쪽에 의해 통제되느냐는 점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한다(Lowe et al. 1995). 내생적 발전전략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면서 네트워크 접근법에 입각하여 지역발전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혼합적 접근법이 등장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2.3. 내생적 · 외생적 발전론을 결합한 네트워크 접근

2.3.1. 네트워크 접근법의 개요

단순히 지리적 경계를 기준으로 내생적 접근이냐 외생적 접근이냐를 구분하는 이분법을 넘어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것이 내생적 전략과 외생적 전략을 결합하고자 하는 시도이다(mixed exogenous/endogenous approach). 이러한 절충적 입장이 나타나게 된데는 몇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Terluin et al. 1999). 첫째는, 외생적 전략 자체가 갖는 한계와 관련된다. 즉 외생적 농촌발전전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는 지방적인 색채가 가미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지역 정체성(regional identity)이나 기업 환경(entrepreneurial climate), 문화적·자연적 환경의 매력도 등과 같은 내생적 잠재력을 충분히 고려하기는 어렵다.

둘째는, 내생적 발전전략의 한계와 관련되는 문제이다. 세계화로 대

표되는 환경 하에서는 농촌 지역 역시도 외부와 다양한 연계관계를 갖기 마련이며, 그러한 관계가 농촌 개발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런점에서 지역 내의 경제활동에 초점을 맞추는 내생적 발전전략은 시대에 동떨어진 점이 있다.

셋째는, 무엇보다 농촌 개발을 여러 네트워크들이 어우러진 과정으로 보는 혼합적 전략의 관점이 현재의 농촌 상황을 잘 반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지역 내·외의 힘이 상호 작용하면서 다양한 발전경로가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한다. 그것은 앞의 외생적 접근법이나 내생적 접근법에 비해 현실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혼합적 접근법에서는 지방 내·외의 여러 주체들 간의 상호 작용에 대해 주목해야 하며, 이러한 다양한 주체들을 통합하는 네트워크 분석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무엇보다 이러한 접근이 요청되는 것은 농촌개발 역시 정보통신 분야의 급격한 기술 변화에 바탕을 둔 세계화 조류 속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런 변화 속에서 농촌지역의 행위자들 역시도 지방적인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네트워크와도연결되어 있기 마련이다. 물론 각 지역마다 경제·사회·제도적 관계, 그리고 내외적 연계는 달리 나타나며, 농촌개발은 이러한 지방 내·외의 네트워크가 복합되어 상호작용하는 것이다(Lowe et al. 1995; Terluin et al. 1999).

따라서 네트워크 패러다임 속에서 농촌개발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패러다임에서는 혁신이 경제 성장의 주된 동력이며, 기업들 간의 네트워크로 연결된 준(準)수직적 통합(quasi-vertical integration) 형태가 가장 효율적인 생산조직이라 이해된다. 이런 기업 간 네트워크가 이른 바 네트워크 외부효과(network externalities)를 낳기 때문이다.17

이는 농촌개발에 대해 설명하면서 내생적 발전에서 강조하는 상향

식 접근법에 혁신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결합한 것으로서 결국 이는 혁신환경(innovative milieu)에 대한 이론이라 할 수 있다(Terluin et. al., 1999). 이러한 이론에서는 모방과 새로운 기술적 창조, 신속한 적응 능력, 쇠퇴 부문의 자원을 새로운 부문으로 투입하는 능력, 외부의위기에 대응해서 지방의 생산조직을 재구조화하는 능력 등이 혁신 창출을 위해 중요하며, 그것이 지역의 성공에 관건임이 강조된다. 이같은 환경의 조성 여부는 시장의 불확실성과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혁신에 필요한 노하우를 어떻게 만들어내는가에 달려 있다고 한다. 바로 이때 바탕이 되는 것이 지방 내·외의 네트워크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한편 지방 내·외의 네트워크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점은 그것이 여러 행위주체들간의 일련의 권력의 관계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내생적·외생적 접근법의 혼합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들이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는데, 네트워크 내에서 다른 행위자들에 대해 보다 큰 힘을 행사하는 주체는 누구인지, 지방의 주체들이 어떤 식으로 일련의 관계들에 연계되는지, 지방의 주체들이 외부의 주체들과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 지역 외의 주체들이 어떻게 원격지에서 변화를 가져오고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등이 그것이다(Lowe et al. 1995).

¹⁷ 네트워크 외부효과란 네트워크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을 의미한다.

2.3.2. 혼합적 접근법에 의한 농촌의 고용 창출 사례 연구

가. 개요

내생적 접근법과 외생적 접근법을 혼합하여 다각도에서 농촌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 실증 연구한 사례로서 유럽의 RUREMPLO 프로젝트 연구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18 이는 EU 농촌지역의경제활동 여건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 차원에서 진행된 연구 프로젝트로서, 지역발전의 동력에 대해 지리적 경계를 중심으로 내생적이냐 아니면 외생적이냐 구분하는 방식을 넘어서서 지역 내·외의 네트워크관계를 분석하여 그것을 지역발전과 연관 짓는 데 초점을 두었다.

농촌의 경제활동 기회가 지역적으로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연구의 주요 목적이며, 특히 농촌의 지역 간 경제활동 기회를 나타내는 대리변수로 고용 변화량을 사용하였다. 그래서 고용이 늘어난 선도농촌지역(leading rural region) 9곳과 감소한 낙후농촌지역(lagging rural region) 9곳을 사례로 발전격차의 실태와 원인을 진단하고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19 특히 지역

¹⁸ RUREMPLO는 European Commission의 재정 지원을 받아 진행된 'EU 농 촌지역의 농업과 고용(Agriculture and employment in the rural regions of the EU)'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의 약칭이다.

¹⁹ 특히 고용에 초점을 두게 된 것은, 서구에서는 1970년대 이후 경기 침체, 실업 증가의 여파로 고용 문제가 중요한 정책 이슈로 등장하였기 때문이 다. 유럽 국가들의 경우 경제의 세계화와 더불어 국가의 경제정책 개입 역 할이 축소되고, 그것이 상위의 EU 단위 그리고 하위의 지역 단위로 이전되 면서 지방이 지역경제 개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지역정책에서도 지방 나름의 실업 문제 대응과 고용 창출의 과제가 핵 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장육 2000).

부존자원, 경제활동 양상, 노동 공급, 노동시장 구조, 발전 전략 등 주요 부문의 12가지 이슈를 바탕으로 사례 지역의 지역발전에 관한 SWOT 분석을 실시하였다(Terluin & Post 1999).

나. 사례 연구 결과

이상의 사례 연구에서 고용 면에서 성장한 지역(성장지역)과 감소한 지역(감소지역)을 비교한 내용 중 중요한 요인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로 요약해 볼 수 있겠다.

① 성장지역이건 감소지역이건 대부분의 사례 지역에서 나름의 농촌 어메니티가 있으며 그것들이 지방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어메니티 자원의 존재 여부 자체가 반드시 성장지역

표 2-2. RUREMPLO 사업의 지역발전에 관한 SWOT 분석을 위한 요인들

분 야	주 요 내 용
강점과 약점	1) 지역입지(성장지역과의 근접성) 2) 고용을 유도할 지역자원 3) 노동자의 교육수준 4) 처렴한 노동비 5) 개선된 물질적인 하부구조 6) 산업구조 7) 기후 8) 어메니티의 존재 9) 대학이나 기타 연구센터의 존재 10) 지역경제의 전문성 11) 지역경제의 다양성 12) 산업부문 내 수직적 협력관계 13) 산업부문간 수평적 협력 관계 14) 지역 활동주체의 능력 15) 혁신하려는 지역주체의 능력 16) 기업가적인 분위기 17) 내적 네트워크 18) 외적 네트워크 19) 틈새시장의 존재 20) 관광업의 존재
기회와 위협	1) 시장기회 (특정부문과의 연관성) 2) 틈새시장의 발전 3) 관광업의 발전 4) 유럽연합의 확대와 통합 5) WTO와 같은 정치적 상황과 중동부 유럽에서의 변화과정 6) 하부구조의 개선 7) 시장접근성의 개선

과 감소지역을 구분 짓는 요인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보다는 지역의 관련자들이 농촌 어메니티를 관리하고 부가가치를 증대하는 노력 여부가 농촌의 고용 증대와 관련되는 것이다.

- ② 경제 중심지, 즉 도시와의 근접성이 반드시 농촌의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중요하다. 성장지역 중에서도 도시권에서 벗어난 외곽지대에 위치한 곳이 있는 반면, 감소지역 중에도 도시권에 근접한 곳이 있는 것이다.20
- ③ 경제구조 면에서 성장지역 중에는 특정 분야(예를 들어 가구, 가죽의류, 목재, 금속, 관광 등)에 전문화되고 있는 지역도 있으나, 대체로 여러 분야들로 다변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탈리아의 산업지구에서와 같은 전문화가 농촌의 고용 성장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라 단정짓기는 어려운 것이다.21
- ④ 성장지역이 감소지역에 비해 두드러지는 점으로서, 무엇보다 경제활동주체들이 뛰어난 역량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특히성장지역의 경우, 경제활동주체들이 지역 내·외의 관련 주체들과 협력하는 방식, 도전에 직면하여 혁신하고 위험을 감수하는 태도, 지역의 역량과 필요에 맞추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 제품을 외부에 마케팅하는 방법 등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이다.
- ⑤ 성장지역은 지역 내·외의 네트워크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 나고 있다. 그러한 네트워크의 사례로는, 민관협력 네트워크, 여러 상

²⁰ 전통적인 도시권의 산업 중심지를 벗어난 곳에서 성공적인 경제 발전이 일 어난 제3이탈리아의 사례에서도 이미 이 점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²¹ 이와 관련하여 RUREMPLO 사례의 성장지역 중 가구, 가죽 등의 업종으로 전문화 경향을 나타낸 곳도 제3이탈리아 지역으로 분류되는 이탈리아 페사 로(Pesaro) 지방이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한 행정계층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행정부서·조직 간의 네트워크, 기업가들의 네트워크, 여러 지역 어젠다를 다루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네트워크 등을 들 수 있다.22 특히 행정조직 네트워크의 경우, 지역의 여건을 잘 진단해서 정책 우선순위를 정하고 종합적인 지역발전 비전 속에서 사업을 계획하는 지역일수록 더욱 성공적으로 나타난다. 아울러 상위 기관과 원활한 접촉을 가지며 특정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 능력을 갖추고서 가지는 지역일수록 지역 외 행정계층 네트워크가 더 긴밀히 작동한다. 이는 내생적 자원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과 더불어 지역 외의 지원을 효과적으로 획득하는 능력 역시 농촌의 고용 창출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⑥ 제3이탈리아 같은 산업지구에서 확인된 바는, 농가의 다원활동 전통(plural active farming system)을 지니고 있으며 자가 고용의 관행을 갖춘 곳에서 농촌 노동시장의 역동성이 높고 고용 증가가 두드러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RUREMPLO 사례 지역 연구 결과에서 보건대, 그러한 농업 부문의 역할에만 기대어 지역의 고용 창출이일어나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나타난다고 단정짓기는 무리이다. 그것은 (제3이탈리아의 경우처럼)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겠으나, 그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라고 보는 편이 더욱 적절한 것이다.

RUREMPLO 사례 지역 조사 결과 농가 차원의 다원활동 형태로는, 농촌관광, 농산물·임산물 가공 및 판매 등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그것은 지역의 일자리 분포 정도, 농가가 생산한 제품 및 농촌관광활

²² 이탈리아 페사로 지방의 경우 비공식적인 개인 네트워크가 기업 내 또는 기업들 사이에 지식을 확산시키거나, 상거래 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데 결 정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동에 대한 수요의 정도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다원활동 정도가 인근의 도시 및 시장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다. 한편 농촌관광활동의 경우에도 고용 성장지역이 감소지역에 비해 더욱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역시 농업 부문 다원활동수준은 전반적인 지역경제 활력에 영향을 받는 결과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다. RUREMPLO 연구 결과의 시사점

최근 서구의 농촌발전 관련 논의에서는 지역의 전통이나 자원, 문화 등의 내생적 요인을 기반으로 한 발전 전략을 중요하게 꼽고 있으나, RUREMPLO 연구 결과는 그것만이 전부는 아님을 알려준다. 선진국의 경우라도 순수하게 농촌의 내생적 동력에 바탕을 두어 지역발전을이끌어 낸 사례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요컨대, 제3이탈리아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듬어진 내생적 발전론의 모델이 다른 그 밖의 농촌지역에서도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한 요인들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낙후 농촌지역의 경우 외부자원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능력 역시 고용 창출에는 중요함을 성장지역에 대한 사례 연구 결과가 보여 준다. 그리고 특히 이 대목에서 지방정부 등 공공 부문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여러 내생적 발전론 관련 연구들에서 중요하게 언급되었던 사항이 RUREMPLO 사례 연구에서도 분명히 확인되기도 한다. 무엇보다 지역경제의 활력과 성공을 위해서는 혁신적인 능력을 갖춘 경제활동주체의 역할이 중요하며, 모험을 감수하고 창업을 마다하지 않는 기업가 정신이 밑거름이 된다는 점이다. 이는 이미 제3이탈리아를 비롯한 성공적인 지역들의 사례에서도 거듭 확인되는 바이기도 하다.

또한 고용의 증가는 지역 내·외를 잇는 다양한 네트워크 관계가 발달한 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진다는 것도 중요하다. 지리적 근접성을 바탕으로 하여 경제활동주체들 간에 다양한 공식적/비공식적 상호 작 용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지역에 비해 우위를 가지는 장소 자 산이 될 수 있는 것이다.

3. 연구의 관점과 문제제기

3.1. 연구의 기본 관점

지금까지 지역발전에 대한 주요 이론의 흐름과 농촌발전전략에 대한 논의들이 진행되어온 양상에 대해 개괄적으로 소개하였다. 전통적·외생적 모형이든 내생적 모형이든 간에 모두 나름의 한계들을 안고 있으며, 각각의 접근법들은 나름대로 서로에 대해 보완적인 설명력을 지니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예컨대 도시 접근성 같은 전통적 요인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제3이탈리아 같은 몇몇 지역들의 발전 경험들이 나타났기에 내생적 지역발전이론이 구체화될수 있었던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경제의 세계화 조류 속에서 내생적발전론에서처럼 지방의 내재적인 요소에 지나치게 주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깨달음이 바탕이 되어 지역 내·외를 잇는 네트워크에주목해야 한다는 접근법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처럼 시대적인 여건 변화나 새로운 성공 지역 등장 등의 요인들 이 대안적인 지역발전론 모색의 움직임이 커지도록 하는 것은 사실이 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전통적인 지역발전의 접근법이 결코 용도폐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우리에 비해 내생적 지역발전의 성공 사례들이 풍부하게 축적되어 있는 유럽 등 선진국이라할지라도 여전히 농촌의 변화를 추동하는 힘은 도시와 성장산업 부문에서 발원하는 경우가 많음을 RUREMPLO 사례 연구 등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농촌의 경우 그런 사정은 더욱 확연하리라 예상된다. 지방 자치의 경험이 길지 않은 우리의 경우 전국토를 관장하는 중앙정부가 오랜 기간 동안 지역개발의 실질적 주역을 맡아왔으며, 협소한 국토 여건상 지역개발과 국토개발이 상당 부분 동의어로 여겨지기도 하였 다(김형국 1996). 따라서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공간 통합 전략이 농 촌의 발전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주된 변수가 될 수밖에 없었다. 대개의 농촌지역 정주 여건이 주요 도시축이 발달한 주변부와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 뚜렷이 구별되어 나타난다는 점에서도 이를 알 수 있 는 것이다.23

이 연구에서도 이후 제3장 및 제4장의 논의에서는 농촌의 지역간 분화와 경제력 차이를 분석하는 데 이러한 전통적 지역발전 요인에 바탕을 둔 설명법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지 역별 소득 수준의 차이(제3장)나 고용기회의 분포 정도(제4장)를 결정 짓는 데 대도시 접근성이라든가 대규모 산업 입지 등의 집적 요인이 주요하게 작용하리라 예상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진단 결과를 받아들 일 경우 앞서 외생적 발전전략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농촌의 주변성 (marginality)을 극복하도록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기반시설을 확

²³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로 성주인·송미령(2003) 참조

충하는 노력이 농촌에 여전히 절실하리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이 같은 결론에만 머무르고자 하지는 않을 것이다. 두드러지지는 않을지라도 농촌지역 내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 지 다원적 활동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시도들을 찾아내고 그것이 갖 는 의미를 찾아내는 작업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는 보다 세부적으로 지역 단위의 사례조사를 통해 파악할 내용들로, 내생적 농촌발전론의 관점이 이 대목에서 다시금 요구된다 할 것이다. 앞서 내생적인 접근 법에 대해 살펴본 바 있으나 이러한 사례 연구와 관련해서 보다 직접 적인 시사점을 주는 사항들을 다음에서 짚어보고자 한다.

3.2. 내생적 농촌발전론에 입각한 분석의 관점

가. 농촌 발전의 기반으로서 장소의 자원

내생적 발전론에서는 농촌의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해당 지역이 갖추고 있는 강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전통적인 지역발전론에서는 농촌이 도시에 대해 갖는 강점으로서 저임금이나 싼 지가 같은 비용 요소에 주목해왔으나, 그보다는 농촌 지역이 지니고 있는 장소 자원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내생적 발전론의 주장이다. 즉 단순히 저비용 조건에 의해서가아니라 농촌이 가지는 고유한 장소적 매력과 특질이 기업 입지를 비롯한 경제활동의 주요 요인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것이다.24

²⁴ 경제의 세계화와 이동성 증대로 말미암아 경제활동이 장소의 제약에서 벗 어나는 탈영역화(deterritorialization)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기업들이 개별 장소가 지닌 미묘한 차이와 장소의 질에도 민감하게 반응토

최근 들어서 농촌 활성화의 바탕으로서 어메니티 자원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은 그러한 맥락에서이다. 자연자원이든 농경지 경관이든, 문화유산이든 농촌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특징들이 농촌 개발을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되고 이에 바탕을 둔 경제적 기회 모색 노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OECD 1999).25

장소 경쟁력의 바탕이 되는 장소자산으로서 이러한 유형의 자원이나 환경 등만이 아니라 지역 내 관련 주체들간의 '돈으로 거래되지 않는 상호 의존성'(untraded interdependancy: Storper 1997)도 요소로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상호 의존성을 한마디로 관계자산(relational assets)이라고 이를 수 있는데, 상호 협력의 분위기, 신뢰 등에 기반을 두는 비공식적 성질의 자산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구매자-공급자, 연구개발자-생산자, 기업-노동시장 간의 각종 관계가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까닭에 관계자산은 지방의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기여를 한다(김형국 2002).26

록 하는 재영역화(reterritorialization)를 가져오기도 한다(김현호 2002).

²⁵ 이런 점과 관련해서 농촌의 장소적 특질로서 어메니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Pezzini(2003)의 연구 결과도 참고할 만하다. 이 연구에서는 농촌, 중소도시, 대도시로 지역을 유형화하여 각 유형별 지역발전의 비교우위와 장애 요인에 대해 OECD 각국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농촌의 발전 요인으로 과거에는 교통기반시설, 지역 내 소도시 존재 여부, 대도시 접근성 등이 중요 요소였으나, 최근에는 어메니티와 같은 공공재가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²⁶ 내생적 발전의 대표 사례인 제3이탈리아 지역이 지니고 있는 진정한 강점 은 이와 같이 구성원들 간의 신뢰와 협력에 바탕을 두고 있는 관계자산이 라 할 것이다.

나. 관련 주체들의 역량과 혁신활동

농촌의 내생적 발전 논의에서는 공통적으로 지역발전을 주도해 갈 주체의 역할이 중요하게 언급되곤 한다. 앞서 살펴본 츠루미의 내발적 발전론에서는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핵심인물(key person)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EU에서 1990년대에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리더(LEADER) 프로그램에서도 지방 단위 실천 조직(Local Action Group: LAG)의 역할이 중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Ray 2000).

최근 들어서는 특히 지역 내에서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주체들의 혁신 역량이 어떠한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지역 경쟁력의 척도로 평가된다. 제3이탈리아에 대한 사례 연구 결과를 보면, 자가고용 전통을 가지고 있던 농가 단위에서 출발한, 모험심 강하고 창업 의욕을 가진 경제활동주체들이 혁신 창출의 주역이었음을 보여 주고 있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전통적인 낙후 농촌지역의 경우 혁신적인 자세와 아이디어로 무장한 주체들이 없다는 것이 종종 약점으로 거론되곤 한다.

혁신적 마인드를 갖춘 주체들의 존재 여부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들 간의 협력을 통해 지역 전반의 혁신 능력을 배가시키는 것이 지역발전의 핵심과제이다. 경제활동주체들 간의 긴밀한 상호 의존의 바탕 위에서 대면접촉을 통해 암묵적 지식을 교환하는 것이 변화하는 시장상황에 적응하고 성공적으로 살아남는 길이 된다(Amin 1998; Terluin 2003).²⁷

²⁷ 앞서 농촌 어메니티의 중요성을 언급했던 Pezzini(2003)의 연구에서도 기업 가 정신, 문화적 정체성, 참여와 협력 등 비가시적인 것들을 농촌의 지역 간 발전 차이를 가져오는 요소로 지적하고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자원 보유 여부 자체보다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stock을 flow로 전환시키는 능력)이라는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관계자산이 중요성을 가진다. 지역 내 존재하는 학습을 위한 다양한 공식적 · 비공식적 조직이라든가, 자체적인 연구 활동 등이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가 농촌지역의 경쟁력 획득의 관건인 것이다. 이러한 혁신활동들은 비단 첨단산업 등 성장 부문을 위주로 하는 지역뿐만 아니라 낙후된 농촌의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28

다. 지역 내 산업의 연관관계

내생적 발전론에서는 가치사슬(value chain)이 가능한 한 지역 내에서 형성되도록 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지역 내에 귀속시키는 것을 중시한다. 일본의 가나자와시(金澤市)에 대한 사례 연구를 보면, 대기업 공장은 없지만 전통적인 섬유공업을 바탕으로 한 연관산업이 발달하여부가가치가 지방에 귀속되는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비슷한 규모의 오이타시(大分市)나 와카야마시(和歌山市)에 비해 공업 출하액 면에서는절반 정도에 그치지만 도매 판매액은 반대로 2.5~3.5배가 높고 시민의 과세소득이나 저축액도 높게 나타났다(佐々木雅辛 1994).

이런 점에서 키요나리는 지역산업의 진흥을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다(總合硏究開發機構 1990). 첫째로, 타 지 역에서 생산 재화를 지역 재화로 대체하는 것이다(이입대체). 둘째로, 원료 상태 이출보다 가공도를 높여서 이출시킨다(이출대체). 셋째로,

²⁸ 이를테면 기존의 산업 중심지가 아닌 원격지 농촌에 설립한 분공장이 새로 운 혁신 창출의 시험장이 되기도 한다. EU의 경우 특히 이 점에서 기존에 낙후를 면치 못했던 농촌지역도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데, 어떠한 학습과 혁신의 네트워크를 갖추는가 여부는 낙후지역 내의 발전 정도 차이에도 영 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Morgan & Nauwelaers 2003).

지역 외로 이출된 재화가 부가가치를 붙여서 재이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 내 순환시스템을 구축한다(이출재 재이입 저지). 넷째로, 원래 지역에 존재한 산업 재조직화하고, 다섯째로, 지역 자원이나 노동력을 활용하여 새로운 산업을 창출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판, 생산자, 소비자제휴, 지역단체 판매 등 새로운 지역 내·외 유통네트워크를 형성한다.

라.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농업 부문의 역할

내생적 발전의 밑거름으로서 농업 부문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다. 예컨대 대표적인 제3이탈리아 지역 중 하나인 에밀리아로마냐의 발전 경험에서도 그 밑거름으로서 농업 부문이 중요한 기여를 했음이 알려져 있다(Picchi 1994). 에밀리아로마냐에서는 비농업 부문 기업 창출에 필요한 자본과 인력 공급에서 농업 부문이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으며, 농가 수준의 다원활동과 관련 기업의 파트타임 노동이 폭넓고 유연하게 결합해 있다. 또한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자가고용의 전통이 뿌리 깊다고 한다. 농업생산과 가공산업, 나아가 기계산업이 연계되고 있으며,29 섬유산업, 관광 등도 모두 농가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탈리아 투스카니(Tuscany) 지역 역시 농가의 다원활동과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데, '와인루트(wine route)'라는 이름의 탐방코스를 조성해서 방문객을 끌어들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다(Brunori & Rossi 2000).30 투스카니 지역 중에서도 특히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는 리보

²⁹ 일례로, 치즈, 햄 등의 생산 과정이 지방의 고유 농업 스타일에 어울리는 디자인을 갖추도록 요구되었고, 그 결과 기계산업 부문 중소기업을 위한 시장이 창출되었다(Picchi 1994).

르노(Livorno) 지방의 경우 와인루트에 소속되어 있는 농가는 포도주나 올리브 등을 일반 농가에 비해 더욱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도시민들을 상대로 한 직접 판매도 늘어나면서 추가적인 소득을얻고 있다. 농촌관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입 규모도 큰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31 나아가 와인 생산과 직접 관련되는 업체에만 한정되지않는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와인루트 컨소시엄이 구성되어 있는데,여기에는 포도 재배 농가나 농촌관광 농가, 꿀이나 오일 생산 농가, 와인 바 및 상점, 레스토랑, 자연공원, 호텔 등 와인루트에 관련되는 다양한 주체들이 포함되어 있다.

3.3. 분석을 위한 문제제기

지금까지 주로 선진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듬어진 농촌발전론 관련 논의들을 살펴보았다. 이상의 내용들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농촌지역개발과 관련해서도 특히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염두에 두고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①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농촌개발 분야 연구들은 대체로 도시와 농촌의 상대적 격차 해소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농촌이 지닌 나름의 특성과 자산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지역발전을 이

³⁰ 와인루트에서는 각 코스마다 재배되는 고유의 포도로 술이 제조되고 있으며, 방문객들이 생산 농가나 포도주 창고를 직접 방문하여 포도주를 맛보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³¹ 추정치에 의하면 와인루트에 참여함으로써 농가가 올릴 수 있는 수입은 그렇지 않았을 때에 비해 30~40%가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루어 낸 제3이탈리아 등의 경험들에서도 확인되듯이, 다양한 요인에 따라 농촌 내에서도 여러 가지 양상으로 지역 분화가 진행되는 것이 서구의 상황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정은 어떠한지 탐구할 필요가 있겠다. 농촌 내에서 나름의 요인에 의해 성장하는 지역이 나타나고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그 성장의 요인은 무엇인지 찾아볼 필요가 있다. 즉 기업 입지 및 새로운 경제활동 창출을 낳을 만한 나름의 장소적 매력이 있어서인지 아니면 여전히 대도시 주변부에 입지해 있다든지 지가가 저렴하고 저임금 노동을 이용할 수 있다는 비용 요인이 작용한 까닭인지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②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 정도에 따라 지역 경쟁력이 좌우된다는 점도 최근 강조되고 있는 바이다. 그것은 지역 내에 기업가 정신을 지닌 경제활동주체들의 분포 양상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또한 여러 관련 주체들이 공동의 이해와 문화의 바탕을 가지고 긴밀하게 협력하고 지식을 교환하는 긴밀한 상호 의존 관계 정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우리의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기업가 정신을 지닌 혁신 주체로 분류될 인력이 얼마나 존재하며, 주로 어떠한 성향과 계층의 사람들이 그러한 혁신적인 주체로 분류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지역발전 과정에서 담당하는 역할은 무엇이며, 그러한 혁신적인 계층의 존재가 농촌의 활성화를 위해 발휘하는 효과가 얼마나되는지도 논의가 필요하겠다.

③ 제3이탈리아 등의 내생적 발전 경험은 인력 공급, 전통 기술 활용 등에서 농업 부문의 역할이 밑거름이 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우리의 경우에도 별다른 산업 기반을 갖지 못한 대부분의 농촌지역에서는

농업에 기반한 농가의 다원활동의 수행과 연관산업의 개발 노력이 중요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이 어떠한 조건하에서 그리고 어떠한 지역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그리고 농업 및 그관련 산업의 개발에 의지해서 과연 어느 정도의 지역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실증적 분석을 요하는 문제이다. 또 농업에 바탕을 둔 지연산업 개발이 산업지구라든가 클러스터 등으로 발전할 잠재력이 있는지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④ 내생적 발전론을 순수하게 자립적인 지역발전모델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비록 선진국이라 할지라도 순전히 내생적 자원에 의지하는 것만으로는 농촌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없는 것이다. 필요한 외부 자원을 어떻게 동원하고 적절하게 이용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외부 자원에 대해 지역의 이해에 맞도록 어떤 식으로 효과적으로 통제할 것인지가 더욱 중요하다. 특히 재정 여건 면에서 취약한 우리나라 농촌지역의 경우 내생적 발전을 도모하는 문제보다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외부의 지원을 이끌어 내고 그것을 활용하느냐는 문제가 더 절실하다.

3 3

지역간 소득격차 발생요인 분석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 시·군 지역에서의 소득 격차가 어떠한 요인에 의해 발생되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이용 가능한 시·군 단위 통계자료에 기초하여 지역소득 결정식을 추정해 본다. 추정된지역소득 결정식에 의거하여 거시적인 관점에서 농촌지역의 경제활동기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장의분석 결과와 후술하는 제4장과 제5장의 분석 결과를 통해서 농촌지역에서 경제활동기회에 차이를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1. 분석의 목적 및 의의

지역간 (소득)격차 발생 요인에 대한 의문은 오래전부터 지역경제학의 중요한 연구 주제이며 지역개발 정책 담당자들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이 분야의 많은 선행 연구들이 이 사실을 잘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지역간 소득격차 발생요인을 시·군 단위 통계를 사용해 실증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는 주로 통계자료의 미비(특히 자본 관련 통계)에 기인할 것이다.32

여기에서는 지역소득결정 회귀식을 추정해 봄으로써 지역의 소득 격차 발생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더욱 구체적으로는 광역시를 제외 한 163개 시·군의 1998-2002년 동안의 5개년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지역소득 결정식을 추정하고, 지역의 성장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이 이 연구에서 가지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3년 동안에 이루어질 이 연구의 주제,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도농간 소득격 차 완화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 된다. 지역 균형발전은 지 역간 소득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소 득결정 요인의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2차 연도의 연구 테마인 경제활동기회의 농촌지역간 차이를 거시적으로 밝힐 수 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농촌지역 경제활동기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은 미시적인 관점에서의 농촌지역의 경제활동요인 분석과 종합되어 더욱 실제에 가까운 모습을 그려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3장의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소득 결정에 관한 기존 문헌을 고찰함으로써 지역소득결정을 분석하는 데 고려해야 할 설명변수를 선택한다. 다음으로는 이 변수들을 근거로 지역 소득 결정식을 추정한다. 추정 결과를 근거로 지역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중요도를 살펴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지역 성장에 어떠한 요인은 작용하고 있는지 분석한다.

³² 한국에서 지역 격차에 관한 기존 연구는 대부분 광역단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통계자료의 부족이 그 근본적인 이유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 공백은 시·군 단위를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가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생각할 때 매우 아쉽다 하겠다. 이 연구는 시·군 단위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본격적이며 포괄적인 소득결정에 관한 계량분석의 최초의시도이다.

이 장에서 행한 지역소득 회귀분석은 다양한 요인들의 지역소득에 대한 상대적인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성장 요인의 분석은 시·군이 성장하기 위한 최적 방안을 도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분석에 이용한 자료는 서울 및 6개 광역시와 통계자료가 부족한 증평과 계룡 등 2개 출장소를 제외한 163개 시·군의 1998~2002년 동안의 5개년 패널이다.

2. 설명변수 선정을 위한 이론 검토

2.1. 집계생산함수 추정

집계생산함수(aggregate production function)는 산업별 분석이나 개별 기업의 생산함수의 분석과 달리 지역 내 전체 생산을 총합한 것이다. 따라서 기업 생산함수와 달리 집계 생산함수에는 집적효과, 사회간접자본 등과 같은 지역 총생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간접적인 생산요소를 투입한다. 이는 지역 총생산의 결정이 단순히 자본과 노동 등투입물의 결합에 의해 산출물이 결정되는 기업의 생산과 다르기 때문이다. 집계생산함수에서 고려되는 간접적인 생산요소들을 살펴보자.

2.1.1. 집적경제

집적경제(economies of agglomeration)는 기업들이 서로 가까이 입지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일컫는다. 이는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와 연관효과(network effects) 등으로부터 발생한다. 서로 관련된

기업들이 밀접하게 입지할 경우 생산비는 더욱 낮아지게 된다. 이 기업들은 다수의 기업들로부터 값싸게 표준화된 부품을 공급받을 수 있으며, 노동시장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노동의 분업에 따라 전문화는 더욱 심화된다. 그리고 기업은 더 큰 수요시장을 가지게 된다.

제조업 기반이 잘 형성되어 있는 지역은 연관 산업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습득이 유리할 것이다. 집적경제는 기업 활동이 활발한 지역에서 금융, 보험, 기술지원, 교통 통신 등 기업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발생하기도 한다.

집적경제는 지리적으로 기업이 밀집된 지역에 발생하지만 그 지역과 인접한 곳에도 동일한 이익을 가져온다. 다만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을수록 그 이익은 감소될 것이다.

박상우(1986)는 집적이익의 특성과 도시규모 변화와의 관련성을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이 연구는 집적이익을 구체적으로 도시화 경제 (urbanization economies)와 지역화 경제(localization economies)로 구분하여 Translog 생산함수를 이용, 한국과 일본의 공간적 특성을 설명하였다. 홍성웅(1986)의 연구는 4개의 지역유형과 산업별로 집적효과를 지역인구의 함수로 측정하여 콥-더글러스와 CES 생산함수를 추정하였다.

위 연구들은 대부분 집적경제를 힉스 중립적 생산성의 변화로 생산 함수 모형에 도입하고, 도시화 이익 및 지역화 이익을 추정하기 위해 지역 인구밀도(혹은 도시인구)나 지역의 제조업 고용자 수를 대리변수 로 사용하였다.

2.2.2. 사회간접자본

집계생산함수에 포함되는 중요한 또 다른 투입요인으로 지역의 사회간접자본을 들 수 있다. 사회간접자본에 관한 경제학적 연구는 오랜전통을 가지고 있다.33 공공자본에 생산요소로 포함시켜 집계생산함수를 추정한 많은 연구들이 있으며, 이들 연구에서는 공공자본의 산출탄력성을 파악하여 사회간접자본이 민간생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먼저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김성태 등(1992)은 사회간접자본 탄력성의 추정치를 대도시권에서는 0.068, 대도시 근접권과 비도시권에서는 0.30 정도로 보고하였다. Kim et al.(1999)과 김상호 등(1995)은 산출탄력성을 0.38~0.51로 상당히 높게 보고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우리나라에서 공공자본의 산출탄력성은 0.06~0.5로 계측돼 사회간접자본의 1% 증가는 총생산량을 0.06~0.5% 증가시킨다고 볼 수 있다.34

국외 지역별 연구의 경우, Munnell(1990)와 Costa et al.(1987)은 공 공자본의 산출탄력성을 0.15~0.20로, Eberts(1990), Garcia-Mila와 McGuire(1992)은 탄력성을 0.040~0.045로 추정하였다.

이상의 문헌 연구를 종합해 볼 때, 사회간접자본의 높은 산출탄력성 추정치는 생산함수를 추정하는 연구들의 일관된 결과로 보여진다. 국 내 연구들도 사회간접자본의 높은 생산성 효과를 확인하고 있다.

³³ 허쉬만(Hirschman 1958)은 공공자본의 부족이 경제성장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며 지역발전을 결정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³⁴ 사회간접자본에 관한 실증연구 요약은 김상호(1997)를 참조.

2.2.3. 금융발달

Schumpeter(1911)는 금융부문 발전이 실물부문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 중개 기관은 저축의 동원, 경영인의 감독, 투자계획과 위험의 평가, 거래의 원활화 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실물경제의 발전을 유도한다고 주장했다.

Goldsmith(1969)는 한 국가의 금융부문은 자금을 효율적으로 실물부문에 이전시킴으로써 실물 경제의 성장을 가속화시킨다고 주장했다. Greewood and Jovanovic(1990)은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투자기회를 제공하며 수많은 투자자의 위험을 통합하는 금융 중개기관의 선별기능과 이전기능에 주목한다. Bencivenga and Smith(1991)는 은행의 경쟁적인 금융 중개 행위가 실질경제의 성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자원 배분을 유도한다고 주장한다.

국민경제와 달리 지역경제에서는 자본 및 실물의 이동이 거의 자유롭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역금융의 발달과 지역경제의 성장 사이에는 관련성이 존재한다. 첫째, 상당수의 기업은 지역 내에서 금융서비스를 공급받아 지역 내에서 생산활동을 한다. 둘째, 지역 내에서 자금을 공급받아 주로 지역 내의 기업에게 대출하는 금융기관이 존재한다(구재운 1996).

Amos and Wingender(1993)는 미국 내 50개 주의 지역총생산이 지역에 공급된 상업은행의 순대출의 영향을 받는다는 실증결과를 보고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Koo and Kim(1999)은 생산변경함수의 추정을통해 금융 발전이 지역의 생산효율성을 개선시킴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한다고 제시하였다.

2.2. 내생적 성장이론

신고전파 성장이론은 기술진보를 외생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가정한다. 그리고 기술진보와 저축률, 인구 증가율의 변화는 경제성장의 경로를 결정하는 것으로 분석한다. 그러나 내생적 성장이론은 내생적으로 성장을 결정하는 요인을 찾고, 이 요인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관심을 가진다.

2.2.1. 인적 자본과 성장

Romer(1990)는 신고전파 모형에 기술진보를 도입함으로써 기술진보의 원인을 내생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 결과 인적 자본이 성장률을 결정하며, 연구 분야에 더 많은 인적 자본이 투자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Lucas(1988)는 내생적 경제성장이론 중 인적 자본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인적 자본과 경제성장과의 관계에 대해 새로운 이론을 정립했다. 그는 인적 자본의 원천을 교육과 경험을 통한 학습으로 나누어 모형을 전개하였다.

인적 자본과 경제성장간 관계를 분석한 많은 실증연구들이 있다. Mankiw et al.(1992)은 인적 자본의 대리변수로 중등학교 진학률을 사용하였으며, Benhabib and Spiegel(1994)은 초등학교, 중등학교 그리고 대학교의 등록률을 종합해 작성한 변수를 사용하였다.

내생적 성장이론에 근거 인적 자본을 생산함수에 구체적으로 투입하여 지역 생산함수를 추정한 연구로는 김명수(1997), 박광재(1997) 등이 있다. 이들 연구 중 김명수(1997), 박광재(1997)의 연구에서 인적 자본의 산출탄력성의 추정치는 0.305~0.516으로 자본의 추정치를 능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적 자본을 고려한 지역연구는 인적

자본이 지역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고 있다.

2.2.2. 혁신(기술진보)과 지역성장

내생적 성장이론에서는 기술진보가 내생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기술진보 혹은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역량이 경제성장 요인으로 부각된다. 실제 혁신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실증된 바 있으며 (OECD 2000), 혁신과 기술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최근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또한 지역 균형발전 전략으로 지역의 혁신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다.

혁신은 기술진보를 지칭하지만 이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다. 기술 진보가 매우 역동적이며, 다양한 상호 작용의 결과로 이루어지기 때문 이다. 이는 혁신체계(innovation system)라는 정의에서 보다 명확히 파 악된다. 혁신체계는 기술 개발이 기업의 독자적인 산출물이 아닌 고 객, 경쟁자, 연구개발기관, 정부기관 등의 다양한 혁신주체들의 협력 과 교류 및 의사소통을 통해 생성된다(Edqist 1997).

혁신체계는 경제구조나 제도 등이 국가 차원에서 결정될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흔히 국가의 혁신체계가 강조되었다. 그러나 최근 지역 혁신체계가 강조되고 있다. 그 결과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타 지원기관이 클러스터를 구성함으로써 혁신 과정에 필수적인 지식의 상호 교류와 전파를 쉽게 할 수 있는 성장거점 전략이 지역발전 방안으로 제기되기도 한다.

2.3. 기타 소득결정 이론

2.3.1. 정주환경이론

농촌지역의 침체와 도·농간의 격차를 정주 환경의 차이에서 찾는 연구들이 있다. 이 연구들은 농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주거환경, 생활환경 및 생산활동의 하부구조와 서비스 시설 등 정주환경에서 낙 후되어 주민에게 삶의 공간을 제공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 연구들은 농촌지역의 정주환경 개선을 통해 발전 잠재력을 향상 시키는 것이 도·농간 성장 격차의 해소의 전제 조건이라고 주장한다. 이들 연구는 정주 환경의 격차가 발생되는 요인을 찾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분석을 집중하고 있다. 이들 격차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는 지역의 다양한 입지적인 여건, 발전정도 및 외 생적 요인 등이 지적된다.

실증연구를 살펴보면, 이성우(2001)는 사설학원수와 학생당교원수가 클수록 인구 유입이 큼을 보여 주었다. 취업기회와 생활 향상이 교육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믿는 한국인에게 교육기회는 정주결정의 중요한 요인일 것이다.

이런 면에서 지역성장 분석에서 정주이론의 일부 변수는 고려해 볼 가치가 있을 것이다. 특히 교육, 의료, 사회복지 등의 변수가 이에 해 당된다.

2.3.2. 산업구조

농촌소득의 정체는 농촌의 주 소득원인 농업의 쇠락과 깊은 관련이 있다. 제조업 중심의 한국경제의 성장은 농업에 의존하는 농촌의 정체 를 가져온 반면, 대규모 노동력 공급이 가능한 도시의 팽창을 가져왔다. 농업적 특성과 지역소득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농업인구, 영농규모 및 농업 산출량의 확대가 지역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또한 차별화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거나 기타 문화·역사적인 관광지인 지역은 관광을 통해 소득기회를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요즘 대부분의 지자체가 축제나 문화행사를 통해 지역소득을 증대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농촌관광이 소득증대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박시현 등 2003). 이러한 시점에서 관광이 지역소득에 미치는 효과를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최근 한국경제의 서비스업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제조업의 공 동화를 메울 수 있는 대안으로 서비스업이 주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산업 구성의 변화가 지역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서비스업 비중을 고려한다.

문헌 연구에서 인용한 소득결정에 관한 지역연구는 모두 광역시·도에 관한 것으로 전국 시·군 단위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찾을 수 없었다. 이러한 연구 공백은 시·군 단위를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가 제공할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생각할 때 매우 아쉬운 점이다.

3. 회귀방정식 추정

3.1. 사용변수

지역간 소득 격차 분석을 위해서는 종속변수로 지역의 소득활동을

대변할 수 있는 지역내총생산(GRDP)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무난할 것이다. 그러나 전국의 지역내 총생산의 시·군별 통계는 추정되지 않는 실정이다. 단지 경기도, 강원도, 경상남도, 경상북도의 4개 도에서 1995년 혹은 1998년부터 GRDP 시계열 데이터를 발표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분석에서는 GRDP 외 시·군 단위의 경제활동을 대변할 수 있는 변수로 주민세를 사용하다.35

설명변수는 앞서 살펴본 지역소득 결정이론에 근거한 주요 변수를 추출하여 사용한다. 먼저 집적경제를 나타내기 위해 제조업 고용자 수 및 제조업 사업체 수 등 지역화이익을 대변하는 변수를 지역소득 변동의 회귀식에 포함시킨다.36 그리고 집적경제는 인접한 지역에도 그파급효과를 미치므로 이러한 파급효과를 포착하기 위해 주변 지역의경제력을 설명변수로 추가한다. 즉 주변 주요 도시의 지방세를 거리로나누어 인접 도시의 경제력 변수로 사용한다. 인접 도시와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 경제적 효과는 더 높은 비율로 감소할 것이므로 이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인접 도시의 경제력을 거리의 제곱으로 나눈 변수를 동시에 투입한다.

경제적 하부구조가 지역소득의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기 위

³⁵ 지역 소득 대리 변수로 소득할 주민세를 많이 사용하지만 자료 제약 때문에 소득할 주민세에 인구에 균등하게 배당되는 균등할 주민세를 합한 주민세를 소득 자료로 사용한다. 주민세 중 균등할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고 인구에 비례하기 때문에 주민세는 지역의 소득활동을 대변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GRDP와 주민세 두 변수의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경기, 강원, 경남, 경북 4개 도의 GRDP와 주민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두 변수 간 상관계수는 1998년 0.994, 1999년 0.994, 2000년 0.993으로 나타나, 주민세를 GRDP의 대리변수로 간주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³⁶ 집적경제의 이익 중 인구 혹은 인구밀도 등의 도시화이익을 나타내는 변수 는 모든 변수를 인구로 나누어 표준화시키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해 사회간접자본의 중요한 부문인 도로연장을 설명변수로 사용한다. 또한 금융발전이 지역성장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하기 위해 지역금융 의 심화정도를 대변할 수 있는 변수로 은행지점수, 농·축·수협 지점 수와 새마을금고 수 등을 합하여 작성한 은행점포 수를 금융발전 지 표로 투입한다.

내생적 경제성장이론에서 촉발된 인적 자본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그 대리변수로 인구 대비 고등학교 학생 수 혹은 15-64세의 노동 가능한 인구를 대리변수로 사용한다. 이 변수는 지역의 학력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혁신이 지역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지역 혁신역량을 대리하는 변수로 지역의 특허 출원수를 사용한다.

위에서 설명한 소득결정의 주요 변수에 추가적으로 기타 소득결정이론을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변수를 고려한다. 정주 환경의 차이가 지역간 성장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지역의 교육 환경을 나타내는 변수로 사설학원수를 투입한다. 사교육비 지출이 공교육비 지출을 초과하는 현 상황에서 이 변수의 선택은 적절해 보인다. 그리고 의료환경과 사회복지환경요인으로 의료기관수와 복지시설수를설명변수로 사용한다.

농촌지역의 소득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서는 농업비중, 농업규모, 농산물 판매액이 2천만원 이상인 농가 비율 및 영농후계자가 있는 농가 비율 등을 고려한다. 농업비중이 증가할 경우 지역소득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농업의 특성을 대변하는 설명변수들은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경우 지역소득 결정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관광소득의 존재 여부나 규모를 분석하기 위해 관광사업 체수를 설명변수로 사용한다. 그리고 서비스업의 비중을 산업 구성의 차이가 지역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설명변수로 투입한다. 이상을 요약하면 <표 3-1>과 같다.

표 3-1. 지역소득 변동 설명변수의 이론적 배경, 구성 및 출처

이론	적 배경	변수	변수구성	출처, 비고	
	집적 경제	제조업고용자수 제조업사업체수	제조업고용자수/총고용자수 제조업사업체수/총사업체수	시・군・구 주요통계	
생산 함수 이론	효과	주변도시의 경제력	주변도시의 경제력*거리	거리는 한국도로공사의 국도 간 최단 거리 사용	
이론	사회간 접자본	도로	도로연장/면적	km/km ²	
	금융 발달	은행점포수, 새마을금고수	시중은행+금고수/인구	모든 은행의 본점, 지점, 출장소 포함	
내생 성장 이론	인적 자본	고등학교학생수 15-64세 인구 학력수준	고등학교학생수/인구 15-64세 인구/인구 대학졸업생수/인구	학력은 2000년 통계만 사용 가능	
이론	혁신	특허출원건수	특허출원건수/인구	한국특허정보원의 특허기술정보서비스	
	교육 환경	사설학원수	사설학원수/인구	시・군・구 주요통계	
정주 환경 이론	의료 환경	의료시설	병원수/인구	종합병원, 병원, 의원수의 합계	
16	복지 환경	복지시설수	각종복지시설수/인구	아동, 여성, 노인 복지 시설수를 합하여 구함	
	농업 비중	농업비중	농업인구/총인구		
	농업 규모	농업규모	경지면적/농업가구수	가구당 ha	
산업	농가 소득 농가생산 규모		농산물 판매액 이천만원 이상 농가수/농가수	농업센서스, 2000년	
구초	농업 활력	영농후계자	영농후계자농가수/농가수	통계 만 존재	
	서비스 비중	3차 산업 비중	서비스종사자수/총인구	KOSIS, 1999년 이후 통계만 존재	
	관광 수입	관광사업체수	관광사업체수/인구	일반, 국내, 국제 여행사업체수의 합	

주: 시·군·구별 통계자료의 출처가 명시되지 않는 경우 시·군·구 100대 지표 (2002), 시·군·구 주요 통계(2003) 및 KOSIS(Korea Statistical Information System) 로부터 구함.

자료는 광역자치단체와 통계자료가 부족한 증평과 계룡 등 2개 출장소를 제외한 163개 시·군의 1998-2002년 동안의 5개년 패널이다. 가격 변수는 모두 2000년 불변가격으로 환산했으며, 모든 사용 변수는 인구로 나눈 값에 로그를 취해 규모를 조정했다. 37 평균, 표준편차등 사용변수의 기초통계량은 도별로 <부표 1-1>에 제시한다.

3.2. 소득 결정식

지역소득 결정 회귀분석의 추정식은 다음과 같다.

 $y_{ii} = \alpha_0 + \sum_{r}^{R} \alpha_r D_r + \sum_{j=1}^{k} \beta_{j} x_{jit} + \varepsilon_{it, j=1,...,k, i=1,...,N,r=1,...,R}$ (1) 식 (1)에서 하첨자 I, t, r는 각각 시·군 자치단체(i=1,2...N), 시간 (t=1,2,...T) 및 도(r=1,2,...R)을, y는 로그 산출물을, x는 로그 생산요소를 나타내며, 하첨자 j는 투입요소를 나타낸다. 그리고 ε 은 $N(0, \sigma_v^2)$ 인 정규분포를 가지는 확률적 오차항이다. D는 10개 지역별(도) 더미를 나타낸다. 이는 9개도와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 울주군 등 광역시에 포함된 군을 나타내는 총 10개의 더미변수이다.

패널자료를 사용한 추정법에는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s model) 과 확률효과 모형(random effects model)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38 이

³⁷ 이는 이분산(heteroscedasticity)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며, 계수 추정치는 탄력성을 나타낸다.

³⁸ 고정효과 모형은 시계열 단위나 횡단면 단위가 상이한 절편을 가진다는 가 정하에 추정하는 것이다. 설명변수와 절편들이 상관관계가 없을 때 가장 효율적인 추정량이 된다. 반면에 확률효과 모형은 상수항들이 정규분포를 이루는 확률변수라는 가정을 부가한다. 따라서 이모형은 절편항을 시간과

연구는 5개년 163개 시·군의 패널을 사용 충분한 표본 수를 가지고 있어 고정효과 모형에 수반되는 자유도 손실이 문제가 되지 않으며, 통계수집상 회귀분석에서 제외된 다른 투입변수들 특히 민간자본 총량이 투입된 요소들과 상관관계를 가지기보다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고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즉 횡단면 오차항이 동일 도내의 시·군 단위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가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회귀식의 추정에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한다.

식(1)은 패널자료의 고정효과 추정모형으로 설명변수로 고려되지 않는 지역별 차이를 더미변수로 통제하게 된다. 추정식의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해 더미변수가 전체적으로 유의한가 하는 귀무가설 H_0 : $\sum_{j=1}^{10} \alpha_j = 0$ 과 설명변수가 전체적으로 유의한가 하는 귀무가설 H_o : $\sum_{j=1}^{k} \beta_j = 0$ 을 검정할 것이다. 가설검정은 로그우도비 검정을 사용하며, 검정통계량은 $\lambda = -2*[L(H_0) - L(H_1)]$ 가 된다. 여기서 $L(H_0)$ 와 $L(H_1)$ 는 각각 귀무가설이 제약될 때의 로그우도 값과 제약이 없을 때의 로그우도 값을 나타낸다. 만약 귀무가설이 사실일 경우 λ 는 제약식 수를 자유도로 하는 χ^2 분포를 이룬다.

3.3. 추정 과정

3.3.1. 추정 단계

횡단면 단위에 따른 변화를 오차항의 분포로 포착한다. 오차항간 상관관계 와 오차항내 계열상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효율적이 추정법이다.

회귀분석은 4번에 걸쳐 이루어졌다. 첫째는 163개 시·군 전체 자료를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이다. 관찰치 수는 1998~2002년 5년 동안 163개 시·군의 815개이다. 이는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에서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는 일반시를 제외한 138개 통합시·군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표본은 1998~2002년 동안 690개 지역의 패널이다. 통합시·군의 추정치는 일반시를 포함한 경우보다 농촌 간 소득 격차 요인을 보다잘 설명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 번째는 통합시·군 자료에서 다시 통합시를 제외시키고 89개 군을 대상으로 추정한 것이다. 이 경우 샘플수는 89개 시·군의 5년 패널 445개이다. 이 경우 추정치는 통합시를 포함한 경우보다 농촌의 특성을 잘 반영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시의 일부는 일반시의 특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일부 통합시는 대도시이나 군을 흡수한 이유로 포함되어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추정 결과는 통합시·군의 경우와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 여기에서는 설명을 하지 않는다(단, 추정결과는 <부표 1-2>에 수록하였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통합시·군 추정 모형에 기타 설명변수를 추가로 투입하여 추정한 것이다.

3.3.2. 기본 모형과 확장 모형

추정모형은 기본모형과 확장모형으로 나누어진다(그림 3-1). 기본 모형은 지역소득결정이론과 내생적 발전이론에 근거한 주요 변수만을 설명변수로 하여 추정한 것이다(7개의 설명변수). 기본모형은 다시 6 가지로 나누어진다. 먼저 집적경제를 대변하기 위해 제조업 고용자 수 와 제조업 사업체 수를 사용한 경우의 두 가지로 나뉘고 다음은 인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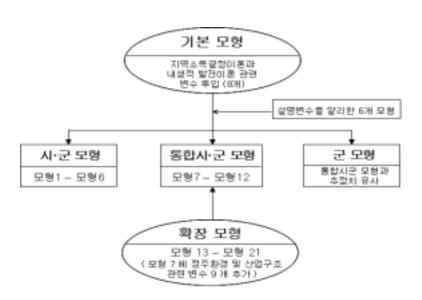


그림 3-1. 추정 단계 및 모형

자본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인적 자본에 $15\sim64$ 세 인구를 사용한 경우, 고등학교학생수를 사용한 경우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

확장모형은 통합 시·군 추정 결과의 모형 7을 기본모형으로 하고 정주환경이론 산업구조론에서 제기되었던 변수들을 추가로 투입해 그 변수들이 지역소득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다. 이들 변수들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동시에 투입하지 않았다.

3.4. 추정 결과

3.4.1. 시・군 소득결정요인(기본모형)

<표 3-2>은 163개 시・군 전체 자료를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의 계

수추정치이다. 추정모형의 상관관계계수(\overline{R}^2)는 $0.727 \sim 0.744$ 로 매우 높은 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추정계수들도 대부분 매우 유의하였다. 두 가지 가설검정도 모두 1% 유의수준에서 기각되어 설명변수와 더미변수가 전체적으로 유의하였다.

추정 결과, 집적경제의 이익은 제조업 고용자수와 제조업 사업체 수모두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단 모형 2의 제조업 사업체 수는 5%에서 유의함). 주변도시의 경제력을 나타내는 두 변수는모든 모형에서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변수추정계수의 부호는 "(주변도시의 경제력)×(1/거리)"의 경우는 양의 부호를, "(주변도시의 경제력)×(1/거리)²"은 음의 부호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변도시의 경제력이 지역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지만, 거리가밀어질수록 그 영향력은 거리보다 더 높은 비율로 감소하는 2차 곡선의형태를 가진다.

사회간접자본을 대변하는 도로연장의 경우 그 유의성은 모형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집적경제 대리변수로 제조업 사업체 수를 사용한 모형인 모형 2, 4, 6의 경우 그 유의수준은 1~5%로 매우 유의한 영향력을 소득결정에 미치고 있다. 그러나 집적경제 대리변수로 제조업 고용자수를 사용한 모형인 모형 1, 3, 5의 경우 그 유의수준은 10%나 그에 약간 못 미치는 것으로 낮게 나타났다.

금융심화를 대변하는 은행점포수의 경우 모두 양의 부호를 갖고 있으며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금융발전이 지역발전을 가져온다는 가설을 지지하고 있다.

내생적 성장이론을 대변하는 인적 자본의 경우 추정 결과는 투입변수에 따라 큰 차이가 있었다. 고등학교 진학률의 대리변수로 지역의학력을 나타내는 고등학교 재학생수는 모형 5~6에서 10% 유의수준

표 3-2. 한국 시·군 소득 결정요인의 회귀분석(종속변수: 주민세)

설명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모형 6
제조업고용자수		0.127 (0.017)*		0.126 (0.017)*		0.131 (0.017)*	
제조업] 사업체수		0.045 (0.020)**		0.047 (0.020)*		0.057 (0.021)*
주변도 (1/거리	E시의 경제력× 믜)	0.518 (0.084)*	0.544 (0.088)*	0.520 (0.084)*	0.547 (0.088)*	0.528 (0.084)*	0.548 (0.087)*
주변도 (1/거리		-0.251 (0.044)*	-0.261 (0.046)*	-0.252 (0.044)*	-0.262 (0.046)*	-0.256 (0.044)*	-0.264 (0.046)*
도로연		0.032 (0.020)***	0.048 (0.020)*	0.029 (0.020)	0.042 (0.021)**	0.025 (0.020)	0.041 (0.021)**
은행점]포수	0.148 (0.031)*	0.119 (0.035)*	0.143 (0.032)*	0.112 (0.035)*	0.133 (0.032)*	0.111 (0.035)*
인적지	· 본			0.366 (0.483)	0.619 (0.497)	0.082 (0.044)***	0.080 (0.048)***
특허출	·원수	0.201 (0.016)*	0.230 (0.016)*	0.202 (0.016)*	0.231 (0.016)*	0.202 (0.016)*	0.231 (0.016)*
	경 기	8.554 (0.300)*	8.740 (0.317)*	8.694 (0.353)*	8.981 (0.371)*	8.239 (0.345)*	8.470 (0.355)*
	강 원	8.897 (0.292)*	9.095 (0.309)*	9.031 (0.341)*	9.326 (0.360)*	8.572 (0.340)*	8.818 (0.350)*
	충 북	8.725 (0.290)*	9.000 (0.306)*	8.868 (0.346)*	9.246 (0.364)*	8.396 (0.340)*	8.719 (0.348)*
지	충 남	8.783 (0.285)*	9.024 (0.303)*	8.927 (0.343)*	9.273 (0.363)*	8.450 (0.337)*	8.742 (0.346)*
역	전 북	10.85 (0.279)*	11.06 (0.297)*	11.00 (0.342)*	11.31 (0.362)*	10.54 (0.328)*	10.79 (0.337)*
더	전 남	8.596 (0.289)*	8.789 (0.307)*	8.744 (0.349)*	9.044 (0.369)*	8.274 (0.337)*	8.516 (0.347)*
미	경 북	8.621 (0.280)*	8.846 (0.295)*	8.766 (0.338)*	9.093 (0.355)*	8.309 (0.327)*	8.578 (0.335)*
·	경 남	8.598 (0.287)*	8.819 (0.303)*	8.743 (0.345)*	9.067 (0.363)*	8.277 (0.336)*	8.543 (0.345)*
	제 주	8.816 (0.311)*	8.881 (0.331)*	8.958 (0.363)*	9.129 (0.386)*	8.511 (0.352)*	8.627 (0.364)*
	기 타	9.178 (0.289)*	9.418 (0.304)*	9.324 (0.347)*	9.669 (0.364)*	8.876 (0.332)*	9.162 (0.340)*
\overline{R}^{2}		0.743	0.727	0.743	0.727	0.744	0.728
$\chi^{2}(6)$		445.5*	397.5*	446.1*	399.1*	449.0*	400.4*
	$\chi^2(9)$	981.3*	942.8*	977.2*	940.2*	984.7*	945.5*

주1. 괄호 안은 표준오차이며, 추정치는 *,**,***는 각각 1, 5, 10%의 유의수준에서 유 의함

주2. 패널모형의 고정효과 추정치이며, $\chi^2(6)$ 와 $\chi^2(9)$ 은 각각 지역효과와 설명변수의 유의성 검정통계량임.

주3. 인적 자본에 모형 3~4는 15~64세 인구를, 모형 5, 6은 고등학교학생수를 투입. 주4. 표본은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한 163개 시·군이며, 모든 변수는 인구로 나눈 값 에 로그를 취해 조정했음(단 도로는 면적으로 나누어 규모를 조정했음).

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의 노동력 인구비율을 나타내는 15~64세 인구비율은 모형 3, 4에서 유의하지 않았다.39 이는 노동력 인구는 지역소득의 변동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지역민의 학력을 직접 대변하는 대학(교)졸업생 비율을 투입해 보았다. 학력 변수는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1개 연도 자료가 사용 가능했다. 지역더미를 투입한 동일한 모형을 추정한 결과, 고등학교, 대학 혹은 대학교 졸업생 비중은 지역소득의 결정에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부분 다른 변수의 유의성이 사라져 추정에 실패했다.

내생적 성장이론의 다른 변수인 지역의 혁신역량을 대변하는 특허출원수는 모든 모형에서 1%의 높은 유의수준에서 유의했다. 이 추정결과는 지역 혁신활동이 소득결정에 매우 높고 유의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케 한다.

지역더미 변수들은 모두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추정치의 크기는 기타지역을 제외할 경우 전북, 강원, 제주도, 충남, 충북 순으로 높았으며, 경기, 전남, 경남 순으로 낮았다.

3.4.2. 농촌지역(통합시・군) 소득결정요인(기본모형)

138개 통합시·군을 대상으로 추정한 결과가 <표 3-3>에 요약되어 있다. 전반적인 추정 결과는 시·군 전체 표본에 대한 추정치와 크게

³⁹ 인적 자본을 나타내는 변수로 15~64세 인구비율 대신 20~49세 인구비율을 투입하였으나 계수추정치의 유의성이 크게 떨어졌다. 이는 20~49세 인구는 소득 기회가 있는 지역에 분포하여 고용인구 등 다른 설명변수와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인적 자본의 대리변수로는 고용가능인구를 나타내는 15~64세 인구가 보다 유용할 것이다.

다르지 않았다. 몇 가지 차이점을 살펴보면, 첫째 제조업 사업체 수보다는 고용자 수가 보다 유의수준이 높았다. 지역의 집적경제는 사업체수보다는 고용자 수에 의해 결정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단지 몇 개의 대기업이 존재하더라도 전체 고용자 수가 많다면 이 지역은 중소기업들이 많이 분포한 지역보다 소득이 더 높아질 것이다. 이 추정 결과는 통합시·군 자료에서 기업규모의 변동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둘째, 도로연장이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 지역소득에 매우 중요한 설명력을 가짐을 보여 준다. 이 결과는 일반도시를 포함한 전체 표본에서는 대부분의 도시들이 도로망을 잘 갖추고 있어 도로연장은 소득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통합시·군 표본에서는 도로연장은 시·군별로 차이가 있으며 또한 지역 소득과 더 높은 상관성이 있음을 제시한다.

셋째, 은행점포수는 소득결정에 대한 설명력을 상실하고 있다. 일반시를 포함할 경우 지역의 금융심화 정도가 소득결정에 중요한 변수였으나 통합시·군 자료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이 결과는 통합시·군의 대부분에서 금융이 심화된 지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대변하고 있을 것이다. 혹은 지역금융의 역할이 통합시·군 단위에서는 매우제한적이어서 경제성장에 미치는 활력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 결과는 이 지역에서 금융기관은 단지 예금을 모아서 이를 역외에 유출시키는 사실을 반영할 수도 있다.

넷째, 인적 자본의 유의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 자본은 통합시·군 단위 표본에서 소득결정에 영향력이 없음을 시사 한다. 이는 통합시·군의 인적 자본의 차이가 크게 다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내생적 성장이론이 제안하는 혁신활

표 3-3. 한국 통합시 • 군 소득 결정요인의 회귀분석(종속변수: 주민세)

	설명 변수	모형 7	모형 8	모형 9	모형 10	모형 11	모형 12
제조업 고용지		0.129 (0.021)*		0.126 (0.021)*		0.130 (0.021)*	
제조업] 수		0.018 (0.023)		0.020 (0.023)		0.020 (0.025)
주변도 (1/거리		0.498 (0.090)*	0.555 (0.092)*	0.509 (0.090)*	0.567 (0.092)*	0.500 (0.090)*	0.555 (0.092)*
주변도 (1/거리	E시의경제력× 리) ²	-0.239 (0.047)*	-0.259 (0.049)*	-0.243 (0.047)*	-0.264 (0.049)*	-0.240 (0.047)*	-0.259 (0.049)*
도로연	년 장	0.102 (0.028)*	0.156 (0.028)*	0.096 (0.028)*	0.145 (0.028)*	0.100 (0.029)*	0.154 (0.028)*
은행점	 포수	0.113 (0.033)*	0.093 (0.036)	0.103 (0.034)*	0.081 (0.037)**	0.110 (0.034)*	0.092 (0.036)*
인적지	· 본			0.814 (0.525)	1.095 (0.536)***	0.025 (0.046)	0.013 (0.050)
특허출	<u>-</u> 원수	0.210 (0.018)*	0.248 (0.018)*	0.212 (0.018)*	0.250 (0.018)*	0.211 (0.018)*	0.248 (0.018)*
	경 기	8.166 (0.326)*	8.129 (0.345)*	8.461 (0.377)*	8.536 (0.398)*	8.079 (0.365)*	8.089 (0.376)*
	강 원	8.481 (0.320)*	8.413 (0.341)*	8.765 (0.368)*	8.807 (0.391)*	8.390 (0.362)*	8.371 (0.374)*
	충 북	8.265 (0.318)*	8.260 (0.339)*	8.568 (0.373)*	8.677 (0.395)*	8.173 (0.362)*	8.217 (0.374)*
지	충 남	8.313 (0.314)*	8.262 (0.337)*	8.618 (0.370)*	8.684 (0.395)*	8.220 (0.359)*	8.219 (0.372)*
역	전 북	10.37 (0.309)*	10.28 (0.331)*	10.69 (0.370)*	10.72 (0.395)*	10.28 (0.351)*	10.24 (0.363)*
더	전 남	8.111 (0.318)*	8.022 (0.340)*	8.424 (0.377)*	8.456 (0.401)*	8.022 (0.360)*	7.981 (0.372)*
미	경 북	8.173 (0.307)*	8.130 (0.327)*	8.478 (0.364)*	8.550 (0.385)*	8.086 (0.348)*	8.089 (0.359)*
	경 남	8.117 (0.318)*	8.042 (0.338)*	8.423 (0.373)*	8.465 (0.396)*	8.027 (0.360)*	8.000 (0.371)*
	제 주	7.991 (0.351)*	7.792 (0.374)*	8.289 (0.400)*	8.211 (0.426)*	7.908 (0.384)*	7.755 (0.398)*
	기타	8.764 (0.315)*	8.724 (0.335)*	9.072 (0.372)*	9.149 (0.394)*	8.680 (0.353)*	8.685 (0.364)*
	\overline{R}^{2}	0.760	0.747	0.760	0.748	0.759	0.747
	$\chi^2(6)$	420.3*	384.4*	422.7*	388.6*	420.5*	384.5*
	$\chi^{2}(9)$	868.0*	834.6*	868.2*	837.2*	868.1*	833.6*

주. 관찰치수는 광역자치단체와 일반시를 제외한 전국의 138개 통합시·군이며, 다른 모든 사항은 <표 3-2>의 경우와 동일함.

동은 여전히 매우 유의하게 추정되었다.

이상의 추정 결과에서 각 추정치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추정변수 중 주변도시의 경제력은 매우 높은 탄력성을 가지고 있으나 그 영향력은 인접성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그 영향력은 급속히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인접성이 절대적으로 중요함을 제시한다. 소득이 높은 도시가 지근거리에 있다면 인접도시도 소득이 매우 높을 것이다.

<표 3-3>을 기준으로 집적경제를 대변하는 변수들의 소득 탄력성은 제조업 고용자수의 경우 0.126~0.130이였으며, 제조업 사업체 수의경우 0.018~0.020으로 나타났다. 도로연장의 소득 탄력성은 그 평균이 제조업 고용자수와 비슷한 0.096~0.156 정도로 추정되었다. 특허출원수의 탄력성은 0.210~0.250으로 나타나 주변경제력의 추정계수다음으로 설명변수 중 두 번째로 높았다.40

계수 추정치의 크기만 살펴볼 때 특허 출원수의 증가가 전통적인 생산요소의 증가와 비슷하게 소득 증가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허 출원수는 그 지역의 기술 개발활동의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역의 기술 개발활동을 강화시킴으로써 지역소득 증가에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⁴¹

⁴⁰ 지역소득의 인접 도시의 경제력에 대한 탄력성은 주변경제력의 두 추정변수의 단순한 합이 아니라 거리의 함수이다.

⁴¹ 특허 출원수는 추정 기간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다른 변수들의 추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이를 제외한 다른 변수들만을 투입한 회귀식을 추정해 보았다. 그러나 추정 결과는 포함한 경우와 큰 차이가 없었다<부표 1-3>.

3.4.3. 농촌지역(통합시・군) 소득결정요인(확장모형)

이제 통합시·군의 추정 결과의 모형 7을 기본으로 기타 소득 결정이론에서 제기되었던 변수들을 추가로 투입해 그 변수들이 지역소득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다. 추정 결과가 <표 3-4>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사설학원 수, 의료기관 수, 복지시설 수 등을 사용, 이들 변수들이 정주 환경을 개선을 통해 지역에 인구를 유입시킴으로써 지역소득의 증가를 간접적으로 유발하는지를 살펴보았다(모형 13~15). 사설학원수의 추정치는 영에 가까워 유의하지 않았으며, 의료기관수는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게 추정되었으며, 복지기관수는 음의 부호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첫째, 교육 환경이 지역소득에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결과는 통합시·군간 교육 환경의 차이가 크지 않음을 시사한다. 주요 교육이 대부분 일반시나 특별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일 것이다.

둘째, 의료기관은 소득과 인구가 높고 많은 지역에 몰려 있을 것이며, 추정 결과는 이러한 사실을 반영할 것이다. 의료기관이 정주 환경의 중요한 결정인자임을 알 수 있다.42

복지기관은 정주 환경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추정 결과는 복지시설이 저소득층을 위해 설립되므로 지역소득과 음의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추정치가 유의하지 않아 두 요인의 상대적인 효과는 알 수 없다고 하겠다.

⁴² 이 결과는 단순히 두 변수의 상관관계를 반영할 것이다. 의료기관이 인구 유입을 통해 소득 증가를 유발할 수 있지만 소득이 높은 지역이 인구가 많 고 병원을 유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표 3-4. 한국 통합시・군 기타 소득 결정요인의 회귀분석

기리 비스	정주 환경			산업 구조					
설명 변수	모형 13	모형 14	모형 15	모형 16	모형 17	모형 18	모형 19	모형 20	모형 21
제조업 고용자수	0.129 (0.021)*	0.128 (0.021)*	0.127 (0.021)*	0.113 (0.021)*	0.129 (0.021)*	0.156 (0.056)*	0.152 (0.056)*	0.140 (0.021)*	0.201 (0.023)*
주변도시의 경제력/거리	0.499 (0.090)*	0.466 (0.090)*	0.494 (0.090)*	0.488 (0.088)*	0.496 (0.090)*	0.290 (0.227)	0.261 (0.232)	0.499 (0.089)*	0.421 (0.093)*
주변도시의 경제력/거리 ²	-0.239 (0.047)*	-0.222 (0.048)*	-0.238 (0.047)*	-0.232 (0.046)*	-0.238 (0.047)*	-0.149 (0.119)	-0.135 (0.122)	-0.240 (0.047)*	-0.192 (0.049)*
도로연장	0.104 (0.029)*	0.085 (0.029)*	0.098 (0.028)*	0.080 (0.028)*	0.100 (0.029)*	0.076 (0.076)	0.074 (0.076)	0.105 (0.028)*	0.065 (0.030)**
은행점포수	0.113 (0.033)*	0.108 (0.033)*	0.112 (0.033)*	0.069 (0.033)**	0.113 (0.033)*	0.195 (0.104)**	0.207 (0.104)**	0.109 (0.033)*	-0.0001 (0.038)
특허출원수	0.210 (0.018)*	0.203 (0.019)*	0.207 (0.018)*	0.187 (0.018)*	0.210 (0.018)*	0.253 (0.054)*	0.246 (0.056)*	0.199 (0.019)*	0.180 (0.021)*
사설학원수	-0.00005 (0.0001)								
의료기관수		0.114 (0.052)**							
복지시설수			-0.012 (0.009)						
농업비중				$^{-0.122}_{(0.022)^*}$					
농업규모					-0.0000 8 (0.0002)				
농가소득						-0.064 (0.067)			
영농후계자							0.052 (0.102)		
여행사업체수								0.054 (0.024)**	
서비스업비중									1.245 (0.114)*
R^{2}	0.759	0.761	0.760	0.769	0.759	0.705	0.704	0.761	0.792
$\chi^{2}(6)$	420.4*	425.2*	422.1*	449.8*	420.4*	84.77*	84.05*	425.1*	435.5*
$\chi^{2}(9)$	863.8*	852.8*	869.8*	887.9*	866.5*	226.56*	214.9*	869.6*	764.4*

주: 통계자료 제약으로 모형 18-19는 2000년 1개 연도의 추정치이며, 모형 21은 1999-2002년 4개 연도의 추정치임. 다른 모든 사항은 <표 3-3>과 동일함.

모형 16~19에서는 농업 특성을 대변하는 변수들이 지역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농업비중, 농업규모, 농산물 판매액 2천만원 이상 농가구 비중 및 영농후계자 가구 비율 등을 기본 모형에 추가투입하였다. 추정 결과, 농업비중은 음의 부호로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하게 추정되었다. 그러나 다른 변수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모형 17~19는 농업센서스 자료로 2000년 1개 연도의 관찰치를 추정한 관계로 다른 모형에 비해 자유도가 크게 떨어진 것도 추정의 유의성을 낮췄을 것이다. 농가당 경지면적으로 구성된 농업규모와 농산물 판매액이 2천만원 이상 농가구 비중은 음으로 추정되었으며, 영농후계자농가구 비중은 양으로 추정되었다.

추정 결과는 농업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소득이 낮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농업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농업규모와 농업매출액의 증가는 농업소득의 증가를 통해 지역소득을 증가시키지만지역의 농업비중의 증가를 가져와 지역소득을 감소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추정 결과는 후자가 전자를 상쇄할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 영농후계자도 동일한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모형 20에서는 관광소득의 여부나 크기를 반영하기 위해 여행업체수를 투입했다. 여행업체수의 계수 추정치는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이 결과는 관광소득이 큰 지역일수록 지역소득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확인케 한다. 관광자원을 활용하거나 지역축제로 관광객을 흡수함으로써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음을 제시한다. 그리고 농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소득 증가정책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모형 21은 서비스업 비중은 서비스업 종사자 비중이 증가한 지역일수록 소득이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경제적으로 서비스업 비중의 증가가 지역소득 증가를 가져오고 있음을 시사한다.

4. 지역 소득 성장 요인

4.1. 분석식

소득결정식의 추정으로부터 지역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과 그 크기를 살펴보았다. 이제 이러한 변수들이 실제 지역소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각 변수의 성장기여도를 추정해 보자.

성장기여도는 각 변수의 계수추정치와 변수 성장률의 곱으로 결정될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회귀분석의 소득추정식 (1)에서 $v_{i(t-1)}$ 을 제거하여 다음과 같은 소득결정의 차분식을 얻을 수 있다.

$$y_{it} - y_{i(t-1)} = \sum_{i=1}^{k} \beta_{i}(x_{jit} - x_{ji(t-1)}) + (\varepsilon_{t} - \varepsilon_{(t-1)})$$
(2)

통퀴비스트 근사법(Tornqvist approximation)을 사용할 경우 연속적인 성장률은 자연대수의 차이로 대체된다. 식 (1)에서 y와 x는 산출량(Y)과 설명변수(X)의 로그값이므로 산출량과 설명변수의 성장률은 각각 $\dot{y}=y_t-y_{t-1}=\ln(Y_t)-\ln(Y_{t-1}), \quad \dot{x}=x_t-x_{t-1}=\ln(X_t)-\ln(X_{t-1})$ 으로 표시된다. 따라서 식 (2)에 계수추정치 $\hat{\beta}$ 를 대입하여 소득성장률을 변수의 증가율과 그 추정계수의 곱을 구할 수 있다.

$$\dot{y} = \sum_{j=1}^{k} \widehat{\beta}_{j} \times \dot{x}_{j} + \dot{\varepsilon} \tag{3}$$

위 식으로부터 변수 j의 성장기여도를 $g_j = \widehat{\beta}_j \times \widehat{x}_j / \sum_j \widehat{\beta}_j \times \widehat{x}_j$ 로 표시할 수 있다. 여기서 g_j 는 독립변수 전체가 설명하는 지역소득 변동 중에서 변수 j가 설명하는 부분이다.43

⁴³ 위 방법은 성장률을 각 요인으로 분해한다는 점에서 성장회계식과 유사하다. 그러나 전통적인 성장회계식은 성장 요인을 자본, 노동 등의 생산요소

지역소득의 성장 요인을 다양한 변수들의 기여도로 나타내기 위해 시·군 전체 자료를 회귀분석에서 유의했던 주요 변수들을 모두 설명 변수로 투입해 식 (1)을 다시 추정하였다. 투입된 설명변수는 제조업 노동자(Man), 주변도시경제력/거리(Vic1), 주변도시경제력/거리2(Vic2), 도로연장(Road), 은행점포수(Bank), 농업비중(Agri), 여행업체수(Tour), 서비스비중(Serv) 등 총 8개이다. 이 중 서비스비중이 1999년부터 자료가 존재하므로 1999-2002년의 4개 연도 패널자료를 사용하였다. 고정효과 모형의 추정 결과가 식 (4)에 제시되어 있다.

$$y = const. + 0.204 * Man + 0.714 \times Vic1 - 0.353 \times Vic2 + 0.020 * Road$$

$$(0.017) \quad (0.086) \quad (0.045) \quad (0.025)$$

$$+ 0.204 \times Bank - 0.068 \times Agri + 0.098 \times Tour + 0.0001 \times Serv$$

$$(0.036) \quad (0.018) \quad (0.022) \quad (0.00003)$$

계수추정치는 도로연장을 제외한 모든 변수가 1% 유의수준에서 유의했다. 그리고 R^2 는 0.719로 나타났다. 추정으로부터 4년 자료의모든 지역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추정계수를 구한다.44 위 추정치를 근거로 $1999\sim2002$ 년의 소득 성장률을 각 요인의 기여도로 분해한다.

의 몫으로 나누어 생산요소의 기여도는 전체 생산량 증가에서 각 요소가 차지하는 부분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 연구는 직접적인 생산요소를 사용하 지 않기 때문에 기여도가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요소 몫을 나타내지 않는 다. 또한 이 연구의 계수추정치는 모든 지역에 공통으로 적용된다는 점도 지역별로 상이한 요소배분율을 사용하는 전통적인 연구와 다른 점이다.

⁴⁴ 성장 요인의 분석에서 혁신요인의 대리변수인 특허 출원수를 제외한다. 특 허 출원수는 지역소득의 결정에 유의하며 높은 영향력을 가진 요인으로 나 타났으나 추정 기간 연도별 증가율이 매우 커 지역성장에 이상적으로 높은 기여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4.2. 분석 결과

한국 시·군의 소득 성장 요인의 연평균 증가율과 성장기여도의 추정 결과가 일반시, 통합시, 군 지역으로 구분되어 <표 3-5>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일인당 주민세 증가율은 군이 0.204로 가장 높았으며, 일반시가 0.134로 가장 낮았다. 일인당 주민세 증가율은 실제 소득의 변화와인구 변화를 반영한 것이며, 그 절대적인 크기가 아닌 증가율을 나타낸다. 이 점을 반영 주민세 증가율은 인구가 감소한 지역에서 높게, 그리고 인구가 증가한 지역에서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 노동자 수, 즉 제조업 노동자가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연평균 증가율은 일반시 35.1%, 군 지역 19.6%, 통합시 15.7%로 나타

표 3-5. 한국 일반시, 통합시, 군 지역 성장 요인의 연평균 증가율 및 성장기여도

지역	주민세	제조업 노동자	주변 경제력	도로 연장	은행 점포 수	농업 비중	여행 업체 수	서비스 비중
일반시	0.134	0.351	0.317	0.256	-0.150	-0.140	0.283	0.062
글 빈 시 		0.510	0.405	0.037	-0.218	0.068	0.198	0.000
통합시	0.160	0.157	0.243	0.166	-0.152	-0.091	0.243	0.044
		0.409	0.559	0.043	-0.396	0.079	0.305	0.000
군	0.204	0.196	0.235	0.063	-0.286	0.063	0.831	0.049
		0.390	0.411	0.012	-0.568	-0.042	0.796	0.000
전체	0.201	0.216	0.260	0.164	-0.232	-0.859	0.637	0.053
		0.263	0.279	0.020	-0.282	0.348	0.373	0.000

주. 위 칸은 각 변수의 1998-2002년 연평균 증가율을, 아래 칸은 성장기여도를 나타 냄. 2002년 기준으로 각 시·군이 그룹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가중치로 사용한 가 중 평균치임. 군 지역의 경우 대도시 성격을 가지는 기타지역을 제외함.

났다. 일반시가 가장 빨랐으며, 군이 통합시보다 더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득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일반시가 51%로 가장 높았으며, 통합시와 군 지역은 각각 40.9%와 39%로 추정되었다.

전체적으로 제조업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기준 연도가 IMF 경제위기의 구조조정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던 1999년이 기준 연도이기 때문이다. 군의 제조업 성장률이 통합시보다 높게 나타나 것은 초기 값이 매우 작아 약간의 성장이 높은 비율로 잡혔기 때문이다.

주변 경제력의 성장률은 인접 도시의 지방세를 거리와 거리제곱으로 나눈 두 변수의 효과를 합해 보고하였다. 주변 지역 경제력은 일반시가 31.7%로 가장 빨리 증가했으며, 통합시와 군은 각각 24.3%와 23.5%로 비슷했다. 한편 소득 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일반시 40.5%, 통합시 55.9%, 군 41.1%로 추정되었다. 통합시가 상대적으로 대도시에 인접해 주변 도시의 경제력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시에서는 자체적인 제조업 증가가 소득 증가를 가져오고 있는 반면에 통합시에서는 주변 지역 경제력이 자체 제조업 비중보다 더 중요한요인이었다. 그러나 군은 자체 제조업과 주변 경제력 모두 다른 지역에 비해 낮아 소득성장의 취약성을 시사한다.

도로연장의 연평균 증가율은 일반시 25.6%, 통합시 16.6%, 군 6.3% 순으로 추정되었다. 그 소득 기여도는 일반시 3.7%, 통합시 4.3%, 군 1.2%로 나타났다. 탄력성 추정치가 매우 낮았기 때문에 증가율에 비해 그 기여도가 낮았다. 도로건설은 인구가 집중된 대도시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일반시의 도로 증가율은 통합시와 군에 비해 각각 1.5배와 4배 정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시의 도로의 소득기여도는 통합시보다 오히려 더 낮았으며, 군보다는 약 3배정도에 머물렀다. 일반시에서 도로건설의 증가율에 비해 그 소득기여

도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은행점포수의 경우 IMF 경제위기 이후 금융 구조조정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수가 모든 지역에서 크게 감소했다. 대도시와 일반시가 약15%로 비슷하게 감소했으나 군은 28.6%로 크게 감소했다. 모든 지역에서 은행 감소는 소득 증가율의 후퇴를 가져왔다. 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마이너스 21.8~56.8%로 나타났으며, 군 지역의 타격이 특히 심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군 지역은 소득활동이 아주 낮아 금융 구조조정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일 것이다.

농업비중은 일반시와 통합시에서 각각 14%와 9.1% 감소했으나, 군은 6.3% 증가했다. 농업비중의 감소는 일반시와 통합시에서 각각 6.8%와 7.9%의 소득 증가에 기여했으며, 반면에 군은 농업비중의 증가로 약 4.2% 소득이 감소했다. 군 지역 농업비중의 증가는 농업에 종사하는 노년층을 제외한 인구유출에 기인할 것이다. 군 지역의 농업비중의 증가가 상대적인 소득 감소를 가져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행업체수의 증가는 군 지역에서 83.1%로 일반시의 28.3%와 통합시의 24.3%를 크게 앞지르고 있다. 그 소득 증가에 대한 기여도도 군지역에서 79.6%로 가장 높았다. 통합시는 30.5%로 군 지역의 절반 정도에 그쳤으며, 일반시는 약 20%로 군의 1/4 정도로 상대적으로 크게낮았다. 여행업체수는 최근 여가 수요의 확대와 더불어 크게 증가했을 것이다. 이는 관광소득 증가에 대한 지자체들의 노력도 반영하고 있을 것이다. 특히 다른 소득창출의 기회가 많지 않은 군 지역에서 여행업체수의 증가가 크고 소득기여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관광기회의 확대가 농촌소득 증대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음을 제시한다.

서비스비중은 일반시 6.2%, 군 4.9%, 통합시 4.4% 등으로 증가했으나, 소득에 대한 기여도는 거의 없었다. 이는 소득의 서비스비중 탄력

성이 거의 영에 가깝기 때문이다. 서비스업 비중의 증가가 지역 소득의 증가로 이어지기 위해 서비스업의 고도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상 지역별 성장 요인의 증가율 및 성장 요인을 요약하면, 일반시의 소득성장에는 제조업 비중이 가장 큰 기여를 했으며 주변 경제력이 그 다음으로 높은 기여를 했다. 이 두 요인이 소득 증가의 90% 정도를 설명하고 있다. 통합시의 경우에는 주변경제력, 제조업 비중, 여행업체수 순으로 기여도가 높았다. 주변경제력이 제조업 비중보다 더중요하게 나타나 일반시의 경우와 대조적이다. 또한 여행업체수가 제조업에는 못 미치나 상당히 중요한 요인임도 주목할 만하다. 군 지역의 성장에는 여행업체수, 주변 경제력, 제조업 비중의 순으로 기여도가 높았다. 여행업체수의 성장 기여도는 주변경제력과 제조업을 합한 것과 비슷했다. 이는 군 지역의 제조업 기반의 취약성을 암시한다.

5. 분석 결과 종합

이상에서 추정한 계수 추정치를 <표 3-6>에 종합·정리했다. 표에서 기본모형과 확장모형의 추정치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기여도 추정모형은 기본모형과 확장모형의 회귀분석에서 유의했던 주요 변수들을 모두 설명변수로 투입해 식 (1)을 다시 추정한 결과이다.

< 표 3-6>에서 탄력성은 해당 설명변수의 1단위 변화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기여도 추정모형에서 제조업의 탄력성이 0.204라는 것은 제조업고용자수 1단위 변화가 지역의 소득에 0.204만큼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탄력성은 모형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나타나지만 기본적인 경향은

표 3-6. 모형별 탄력성 추정치의 종합

- 	기본 시·군 모형	모형 통합시 • 군모형	확장모형	기여도 추정모형
	시·교 도명 (모형1~모형6)	(모형7~모형12)	(모형 13~21)	(식 4)
제조업고용자수	$0.126 \sim 0.131$	$0.126 \sim 0.130$	0.113~0.201	0.204
제조업사업체수	$0.045 \sim 0.057$	Not-Sig.	Not-Incl.	Not-Incl.
주변경제력/거리	0.518~0.548	$0.498 \sim 0.567$	$0.421 \sim 0.499$	0.714
주변경제력/거리 ²	$-0.251 \sim -0.264$	$-0.239 \sim -0.259$	$-0.135 \sim -0.24$	-0.353
도로연장	$0.029 \sim 0.048$	$0.100 \sim 0.156$	$0.065 \sim 0.105$	Not-Sig.
은행점포수	0.111~0.148	0.081~0.113	$0.069 \sim 0.207$	0.204
고등학교학생수	$0.080 \sim 0.082$	Not-Sig.	Not-Incl.	Not-Incl.
15-64세 인구	Not-Sig.	1.095	Not mer.	
특허출원건수	0.201~0.231	0.210~0.250	$0.180 \sim 0.253$	Not-Incl.
사설학원수			Not-Sig.	
의료시설			0.114	
복지시설수			Not-Sig.	
농업비중			-0.122	-0.068
농업규모			Not-Sig.	
농가소득			Not-Sig.	
영농후계자			Not-Sig.	
여행사업체수			0.054	0.098
3차 산업 비중			1.245	0.0001

- 주1. 기본모형에서 시·군모형은 표본은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한 163개 시·군의 추정치이며, 통합시·군 모형은 138개 통합시·군을 대상으로 한 추정치임. 확장모형은 기본모형에 정주환경과 산업구조를 대변하는 변수를 추가로 투입한 모형임. 그리고 기여도 추정모형은 소득기여도를 추정하기 위해 사용한 모형임.
 - 2. 탄력성 추정치의 구간 값은 각 변수 투입을 달리하면서 추정한 모형들의 결과를 모두 포함함. 예를 들어 시·군 모형은 모형1부터 모형 6까지에서 추정된 탄력성 값을 나타내고 있음.
 - 3. Not-Sig. 유의하지 않음을, 그리고 Not-Incl.은 모형에 포함되지 않은 변수임.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표 3-6>에서 제시한 추정 결과로부터 지역소득 결정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먼저 지역경제이론에서 전통적으로 강조되어 온 집적경제(제조업고용자수와 사업체 수, 주변 지역 경제력)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역소득에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도로연장과 금융발달은 집적경제보다 낮은 영향력을 가지나 매우유의한 변수이다. 세 번째 내생적 성장이론의 경우 혁신변수로 설정한특허출원건수는 집적경제와 같은 중요성을 가지나 인적 자본은 전반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모형별 탄력성 추정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탄력성 추정치는 주변 경제력과의 거리가 가장 높은 값을 보여 주고 있다(기여도 추정모형의 경우 0.714). 이는 주변 경제력의 거리의 변화가 지역의 소득 변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 준다. 다만 주변도시 경제력의 탄력성은 거리의 함수로서 주변 도시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주변경제력/거리²"값은 -0.353) 그 영향력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다른 변수들의 경우 탄력성 즉 변수들의 영향력은 특허출원건수가 가장 컸으며(다만 기여도 추정모형에서는 특허출원건수를 제외), 제조 업고용자 수, 은행점포 수, 도로연장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정주환경과 산업구조 변수를 추가하여 통합시·군 자료 대상으로 추정한 결과에 의하면 사설학원수와 복지시설은 유의하지 않았으나 의료시설이 유의하여 지역소득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산업구조 변수 중 농업비중은 음으로 유의하게 추정되어, 농업비중의 증가가 지역소득의 증가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기타 "농가소득(2천만원 이상 농가소득비율)"과 농업규

모는 지역소득과 음의 관계를 가지나 유의하지는 않았으며, 영농후계 자가구비율은 양으로 추정되었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여행업체 수와 서비스비중은 양으로 유의하였다.

변수별 탄력성의 크기는 실제 지역의 성장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군의 성장 요인을 분석한 결과, 성장기여도는 가장 중요한 성장 요인으로 제조업 고용자수의 증가와 주변 경제력을 꼽을 수 있었다. 이러한 성장 요인의 상대적인 중요성은 시·군별로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예컨대, 군 지역의 성장에는 여행업체수, 제조업 비중의 순으로 기여도가 높았던 반면에 일반시의 성장에는 제조업비중, 주변 경제력의 순으로 기여도가 높았다.

지역성장에 관한 실증분석은 전통적인 변수들의 중요성을 확인케했지만 특허출원건수와 같이 지역의 기술 수준을 나타내는 변수와 여행업체 수와 같이 지역의 관광활동을 나타내는 변수도 지역 성장에 높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도시와의 거리가 농촌지역의 경제발전에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농촌지역의 성장이 지역 밖에서 이루어지는 외생적 요인에 의해 크게 좌우한다는 외생적 발전론의 중요성을 실증해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성장거점 개발 발전정책이 농촌지역의 성장에 아직까지도 유효하다는 것을 말하여준다. 다른 측면에서 농촌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점도 알려준다. 농촌지역의 경제 성장은 국토 발전정책의 큰 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이 점과 관련하여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경우 농촌지역의 소득증대에 크게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특허 출원건수가 지역의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사실로부터 지역성장을 위한 기술 개발 노력의 중요성을 유추할수 있다. 이 결과는 최근 부쩍 논의되고 있는 혁신이론이 농촌의 발전전략으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준다. 다만 최근의 혁신 관련 논의와 정책 수단은 혁신이 이루어지는 여건 조성을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은 혁신 활동의 결과로 얻어지는 기술 향상(특허 출연)이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셋째, 제조업 발달이 지역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이 결과는 농촌지역으로의 기업유치가 여전히 지역발전의 중요한 수단임을 다시 한 번일깨워 주고 있다.

넷째, 군지역에서 관광 관련 사업체 수의 증가가 지역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농촌지역경제의 소프트화 노력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 준다. 지역경제의 소프트화는 단순한 서비스산업 비중의 증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지역의 주력 산업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가진 서비스 산업의 육성이 중요하며 관광산업의 육성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서비스산업의 전반적인 생산성의 제고도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농촌지역의 경제성장은 농업비중과 역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결과는 전통적으로 농촌지역의 기반산업인 농업의 쇠퇴가 농촌지역의 경제발전을 가로막은 주요인이었으며, 또한 농업을 대체할 만한 다른 산업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이 소득이 높다는 점을 실증해 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농촌지역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농업의 비중을 낮추는 전략이 바람직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농업의 비중 저하는

도시와의 거리, 제조업의 입지 등 주로 외생적인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지역 내의 인위적인 농업 비중 저하 노력은 제한적인 의미를 가질 것이다. 오히려 외부 기업의 꾸준한 유치 노력과 병행하여 농업자원을 바탕으로 하는 가공 산업과 관광 산업의 개발이 농촌지역에서 추진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이 분석에서는 시·군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통계자료 미비로 인해 변수 유용성의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생산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시·군의 민간자본을 지역 소득결정식 추정에 투입할 수 없었던 점이 가장 아쉬웠다. 사회간접자본의 총량도 자료한계로 도로연장이라는 대리변수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내생적 성장이론을 나타내는 인적 자본 변수도 시계열의 한계로 적절한 변수를 구성할 수 없었다. 향후 변수 보완을 통한 지역소득 결정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4 3

고용기회의 농촌지역간 차이 분석

이 장에서는 농촌지역에서의 고용기회가 지역별로 어떻게 다르고 그 차이가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나타나는지를 밝혀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고용 관련 지역별 통계자료와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통계분석을 행하고, 보완적으로 인구와 고용기회를 내생변수로 하는 동시방정식을 추정한다. 또한 사례지역 연구를 통하여 통계분석에서 나타나지 않는 농촌지역의 고용 특성을 살핀다. 이 장의 분석 결과는 농촌지역의 경제활동이 외생적인 측면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제3장의 분석 결과를 고용 측면에서 보완하고 있다 하겠다.

1. 분석의 목적 및 의의

농촌지역의 경제활동기회의 차이는 해당 지역의 일자리 창출 능력에 달려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해당 지역의 일자리 창출 능력은 그 지역 고용시장의 특성과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인 여건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 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농촌지역에서의 고용기회가 지역별로 어떻게 다르고 그 차이가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나타나는지를 밝혀 보고자 한다. 이

를 위해 먼저 농촌지역에서 고용기회, 곧 일자리는 어떻게 창출되고 소멸되는지, 그리고 일자리의 변화는 어떠한지를 지역별로 살펴본다. 여기에서는 임금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 원 자료를 이용하여 일자리의 동태성을 관찰한다.

다음으로 지역별 고용기회의 차이를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어떠한 것이 있는지 이들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계량 경제학적 통계분석을 시도하기로 한다. 이 결과에 기초하여 농촌지역 의 고용기회와 관련된 거시적 특성을 조명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연구에서는 1개의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사례 조사를 실시한다. 사례 조사는 말하자면 거시적 차원의 접근방법에 대한 미시적 차원의 보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전국 범위의 통계자료에서 규명되지 않는 부분이나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을 사례 지역의 구체적인 사실로부터 새롭게 해석하기 위한 목적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이 장의 분석 결과는 이 과제의 제2차 연도 연구 주제인 경제활동기회의 농촌지역간 차이를 이해하는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이 과제의 궁극적인 지향점인 도농간 소득격차 완화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판단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결국 도시와농촌의 소득 격차 완화는 고용기회의 격차 완화이고, 농촌지역간의 경제활동기회의 차이란 한마디로 고용기회이기 때문이다.

또한 제4장은 제3장과 제5장의 중간 부분에 위치하면서 제3장과 제5장의 분석 결과를 보완해 줄 것이다. 제3장에서는 지역 소득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macro)인 측면이 모델을 통해 논의되었다. 후술하는 제5장에서는 사례 지역에서의 농업 관련 경제활동의 내용을 미시적(micro)인 조사를 통해서 밝힐 것이다. 제4장은 주로 고용데이터에 국한시켜 업종과 지역을 논한다는 측면에서 중간(meso)단계의 분

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부분을 결합하고 서로 보완함으로써 농 촌지역간 경제활동기회가 왜 차이가 나는지를 보다 종합적으로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농촌지역간 고용기회의 차이

2.1. 종사자 수에 의한 도농간 차이

통계청의 '시·군·구 주요통계'로부터 지역별 종사자 수에 대한 통계를 얻을 수 있다. 먼저 <표 4-1>에 따르면, 통합시를 포함한 농촌지역의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종사자수는 2003년의 경우, 482만 3천명으로 종사자수 전체의 33.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01년과 2002년에 32.2%로 약간 감소하고 있으나 대체로 비중의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1. 지역별 사업체 종사자수, 1999-2003

단위: 명, %

	전체		도	시	농촌		
	종사자수	백분율	종사자수	백분율	종사자수	백분율	
1999	12,920,289	100.00	8,661,841	67.04	4,258,448	32.96	
2000	13,604,274	100.00	9,080,991	66.75	4,523,283	33.25	
2001	14,109,641	100.00	9,568,772	67.82	4,540,869	32.18	
2002	14,608,322	100.00	9,907,970	67.82	4,700,352	32.18	
2003	14,637,560	100.00	9,814,175	67.05	4,823,385	32.95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시·군·구 주요통계』

다음으로 사업체규모별 종사자 분포를 살펴보면, 분포에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차이는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표 4-2>). 대체로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체의 종사자가 많다는 것이 농촌지역의특징이라 할 수 있다. 곧 5~9명 규모의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100명미만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체의 비중이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에서높다. 이와는 반대로 100명이상 규모의 사업체 비중은 도시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45

업종별 구성을 보면, 두드러지는 특징으로서 농촌지역에 제조업 종사자의 비중이 도시지역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표 4-3>. 곧 농촌지역의 제조업 종사자 비중은 31.7%로 도시지역의 제조업 종사자

표 4-2. 지역별·사업체규모별 종사자 수 구성. 2003

단위: 명, %

	전국		도	시	농촌	
전체	14,729,166	100.00	9,905,781	100.00	4,823,385	100.00
1~4명	4,836,729	32.84	3,221,820	32.52	1,614,909	33.48
5~9명	1,835,679	12.46	1,283,052	12.95	552,627	11.46
10~19명	1,555,418	10.56	1,028,331	10.38	527,087	10.93
20~49명	1,978,630	13.43	1,260,915	12.73	717,715	14.88
50~99명	1,314,221	8.92	880,293	8.89	433,928	9.00
100~299명	1,412,475	9.59	962,439	9.72	450,036	9.33
300~499명	512,935	3.48	368,295	3.72	144,640	3.00
500~999명	507,949	3.45	376,841	3.80	131,108	2.72
1,000명이상	775,130	5.26	523,795	5.29	251,335	5.21

자료: 통계청. 2003. 『시・군・구 주요통계』.

⁴⁵ 이 사실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통계에서도 확인 되고 있다.

비중 19.0%보다 훨씬 높은 편이다. 도소매업과 사업서비스업에서 도시지역 종사자의 비중이 높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다른 업종에서 구성비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말하자면 도시지역에 비하여 고용기회의 면에서 농촌지역이 제조업에 의존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4-3. 지역별·업종별 종사자 수 구성, 2003

단위: 명, %

	전국		도시]	농촌	
전체	14,729,166	100.00	9,905,781	100.00	4,823,385	100.00
농업 및 임업	27,723	0.19	3,823	0.04	23,900	0.50
어업	7,481	0.05	4,295	0.04	3,186	0.07
광업	20,537	0.14	4,378	0.04	16,159	0.34
제조업	3,411,003	23.16	1,884,521	19.02	1,526,482	31.65
전기·가스·수도사업	62,312	0.42	33,420	0.34	28,892	0.60
건설업	713,775	4.85	502,601	5.07	211,174	4.38
도소매업	2,539,189	17.24	1,859,851	18.78	679,338	14.08
숙박 및 음식점업	1,738,724	11.80	1,142,788	11.54	595,936	12.36
운수업	858,018	5.83	635,346	6.41	222,672	4.62
통신업	139,273	0.95	99,769	1.01	39,504	0.82
금융 및 보험업	600,173	4.07	446,125	4.50	154,048	3.19
부동산 및 임대업	395,880	2.69	314,647	3.18	81,233	1.68
사업 서비스업	926,229	6.29	795,183	8.03	131,046	2.72
공공행정,국방,사회	508,032	3.45	313,186	3.16	194,846	4.04
교육 서비스업	1,079,364	7.33	704,031	7.11	375,333	7.78
보건 및 사회복지	559,258	3.80	391,831	3.96	167,427	3.47
오락,문화 및 운동	354,974	2.41	251,947	2.54	103,027	2.14
기타 공공,사회,개인	787,221	5.34	518,039	5.23	269,182	5.58

자료: 통계청. 2003. 『시・군・구 주요통계』.

2.2.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에 의한 지역간 차이

2.2.1. 고용보험 데이터 베이스

지금까지 시·군·구별 고용상황 비교는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사업체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통계청의 사업체통계조사 자료는 취업자의 개념이 방대하기 때문에 지역간 고용기회의 차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46.

또한 시·군·구별 주요 통계자료에 수록된 지역별 종사자 수는 일종의 저량(stock) 변수에 해당한다. 곧 어느 지역에서 1년간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로 종사자들이 활동하였는가를 나타낸다. 하지만 일자리는 사업체의 신설이나 기존 사업체의 확장으로 새롭게 창출되는가 하면, 기존 사업체의 축소나 폐업 등으로 소멸되기도 한다. 따라서 농촌지역의 고용기회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일자리의 창출과 소멸이라는 일종의 유량(flow) 변수도 아울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서는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이하 고용보험 DB라 함)자료를 활용하여 농촌지역간 고용기회 차이를 살펴본다.

고용보험 DB는 사업체와 피보험자에 대한 가장 방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행정자료로서 사업체와 근로자와 관련된 데이터가 수록

⁴⁶ 통계청에서 쓰는 취업자의 개념 조사 대상 주간에 소득, 이익, 봉급, 임금 등의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자기에게 직접 이득이나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가구단위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데 도와준 가족종사자로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 대상 주간에 일시적인 병, 일기 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를 모두 취업자로 포함하고 있다.

되어 있다. 고용보험 DB는 고용보험법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고용보험법상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14조)에 규정된 근로자의 범위보다는 넓지만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대가로 임금 형태의 금품(보수 등)을 지급받는 자로 정의한다. 고용보험법상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는 65세 이상인 자, 소정근로시간이 월간 60시간(1주간 15시간) 미만인 자가 포함되며,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신분보장 및 연금의 수혜 대상이되므로 적용에서 제외된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와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 재외국민, 외국인 근로자또한 적용 제외 대상이다.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우체국 직원 등과 같이 공공부문 종사자 실태는 민간부문 종사자 현황보다 지역 경제력에 의해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고용보험 DB는 한 지역의 경제력에 의해 좌우되는 민간 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 현황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고용보험 DB의 사업체 자료와 피보험자에 대한 이력을 활용하여 '사업체-피보험자 연계 패널자료'를 구축하였다.47 패널자료의 구축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피보험자 이력을 이용하여 개별근로자의 직업력(job spell)을 만들었다. 피보험자 이력 데이터의 피보험자 자격 취득·상실·이직 정보를 이용하게 되면, 개별 근로자의 노동시장 진입과 일자리 이동을 파악할 수 있다. 둘째, 이러한 직업력을 사업체 데이터와 결합함으로써 사업체의 일반 정보를 획득하게 되

⁴⁷ 고용보험 DB의 사용과 관련하여 노동부 보험운영지원팀의 자료 협조를 받았다.

며, 이로부터 사업체 규모, 재직 근로자 등의 변수를 만들어 각 연도 별 사업체-피보험자 연계 패널자료를 구성하게 된다.

1995년 7월부터 현재(2005년 2월 19일 기준)까지 고용보험DB는 199만 8천 개의 사업체, 1,499만 2천 명 피용자의 일자리 이동 정보를 가지고 있다. 2004년 12월 말 기준으로 일자리수는 734만 개로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사업체 종사자 2,255만 7천 명의 취업자 중 1/3만을 포괄하는 한계를 가진다.48 곧 적용제외 근로자와 영세 소규모 사업체가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분석 결과는 주로 정규직에 가까운 고용보험 적용대상자에 한정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49

분석 대상 기간은 2001년 12월 3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이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각각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의 수를 각 사업체별로 계산하고 창출률과 소멸률을 통한지역별 일자리 변동을 알아보았다. 예를 들어 2002년의 일자리 창출률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2001년과 2002년 12월 31일 해당 시점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를 사업체별로 계산한다. 이 두 시점의 차이는 2002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의 각 사업체별 일자리 창출수(소멸수)가 되며 이를 통해 2002년 일자리 창출률(소멸률)을 계산한 수 있다. 그리고 다시 이를 사업체의 소재지에 따라 지역별로 합산하게 된다.

⁴⁸ 고용보험데이터의 일자리와 통계청에서 발표한 취업자 수 2,255만 7천 명과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유는 통계청에서 쓰는 취업자의 개념과 고용보험법사의 근로자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⁴⁹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고용보험 DB가 지역의 경제 실상을 잘 나타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2.2. 도농간 비교

2004년 12월 31일 현재 농촌지역의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220만 9천 명으로 피보험자 전체의 30.2%를 차지하고 있다<표 4-4>. 최근 4년간의 통계로 볼 때 농촌지역 피보험자의 구성비는 조금씩 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는 <표 4-5>에서 볼 수 있듯이 농촌지역의 일자리수 증가율이 최근 3년간 도시지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한편, 사업체 규모별 구성은 <표 4-6>에 나와 있다. <표 4-6>에 따르면, 300명 이상, 특히 1,000명 이상 규모의 사업체는 도시의 경우에

표 4-4. 지역별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추이, 2001-04 단위: 명, (%)

연 도	전체	도시	농촌		
2001	6,680,000 (100.00)	4,704,193 (70.42)	1,975,807 (29.58)		
2002	6,869,124 (100.00)	4,828,072 (70.29)	2,041,052 (29.71)		
2003	7,062,259 (100.00)	4,941,048 (69.96)	2,121,211 (30.04)		
2004	7,304,051 (100.00)	5,095,549 (69.76)	2,208,502 (30.24)		

자료: 중앙고용정보원. 각 연도.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 원자료』.

표 4-5. 지역별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변화율 추이, 2001-04

단위: %

연 도	전체	도시	농촌
2002	2.83	2.63	3.30
2003	2.81	2.34	3.93
2004	3.42	3.13	4.12

자료: 중앙고용정보원. 각 연도.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 원자료..

표 4-6. 지역별・사업체규모별 피보험자 구성, 2004

단위: 명, (%)

구 분	전 체	도 시	농 촌
5인 미만	821,243 (11.19)	580,454 (11.35)	240,789 (10.81)
5~9인	751,342 (10.24)	503,036 (9.84)	248,306 (11.15)
10~29인	1,311,949 (17.87)	856,818 (16.76)	455,131 (20.44)
30~49인	560,452 (7.64)	357,885 (7.00)	202,567 (9.10)
50~99인	747,486 (10.18)	468,772 (9.17)	278,714 (12.51)
100~299인	1,109,867 (15.12)	757,821 (14.82)	352,046 (15.81)
300~499인	402,795 (5.49)	297,886 (5.83)	104,909 (4.71)
500~999인	449,146 (6.12)	342,153 (6.69)	106,993 (4.80)
1,000인 이상	1,185,365 (16.15)	947,643 (18.54)	237,722 (10.67)
 전 체	7,339,645 (100.00)	5,112,468 (100.00)	2,227,177 (100.00)

자료: 중앙고용정보원. 2004.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 원자료』.

상대적으로 높은 구성비를 보이고 있다. 농촌의 경우에는 100명 미만 규모의 사업체에 종사하는 피보험자의 비중이 도시에 비하여 높게 나타난다. 100~299명의 경우에도 농촌의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근로자로 구성된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업종별 분포를 보면, 제조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표 4-7>. 특히 이는 농촌지역에서 두드러져 2004년 12월 31일 현재 제조업에 종사하는 농촌지역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122만 명으로 농촌지역 전체 피보험자 수의 55.2%에 이르고 있다. 특이한 사항은 시군·구별 주요통계자료의 종사자 수에서 도소매업과 숙박 및음식점업의 비중이 높은 편이었으나 고용보험 피보험자에서는 각각5.0%와 1.4%로 상당히 낮은 분포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두 업종에

종사하는 취업자가 근로자보다는 자영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뜻한다.

표 4-7. 지역별·업종별 피보험자 구성, 2004

단위: 명, (%)

 구 분	전 체	도 시	농 촌
농림어업	24,964 (0.3	4) 11,186 (0.22)	13,778 (0.62)
광업	16,349 (0.2	2) 7,478 (0.15)	8,871 (0.40)
제조업	2,694,900 (36.9	0) 1,475,154 (28.95)	1,219,746 (55.23)
전기,가스및수도사업	59,379 (0.8	1) 44,821 (0.88)	14,558 (0.66)
건설업	513,482 (7.0	334,612 (6.57)	178,870 (8.10)
도매 및 소매업	760,456 (10.4	1) 651,245 (12.78)	109,211 (4.95)
숙박 및 음식점업	156,165 (2.1	4) 125,690 (2.47)	30,475 (1.38)
운수업	488,419 (6.6	9) 379,013 (7.44)	109,406 (4.95)
통신업	42,067 (0.5	8) 38,241 (0.75)	3,826 (0.17)
금융 및 보험업	353,236 (4.8	4) 287,399 (5.64)	65,837 (2.98)
부동산 및 임대업	216,018 (2.9	6) 180,156 (3.54)	35,862 (1.62)
사업서비스업	957,564 (13.1	1) 848,112 (16.64)	109,452 (4.96)
공공행정,국방,사회	107,882 (1.4	8) 66,079 (1.30)	41,803 (1.89)
교육서비스업	198,460 (2.7	2) 133,392 (2.62)	65,068 (2.95)
보건, 사회복지사업	384,405 (5.2	6) 269,506 (5.29)	114,899 (5.20)
오락,문화,운동관련	95,299 (1.3	0) 67,148 (1.32)	28,151 (1.27)
기타공공,수리,개인	233,960 (3.2	0) 175,469 (3.44)	58,491 (2.65)
가사서비스업	777 (0.0	1) 580 (0.01)	197 (0.01)
국제 및 외국기관	269 (0.0	268 (0.01)	1 (0.00)
전 체	7,304,051 (100.0	0) 5,095,549 (100.00)	2,208,502 (100.00)

자료: 중앙고용정보원. 2004.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 원자료..

2.2.3. 지역별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최근 4년간(2001~2004년 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보면, 경남 창원시와 같이 12만 명인 경우가 있는가 하면, 경북 울릉군처럼 415명 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대체로 3만 명 이상의 지역은 모두 통합 시이며, 1만 명 이상의 지역은 충북 청원군, 경기 양주시, 충북 음성군 등 대부분 공단지대이거나 인근에 대도시가 있는 경우이다.

다음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업종별 구성을 살펴보면(<표 4-8>와 <표 4-9>, <부표 2-1>), 먼저 제조업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북 충주시로 80.3%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 밖에 충북 진천군(79.5%)과 전남 함평군(78.5%) 등 총 45개 지역이 50%가 넘는 비중을 보이고 있다. 총 104개 지역에서 제조업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반면 제조업 비중이 가장 낮은 지역은 충남 서천군으로 12.7%이다.

2.2.4. 지역별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소멸

가. 도농간 비교

전국에서 2002~2004년간 일자리 창출규모는 각각 104만 3천 명, 102만 명, 107만 7천 명이고, 일자리 소멸은 85만 4천 명, 82만 7천 명, 83만 6천 명이었다. 순고용 증가는 18만 9천 명, 19만 3천 명, 24만 2천 명으로 고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표 4-10>.

표 4-8. 최근 4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별 지역분류

피보험자수	지 역
10만 명 이상(1)	경남 창원시
5만 명 이상 10만 명 미만(7)	경북 구미시, 경기 용인시, 경기 화성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기 평택시, 경남 김해시
3만 명 이상 5만 명 미만(13)	경남 양산시, 경남 마산시, 경기 이천시, 경남 거제시, 충남 아산시, 경기 김포시, 울산 울주군, 경북 경주시, 경기 광주시, 전북 익산시,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경기 파주시
1만 명 이상 3만 명 미만(30)	경남 진주시, 강원 원주시, 전북 군산시, 전남 광양시, 대구 달성군, 경기 남양주시, 충북 청원군, 경기 양주시, 경기 안성시, 경기 포천시, 강원 춘천시, 강원 강릉시, 충북 음성군, 경북 칠곡군, 전남 순천시, 충북 충주시, 충북 진천군, 부산 기장군, 경북 김천시, 충남 서산시, 충남 연기군, 경북 영천시, 경북 안동시, 충남 당진군, 경남 사천시, 충남 공주시, 전북 완주군, 충남 논산시, 충북 제천시, 경남 함안군
5천명 이상 1만 명 미만(26)	경기 여주군, 전남 화순군, 전남 나주시, 전남 영암군, 전북 정읍시, 전북 김제시, 경남 밀양시, 충남 보령시, 경남 통영시, 충남 예산군, 경북 영주시, 충남 금산군, 경북 상주시, 충북 옥천군, 전북 남원시, 강원 정선군, 전남 담양군, 강원 횡성군, 충남 부여군, 경남 고성군, 강원 홍천군, 충남 홍성군, 경북 고령군, 전남 영광군, 충남 서천군, 전남 장성군
3천명 이상 5천명 미만(27)	제주 북제주군, 경남 창녕군, 강원 삼척시, 충북 단양군, 경북 성주군, 경북 문경시, 강원 평창군, 경기 양평군, 전남 곡성군, 경기 가평군, 전남 해남군, 강원 영월군, 전남 무안군, 충북 영동군, 경북 울진군, 제주 남제주군, 경남 거창군, 인천 강화군, 경북 의성군, 충남 태안군, 전남 고흥군, 충북 괴산군, 경북 청도군, 전북 부안군, 충북 증평군, 경기 연천군, 충북 보은군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33)	경남 합천군, 경남 하동군, 경남 의령군, 전북 고창군, 충남 청양군, 경북 군위군, 전남 함평군, 강원 철원군, 전남 완도군, 전남 보성군, 경북 영덕군, 경북 봉화군, 강원 양양군, 강원 고성군, 경남 남해군, 경남 산청군, 경북 예천군, 경남 함양군, 전북 임실군, 전남 장흥군, 전남 강진군, 충남 계룡시, 전북 무주군, 전남 신안군, 전북 순창군, 전북 진안군, 경북 청송군, 전남 구례군, 강원 인제군, 전남 진도군, 전북 장수군, 경북 영양군, 강원 양구군
1천명 미만(3)	강원 화천군, 인천 옹진군, 경북 울릉군

표 4-9. 고용보험 피보험자 제조업 비중별 지역 분류

비율	지 역
50% 이상 (45)	충북 충주시, 충북 진천군, 전남 함평군, 충북 영동군, 전남 완도군, 경북 구미시, 충북 보은군, 충남 금산군, 충남 논산시, 제주 남제주군, 경남 김해 시, 경남 함안군, 전북 고창군, 경기 남양주시, 전북 김제시, 경북 봉화군, 경북 상주시, 경북 영주시, 전남 신안군, 전북 완주군, 경북 청도군, 경기 이천시, 전북 임실군, 경북 울진군, 경북 영양군, 경북 김천시, 경북 성주군, 강원 홍천군, 강원 인제군, 충남 당진군, 경북 경산시, 강원 정선군, 경남 통영시, 충남 천안시, 경북 경주시, 경기 파주시, 경기 김포시, 충북 옥천군, 경남 거창군, 충북 단양군, 경남 함양군, 경남 사천시, 전남 고홍군, 전남 해남군, 강원 춘천시
30% 이상 50% 미만 (32)	경북 군위군, 전남 무안군, 경북 칠곡군, 충남 서산시, 경기 양주시, 전남 나주시, 전북 순창군, 전북 군산시, 충남 연기군, 경남 고성군, 충남 아산시, 인천 옹진군, 강원 화천군, 전남 곡성군, 경북 포항시, 충남 태안군, 경남 창원시, 강원 강릉시, 충북 증평군, 전남 장흥군, 경북 안동시, 전북 무주군, 경남 의령군, 전북 익산시, 충남 공주시, 경남 양산시, 경기 가평군, 전남 강진군, 경기 용인시, 충남 홍성군, 경남 거제시, 전남 순천시
10% 이상 30% 미만 (51)	강원 영월군, 경남 창녕군, 충북 괴산군, 경기 양평군, 경북 울릉군, 경남 합천군, 강원 삼척시, 전남 담양군, 전남 장성군, 경남 밀양시, 경북 예천군, 전남 광양시, 전북 남원시, 경북 문경시, 제주 북제주군, 전남 구례군, 경남, 산청군, 경기 평택시, 충남 부여군, 강원 횡성군, 충북 제천시, 부산 기장군, 충남 보령시, 경기 광주시, 강원 철원군, 경북 영천시, 전남 보성군, 전북 진안군, 전북 장수군, 전남 영광군, 전남 여수시, 경남 진주시, 강원 양양군, 경기 여주군, 경북 의성군, 전북 정읍시, 전남 진도군, 경기 연천군, 경남 남해군, 강원 고성군, 충남 청양군, 충남 서천군, 충북 음성군, 경남 마산시, 인천 강화군, 전남 영암군, 경기 포천시, 울산 울주군, 경기 화성시, 강원 평창군, 대구 달성군
10% 미만(12)	경북 영덕군, 강원 양구군, 전남 화순군, 경북 청송군, 충남 계룡시, 충남 예산군, 강원 원주시, 경북 고령군, 전북 부안군, 경기 안성시, 경남 하동군, 충북 청원군

표 4-10. 지역별 일자리 창출·소멸·순고용 변화 추이, 2002-04 단위: 명, (%)

		전	체	도	시	농	촌
رد ادار ادار ادار ادار ادار ادار ادار ا	2002	1,042,921	(100.00)	735,518	(70.52)	307,403	(29.48)
일자리 창출	2003	1,020,173	(100.00)	703,784	(68.99)	316,389	(31.01)
0 2	2004	1,077,449	(100.00)	741,748	(68.84)	335,701	(31.16)
رد ادار ادار ادار ادار ادار ادار ادار ا	2002	853,797	(100.00)	611,639	(71.64)	242,158	(28.36)
일자리 소멸	2003	827,038	(100.00)	590,808	(71.44)	236,230	(28.56)
	2004	835,657	(100.00)	587,247	(70.27)	248,410	(29.73)
* - 0	2002	189,124	(100.00)	123,879	(65.50)	65,245	(34.50)
순고용 변화	2003	193,135	(100.00)	112,976	(58.50)	80,159	(41.50)
24	2004	241,792	(100.00)	154,501	(63.90)	87,291	(36.10)

자료: 중앙고용정보원. 각 연도.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 원자료』.

도시지역의 경우, 2002~2004년간 일자리 창출은 73만 6천 명, 70만 4천 명, 74만 2천 명, 일자리 소멸은 61만 2천 명, 59만 1천 명, 58만 7천 명으로 순고용 변화가 12만 4천 명, 11만 3천 명, 15만 5천 명이었다. 농촌지역의 경우, 2002~2004년 일자리 창출이 30만 7천 명, 31만 6천 명, 33만 6천 명, 일자리 소멸이 24만 2천 명, 23만 6천 명, 24만 8천 명으로 순고용 변화가 6만 5천 명, 8만 명, 8만 7천 명이었다.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비교하면, 일자리 창출에서 농촌지역이 29.5~31.2%를 차지하고, 일자리 소멸에서 28.4~29.7%를 차지하여 순고용변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5~41.5%를 보이고 있다. 일자리 창출보다 일자리 소멸이 상대적으로 낮게 발생함으로써 농촌지역이 순고용 증가에서 상대적으로 기억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최근 3년간(2002~2004) 업종별 평균 일자리 창출을 보면<표 4-11>,

도시지역은 제조업(23.6%)과 사업서비스업(21.0%), 그리고 도매 및 소매업(17.4%)을 중심으로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농촌지역은 제조업이 50.2%로 과반수에 이른다. 그리고 건설업(10.4%)과 도매 및 소매업(7.5%), 사업서비스업(6.4%)의 순이다.

표 4-11. 최근 3년간 업종별 평균 일자리 창출, 2002-04

단위: 명, (%)

구 분	전	체	도	시	농	촌
농림어업	4,282	(0.41)	1,971	(0.27)	2,311	(0.72)
광업	1,820	(0.17)	401	(0.06)	1,419	(0.44)
제조업	332,381	(31.75)	171,846	(23.64)	160,535	(50.19)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2,883	(0.28)	2,185	(0.30)	698	(0.22)
건설업	91,053	(8.70)	57,846	(7.96)	33,207	(10.38)
도매 및 소매업	150,399	(14.37)	126,430	(17.39)	23,970	(7.49)
숙박 및 음식점업	31,352	(2.99)	24,787	(3.41)	6,565	(2.05)
운수업	41,052	(3.92)	29,987	(4.12)	11,065	(3.46)
통신업	5,826	(0.56)	4,926	(0.68)	900	(0.28)
금융 및 보험업	18,769	(1.79)	15,983	(2.20)	2,786	(0.87)
부동산 및 임대업	30,984	(2.96)	25,451	(3.50)	5,533	(1.73)
사업서비스업	173,113	(16.54)	152,545	(20.98)	20,569	(6.43)
공공행정, 국방, 사회	11,687	(1.12)	6,253	(0.86)	5,434	(1.70)
교육서비스업	40,862	(3.90)	28,091	(3.86)	12,771	(3.99)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56,349	(5.38)	39,446	(5.43)	16,903	(5.28)
오락, 문화, 운동관련	13,944	(1.33)	9,767	(1.34)	4,177	(1.31)
기타공공,수리,개인	39,791	(3.80)	28,856	(3.97)	10,935	(3.42)
가사서비스업	243	(0.02)	188	(0.03)	54	(0.02)
국제 및 외국기관	59	(0.01)	59	(0.01)	0	(0.00)
전 체	1,046,848	(100.00)	727,017	(100.00)	319,831	(100.00)

자료: 중앙고용정보원. 각 연도.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 원자료』.

최근 3년간 일자리 소멸의 경우<표 4-12>, 역시 도시지역에서는 제조업 (28.8%), 도매 및 소매업(18.0%), 사업서비스업(17.5%)이 중심이다. 그리고 농촌지역에서는 제조업이 53.0%로 절대적인 위치에 있으며, 건설업과 도매 및 소매업이 각각 9.1%와 8.8%로 뒤를 잇고 있다.

표 4-12. 최근 3년간 업종별 평균 일자리 소멸, 2002-04

단위: 명, (%)

구 분	전	체	도	시	농	촌
농림어업	2,584	(0.31)	1,098	(0.18)	1,486	(0.61)
광업	1,931	(0.23)	438	(0.07)	1,493	(0.62)
제조업	300,127	(35.78)	171,745	(28.79)	128,382	(52.99)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2,403	(0.29)	861	(0.14)	1,543	(0.64)
건설업	64,032	(7.63)	41,945	(7.03)	22,088	(9.12)
도매 및 소매업	128,586	(15.33)	107,331	(17.99)	21,255	(8.77)
숙박 및 음식점업	29,744	(3.55)	22,483	(3.77)	7,261	(3.00)
운수업	42,148	(5.02)	31,840	(5.34)	10,309	(4.26)
통신업	16,784	(2.00)	13,833	(2.32)	2,951	(1.22)
금융 및 보험업	19,597	(2.34)	16,886	(2.83)	2,711	(1.12)
부동산 및 임대업	20,091	(2.40)	16,918	(2.84)	3,173	(1.31)
사업서비스업	116,944	(13.94)	104,490	(17.52)	12,454	(5.14)
공공행정, 국방, 사회	4,391	(0.52)	2,709	(0.45)	1,682	(0.69)
교육서비스업	24,205	(2.89)	16,590	(2.78)	7,615	(3.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28,173	(3.36)	19,736	(3.31)	8,437	(3.48)
오락, 문화, 운동관련	9,321	(1.11)	7,288	(1.22)	2,033	(0.84)
기타공공,수리,개인	27,654	(3.30)	20,271	(3.40)	7,383	(3.05)
가사서비스업	93	(0.01)	82	(0.01)	11	(0.00)
국제 및 외국기관	21	(0.00)	21	(0.00)	0	(0.00)
전 체	838,831	(100.00)	596,565	(100.00)	242,266	(100.00)

자료: 중앙고용정보원. 각 연도.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 원자료』.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순고용 변화는 도시지역의 경우에 사업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도매 및 소매업, 건설업을 중심으로 증가하였다<표 4-13>. 농촌지역의 경우는 제조업이 순고용 증가에 대한기여도가 가장 크며, 다음으로 건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업서비스업의 순이었다. 도시지역과 마찬가지로 농촌지역에서도 통신업이순고용 감소를 보였으며, 이 밖에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과 숙박 및음식점업이 약간의 순고용 감소를 기록하고 있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지역인 경우에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소멸이 높을 뿐만 아니라 순고용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4-13. 최근 3년간 업종별 평균 순고용 변화, 2002-04 단위: 명, (%)

구 분	전체		도시		농촌	
농림어업	1,698	(0.82)	872	(0.67)	825	(1.06)
광업	-111	(-0.05)	-37	(-0.03)	-73	(-0.09)
제조업	32,254	(15.51)	100	(80.0)	32,154	(41.45)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480	(0.23)	1,324	(1.02)	-844	(-1.09)
건설업	27,021	(12.99)	15,902	(12.19)	11,119	(14.34)
도매 및 소매업	21,813	(10.49)	19,098	(14.64)	2,715	(3.50)
숙박 및 음식점업	1,608	(0.77)	2,305	(1.77)	-697	(-0.90)
운수업	-1,097	(-0.53)	-1,853	(-1.42)	756	(0.98)
통신업	-10,958	(-5.27)	-8,907	(-6.83)	-2,051	(-2.64)
금융 및 보험업	-828	(-0.40)	-903	(-0.69)	75	(0.10)
부동산 및 임대업	10,893	(5.24)	8,533	(6.54)	2,360	(3.04)
사업서비스업	56,169	(27.00)	48,054	(36.84)	8,115	(10.46)
공공행정, 국방, 사회	7,296	(3.51)	3,544	(2.72)	3,751	(4.84)
교육서비스업	16,657	(8.01)	11,501	(8.82)	5,156	(6.65)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28,176	(13.54)	19,710	(15.11)	8,466	(10.91)
오락, 문화, 운동관련	4,622	(2.22)	2,479	(1.90)	2,144	(2.76)
기타공공,수리,개인	12,136	(5.83)	8,585	(6.58)	3,551	(4.58)
가사서비스업	150	(0.07)	107	(80.0)	43	(0.06)
국제 및 외국기관	38	(0.02)	38	(0.03)	0	(0.00)
전체	208,017	(100.00)	130,452	(100.00)	77,565	(100.00)

자료: 중앙고용정보원. 각 연도.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 원자료』.

참고로 3년 평균 지역별 일자리 창출과 4년 평균 일자리 수의 상관계수는 0.98이며, 3년 평균 지역별 일자리 창출과 4년 평균 제조업 일자리수의 상관계수는 0.97이었다. 이 두 상관계수를 3년 평균 일자리소멸에 대하여 구한 결과, 각각 0.98과 0.95였으며, 3년 평균 순고용변화에 대하여 구한 결과, 각각 0.77과 0.80이었다. 이는 순고용의 증가에 일자리 창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제조업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나. 지역별 일자리 창출 및 소멸

3년 평균 일자리 창출 수로 보면(<표 4-14>과 <부표 2-2>), 경북 구미, 경기 화성, 충남 천안, 경남 김해 등 공업단지가 입지한 지역, 대도시 주변 지역 등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평균 1천 명 미만의일자리 창출을 보이고 있는 지역은 충북 옥천, 보은, 전북 남원, 순창, 전남 강진, 장흥, 경북 의성 등 백두대간 주변의 오지 농촌지역이 차지하고 있다.

3년 평균 일자리 소멸수에서도 지역별 분포는 일자리 창출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표 4-15>. 경남 창원시 등의 공업단지 지역과 대도시권 주변이 높고, 백두대간 주변의 오지 농촌지역에서 일자리 소멸수가 낮다. 참고로 최근 3년간 평균 일자리 창출수와 일자리 소멸수의 상관계수는 0.97로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소멸 사이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그림 4-2>에서도 명확히 나타난다.

표 4-14. 최근 3년 평균 일자리 창출 수에 따른 지역분류

일자리 창출수	지 역
10,000명 이상 (7)	경북 구미시, 경남 창원시, 경기 화성시, 경기 용인시, 충남 천안시, 경남 김해시, 경기 평택시
5,000~9,999명 (11)	경북 포항시, 충남 아산시, 경기 김포시, 경기 광주시, 경남 거제시, 경남 양산시, 경기 파주시, 경기 이천시, 경남 마산시, 울산 울주군, 경북 경주시
3,000~4,999명 (15)	전북 익산시, 강원 원주시, 경북 경산시, 경기 남양주시, 충북 청원군, 경기 포천시, 경기 양주시, 경북 칠곡군, 전북 군산시, 경남 진주시, 전남 여수시, 경기 안성시, 강원 춘천시, 강원 강릉시, 충북 음성군
2,000~2,999명 (8)	전남 순천시, 대구 달성군, 충북 충주시, 충북 진천군, 충남 서산시, 충남 연기군, 전남 광양시, 경북 김천시
1,000~1,999명 (26)	충남 당진군, 경북 안동시, 경북 영천시, 전북 완주군, 경남 함안군, 경기 여주군, 경남 통영시, 충남 공주시, 충남 논산시, 충북 제천시, 전남 나주시, 전남 화순군, 전북 김제시, 강원 정선군, 전남 영암군, 전북 정읍시, 부산 기장군, 경남 사천시, 경남 밀양시, 충남 금산군, 충남 보령시, 경북 상주시, 전남 담양군, 제주 북제주군, 경북 영주시, 충남 홍성군
1,000명 미만 (73)	전북 남원시 등

표 4-15. 최근 3년 평균 일자리 소멸 수에 따른 지역분류

일자리소멸	지역
10,000명 이상 (1)	경남 창원시
5,000~9,999명 (10)	경북 구미시, 경남 김해시, 경기 화성시, 경기 용인시, 충남 천안시, 경기 평택시, 경남 마산시, 경북 포항시, 경남 양산시, 경기 김포시
3,000~4,999명 (15)	경북 경주시, 전북 익산시, 경북 경산시, 경기 광주시, 경기 이천시, 충남 아산시, 경기 파주시, 전북 군산시, 강원 원주시, 경기 양주시, 울산 울주군, 경기 포천시, 경기 남양주시, 전남 여수시, 경남 진주시
1,000~2,999명 (32)	강원 춘천시, 경남 거제시, 경북 칠곡군, 강원 강릉시, 충북 청원군, 충북 충주시, 대구 달성군, 충북 음성군, 전남 순천시, 경기 안성시, 경북 영천시, 경북 안동시, 충북 진천군, 충남 연기군, 충남 당진군, 경남 통영시, 경북 김천시, 경남 함안군, 충북 제천시, 전남 광양시, 경기 여주군, 부산 기장군, 충남 서산시, 전북 정읍시, 충남 공주시, 충남 논산시, 경남 사천시, 전북 김제시, 전북 완주군, 전남 나주시, 경남 밀양시, 충남 금산군
1,000명 미만 (82)	전남 화순군 등

일자리 창출 수에서 일자리 소멸 수를 뺀 3년 평균 순고용 변화에서 경북 구미시가 7천 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 4-16>과

5천 명 이상의 순고용 증가를 보인 지역은 충남 천안시(6천 명), 경기 화성시(6천 명), 경기 용인시(6천 명)이다. 그리고 1천 명 이상 5천 명 미만의 순 고용 증가는 경남 거제시 등 경남 일원, 충남 서산군 등 충남 일원, 경기 파주시 등 경기 일원, 충북 청원군, 경북 칠곡군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수도권의 신흥 개발지역, 공업단지 입지지역 등이다. 반면에 순일자리 창출이 낮은 지역은 충북 내륙, 전북전남 일대, 경북 내륙 농촌지역이다.

한편 순고용이 마이너스인 지역도 있는데 강원 영월군, 강원 횡성군, 부산 기장군, 충북 충주시, 경남 고성군, 경북 울진군, 경남 마산시등이다. 이들은 일자리의 창출과 소멸이 다 같이 낮은 지역(강원 영월)이 있는가 하면 일자리 창출이 높았지만 그보다 일자리 감소가 더많았던 지역(경남 마산시) 등이다.

표 4-16. 최근 3년 평균 순고용 변화에 따른 지역분류

순고용 변화	지역
5,000명 이상 (4)	경북 구미시, 충남 천안시, 경기 화성시, 경기 용인시
1,000~4,999명 (15)	경남 거제시, 충남 아산시, 경남 김해시, 경기 평택시, 경기 광주시, 경기 파주시, 충북 청원군, 경기 김포시, 울산 울주군, 경기 이천시, 경남 창원시, 경기 안성시, 경기 남양주시, 경북 칠곡군, 충남 서산시
0~1,000명 미만 (114)	충북 진천군 등
감소(7)	강원 영월군, 강원 횡성군, 부산 기장군, 충북 충주시, 경남 고성군, 경북 울진군, 경남 마산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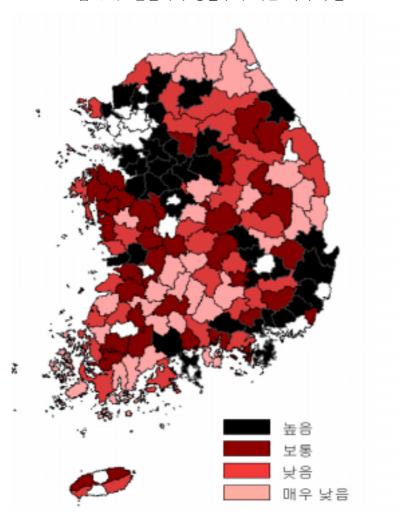


그림 4-1. 순일자리 창출수에 따른 지역 구분

3년 평균 일자리 창출과 순고용 변화의 상관계수는 0.86이며, 3년 평균 일자리 소멸과 순고용 변화의 상관관계는 0.71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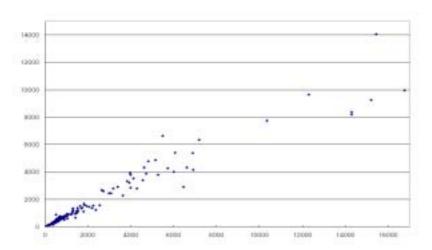


그림 4-2.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소멸의 상관도

다. 지역별 순고용 변화율

순고용 변화율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t 연도의 순고용 변화율 = 100 × (t 연도의 순고용 변화 / (t - 1)년도 말의 일자리수)

<표 4-17>에 따르면, 2003년도에 급격한 일자리 증가를 경험한 강원 정선군과 전북 무주군이 나란히 최근 3년간 순고용 변화율도 각각 14.7%와 13.9%로 1, 2위에 오르고 있다<부표 2-4>. 3년 평균 5%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는 지역은 강원 정선군과 전북 무주군을 포함하여 46개 지역에 해당한다.

그리고 가장 큰 감소율을 기록한 지역은 경북 울진군으로 2002년의 -30.4%라는 변화율로 3년 평균 변화율이 -6.7%이다. 이 밖에 마산시 (-2.4%), 경남 고성군(-1.0%), 강원 횡성군(-0.8%), 강원 영월군(-0.6%), 부산 기장군(-0.4%), 충북 충주시(-0.3%)의 변화율을 보이고 있다.

표 4-17. 최근 3년 평균 순고용 변화율별 지역분류

순고용변화율	지 역
10% 이상 (2)	강원 정선군, 전북 무주군
5% 이상 10% 미만 (44)	강원 평창군, 인천 옹진군, 경남 거제시, 제주 북제주군, 경남 함양군, 충남 서산시, 경남 의령군, 강원 인제군, 충남 천안시, 경북 청송군, 경남 하동군, 경북 구미시, 충남 아산시, 강원 고성군, 경기 화성시, 경기용인시, 충북 진천군, 경기 광주시, 전북 완주군, 전남 신안군, 전남 보성군, 전북 부안군, 충북 청원군, 전북 순창군, 경기 파주시, 경기 안성시, 전북 진안군, 경기 양평군, 전남 구례군, 전북 장수군, 충남 계룡시, 경남 남해군, 경북 칠곡군, 전남 진도군, 경북 울릉군, 충남 연기군, 전북 임실군, 전남 화순군, 전남 고흥군, 강원 홍천군, 충남 태안군, 전남 영암군, 전남 장성군, 경기 가평군
5% 미만 (87)	경기 남양주시 등
감소율 (7)	충북 충주시, 부산 기장군, 강원 영월군, 강원 횡성군, 경남 고성군, 경남 마산시, 경북 울진군

순고용 증가율이 높은 지역에서 어떠한 업종에서 순고용이 증가하였는지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관광자원에 의존하는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이 순고용 증가를 수반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제조업이 지역의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지역이 있다. 전자에 해당하는 곳으로 강원 정선군과 전북무주군은 각각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일자리 창출이 크게 이루어졌다. 강원 평창군은 숙박 및 음식점업업과 부동산 및 임대업에서 순고용 증가가 이루어졌다. 제주 북제주군의 경우는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업서비스업과 교육서비스업에서 순고용 증가가 이루어졌다.

반면에 후자에 속한 지역으로 경남 거제시의 경우는 제조업과 건설 업의 영향이 크며, 충남 서산시의 경우는 제조업, 사업서비스업, 도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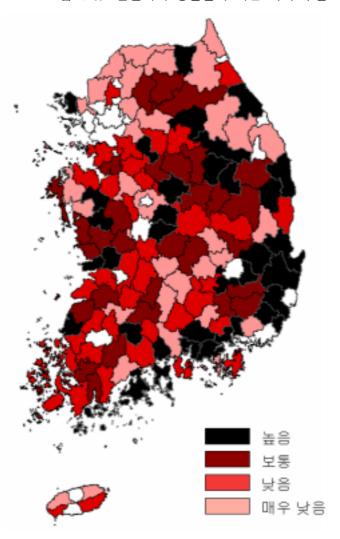


그림 4-3. 순일자리 창출률에 따른 지역 구분

및 소매업에서 순고용 증가가 이루어지고, 충남 천안시, 경북 구미시, 충남 아산시, 경기 화성시, 경기 용인시, 충북 진천군, 경기 광주시, 전 북 완주군, 충북 청원군, 경기 파주시, 경기 안성시, 경북 칠곡군은 제 조업 등의 순고용증가가 컸다.

3년 평균 일자리 창출률과 순고용 변화율의 상관계수는 0.72로 상당히 높으나 3년 평균 일자리 소멸률과 순고용 변화율의 상관계수는 -0.37로 낮은 편이다. 이 결과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순고용의 증가가 일자리 창출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다.

3. 지역별 고용기회의 결정

지금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이용한 일자리 창출과 소멸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지역별 고용기회에서 지역별로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통계 자료만 가지고 지역간의 고용기회가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지는 알 수가 없다. 여기서는 다른 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지역별 고용기회가 어떠한 요인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3.1. 분석모형

흔히 지역의 고용기회를 결정하는 요인을 고려할 때 등장하는 가설이 "사람이 일을 따른다(people follow jobs)"라는 가설과 "일이 사람을 따른다(jobs follow people)"라는 가설이다. 이 때문에 인구와 고용기회는 동시에 결정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 가설을 검증할 수 있도록 분석 모형을 제시한 연구가 Carlino and Mills(1987)이다.

이들에 따르면, t 연도의 인구 P_t 와 t 연도의 고용 E_t 는 상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다음과 같은 식이 될 것이다.

 $P_t = F(E_t, P_{t-1}, X_t)$ $E_t = G(P_t, E_{t-1}, Z_t)$

먼저 P_t 는 E_t 와 전년도 인구인 P_{t-1} 그리고 다른 설명변수인 X_t 에 의하여 결정되며, E_t 는 P_t 와 전년도 고용인 E_{t-1} 그리고 다른 설명변수인 Z_t 에 의하여 동시에 결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P_t 와 E_t 는 분석 모형에서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변수이며, 나머지 P_{t-1} , E_{t-1} , X_t , Z_t 이 외생변수 (exogeneous variable)이다.

인구와 고용기회의 동시적 결정 모형에 기초한 연구는 약간의 변형은 있을지라도 기본적인 틀로서 Carlino and Mills(1987)의 모형을 따르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도 이에 기초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3.2. 설명변수

인구 P_t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로서는 먼저 E_t, P_{t-1}가 포함된다. Carlino and Mills(1987)는 이 밖의 설명변수로서 흑인 비율, 주간(州間) 고속도로 포장률, 1인당 지방세 부담액, 가구소득, 노조조직률, 지방공채 발행액 등을 사용했다.

이 연구에서는 설명변수에 다음과 같은 변수들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인근 지역의 상황을 나타내는 대리변수(proxy variable)로서 인근지역 인구, 인적 자본(human capital)의 축적 수준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중졸 이하 학력자 비중(2000년)과 전문대졸 이상 학력자 비중(2000년),50 농업의 영향을 나타내는 대리변수로서 전업농가 비중, 300명 이

⁵⁰ 이로서 고졸 학력자 비중이 일종의 비교집단(reference group)이 된다. 그리고 이들 비중은 2003년도 주민의 교육수준에 대한 통계가 없어 2000년의 인구센서스 자료에 기초하여 계산한 것이다.

상 사업체 비중, 인구밀도(2003년), 지역의 소득을 나타내는 대리변수로서 1인당 주민세 부담액(2002년), 정주비용을 나타내는 대리변수로서 1인당 지방세 부담액(2003년)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고용 E_r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P_r와 E_{r-1} 이외에 인근 지역인구, 중졸 이하 학력자 비중과 전문대졸 이상 학력자 비중, 전업농가 비중과 300명 이상 사업체 비중을 포함하였다.

Edmiston(2004)은 이 밖에도 고용 E,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사업체 수와 변화 등을 고려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도 Edmiston(2004)과 마찬가지로 2002년의 사업체 수, 2003년의 사업체 수 변화(= 2003년의 사업체 수 - 2002년의 사업체 수), 고용보험 DB에서 추계한 순고용증가율(2002~2004년의 평균)을 포함하였다. 이로부터 기존의 사업체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사업체의 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근로자수의 변화가 전체 취업자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수 있게 된다.

3.3. 분석결과

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표 4-18>에 따르면, 먼저 인구에 대하여 사업체 종사자 수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동시에 사업체 종사자수에 대해서도 인구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된다. 곧 "사람이 일을 따른다(people follow jobs)"와 "일이 사람을 따른다(jobs follow people)"라는 가설이 모두 입증이 되고 있다. 다만 계수추정치의 절대치로 볼 때, 인구에 대한 사업체 종사자 수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농촌지역의 인구가 정주하는 데는 고용기회가 중요함을 분석 결과가 말해 주고 있다.

인구 종사자수 (2003)(2003)계수추정치 P>|z|계수추정치 P>|z|상수 -14,209.99(4,481.819) 0.002 -5,152.626(1,308.427) 0.000 종사자수(2003) 0.083 (0.037)0.025 인구(2003) 0.015 0.009 (0.001)인구(2002) 0.996 (0.013)0.000 종사자수(2002) 0.969 (0.015)0.000 인근지역인구 1.299 (0.206) 0.000 0.315 (0.073)0.000 중졸 이하 비중 57.202 (15.021) 126.672 (48.103) 0.008 0.000 전문대졸 이상 비중 536.806 (237.494) 0.024 326.213 (75.430) 0.000 전업농가비중 -5,282.331 (5551.137) 0.341 -2,735.922 (1,587.065) 0.085 300명이상사업체비중 -107.549(73.850) 0.145 54.919 (23.837) 0.021 인구밀도(2003) -4.033(3.120) 0.196 1인당 주민세 부담액 0.956 (4.905) 0.8461인당 지방세 부담액 0.008 (0.002)0.000 사업체수(2002) -0.224(0.104)0.031 사업체 수 증가(2003) 3.029 (0.544)0.000 순고용증가(3년 평균) 1.620 (0.204)0.000

표 4-18. 인구와 고용의 상호영향성 분석 결과. 2003

결정계수

다음으로 사업체 종사자 수에 대하여 인근 지역의 인구가 미치는 영향도 확인된다. 이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인근 지역에 거대 시장이 존재하여 이 시장의 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노동에 대한 파생 수요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능한 해석은 통 근을 통하여 인근 지역의 주민이 해당 지역에 노동을 공급하는 경우 로도 해석할 수 있다.

0.9986

0.9988

지역의 인적 자본 수준을 나타내는 중졸 이하 학력자 비중과 전문

주: 괄호 안의 수치는 표준오차임.

대졸 이상 학력자 비중은 계수추정치가 모두 양(+)의 부호를 보일 뿐만 아니라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는 저숙련 노동력에 대한 수요와 숙련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 분석 결과로는 구분하기가 어렵다. 다만 전문대졸 이상 학력자비중의 계수추정치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볼 때, 지역 내의 인적 자본 수준을 높이는 것이 지역 내의 고용기회를 증대시키고, 따라서 정주인구도 늘어나는 연결 고리가 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300명 이상 사업체의 비중이 양(+)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대규모 사업체의 입주 자체가 고용기회를 창출할 뿐만 아 니라 관련된 사업체의 확대를 통한 고용기회의 창출 효과도 수반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사업체 수(2002년)가 음(-)의 효과를 보이는 것은 의외이지만 영세사업체에 대한 대리변수(proxy variable)인 것으로 보인다. 곧 사업체 수는 많지만, 이를 통한 고용효과는 그리 큰 편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사업체 수의 증가(2003년)는 양(+)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라 하겠다.

그리고 순고용증가(3년 평균)가 사업체 종사자 수에 양(+)의 효과를 보이는 것은 근로자와 이들과 관련되는 자영업 관련 종사자의 연관성 을 짐작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와 고용기회는 상호 영향을 미친다. 둘째, 인근 지역의 상황(인구를 대리변수로 한 경우)이 고용기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셋째, 지역의 인적 자본 축적 수준, 특히 고학력자가 높을수록 고용기회가 늘어난다. 넷째, 300명 이상의 대규모 사업체가 입주하는 경우도 고용기회에 긍정적이다. 다섯째, 근로자의 증가가 지역 전체 취업자 증가와 연

결된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해석하여 보기로 하자. 먼저 고용기회가 인구에 미치는 영향이 인구가 고용기회에 미치는 영향보다 상대적으로 크다는 결과로 볼 때, 농촌지역개발에서 고용기회의 역할을 재확인하게 된다. 말하자면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 농촌지역개발의 필요 조건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전제조건에서 나머지 분석 결과는 어떠한 방식으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지를 알려 주고 있다. 먼저 고학력자의 고용효과가 높다는 결과로 볼 때, 장기적으로 농촌지역이 인적 자본 축적 수준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뒤의 함안군 사례에서도 나타나듯이 기능인력의 부족이 사업체의 농촌지역 입주를 어렵게 하며, 결국 인근 지역에서 기능 인력을 보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인근 지역에서 노동력이 공급된다는 것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인근 지역의 인구가 고용효과에 긍정적이라는 결과에서 볼 때, 인근 지역과 어떠한 보완 관계를 가지도록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것인가도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보완 관계는 특히 대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생산과 소비의 공동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분석 결과의 또다른 시사점이기도 하다. 곧 300명 이상의 사업체가 긍정적인 고용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4. 고용 창출 사례 연구

4.1. 사례 연구 대상지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농촌지역의 고용 창출은 제조업의 입지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다면 개별 제조업은 어떠한 요인에 의해 농촌에 입지할까. 또한 농촌지역에서는 입지한 제조업을 통해 지역 고용을 어떻게 창출하는가. 이러한 물음은 농촌지역에서의 고용기회 확대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관심사라 할 것이다. 이러한 물음은 통계 또는 모델분석보다는 구체적인 사례 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 있는 문제일 것이다. 이러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 여기에서는 사례 지역의 기업체 및 고용자 조사를 실시한다.

사례 지역은 경남 함안군이다. 함안군은 마산과 창원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농촌지역이면서 제조업의 입지가 매우 활발한 지역이다. 2004년 말 현재 859개 업체에 이들 기업체 고용인원은 12,054명에 이르고 있다. 1994년 이후 2004년까지의 최근 10년간 기업체 수가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함안군의 산업구조는 종사인구로 보면 1차산업이 53.1%를 차지할 정도로 여전히 농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수박, 청포도, 파프리카 등 젊은 농업자 중심의 시설원예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농촌지역이면서 제조업의 입지가 활발한 지역이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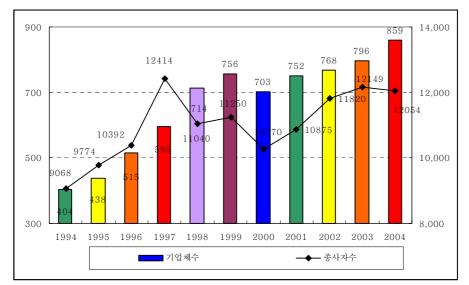


그림 4-4. 함안군 기업체 변화, 1994-2004

자료: 함안군 지역경제과(2005).

4.2. 조사 방법

조사는 일반 지역경제조사와 농공단지 사례조사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지역경제조사는 함안군에서의 제조업 활동과 고용기회창출의 관계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함안군 내부 자료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진흥공단 자료, 함안군 현지 방문 조사, 함안군 지역경제과 담당자, 함안농공단지소장, 지역 상공회의소와의 면담 등으로 이루어졌다.

농공단지 사례 조사는 「군북농공단지」, 「산인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회사와 회사대표의 경우 전수조사를 하였으며, 종사자의 경우 업종별 대표성을 가지는 회사의 경우만 조사하

였다. 회사대표는 인터뷰와 설문지 조사를 병행하였으며, 종사자의 경우 극히 예외로 보충 인터뷰가 이루어졌으나 설문지 조사를 원칙으로 하였다. 사전 조사가 6월 20일부터 7월 15일까지 25일간 이루어졌고 이후 면담과 설문조사가 이루어진 시기는 2005년 7월 20일부터 7월 29일까지였다. 면담과 설문조사는 사전조사에서 확인된 시차적 요인을 없애기 위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농공단지 사례 조사는 「군북농공단지」의 경우 가동 중인 총 13개기업 중「태홍섬유」는 현지생산이 없어 제외하고 대표이사 면담과 설문 조사는 12개 업체에 대해 이루어졌다. 종사자 설문지는 총 280매가업종별, 재직 노동자수에 따라 배포되어 202매가 회수되었다. 「산인농공단지」는 총 20개 업체 중 현지생산이 없는 기업을 제외한 총 17개업체의 대표이사 면담과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 종사자의 경우 설문지는 업종과 재직 노동자수를 감안하여 총 250매 설문지를 배포하여 173매가 회수되었으며 회수율은 69.2%였다. 결국 종사자 설문지는 총 530매를 배포하여 375매를 회수하였다.

4.3. 조사 결과

4.3.1. 기업체의 입지 요인

함안군의 경우 제조업의 입지 요인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근 도시에 관련 산업군의 형성과 지리적인 이점으로 나타났다. 함안군은 마산시, 창원시에 인접해 있으면서 남해·중부내륙 고속도로, 경전선 철도, 국·지방도로 등이 관내를 통과하고 김해공항이 인접해 중부경남의 타지역에 비해 교통망이 발달되어 있다. 이러한 장소적 이점은 마

산, 창원 지역 입주 기업체의 사업 확장과 관련 기업체들의 신규 창업 등으로 함안군을 선호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51

특히 창원 기계공업단지의 관련 업종의 함안군 입지수요가 높은 편이다. 그 예로서 창원군에 가까운 「산인농공단지」는 기계장비, 조립금속, 정밀기계, 자동차 및 운송장비 등 창원 기계공업단지 주력업종과 관련한 사업체 종사자가 94.0%를 차지하고 있다. 창원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진 군북농공단지의 경우에도 마산, 창원 기계공업단지의 관련이 있는 기계, 금속 공업이 전체 업종의 1/3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농촌공업의 경우 결국 가까운 도시 혹은 도시공단의 영향을 어느 형태로든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 압출요인

함안군의 제조업 입지 요인을 지역 밖에서의 압출(push)요인과 지역 내의 흡인(pull)요인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자. 함안군의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요인이 모두 작용하고 있지만 압출요인이 더욱 크게 작용하 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지역 상공회의소에 농촌으로 이주하는 기업들의 농촌 진입 원인을 물어본 결과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이제는 도시에서 '아무리 돈을 주 어도 땅을 더 구할 수가 없다'는 것이 일차적 이유였다. 토지 공급 즉 도시의 문제 때문에 유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었다. 압출 요인은 함 안군의 입주 기업이 창원기계공업단지와 직·간접으로 연계된 업종이

⁵¹ 상공회의소와 함안군청 지역산업과에 사전 문의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함 안군에 기업이 들어오는 결정적 이유는 인근 도시 즉 마산과 창원이 이미 높은 지가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도시에 공장이 들어갈 수 없는 토지 포화 상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많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또한 함안군에 있는 기업이 함안군의 지역 주민보다는 인근 창원과 마산 등지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에서도 압출 요인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일부 기업주는 현지인 채용의 어려움, 외지 통근자의 교통난, 기타 경영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다시 도시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데, 이 점도 압출요인을 확인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 흡인요인

흡인요인 중 가장 큰 것은 지가이다. 「군북농공단지」와 「산인농공 단지」입지 요인으로서 '지가가 싸서' 농촌으로 왔다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군북농공단지」 43.8%, 「산인농공단지」 38.1%). 두 번째의 흡 인요인으로 조세 감면 등의 정책적 보조를 들 수 있다. 「산인농공단지」 의 경우 '저렴한 지가'와 '조세 등 정책적 보조' 때문에 농촌으로 왔다 는 대답이 38.1%로 같은 비중을 차지했고, 「군북」은 25%가 정책보조 를 입지 요인으로 꼽았다. 이는 조사 대상 기업이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수성도 있겠으나 정책보조가 농촌지역에 기업을 유치하는 주요한 요인임에는 틀림없다고 하겠다.

정책과 관련한 또 하나의 흡인요인을 지적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기업 유치 전략을 들 수 있다. 현재 함안군에는 4개의 농공단지가 있고 「칠서일반지방산업단지」가 조성 중이다. 또한 함안군청은 2개의 농공단지를 더 만들려고 준비 중이다. 함안군에서는 "마땅히 고용을늘릴 자원이 없고 비교우위 산업도 없는 데 비해 기업들의 진입 수요는 계속 있기 때문에 이를 유도하기 위한 공업단지 조성에 적극 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농공단지 입주 업체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세금 감면과 분양가 보조가 이루어지는데 이를 지자체가 적극 활용하고

있는 점도 또 하나의 흡인요인이라 할 수 있다.

■ 작용하는 정도

압출요인과 흡인요인은 함안군 지역 전체에 일률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와의 거리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도시로부터 거리가 먼「군북』의 경우 농촌 이주 요인으로 '현지 인력 이용'을 든기업이 18.3%, 「산인」은 '도시에서 땅을 구할 수 없어서'라고 답한 기업이 14.3%였다. 이는 매우 중요한 점이다. 도시에서 먼 농촌으로 들어오는 기업의 경우, 실질적으로 농촌의 노동력에 관심이 있지만 도시와 인접한 농촌의 경우 현지 인력에 대한 관심보다 도시에서 실질적으로 가능한 벗어나지 않으면서 땅값이 싼 곳으로, 즉 도시와 인접한 농촌지역으로 입주하고자 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한편 농촌지역의 흡인요인으로서 일반적으로 지적되는 저렴한 인건비 요인은 함안군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입주 기업 조사에서 '임금이 농촌이 싸서 입주했다'는 기업은 양 지역 모두 없었다. 임금은 언제나기업가들에게 가장 큰 관심이었고 이번 조사에서도 계속 확인되었지만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으로의 진입 동기에서는 임금이 중요한 요인이되지 못했음을 보여 준다. 기업들은 농촌에 들어올 때 이미 농촌이라고해서 임금이 싸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다. 농촌임금이 명목금액으로는 싸지만 그들의 기술 수준이나 학력 등 여러 다른 요소들을 고려할때 임금이 싸지 않다고 생각하는 기업주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농촌지역의 흡인요인으로 지적되는 농촌 자원을 활용한 기업활동도 함안 지역에서는 크게 발견되지 않았다. 조사 대상인 양 농공단지에서 지역의 농산물과 관련이 있거나 전통적인 기술을 활용한 기업체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 이를 잘 나타내 준다.

4.3.2. 입지기업의 지역 내 고용기회 창출

함안군 전체 농공단지에 대한 고용 관련 변수를 살펴보면 <표 4-19>와 같다.

<표 4-19>에서 농촌 현지인 고용 비율은 함안군 농공단지 전체로 볼 때 2005년 6월 말 현재 39.3%였다. 여기에서 현지인 고용비율은 현재 함안군이나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정의하여 쓰고 있는 것처럼 주소를 함안군 현지에 두고 있는 종사자의 전체 종사자에 대한 비율이다.52

표 4-19. 함안군 농공단지 고용현황, 2005

단위: 개소, 명, %

	가동	성별 구성		출신지 구성				업체당	현지인
나시면!	업체수	남	여	현지인 (농가)	현지인 (비농가)	외지인	총 인원	인원	비율
파수	28	357	121	71	171	236	478	17.1	50.6
군북	13	258	130	130	119	139	388	29.8	64.2
법수	17	491	83	12	197	365	574	33.8	32.6
산인	20	561	80	21	97	523	641	32.1	18.4
계	78	1,667	414	234	584	1,263	2,081	26.7	39.3

주: 생산과 수출은 2005년 2분기 실적임.

자료: 함안군 지역경제과(2005. 6. 30).

⁵² 그러나 신규 고용 면에 초점을 맞추어 엄밀히 얘기하면 고용되기 이전 주소를 함안군에 두었던 종사자의 전체 종사자에 대한 비율이 현지인 고용비율이 될 것이다. 따라서 조사자는 나중 사례 분석에서 신규 고용의 경우 前주소를 동시에 고려하여 조사·분석하였고 일반 종사자 특성의 경우는 현주소 현지인을 대상으로 하여 분리하여 분석·검토한다.

우선 도시에서 먼「군북농공단지」의 현지인 비율이 64.2%로 가장 높고 도시에서 가까운「산인농공단지」가 18.4%로 가장 낮음을 알 수 있다. 그 중간에 도시와의 거리에서 차이가 없는「파수농공단지」(이하「파수」로 씀)와「법수농공단지」(이하「법수」로 씀)의 현지인 비율이 50.6%, 32.6%로 나타난다. 즉 도시와의 근접성에 의해 현지고용인 비율이 결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현지인 취업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현지 농가의 취업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군북의 경우 사업체 총 종사자 수 388명 중 현지 농가가 130명으로 전체의 33.5%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산인 농공단지는 전체 종사자의 3.2%만이 현지 농가이다.

「군북농공단지」와「산인농공단지」의 2003년, 2004년, 2005년 최근 3년 입주업체 수와 고용인원, 현지인 비율 등의 변화를 정리하면 <표 4-20>과 같다. 모두 매년 6월 기준이며 현지인 비율 변화는 현지인 비율의 절대수치 변화를 말한다.

표 4-20. 최근 3년 「군북농공단지』와「산인농공단지』 현황, 연 6월 말 현재

		입주 업체 (개)	인력 부족분 (명)	인력 부족률 (%)	고용 인원 (명)	현지인 고용 (명)	현지인 고용비율 (%)	고용 ⁽ 변:	화	현ス 변: (명	화	현지인 비율변화 (%P)
7	2003	12	4	1.0	399	288	72.2	-13		-10		-0.1
군 북	2004	13	56	11.2	445	230	51.7	+ 46	-24	-58	-49	-20.5
-1	2005	14	-	-	388	249	64.2	-57		+19		+12.5
>1	2003	20	60	7.2	775	254	32.8	+100		+45		+1.8
산 인	2004	21	34	4.6	710	280	39.4	-65	-34	+26	-91	+6.6
	2005	22	_	-	641	118	18.4	-69		-162		-21.0

주: 변화는 전년 동월 대비임.

자료: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진흥공단(2003);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진흥공단(2004); 함안군 지역경제과(2005). 2003년에는 「산인농공단지」의 인력 부족률이 7.2%로 거의 인력부족이 없었던 「군북농공단지」의 1.0%에 비해 높았다. 그러나 2004년에는 도시와 인접한 「산인농공단지」의 인력 부족률이 대폭 개선된 반면, 농촌지역에 위치한 「군북농공단지」의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었다.

인력 부족 문제가 항상화·심화되면서 양쪽을 합하여 보면 결국 현지인 비율이 2004년 44.2%에서 2005년 35.7%로 낮아지고 있다. 최근 3년간을 보면 「군북농공단지」는 고용인원이 24명 줄고 있으나 현지인은 49명이 줄고 있고, 「산인농공단지」는 고용이 34명 줄고 있으나 현지인은 91명이 줄고 있다. 즉 전체적으로 지역 차이 없이 현지인 고용이 더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지 고용비율의 감소한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결합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농촌에 절대적인 인력 부족, 기업주가 원하는 기술 인력 부 족, 저임금으로 인한 고용자의 회피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 이다. 이러한 사실은 양 농공단지 기업체와 고용자 조사에서도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

두 농공단지 입주 기업체 대표들에게 왜 현지인 고용이 감소하는지 물은 결과 양 지역 모두 '농촌 현지인을 구할 수 없어서'라는 대답이 각각 53.3%, 47.4%로 압도적 1위였다. 현재 농촌에서 흡수 가능한 주인원은 40대 이상의 여자라고 대답했다.

특징적인 것은 더욱 개별 기술사용적인 「산인」의 경우 31.6%가 현지인 고용이 더 많이 주는 이유로 기술 부족을 들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자동화가 많이 진행되고 개인 기술집약도가 낮은 업종이 많은 「군북」의 경우 '기술수준이 낮아서 현지 고용인 고용을 더 줄인다'는 대답이 높지 않았다. 이는 업종에 따라 현지고용인에 대한 태도, 채용이 달라짐을 확인해 준다.

반면 종사자들은 '농공단지에 사람이 왜 모자라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군북」 응답자의 34.3%가, 「산인」은 47.1%가 월급이 적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표 4-21>.

노동 공급자에게는 급여가 가장 중요한 요인임이 모든 곳에서 확인된다. 특히 도시와 인접하고 외지인 비율이 높은 「산인」의 경우 50%에 가까운 비율이 월급을 응답했다. 농공단지에 사람이 부족한 두 번째 이유로 꼽은 것은 두 지역 모두 '장래 희망이 없고 불안'하기 때문이었는데 「군북」이 26.3%로 「산인」의 21.7%보다 약간 높다.

한편 농공단지가 입지함으로써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효과가 발생하고 있음을 두 개 농공단지 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농공단지 종사자의 과거 거주지53와 현재 거주지를 비교함으로써 알 수 있다. <표 4-22>은 현재 함안 농공단지 종사자들에게 현 직장에 근무하기전 거주지를 질문한 것이다.

「군북」의 경우 원래 함안군 주민이었던 비율은 41.5%로 높았지만 「산인」의 경우는 18.0%로 낮았으며 함안군 외 농촌주민을 포함한 농

구 분	군북	산인
농촌이어서	35 (17.7)	26 (16.6)
일이 힘들어서	43 (21.7)	23 (14.6)
월급이 적어서	68 (34.3)	74 (47.1)
장래 희망이 없고 불안해서	52 (26.3)	34 (21.7)
합계	198 (100.0)	157 (100.0)

표 4-21. 농공단지에 사람이 모자라는 이유

⁵³ 현지인이란 현지 주소를 함안군에 두고 있는 사람이지만 고용이라는 면에 초점을 맞추어 '현지인 고용 창출'이라고 할 경우 엄밀한 의미에서 이는 전 주소가 함안군이었던 사람을 의미한다.

구 분	군북	산인		
함안군	83 (41.5)	31 (18.0)		
함안군 외 농촌	22 (11.0)	5 (2.9)		
마산창원	45 (22.5)	124 (72.1)		
경남 외 도시	50 (25.0)	12 (7.0)		
<u></u> 합 계	200 (100.0)	172 (100.0)		

표 4-22. 농공단지 근로자의 과거 거주지

촌인구 전체로 해도 20.9%로 낮았다. 「군북」의 경우 함안군 외 농촌까지 포함하는 과거 거주지 기준 농촌주민 고용효과를 보면 52.6%로이는 「산인」에 비해 2.5배나 높다.

현재 주소로 계산하는 통상적인 현지인 고용률을 보기 위해 현재 거주지를 정리한 것이 <표 4-23>이다.54

丑 4-23.	농공단지	근로자의	현재	거주지	
丑 4-23.	농공단지	근로자의	현재	거주지	

구 분	군북	산인		
함안군	138 (70.4)	45 (26.8)		
마산시, 창원시	22 (11.2)	116 (69.0)		
마산시, 창원시 외 경남 시부	26 (13.3)	6 (3.6)		
함안군 외 경남 군부	6 (3.1)	1 (0.6)		
경남 외 시부	4 (2.0)	0 (0.0)		
경남 외 군부	0 (0.0)	0.0)		
합계	196 (100.0)	168 (100.0)		

^{54 &}lt;표 4-23>에서 보았듯이 2005년 6월 말 현재 현지인 비율은 『군북』이 64.2%, 『산인』이 18.4%였다. 한 달 사이의 이러한 급등은 일단 표본차이에 따른 것으로 6월 말 조사는 경영자에게 군청 지역경제과에서 물어본 것이고 7월 말 조사는 종사자 표본조사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표본의 차이를 인정한다고 해도 그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7월 들어 현지인 채용 비율이 높아졌을 것으로 추측한다.

<표 4-23>의 현 거주지 응답비율을 <표 4-22>의 이전 거주지 비율과 비교해 볼 때「군북」이나「산인」모두 농촌으로의 역이주, 역류 효과를 가짐을 알 수 있다.「군북」의 종사자는 현재 함안군에 70.4%, 경남 군부에 73.5%가 살고 있어 이전 주소가 함안군이었던 비율 41.5%를 생각하면 함안군으로의 이주효과가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산인」의 경우도 27.4%가 현재 농촌인, 26.8%가 함안사람으로 역시 이주효과가 있었다. 특히 도시와 먼 농촌일수록 오히려 농촌으로의 이주효과가 더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3.3. 입지 기업체의 고용증대 방안

앞에서 말한 것 외에 군북과 산인의 농공단지 조사를 통해서 다음 과 같은 사실을 추가로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농촌지역에 입지하 는 기업체와 그 지역의 고용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가. 수요자 조사

기업 대표이사들에게 향후 가능하면 누구를 많이 고용하겠는가라는 질문에 「군북」과 「산인」은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현지인 고용이 많은 「군북」은 61.5%가 가능하면 현지인을 고용하겠다고 대답한 데 반해, 도시와 인접한 「산인」의 경우 38.9%가 누구든 상관없다고 대답했다.

가능하면 현지인을 고용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의 대표이사는 「군북」은 '현지에서 구하기 쉬워서'라고 대답한 기업이 41.7%로 다른 응답과 차별적으로 많았지만, 「산인」은 '구하기 쉬워서'와 '일을 더 성실해 해서'가 각각 40%를 차지했다. 현지인을 구하는 이유는 양 지역모두 외지인보다 구하기 쉽고 일을 더 성실히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공통점이 있었다. 그러나 농촌 현지인이 더 기술이 좋다고 생각

하는 기업은 양 지역 모두에서 한 기업도 없었다.

이상의 대답에서 농촌에 입주하는 기업의 기술집약도 등에 따라 현지인 고용 창출이 달라지며 한편으로는 농촌 현지인에 대한 기술교육의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대표이사들에게 현지인 고용을 더 늘리기 위해서는 어떤 정부 정책이 필요한지 물어보았다. 「군북」은 '현지인에 대해 임금을 보조해준다면 당연히 기업으로서는 현지인을 늘릴 것'이라는 답변이 1/3로서가장 많았다. 이는 「군북」의 경우 현지인을 더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정부가 그들 임금을 보조해 준다면 당연히 적극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산인」은 28.6%가 그들 현지인 고용수만큼 세금을 감면해 준다면더 늘릴 것이라고 대답했다. 현지 고용을 늘리려면 도시에 가까운 지역일수록 세금정책이, 농촌에 가까운 지역일수록 임금보조 정책이 유효하다는 것을 짐작케 해주는 대목이다.

나. 공급자 조사

전체 응답자 중 순고용 창출 효과는 「군북 과 「산인」 두 지역에서 각각 31.5%, 34.5%이다. 따라서 농공단지가 유휴노동력을 흡수하는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농촌 역류와 직업 이동 면에서 효과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1차 산업 인구의 흡수효과는 「군북농공단지」가 「산인농공단지」보다 매우 높았다. 반면「산인」은 회사원, 공무원 등 비교적 도시 지향적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을 흡수하는 효과가 매우 컸다. 이러한 차이는 도시와의 근접도에 의한 것이다.

정부가 무엇을 지원해주면 농공단지에 계속 남겠는가에 대한 응답에서 「군북」은 66.5%가, 「산인」은 56.6%가 임금 인상을 꼽았다. 떠나려는 사람은 물론, 머물러 있겠다고 한 사람도 일단 정책에 대한 기대

는 임금이 가장 크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정부가 이에 대해 도와주기를 기대했다. 비록 비율은 낮았지만 그 다음 많은 응답은 「군북」에서 교육과 교통시설, 그리고 이어 기술교육지원이었다.

마지막으로 현지인 고용을 기업이 어떻게 하면 늘릴 것인가를 노동 공급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해 각 지역 모두 임 금보조를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고 그 비율도 공통적으로 전체 응답자 의 반을 넘었다. 이는 대표이사와의 인터뷰에서도 확인되는 제안이었 다.

5. 분석 결과의 종합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농촌지역은 사업체의 업종별 분포에서 도시지역에 비해 제조업과 도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비중이 높고, 업종별 비중과 낙후지역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낙후지역에서는 도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 비중이 높았으며 반대로 제조업의 비중은 낮았다는 사실로부터 농촌지역의 성장에는 대규모 사업체의 존재와 제조업 기반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지역별 일자리 창출과 소멸을 추계한 결과에 의하면 지역별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농촌지역간에 고용 창출이 많은 차이를 보이 고 있는데 그 요인으로서는 인근 지역의 상황(인구를 대리변수로 한 경우), 지역의 인적 자본 축적 수준, 대규모 사업체 입주 정도 등이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함안군의 사례 조사에서 농촌지역에 기업의 입지 요인이 지역 밖에서의 압출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도시로부터 원거리에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지가 등의 흡인요인이 더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어느 경우이든 그 지역의 장소적 이점(원료자원, 기술노동력, 기타 지역자원)을 좇아 입지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함안군의 사례를 통해 전국 모두를 일반화시키기는 어렵겠지만 농촌지역 기업입지가 내생적인 요인보다는 외생적인 요인에 의해 크게 결정되고 있음을 짐작케 해준다.

다음으로 농촌지역에 기업체가 입지함으로써 지역의 고용기회 창출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체의 기술력, 입지 장소 등에 따라 달라짐을 알수 있었다. 도시에 가깝고, 대규모이며 기술사용형 기업체에서는 현지고용비율이 낮은 반면에,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며 노동집약형산업에서 현지인 고용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사례 조사에서 현지인 고용비율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점, 대다수 기업주가 현지 고용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농촌지역의고용 창출을 위해서는 공급 측의 요인도 중요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있다.

4 5 3

농업 관련 경제활동 기회의 농촌지역간 차이 분석

이 장에서는 농업에 바탕을 둔 경제활동이 농촌지역간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며 그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례조사 방법을 취한다. 사례지역의 농업 관련 경제활동을 다양한 각도에서비교·분석하여 지역별 차이를 밝힐 것이다. 이 장 전편을 일관하고있는 연구 관심은 내생적인 발전 전략이다. 서구에서 말하는 내생적인 발전 전략이 우리나라 농촌에도 적용되어 정책 대안으로 기능할 수있을지를 타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분석의 개요

1.1. 분석 목적 및 이 연구에서의 위치

이 장에서 중점적으로 밝히고자 하는 것은, 첫째, 농업과 농촌자원에 바탕을 둔 경제활동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둘째, 그것이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셋째, 만약 그것이 농

촌지역간에 차이가 있다면 그 요인은 무엇인지에 관한 것이다.

제5장의 기본적인 관점은 내생적인 발전론에 기초하고 있다. 제2장에서 살펴본 유럽 등의 내생적 발전이론이나 혁신이론을 우리나라의 농촌지역에 접목하여 농촌지역 경제활동의 지역간 차이를 설명할 수 있고 우리나라 농촌발전을 설명해주는 대안 이론으로 삼을 수 있는가도 아울러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장에서는 사례 연구 방법을 취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내생적 발전 전략은 지역 자원(자연 자원, 인적 자원, 지역 자본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꾀하는 기제인데, 이러한 기제는 통계나 또는 그러한 통계에 입각한 분석모델을 사용하여 파악하는 데에 한계 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 장은 이 연구의 핵심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이 연구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인 내생적 발전 전략에 의해서 우리나라 농촌지역경제활동 기회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정책 대안이 가능한가를 이 장의연구 결과를 통해 타진하며, 제2장에서 제시한 몇 가지 연구 문제에대해 답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1.2. 사례 지역 선정의 관점과 방법

사례 지역은 전국 군 지역 중 다음의 관점에 입각해서 6개 지역을 선정한다. 사례 지역 선정의 기본적인 원칙은 비농업 분야에서의 고용 창출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그것이 농업 관련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 두 번째, 농업 관련 경제활동이 비교적 활발하게 일 어나는 지역일 것, 세 번째, 농업 관련 경제활동이 특정 주제를 가질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농업 부문의 경제활동 측면에서 높은 역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고소득 농가가 많고, 작목반 및 영농조합 등의 공동 활동 조직 또한 다수 분포하고 있는 곳으로서 당진군, 해남군을 선정하였다. 이들 두 지역은 2005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집계한 전국 165개 시·군 지역농업 역량 종합지수 순위(김정호, 이병훈 2005)에서 각각 2위, 6위를 기록하였다. 구체적으로 농업 관련 공동활동의 정도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영농조합과 작목반 수에서도 전국 평균치를 상회하는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농산물 판매액기준으로 볼 때 농가의 대략적인 평균치라 할 수 있는 2천만원 이상농가 비율에서도 전국 시·군 평균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두 번째로 비농업 부문의 경제활동 면에서 성장 양상을 보이는 지역들 중 각각 제조업과 관광업으로 특화된 지역으로서 함안군, 평창군

구 분	지역농업역량 종합지수 순위 (2000년)	농산물 판매액 2천만원이상 농가 비율(2000년)	영농조합 수 (2003년)	작목반 수 (2004년)
평창군 당진군 순창군 해남군 성주군 함안군	125 (115) 2 (2) 114 (117) 6 (3) 39 (58) 60 (62)	23.8 % 25.8 % 9.1 % 18.4 % 36.8 % 18.1 %	56 34 30 108 18 26	147 247 82 156 258 127
전 국	_	14.0 %	26	100

표 5-1. 사례 지역의 농업 관련 지표 비교

주: 지역농업역량지수 순위 중 ()안은 1990년도 순위임.

자료: 지역농업역량지수는 김정호·이병훈(2005), 농산물 판매액은 2000년 농업총조 사, 영농조합 수는 농림부 내부자료, 작목반 수는 농협중앙회 내부자료를 각각 참조.

을 선정하였다. 함안군은 1997년, 2000년, 2003년 3개 연도 사업체 종사자 지표로 보았을 때 연평균 +1.7%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다른 군 지역과 대조해보았을 때 제조업 특화계수(종사자 기준)가 1.98로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평창군은 사업체 종사자가 연평균 +1.3%씩 증가하고 있으며, 관광산업과 관련되는 ① 음식·숙박업, ② 오락·문화 및 운동 관련 산업 특화계수가 각각 1.82 및 3.36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세 번째로 농업 관련 경제활동에서 나름의 주제가 강하게 나타나는 지역으로 순창군과 성주군을 선정하였다. 순창군은 전통 장류를 생산하는 가공업체가 계속 증가하면서 2004년에 75개나 등록되어 있는 등전통산업과 연계한 지역경제활동이 활발하여 2004년에는 장류특구로지정된 곳이다. 전통산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경제 모델을 내생적 발전론 관점에서 탐구하기 위한 사례 지역으로 적정하다 할 것이다. 성주군은 참외로 특화된 곳이다. 참외로 인한 고소득 농가가 다수 분포하고 있으며 참외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기술 개발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1.3. 사례 지역의 조사 방법

사례 지역의 농업 관련 경제활동을 3가지 측면에서 파악한다. 첫 번째는 지역경제 현황 조사이다. 각종 통계, 지역의 기업가, 공무원, 기타 지역 여론주도층 등과의 인터뷰 조사를 통하여 지역경제의 전반적인 특징, 특히 산업구조의 변화와 일자리 창출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두 번째는 농업 관련 경제활동 일반 조사이다. 이는 다양한경제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개별 농업인, 조직 경영체(영농조합, 작목

반, 농업회사법인), 기타 사업체(공공사업체, 회사법인)의 경영자를 대상으로 하는 우편조사이다. 세 번째는 농업 관련 경제활동 심층 조사이다. 이는 농업 관련 경제활동 특성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각 조사 방법별 주요 조사 내용과 조사 목적은 <표 5-2> 및 <표 5-3>과 같다.

조사 대상은 농업 관련 경제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 사업체(이하 '등록 사업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 사업체(이하 '미등록 사업체'),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공공사업체, 회사법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등록 개인사업체와 미등록 개인사업체 그

표 5-2. 지역경제 현황조사 내용

조사 항목	조사 방법	조사목적 또는 분석의 초점
 인구구조 변화 총인구 및 연령별 인구 변화 총가구수변화 	- 통계조사	- 지역인구 변화의 특성을 통하여 지역의 쇠퇴 성장 정도를 파악 - 전국 평균과 비교
2. 지역경제 구조 변화 - 지역산업구조변화 - 농업구조 변화(종사자수, 경지 면적, 영농 형태 등) - 지역산업구조 변화 요인	- 통계조사 - 인터뷰 조사	- 지역산업구조와 농업구조 변화와의 관계 분석 - 지역산업구조 변화를 가져온 특이 사항을 인터뷰 등을 통하여 점검
3. 고용활동변화 - 산업별 일자리의 변화 - 농업관련산업에서의 고용활동 변화 - 고용활동 변화를 가져온 요인 파악 - 지역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산 업의 창출	- 통계조사 - 인터뷰 조사	- 어느 분야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가(산업분야, 전통/신규산업) -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의 특징은 무엇인가 - 고용활동 변화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했는가 또는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했는가

표 5-3. 농업 관련 경제활동 조사 내용(일반 및 심층 조사)

조사항목	조사표	조사목적 또는 분석의 초점
1. 경제활동 일반 현황 - 사업장 현황(조직형태, 설립연도, 상근 직원수, 평균 연령, 주요 생산활동 등) - 매출액 및 고용인원 추이 - 향후전망 및 사업계획 2. 경제활동과 지역과의 관계 - 사업체의 입지요인 - 원료 및 종업원 조달처 - 제품의 판매처 및 판매 방법 - 전후방 관련 산업의 발달정도 - 제품의 판매 방법 - 유사 사업체의 존재 유무 - 공동 활동 유무 - 소득의 귀속처	- 우편조사표 - 면접조사표	- 지역 내에서 발생한 다양한 경제활동의 현상을 파악 - 경제활동과 지역 자원과의 관계 파악 - 농업 관련 산업이 지역내 산 업연관 관계를 형성하고 클 러스터로서의 발전하고 있는 지 또는 그 가능성이 있는지
3. 경제활동 주체의 노력 혁신노력 및 수용태세 지역 내 연구 및 기술개발활동 지역 내외 네트워크 공공기관 역할	- 우편조사표 - 면접조사표	-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관련 주체들의 노력과 그것이 경 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리고 회사법인은 해당 시·군에서 추천을 한 사업체이고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공공사업체는 해당 시·군에 소재하는 모든 사업체를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사례 지역별 조사 대상 업체와 실제 회수된 조사표의 비교는 <표 5-4>, <표 5-5>와 같다.

25

252

구 분 조사 대상 일반조사표본 심층조사표본 평창군 71 199 34 당진군 59 31 429 순창군 28 143 43 해남군 584 66 30 성주군 300 62 104

57

358

253

1,908

표 5-4. 사례 조사 표본의 지역별 구성

표 5-5. 사례 조사 표본의 사업체 유형별 구성

구 분	조사 대상	일반조사표본	심층조사표본
무등록 개인사업체	128	65	27
등록 개인사업체	322	67	32
영농조합법인	410	59	36
작목반	858	130	134
회사법인	130	17	8
공공사업체	31	17	15
기 타	11	3	0
합계	1,908	358	252

2. 분석 내용

함안군

합 계

2.1. 지역경제의 현황과 고용 창출

여기에서는 지역경제 현황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사례 지역의 경제

현황과 고용 창출 현황에 대해서 살펴본다.

2.1.1. 인구구조변화와 지역의 경제활동

우리나라 농촌지역의 일반적 특징과 같이 사례 지역 모두에서 '85~'95년 사이에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95~'03년 사이에는 지역별로 사정이 다르게 나타난다. 먼저 당진군은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 외 지역은 여전히 인구가 감소하지만 그 감소율에서는 지역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표 5-6>. 이러한 차이는 그 지역의 경제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당진군의 인구가 증가한 이유는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 이후 당진군이 수도권 외곽의 제조업 입지 후보지로 집중 개발 되고 있는 것과 관련이 높다. 평창군과 함안군에서 인구 감소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것은 평창군은 국내 유수의 리조트가 입지하면서 관광지로서 지역경제가 재편되고 있으며, 함안군은 지리적으로 마산과 창원에 인접해 있어 창원공업단지 연관 산업이 활발하게 입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

표 5-6. 사례 지역 총인구의 변화

단위: 명, %

연도 지역	1985	1995	2003	'85~'95 변화율	'95~'03 변화율
평 창	68,592	49,781	46,531	- 27.4	- 6.5
당 진	147,745	111,624	116,477	- 24.4	4.3
순 창	60,586	39,728	31,593	- 34.4	- 20.5
해 남	150,788	104,660	90,197	- 30.6	- 13.8
성 주	64,648	54,033	48,655	- 16.4	- 10.0
함 안	71,347	68,022	63,435	- 4.7	- 6.7
전국(천명)	40,448	45,858	48,387	13.4	5.5

주: '85년 전국 인구는 인구총조사; '95년 및 '03년 전국 인구는 주민등록인구 자료: 각 시·군 통계연보(각 연도); 인구총조사(1985); 주민등록인구통계(1995, 2003) 으로 판단된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대표적인 농업지역인 순창군과 해 남군에서는 여전히 빠른 속도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이 지역의 경제력이 다른 4개 지역에 비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한편 대부분의 지역에서 심각한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경제활동인구가 절대적인 수치에서뿐만 아니라 상대적인 비율에서도 감소하고 있다. 지역별로 고령화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통적인 농업지역인 순창군과 해남군, 성주군 순이며 반대로 고령화율이 낮은 곳은 평창군, 당진군, 함안군 순이다. 그러나 특이한 것은 당진군과 함안군에서 경제활동인구 전체와 청장년 인구의 절대적인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이들 지역에서 제조업 입지가 활발하게 형성된 결과라고 해석된다.

표 5-7. 사례 지역 인구연령구조의 변화

단위: 명, (%)

		1005-1	11 7 1			2000-1	-1 - 2		
연도	1995년 인구수				2003년 인구수				
지역	15세이하	15~64세	20~49세	65세이상	15세이하	15~64세	20~49세	65세이상	
 평 창	9,517	35,423	21,711	4,839	7,170	32,734	21,380	6,747	
평 창	(19.1)	(71.2)	(43.6)	(9.7)	(15.4)	(70.2)	(45.8)	(14.5)	
 당 진	23,023	76,554	45,813	12,047	21,179	78,064	51,027	17,234	
당 신	(20.6)	(68.6)	(41.0)	(10.8)	(18.2)	(67.0)	(43.8)	(14.8)	
 순 창	6,366	27,607	14,434	5,755	4,199	20,040	11,326	7,243	
正 3	(16.0)	(69.5)	(36.3)	(14.5)	(13.3)	(63.7)	(36.0)	(23.0)	
해 남	19,463	73,030	39,907	12,135	14,074	58,872	34,360	16,680	
에 급	(18.6)	(69.8)	(38.1)	(11.6)	(15.7)	(65.7)	(38.3)	(18.6)	
성 주	9,399	37,386	22,864	7,248	6,795	32,653	20,007	9,207	
78 T	(17.4)	(69.2)	(42.3)	(13.4)	(14.0)	(67.1)	(41.1)	(18.9)	
함 안	11,631	40,958	24,253	7,754	10,610	42,767	28,352	10,058	
임인	(19.3)	(67.9)	(40.2)	(12.8)	(16.7)	(67.4)	(44.7)	(15.9)	
전국	10,477	32,715	23,209	2,665	9,624	34,858	24,980	3,905	
(천명)	(22.8)	(71.3)	(50.6)	(5.8)	(19.9)	(72.0)	(51.6)	(8.1)	

자료: 각 시·군 통계연보(1995, 2003); 주민등록인구통계(1995, 2003).

한편 사례 지역 모두에서 상주인구보다는 주간활동 인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에 거주하면서 일자리가 있는 농촌으로 통근을 하는 생활 패턴이 국토 전반에 걸쳐 일반화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역으로 말하면 이는 또한 농촌이 도시에 비해 정주공간으로서의 매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지역별로는 함안군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외부로부터의 통근자 비율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 특히 광주광역시가 가까운 순창군의 경우 주간인구와 야간인구의 차이가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

2.1.2. 산업구조변화

사례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산업 구조 변화의 특징은 농업의 비중 감소와 3차 산업의 비중 증가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농촌지역 어디에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특성이라고 하겠다. 그러나변화의 정도 그리고 변화 요인은 사례 지역간에 적지 않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지역의 경제활동 수준과 밀접하게 연관되

표 5-8. 사례 지역의 주·야간 인구 비교

단위: 명

연도		1995			2000	
지역	야간인구	주간인구	비고	야간인구	주간인구	비고
평 창	37,625	39,158	- 1,533	40,243	41,884	- 1,641
당 진	92,382	94,070	- 1,688	115,495	118,412	- 2,917
순 창	29,806	29,916	- 110	29,751	30,148	- 397
해 남	80,008	80,824	- 816	87,708	88,514	- 806
 성 주	40,250	42,829	- 2,579	46,024	48,909	- 2,885
함 안	50,194	55,126	- 4,932	57,441	60,882	- 3,441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통근통학인구편』.

어 있다.

사례 지역에서 발견되는 산업구조의 변화 양상은 크게 네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지역의 주력 산업이 농업에서 점차 3차산업으로 옮겨 가고 있는 형태로 평창군이 해당된다. <표 5-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창군은 농업과 제조업에 비해 3차 산업의 비중이 월등하게 높다. 또한 그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평창군은

표 5-9. 사례 지역 산업별 종사자 수의 변화

단위: 명

					1			
연도		19	95			20	03	
지역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음식숙박업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음식숙박업
 평 창	6,055	622	11,820	2,888	5,406	991	11,685	3,310
**************************************	(32.7)	(3.4)	(63.9)	(15.6)	(29.9)	(5.5)	(64.6)	(18.3)
 당 진	17,624	7,686	20,582	3,009	16,307	7,515	20,378	3,893
당 신	(38.4)	(16.7)	(44.8)	(6.6)	(36.9)	(17.0)	(46.1)	(8.8)
 순 창	8,051	1,062	5,649	768	6,511	1,143	5,789	812
순 창	(54.5)	(7.2)	(38.3)	(5.2)	(48.4)	(8.5)	(43.1)	(6.0)
 해 남	17,675	2,963	14,930	1,865	17,145	2,826	14,805	2,678
애 님	(49.7)	(8.3)	(42.0)	(5.2)	(49.3)	(8.1)	(42.6)	(7.7)
 성 주	10,437	3,962	6,550	1,271	7,777	4,234	7,498	1,484
성 주	(49.8)	(18.9)	(31.3)	(6.1)	(39.9)	(21.7)	(38.4)	(7.6)
 함 안	9,572	10,461	8,305	1,329	8,509	11,666	9,617	1,820
임 안	(33.8)	(36.9)	(29.3)	(4.7)	(28.6)	(39.2)	(32.3)	(6.1)
 전 국	1,556	3,749	9,831	1,289	1,299	3,432	11,262	1,739
(천명)	(10.3)	(24.8)	(65.0)	(8.5)	(8.1)	(21.5)	(70.4)	(10.9)

주1. 1차 산업 종사자수는 통계자료의 제약으로 "1차 산업 사업체 종사자수 + 농 가호수"로 계산(1농가에 농업종사자 1명으로 간주)

^{2. 1}차 산업(농림업+어업), 2차 산업(광업+제조업), 3차 산업(전기가스수도+건설업+도소매업+음식숙박업+운수업+...+개인서비스업)

^{3.} 해남군 산업구조 '95년치는 '96년 자료로 대체함.

자료: 각 시군통계연보(1995, 2003); 각 시도 통계연보(1995, 2003).

용평리조트 단지, 보광 피닉스 파크 등 국내 유수의 리조트 시설이 입지하 있다. 최근에는 펜션 등 소규모 콘도형 숙박시설의 입지가 활발하다. 이러한 영향으로 평창군은 3차 산업에서의 고용 증대가 활발하다. 특히 관광산업과 관련이 깊은 음식·숙박업과 오락·문화·운동관련 서비스업에서 고용 증대가 두드러진다.55 전통적으로 농촌지역에서 3차 산업은 비기반 산업(non-basic industry)으로서 기반 산업(basic industry)인 농업이나 제조업에 의존하여 발달하는 경우가 많다. 농업이라는 기반산업의 쇠퇴가 비기반 산업인 3차 산업의 쇠퇴를 가져오고 지역경제 전체가 후퇴하는 양상이 낙후 농촌지역에서 발견되는 일반적인 모습이다. 그러나 평창군의 경우는 관광산업이 지역의 기반산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뒤에서 자세하게 말하겠지만, 평창군은 관광 관련 산업의 성장이 농업과 제조업의 성장을가져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발전 형태를 보여 주는 경우라 할수 있다.

두 번째는 제조업이 지역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형태이다. 함안군이 여기에 해당된다. 2003년 기준으로 함안군에는 4,052개의 사업체에 29,792명이 고용되어 있는데 이 중 제조업 종사자 수가 39.2%에 달하는 11,048명이다. 앞의 제4장의 사례에서 상세하게 살펴보았지만 함안군의 제조업 입지는 인접한 창원기계공업단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함안군의 제조업 비중은 2001년도의 지역총생산액에서 46.1%를

^{55 1995}년과 2003년 사이에 평창군의 음식 숙박업의 사업체 수는 845개에서 1,225개로 48.5% 증가하였고 사업체 종사자 수는 2,888명에서 3,310명으로 14.6%증가하였다. 또한 오락·문화·운동 관련 서비스업은 통계자료가 없어 1995년과 비교할 수 없지만 '03년에 95개의 사업체에서 975명이 종사하고 있다. '03년을 기준으로 이 두 업종에 종사하는 고용자수는 평창군의 전체 사업체 고용자수의 약 32.7%에 이르고 있다.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경남도의 군부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다. 함안군에서 제조업의 지역 내 입지는 지역 내 농업과 서비스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겸업농가의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아 농가소득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다. 또한 제조업의 발달은 이 지역 서비스 산업의 지나친 발달을 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겠다.

세 번째는 농업과 함께 제조업이 지역의 주력 산업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점차 제조업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형태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당진군과 성주군이다. 당진군은 김제에 이어 논의면적이 전국 2번째일 정도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쌀 농업 지역으로 농업이 지역경제의 근간을 형성해 왔다. 그러나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과 함께 서울과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됨에 따라 수도권 인근에서인기가 높은 기업입지 후보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아산국가산업단지 고대 부곡지구와 2개의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철강(한보철강을 인수한 INI스틸 등)과 비금속광물 업체의 입지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표 5-9>에서 보듯이 1995년에 비해 2003년이 제조업 종사자 수가약간 감소하였지만 이는 한보철강 부도 등으로 일시적인 현상일 뿐 2005년 INI스틸 공장이 가동되고 이것과 연관된 대형 업체들이 당진군에 속속 입지하면서 제조업 종사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머지않아 당진군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성주군은 참외가 국내에서 가장 특화된 지역으로 농업이 지역 경제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는 곳이지만 제조업의 활동도 매우 활발한 지역이다.

네 번째는 농업이 여전히 지역의 기반산업을 형성하고 있지만 그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의 지역에서는 농업의 쇠퇴를 대체할 만한 신산업의 출현이 없기 때문에 인구 유출 등 지역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순창군과 해남군이다. <표 5-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순창군과 해남군의 '95년과 '03년사이에 산업 구성 변화는 1차 산업 비중 감소와 3차 산업 비중 증가, 2차 산업 비중 현상 유지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3차 산업비중 증가는 이 분야에 고용자수가 증가 하여 나타난 결과이기보다는 지역 전체의 고용자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다시 말하면이 지역의 3차 산업은 이미 포화 상태에 있기 때문에 1차 산업에서의고용 감소를 지역 내의 3차 산업이 대체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해석할수 있다. 해남군의 경우처럼 오히려 기반산업인 농업이 쇠퇴함에 따라 3차 산업에서의 고용도 동반 하락하고 있다. 농업을 대체할 만한 주력산업의 모색이 적극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역경제의 쇠퇴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1.3. 일자리 창출

사례 지역의 일자리 창출 현황을 노동부의 고용보험DB를 통해서 살펴본다. 제4장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고용보험 DB는 한 지역의 경제력에 의해 좌우되는 민간 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 현황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 가운데 하나이다.

먼저 절대적인 일자리 수를 살펴보자. <표 5-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년 사례 지역 중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당진군(12,278명)이고 그 다음이 함안군(10,519명)이다. 가장 일자리가적은 지역은 농업 이외에 산업이 발달하지 않은 순창군(1,701명)과 해남군(4,258명)이다. 평창군(4,891명)과 성주군(4,765명)은 사례 지역 중

중간 규모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

인구 1인당 일자리 수를 비교해 보면 사례 지역간의 지역경제력의 차이를 보다 잘 알 수 있다. 1인당 일자리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 함 안군(0.167)이고 다음이 평창군(0.108), 당진군(0.104), 성주군(0.098) 순창군(0.053), 해남군(0.048) 순이다. 1인당 일자리 수가 가장 많은 함 안군은 1인당 일자리 수가 가장 적은 해남군의 4배 정도에 해당한다. 사례 지역에서 일자리 창출 분야를 살펴보면 앞의 산업구조에서 살펴본 지역의 특징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평창군은 기타 서비스업,음식숙박업, 건설업 분야에서 고용 창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기타 서비스업에 속하는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에서의

표 5-10. 사례 지역 업종별 고용 현황

단위: 명, (%)

지역	농립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 업	숙박 및 음 식점업	운수업	기타 서비스업	오락,문 화,운동 서비스업	전체	1인당 일자리 수
평창	93 (1.90)	589 (12.04)	5 (0.10)	720 (14.72)	228 (4.66)	894 (18.28)	256 (5.23)	2,106 (43.06)	384 (7.85)	4,891 (100.0)	0.10754
당진	199 (1.62)	6,550 (53.35)	154 (1.25)	1,156 (9.42)	374 (3.05)	164 (1.34)	420 (3.42)	3,261 (26.56)	30 (0.24)	12,278 (100.0)	0.10338
순창	4 (0.24)	458 (26.93)	0 (0.00)	451 (26.51)	53 (3.12)	5 (0.29)	90 (5.29)	640 (37.62)	10 (0.59)	1,701 (100.0)	0.05330
해남	82 (1.93)	441 (10.36)	0 (0.00)	926 (21.75)	315 (7.40)	43 (1.01)	231 (5.43)	2,220 (52.14)	4 (0.09)	4,258 (100.0)	0.04841
성주	45 (0.94)	2,592 (54.40)	3 (0.06)	768 (16.12)	167 (3.50)	46 (0.97)	171 (3.59)	973 (20.42)	10 (0.21)	4,765 (100.0)	0.09843
함안	17 (0.16)	7,787 (74.03)	41 (0.39)	537 (5.11)	391 (3.72)	16 (0.15)	285 (2.71)	1,445 (13.74)	9 (0.09)	10,519 (100.0)	0.16671
전국	24,964 (0.34)	2,711,249 (37.12)	59,379 (0.81)	513,482 (7.03)	760,456 (10.41)	156,165 (2.14)	488,419 (6.69)	2,589,937 (35.46)	95,299 (1.30)	7,304,051 (100.0)	0.14890

자료: 중앙고용정보원. 2004.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 원자료』.

고용 창출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데 이는 이 지역의 관광지로서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당진군은 고용 창출의 54%가 광업 및 제조업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음이 서비스업과 건설업 분야이다. 이는 앞에서 말한 당진 군이 수도권 외곽의 신흥 공업지역으로 계속 발전해 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함안군은 제조업 분야에서의 고용 창출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반면에 서비스업 계통에서의 고용 창출 비율이 낮 다. 이는 지역경제가 제조업 중심으로 비교적 안정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성주군은 당진군과 비슷하게 제조업과 기타 서비스업 그리 고 건설업 순으로 고용 창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해남군은 제조업 분야에서의 고용 창출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크게 떨어지고 기타 서비스업과 건설업에서의 고용 창출 비율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농업 이외의 기반산업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타 서비스업과 건설업이 불균형적으로 발달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순창군 역시 해남군과 비슷하게 기타 서비스업에서의 고용 창출 비율이 높지만 건설업보다는 제조업 분야에서의 고용 창출 비율이 높다.

사례 지역 모두에서 농림업 부문에서의 고용 창출 적은 편이다. 이는 농림업분야 고용은 사업체 형태가 아니라 개별 농가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농업 관련 사업체의 활동이 매우 저조하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한편 주목할 것은 사례 지역 모두에서 도매와 소매업 분야의 고용 창출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서울 의 영향권에 속한 당진군과 광주광역시가 가까운 순창군에서의 도매와 소매업 분야의 고용 창출 비율이 특히 낮다. 반면에 도시로부터 거리가 먼 해남군에서의 도매와 소매업 분야의 고용 창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는 교통의 발달과 함께 농촌지역 중심지의 상업기능이점차 인근 도시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1.4. 고용의 견실성

한편 사례지역 고용의 견실성은 사업체 종사자수와 고용보험 가입자 수와의 비교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제4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계청에서 작성하는 사업체 종사자수에는 주간에 1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이나 보조적으로 가업에 종사하는 사람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고용자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하겠다. 반면에 고용보험 DB는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형태의 금품(보수 등)을 지급받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두 자료를 사용하여 사례지역간의 고용의 견실성 정도를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표 5-11>.

먼저 전국 평균에 비해 사례 지역에서 사업체 종사자 수와 비교한 고용보험 가입자 수 비율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사례지역이 전국 평균과 비교하여 고용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사례 지역 모두에서 3차 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비율은 전국 평균(40.6%)에 비해 낮다.

다음으로 사업체 종사자수와 비교한 고용보험 가입자 수 비율은 지역별로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함안군에서는 그 비율이 35.3%로 비교적 높은 반면, 순창군(12.7%)과 해남군(12.2%)은 그 비율

이 매우 낮다. 평창군(27.0%), 당진군(27.8%), 성주군(24.4%)은 중간정도이다. 이러한 사실은 고용의 견실성이 지역별로도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제조업이 발달한 함안과 당진에서 고용보험 가입자 비율이 높고 농업이 발달한 순창과 해남에서고용보험 가입자 비율이 낮다. 특히 순창과 해남에서는 제조업 분야에서 고용보험 가입자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낮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농업을 대체할 만한 주력 산업이 발달해 있지 않은 지역에서

표 5-11. 사업체 종사자 수와 고용보험 가입자 수

단위: 명, %

<u></u> 구분		사업체	 종사자수			고용보험		<u> </u>
지역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전 체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전 체
평 창	5,406	991	11,685	18,082	93 (1.7)	589 (59.4)	4,209 (36.0)	4,891 (27.0)
당 진	16,307	7,515	20,378	44,200	199 (1.2)	6,550 (87.2)	5,529 (27.1)	12,278 (27.8)
	6,511	1,143	5,789	13,443	4 (0.1)	458 (40.1)	1,239 (21.4)	1,701 (12.7)
해 남	17,145	2,826	14,805	34,776	82 (0.5)	441 (15.6)	3,735 (25.2)	4,258 (12.2)
성 주	7,777	4,234	7,498	19,509	45 (0.6)	2,592 (61.2)	2,128 (28.4)	4,765 (24.4)
함 안	8,509	11,666	9,617	29,792	17 (0.2)	7,787 (66.7)	2,715 (28.2)	10,519 (35.3)
전 국 (천명)	1,299	3,432	11,262	15,993	25 (1.9)	2,711 (79.0)	4,568 (40.6)	7,304 (45.7)

주1. ()안 수치는 (고용보험 가입자수 / 전체 총 종사자수) 비율임.

자료: 각 시군통계연보; 각 시도 통계연보(2003); 중앙고용정보원(2004)

^{2. 1}차 산업 종사자수는 통계자료의 제약으로 "1차산업 사업체 종사자수 + 농가 호수"로 계산(1농가에 농업종사자 1명으로 간주)

^{3. 1}차 산업(농림업+어업), 2차 산업(광업+제조업), 3차 산업(전기가스수도+건설업+도소매업+음식숙박업+운수업+...+개인서비스업)

는 고용의 견실성도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지역에서는 사업체가 많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일시 고용이나 가족 노동력에 의존하는 영세 사업체가 많아 실질적으로 지역 고용 창출에 이바지하는 부분은 매우 적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2. 농업 관련 경제활동의 지역 차이

여기에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업 관련 경제활동이 지역적으로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살펴본다. 주로 우편조사표에 의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되 심층 조사표에 의한 정성적인 사항을 보완한다.

2.2.1. 경제활동의 주체

농업 관련 경제활동은 대부분 지역에서 지역 출신의 50대, 고졸 이상 학력자의 역할 비중이 크다<표 5-12>. 이들의 88%가 지역 출신이

표 5-12. 농업 관련 경제활동 주체의 특성

단위 : 명, %

	구 분	평창	당진	순창	해남	성주	함안	계
고졸 이상 학력자		39	38	29	44	37	44	231
고를 이용	역 역 사	(54.9)	(64.4)	(72.5)	(69.8)	(60.7)	(78.6)	(660.)
	지역 내 계속 거주	43	52	31	52	51	39	268
지역출신	시크 돼 제크 기1	(60.6)	(88.1)	(75.6)	(81.3)	(83.6)	(68.4)	(75.9)
기 기 큰 '단	외지에서 다시 귀향	16	2	3	10	7	7	45
	되시에서 나서 기상	(22.5)	(3.4)	(7.3)	(15.6)	(11.5)	(12.3)	(12.7)
외지출신		12	5	7	2	3	11	40
		(16.9)	(8.5)	(17.1)	(3.1)	(4.9)	(19.3)	(11.3)
전 체		71	59	41	64	61	57	353
	선 4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며,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은 11% 정도다. 하지만 함안군처럼 도시에 인접하며 공업이 발달한 지역에서는 외지인 비율이 높고(21%), 해남군 등은 외지인 비율이 3%에 그치는 등 지역별 편차가 있다. 학력 면에서도 함안군의 고학력자 비중(82%)이 평창군(55%) 등 타 지역에비해 높다.

농업 관련 경제활동을 사업체 형태별로 살펴보면, 작목반의 비중이 가장 높다. 사업체 등록을 하거나 하지 않은 개인사업체의 비중도 높 은 편이다. 뒤를 이어 영농조합법인, 회사법인, 공공사업체 순이다.

전체적으로 정부 정책에 의해 조직된 작목반과 영농조합법인의 비중이 전체의 53%를 차지하며, 개인 또는 법인 형태의 경영체가 전체의 42%이다. 지역별로는 특작이 발달한 평창군, 성주군 등이 작목반비중이 높고, 함안군과 성주군 등은 개인 사업체의 비중이 높다.

표 5-13. 지역별·사업체유형 구성비

단위 : 개, %

구분	개인/	나 업체	영농조합	작목반	회사	공공	기타	합계
1 T	미등록	등록	법인	석독반	법인	사업체	714	엽세
평창군	7 (9.9)	17 (23.9)	6 (8.5)	38 (53.5)	0 (0.0)	3 (4.2)	0 (0.0)	71 (100.0)
		(23.9)	(0.5)	(55.5)	(0.0)	(4.4)	(0.0)	(100.0)
당진군	3	14	17	8	9	7	1	59
0 건보	(5.1)	(23.7)	(28.8)	(13.6)	(15.3)	(11.9)	(1.7)	(100.0)
人引つ	5	10	11	13	2	2	0	43
순창군	(11.6)	(23.3)	(25.6)	(30.2)	(4.7)	(4.7)	(0.0)	(100.0)
—————————————————————————————————————	8	14	16	25	1	2	0	66
해남군	(12.1)	(21.2)	(24.2)	(37.9)	(1.5)	(3.0)	(0.0)	(100.0)
リスコ	24	4	2	27	1	2	1	61
성주군	(39.3)	(6.6)	(3.3)	(44.3)	(1.6)	(3.3)	(1.6)	(100.0)
	18	8	7	19	4	1	0	57
함안군	(31.6)	(14.0)	(12.3)	(33.3)	(7.0)	(1.8)	(0.0)	(100.0)
ال = ا	65	67	59	130	17	17	2	357
전체	(18.2)	(18.8)	(16.5)	(36.4)	(4.8)	(4.8)	(0.5)	(100.0)

2.2.2. 경제활동 내용

농업 관련 경제활동으로서 농산물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37.4%). 농산물을 선별·포장하거나(18.0%), 저장하는 경우 (11.6%)를 포함해서 사업체에서 단순히 농산물을 생산·판매하는 경우가 전체 활동의 67.0%를 차지한다. 하지만 농산물을 가공·판매하거나(15.3%), 지역 특산품을 제조·판매(5.3%)하는 등 2차 가공활동을 병행하는 경우도 20%에 이른다. 농산품 수출은 2.5%이다. 농업 관련경제활동주체들이 민박과 음식물을 제공하거나(3.1%), 주말농원을 운영하는 등(1.9%) 농촌관광활동을 하는 경우는 약 5% 정도이다.

표 5-14. 지역별 사업체의 주요 경제활동

단위 : 개, %

구분	농산물 생산 및 판매	농산물 저장	농산물 선별 및 포장	농산물 가공 및 판매	농산품 수출	특산품 제조 및 판매	민박 및 음식물 판매	주말 농원 운영	농업 지원 서비스	일반 물품 제조업	기타	합계
전체	281 (37.4)	87 (11.6)	135 (18.0)	115 (15.3)	19 (2.5)	40 (5.3)	23 (3.1)	14 (1.9)	15 (2.0)	5 (0.7)	18 (2.4)	752 (100.0)
평창군	58 (30.6)	14 (9.6)	24 (19.6)	19 (14.2)	0 (0.0)	6 (5.7)	16 (11.8)	7 (7.0)	0.0)	0 (0.0)	1 (1.6)	145 (100.0)
당진군	36 (20.3)	21 (23.1)	19 (25.0)	18 (22.8)	1 (1.1)	0 (0.0)	1 (2.8)	1 (1.1)	5 (3.8)	0 (0.0)	0 (0.0)	102 (100.0)
순창군	29 (26.0)	9 (12.2)	8 (9.4)	22 (25.4)	3 (4.1)	11 (13.4)	2 (2.5)	2 (1.9)	0 (0.0)	2 (2.5)	2 (2.5)	90 (100.0)
해남군	56 (30.2)	23 (18.9)	21 (20.0)	18 (12.5)	5 (4.5)	6 (6.0)	0 (0.0)	1 (1.1)	2 (2.2)	0 (0.0)	6 (4.5)	138 (100.0)
성주군	55 (32.1)	5 (6.9)	27 (24.8)	5 (6.2)	2 (3.0)	4 (8.3)	4 (4.4)	3 (5.1)	6 (6.6)	1 (0.6)	1 (2.1)	113 (100.0)
함안군	47 (27.5)	15 (9.2)	36 (22.4)	33 (20.5)	8 (5.0)	13 (8.1)	0 (0.0)	0.0)	2 (1.2)	2 (1.2)	8 (5.0)	164 (100.0)

이러한 내역은 지역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성주군, 평창군, 해남군, 당진군 등에서는 농산물을 단순 생산하여 판매하는 활동의 비중이 높다. 성주군, 평창군, 해남군 등지에서는 농산물의 생산·판매활동이 활발하며(30%이상), 당진군(20%), 해남군(19%) 등지에서는 농산물 저장 활동도 활발하다. 농산물 선별은 성주군(25%), 당진군(25%) 등에서 많이 행해지고 있으며, 생산 활동이 활발한 타 지역에서도 선별 활동 비중은 높다. 한편 순창군(25%)은 농산물 가공이나 지역 특산품 가공의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다. 당진군(22%)과 함안군 (21%)에서도 농산물 가공활동이 활발한 편이다. 농촌관광이 활발한 곳은 평창군으로, 민박 및 음식물 판매(12%), 주말농원(7%) 운영 등이활성화되고 있다. 성주군(7%)과 당진군(3%)과 같이 주산지가 형성된곳에는 농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들도 있다.

이상의 경제활동을 복합경제활동이란 측면에서 다시 구분해 보면, 절반 이상이 생산, 가공, 관광 중 한 분야에만 주력하고 있다(58.2%). 반면 생산과 가공, 관광 등을 함께 병행하는 다원적 경제활동업체는 전체의 41.8%이다. 이들 다원적 경제활동업체들 중 대부분은 생산과 가공, 생산과 관광 등 1-2차 혹은 1-3차 산업에 종사하는 업체(39.2%)이며, 생산과 가공, 관광을 동시에 하는 업체(2.6%)는 소수다.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성주군와 순창군, 함안군은 농업 관련 경제활동이 일부 활동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평창군, 해남군에서는 다양한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겸업기회가 많은 함안군(74%)과 가공산업이 발달한 순창군(45%)이 다원적 경제활동 비중이 높으며, 당진군(76%), 해남군(63%), 성주군(67%) 등은 단순 활동 비중이 높다. 업체별로는 공공사업체(59%)와 등록 개인사업체(49%), 영농조합법인(42%)등의 다원적 경제활동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반면에 작목반은 단순

다원적 1-2-3차 결합 구 분 단순경제활동 합계 경제활동 활동 전 체 202 (58.2) 136 (39.2)9 (2.6) 347 (100.0)평창군 41 (61.2) (34.3)3 (4.5)(100.0)23 67 당진군 45 (76.3) 14 (23.7)0 (0.0)59 (100.0)순창군 21 (50.0) (45.2)2 (4.8)(100.0)19 42 해남군 41 (63.1) (30.8)(6.2)(100.0)20 4 65 성주군 40 (66.7) 20 (33.3)0 (0.0)60 (100.0)함안군 14 (25.9) 40 (74.1)(0.0)54 (100.0)미등록 개인사업체 37 (58.7) (39.7)(1.6)(100.0)등록 개인사업체 31 (47.0) 32 (48.5)3 (4.5)(100.0)66 영농조합법인 33 (55.9) 25 (42.4)1 (1.7)59 (100.0)작목반 84 (66.7) 39 (31.0)3 (2.4)(100.0)126 회사법인 10 (71.4) (28.6)(0.0)(100.0)4 0 14 공공 사업체 6 (35.3) 10 (58.8)1 (5.9)17 (100.0)기타 1 (5.0)0 (0.0)2 (100.0)1 (5.0)

표 5-15. 다원적 경제활동주체의 지역별·사업체 형태별 구성비

경제활동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이상의 내용에서 농업 관련 경제활동이 지역의 특성과 자원에 기초 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신선채소를 생산하면 서 주산지가 형성된 지역이 농업생산에만 국한되는 경제활동이 비율 이 높고, 농업 관련 가공 산업이 발달하거나 관광자원이 존재하거나 또는 제조업이 발달한 지역일수록 다원적 경제활동 비율이 높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한편, 다원적 경제활동을 하는 업체가 단순 경제활동을 하는 업체에 비해서 매출이 높고 향후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도 높다. 또한 다원적

경제활동업체가 홈페이지 보유율이나 특허 출원율, 직거래 시행률 등에서도 높다. 이를 통해서 볼 때 다원적 경제활동 업체가 많은 지역일 수록 농업 관련 경제활동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16. 다원적 경제활동업체의 최근 3년간 매출 실적

 구 분	매출액 증가	매출수준 유지	매출액 감소	합 계
단순경제활동업체	45 (22.6)	80 (37.2)	74 (40.2)	199 (100.0)
다원적 경제활동업체	66 (45.8)	26 (18.1)	49 (34.0)	144 (100.0)

표 5-17. 다원적 경제활동업체의 매출액 향후 전망

 구 분	증가할 것임	비슷할 것임	감소할 것임	알수 없음	합 계
단순경제활동업체	27	97	56	22	202
인군경세월중립제	(13.4)	(48.0)	(27.7)	(10.9)	(100.0)
디이저 거케하두어케	35	57	31	20	143
다원적 경제활동업체	(24.5)	(39.9)	(21.7)	(14.0)	(100.0)

표 5-18. 다원적 경제활동업체의 특징

구 분	단순 경제활동업체	다원적 경제활동업체	1-2-3차 결합 활동업체
홈페이지보유 비율	27 / 202 (13.4)	41 / 145 (28.3)	5 / 9 (55.6)
특허 출원 비율	16 / 201 (8.0)	32 / 145 (22.1)	2 / 9 (22.2)
직거래 시행 비율	37 / 202 (18.3)	44 / 145 (30.3)	5 / 9 (55.6)
모임 참여 비율	132 / 186 (72.0)	87 / 139 (62.6)	4 / 8 (50.0)

2.2.3. 경제활동 성과와 지속성

조사 대상 대부분의 사업체가 농업 관련 경제활동 성과가 좋지 않은 상태이며, 미래에 대해서도 비관적인 견해가 우세하다.

최근 3년간 매출액 증감 여부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31.7%가 증가했다고 답한 반면, 감소했다고 답한 응답자가 37.6%, 변화 없다고 답한 비율이 29.2%였다<표 5-19>. 하지만 매출 규모의 변화가 없었다고응답한 사업체 중 매출액이 감소된 곳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되며, 이를 감안한다면 매출 감소 업체는 매출 증가 업체보다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적으로는 성주군과 해남군에서 매출액이 감소했다는 응답률이 특히 높고(49%), 매출액이 증가했다는 응답은 순창군(47%)이 가장 많

표 5-19. 지역별·사업체 유형별 최근 3년간 매출액 증감여부

단위 : 개, %

 구분	매출약	백 증가	매출인	대 감소	매출변	화 없음	Ť	합계
합계	114	(32.2)	135	(38.1)	105	(29.7)	354	(100.0)
평창군	21	(29.6)	20	(28.2)	30	(42.3)	71	(100.0)
당진군	15	(25.4)	18	(30.5)	26	(44.1)	59	(100.0)
순창군	20	(46.5)	13	(30.2)	10	(23.3)	43	(100.0)
해남군	19	(30.2)	31	(49.2)	13	(20.6)	63	(100.0)
성주군	19	(31.1)	30	(49.2)	12	(19.7)	61	(100.0)
함안군	20	(35.1)	23	(40.4)	14	(24.6)	57	(100.0)
미등록 개인사업체	17	(26.2)	33	(50.8)	15	(23.1)	65	(100.0)
등록 개인사업체	23	(34.8)	20	(30.3)	23	(34.8)	66	(100.0)
영농조합법인	29	(49.2)	12	(20.3)	18	(30.5)	59	(100.0)
작목반	27	(21.3)	59	(46.5)	41	(32.3)	127	(100.0)
회사법인	6	(35.3)	5	(29.4)	6	(35.3)	17	(100.0)
공공사업체	11	(64.7)	4	(23.5)	2	(11.8)	17	(100.0)
기타	1	(50.0)	1	(50.0)	0	(0.0)	2	(100.0)

다. 사업체 유형별로 살펴보면 작목반(47%)과 미등록 개인사업체(51%)의 매출액 감소 비중이 두드러진다. 반면 공공사업체나 영농조합, 회사법인, 등록 개인사업체 등은 매출액 증가가 감소 비중보다 높다.

최근 3년간 매출실적이 증가한 업체들과 감소한 업체들을 별도로 비교해 보면, 먼저 매출증가업체는 매출을 신장시킨 요인으로 판매 방법 개선(38.6%), 생산방식 개선(22%) 등을 꼽는다. 매출증가요인에 지역별 차이는 없지만, 사업체 유형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다. 등록 개인사업체, 영농조합법인, 공공사업체 등은 판매 방법 개선을 통해 매출을 신장한 비율이 높고, 작목반 등은 주로 생산방식 개선(35%)을 통해 매출을 증가시키고자 했다.

표 5-20. 사업체 유형별 매출증가요인

단위 : 개, %

구 분	신 작목 도입	생산방식 개선	신 설비 도입	판매방식 개선	경영방식 개선	기타	합 계
전 체	19 (12.8)	35 (23.5)	6 (4.0)	58 (38.9)	9 (6.0)	24 (16.1)	149 (100.0)
미등록 개인사업체	4 (20.0)	4 (20.0)	0 (0.0)	6 (30.0)	3 (15.0)	5 (25.0)	20 (100.0)
등록 개인사업체	4 (14.3)	4 (14.3)	0 (0.0)	17 (60.7)	0 (0.0)	3 (10.7)	28 (100.0)
영농조합법인	3 (9.7)	6 (19.4)	1 (3.2)	12 (38.7)	1 (3.2)	8 (25.8)	31 (100.0)
작목반	7 (13.7)	18 (35.3)	(3.9)	15 (29.4)	5 (9.8)	4 (7.8)	51 (100.0)
회사법인	0 (0.0)	2 (33.3)	2 (33.3)	1 (16.7)	0 (0.0)	1 (16.7)	6 (100.0)
공공사업체	1 (9.1)	0 (0.0)	1 (9.1)	6 (54.5)	0 (0.0)	3 (27.3)	11 (100.0)
기타	0 (0.0)	1 (50.0)	0 (0.0)	1 (50.0)	0 (0.0)	0 (0.0)	2 (100.0)

매출액이 증가한 업체는 감소한 업체에 비교하여 다원적인 경제활동의 비중(60%:38%), 홈페이지 보유율(33%:13%), 특허 출원 비율(26%:7%), 직거래 시행 비율(32%:27%) 등이 높은 편이다. 또한 적극적인 모임 참여율(51%:43%)도 높은 편이다<표 5-21>.

직원 채용 현황 및 향후 계획도 다소 부정적이다<표 5-22>. 대체로 고용 규모의 변화가 없었고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업체는 그리 많지 않다(18%). 이는 농업 관련 경제활동을 통한 신규 고용 창출이 기대보다는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향후 사업체의 매출액 전망 역시 밝지 않은 편이다<표 5-23>. 조사대상 업체의 45%가 매출액이 계속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앞으로 매출 규모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보는 업체는 전체 응답자의 18%에 그친다. 특히 작목반, 미등록 개인사업체 등의 향후 매출전망이 어두운 편이다. 반면 순창군(42%) 등 최근 3년간 매출 실적이 좋았

표 5-21. 최근 3년간 매출이 증가한 업체의 특징

구 분	매출 증가 업체 (114)	매출 감소 업체 (135)	
다원적 경제활동 비율	66 / 111 (59.5)	49 / 129 (38.0)	
홈페이지보유 비율	38 / 114 (33.3)	17 / 135 (12.6)	
특허 출원 비율	29 / 113 (25.7)	10 / 135 (7.4)	
직거래 시행 비율	36 / 114 (31.6)	21 / 135 (26.6)	
모임 참여 비율	58 / 114 (50.9)	57 / 132 (43.2)	

표 5-22. 지역별·사업체 유형별 향후 직원 채용 전망

	증가	감소	비슷(혹은 모름)	합 계
최근 3년간 직원수	45 (13.5)	58 (17.5)		332 (100.0)
향후 직원수 전망	58 (17.5)	37 (11.2)		331 (100.0)

던 지역은 타 지역과 달리 긍정적 전망치가 더 높다. 전반적으로 최근 매출 실적이 좋은 업체들일수록 향후 매출전망도 밝은 것을 알 수 있 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매출 실적이 부진하고 향후 매출에 대한 불안감은 존재하지만,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는 업체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신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업체가 전체의 절반 이상(52%)이며, 농업 여건이 어려운 순창군(62%)과 해남군(60%) 등지에서 높다. 신규사업으로는 친환경 농법을 도입하겠다(26%)는 응답이 가장 많다. 그외에도 농산물 판매 확대(16%), 생산규모 확대(12%), 품목 전환(11%), 가공 사업(11%), 농촌관광사업(10%) 순으로 새로운 사업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지역 특산품 제조·판매(3%)나 농산품 수출(3%), 농업지원

표 5-23. 지역별·사업체 유형별 향후 매출액 전망

구분	계속 증가	지금과 비슷	점차 감소	알수 없다	합계
합계	65 (18.3)	88 (24.8)	159 (44.8)	43 (12.1)	355 (100.0)
평창군	12 (16.9)	10 (14.1)	37 (52.1)	12 (16.9)	71 (100.0)
당진군	4 (6.8)	18 (30.5)	30 (50.8)	7 (11.9)	59 (100.0)
순창군	18 (41.9)	12 (27.9)	7 (16.3)	6 (14.0)	43 (100.0)
해남군	8 (12.1)	17 (25.8)	32 (48.5)	9 (13.6)	66 (100.0)
성주군	9 (14.8)	18 (29.5)	27 (44.3)	7 (11.5)	61 (100.0)
함안군	14 (25.0)	13 (23.2)	27 (48.2)	2 (3.6)	56 (100.0)
미등록 개인사업체	9 (14.1)	13 (20.3)	35 (54.7)	7 (10.9)	64 (100.0)
등록 개인사업체	21 (31.8)	15 (22.7)	23 (34.8)	7 (10.6)	66 (100.0)
영농조합법인	12 (20.3)	21 (35.6)	19 (32.2)	7 (11.9)	59 (100.0)
작목반	13 (10.0)	34 (26.2)	67 (51.5)	16 (12.3)	130 (100.0)
회사법인	6 (35.3)	2 (11.8)	7 (41.2)	2 (11.8)	17 (100.0)
공공사업체	4 (23.5)	2 (11.8)	7 (41.2)	4 (23.5)	17 (100.0)
기타	0 (0.0)	1 (50.0)	1 (50.0)	0 (0.0)	2 (100.0)

서비스(1%) 등을 신규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업체는 소수다. 농업활동이 왕성한 해남군, 성주군, 함안군 등에서는 주로 친환경 농법으로 전환을 계획하고 있으며, 관광자원개발이 비교적 활발한 평창군은 농촌관광사업(25%) 비중이 높다.

신규 사업을 계획하는 업체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나는 매출이 증가하는 업체들이 사업을 확대·개척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농업분야의 매출이 감소하면서 그 타개책으로 신규사업을 계속해서 시도하는 경우이다. 전자에 해당하는 것은 평창의 농촌관광 사업 계획이라 할 수 있다. 상당수 농업 관련 경제활동주체들은 후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해남에서 신규 사업 계획이 높은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판단된다.

2.2.4. 농업 관련 경제 활동의 지역 연관성

농업 관련 경제활동이 어떤 이유로 해당 지역에서 이루지는지에 대해서는 사례 지역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대부분 지역에서 원래 살고 있었거나 지역 연고가 있어서(45%), 혹은 핵심 원료를 구하기 쉬워서(19%), 그 지역에 입지했다는 응답이 많다. 제품 판매에 유리해서(11%) 입지했다는 응답도 다소 있으나, 직원 채용(5%)이나 거래 관계(3%), 행정 서비스, 기술 개발여건 등은 농촌지역 사업체 입지에 주요 변수가 되지 못한다. 특히 행정 서비스 여건이나 기술 개발여건 때문에 입지한다는 답변은 거의 없다. 이 는 농업 관련 경제활동이 아직도 우연적인 요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우라 하겠다.

입지 요인의 지역별 편차는 크지 않지만 사업체 유형에 따라서는 약간 차이가 난다. 사업체 등록을 한 개인 사업체, 회사법인, 영농조합

표 5-24. 지역별·사업체 유형별 신규사업분야

단위 : 개, %

								- 7 11, 70
	1171101			신규/	나업계획	분야 		
구분	신규사업 계획업체	친환경 농법 도입	농산물 판매 확대	농산물 생산 확대	농산물 품목 전환	농산물 가공 확대	농촌관광 사업	농산물 수출
전체	187 (53.1)	51 (26.0)	31 (15.8)	23 (11.7)	22 (11.2)	21 (10.7)	19 (9.7)	6 (3.1)
평창군	40 (56.3)	4 (10.0)	4 (10.0)	3 (7.5)	10 (25.0)	6 (15.0)	10 (25.0)	1 (2.5)
당진군	25 (42.4)	4 (16.0)	5 (20.0)	4 (16.0)	2 (8.0)	(8.0)	(8.0)	1 (4.0)
순창군	26 (61.9)	7 (29.2)	2 (8.3)	5 (20.8)	2 (8.3)	2 (8.3)	1 (4.2)	2 (8.3)
해남군	39 (60.0)	9 (22.5)	7 (17.5)	5 (12.5)	5 (12.5)	5 (12.5)	(5.0)	1 (2.5)
성주군	27 (46.6)	15 (46.9)	6 (18.8)	3 (9.4)	1 (3.1)	3 (9.4)	3 (9.4)	0.0)
함안군	30 (52.6)	12 (34.3)	7 (20.0)	3 (8.6)	2 (5.7)	3 (8.6)	1 (2.9)	1 (2.9)
미등록 개인사업체	28 (43.8)	9 (30.0)	6 (20.0)	(6.7)	(6.7)	1 (3.3)	6 (20.0)	0 (0.0)
등록 개인사업체	32 (49.2)	4 (12.5)	6 (18.8)	(3.1)	4 (12.5)	8 (25.0)	4 (12.5)	2 (6.3)
영농조합법인	35 (59.3)	7 (20.0)	4 (11.4)	8 (22.9)	4 (11.4)	6 (17.1)	(5.7)	0.0)
작목반	70 (55.1)	27 (35.5)	12 (15.8)	11 (14.5)	11 (14.5)	4 (5.3)	5 (6.6)	0 (0.0)
회사법인	10 (58.8)	0 (0.0)	1 (9.1)	1 (9.1)	0(0.0)	0 (0.0)	2 (18.2)	3 (27.3)
공공사업체	11 (68.8)	3 (27.3)	2 (18.2)	0(0.0)	1 (9.1)	2 (18.2)	0 (0.0)	1 (9.1)
기타	1 (50.0)	1 (100.0)	0.0)	0(0.0)	0.0)	0.0)	0 (0.0)	0 (0.0)

주 1. 신규사업업체 비율 = 신규사업계획을 가진 업체 수 / 전체 사업체수

^{2.} 신규사업계획 비율 = 해당계획 응답수 / 전체 응답수(복수응답 가능)

법인, 공공사업체 등은 미등록 개인사업체나 작목반에 비해 핵심 원료 구입 용이성이나, 거래업체관계, 제품판매 유리성 등을 고려하여 입지 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사업체 등록을 한 개인사업체와 회사법인은 지 역 연고 외에도 핵심 원료나 제품판매, 거래 관계, 생활 여건, 부지 확 보 용이성 등 비교적 다양한 입지 여건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5. 지역별·사업체 유형별 입지요인

단위 : 개, %

											.,,
구 분	지역 연고	핵심 원료	직원 채용	제품 판매	거래 관계	행정 서비스	기술개 발여건	생활 여건	부지 확보	기타	합계
전 체	310 (45.4)	102 (18.6)	23 (4.7)	58 (11.4)	16 (3.2)	5 (1.0)	1 (0.2)	29 (5.5)	20 (4.0)	31 (6.1)	595 (100.0)
평창군	64 (54.3)	17 (18.9)	0.0)	6 (10.0)	1 (1.9)	1 (1.9)	1 (1.9)	7 (9.5)	1 (1.9)	0(0.0)	98 (100.0)
당진군	50 (45.4)	24 (26.4)	2 (2.2)	11 (13.9)	1 (1.4)	2 (2.7)	(0.0)	5 (6.8)	1 (1.4)	0 (0.0)	96 (100.0)
순창군	29 (36.9)	15 (22.6)	1 (1.6)	9 (11.8)	3 (4.8)	(3.2)	(0.0)	1 (1.6)	3 (4.4)	9 (12.9)	72 (100.0)
해남군	58 (44.6)	31 (28.8)	1 (1.0)	5 (4.9)	1 (1.0)	0.0)	(0.0)	6 (5.2)	7 (6.9)	8 (7.6)	117 (100.0)
성주군	60 (50.2)	4 (4.9)	0.0)	20 (27.0)	7 (8.4)	0.0)	(0.0)	1 (1.4)	1 (1.4)	5 (6.8)	98 (100.0)
함안군	49 (43.0)	11 (9.6)	19 (16.7)	7 (6.1)	3 (2.6)	0.0)	(0.0)	9 (7.9)	7 (6.1)	9 (7.9)	114 (100.0)
미등록 개인사업체	63 (50.1)	9 (9.3)	8 (8.2)	10 (10.6)	6 (6.1)	0.0)	0 (0.0)	6 (6.1)	3 (3.2)	6 (6.4)	111 (100.0)
등록 개인사업체	47 (37.1)	32 (31.4)	2 (2.5)	9 (9.2)	4 (5.0)	0.0)	1 (1.3)	5 (5.2)	4 (4.5)	3 (3.8)	107 (100.0)
영농조합법인	50 (43.9)	25 (24.6)	1 (1.1)	7 (7.0)	3 (3.2)	1 (1.1)	(0.0)	8 (8.1)	3 (3.2)	8 (7.9)	106 (100.0)
작목반	122 (49.2)	17 (10.1)	9 (5.8)	27 (16.3)	3 (1.7)	3 (1.9)	(0.0)	6 (3.3)	8 (5.1)	11 (6.6)	206 (100.0)
회사법인	12 (36.5)	5 (18.4)	2 (7.1)	2 (8.3)	0.0)	1 (4.2)	(0.0)	4 (15.4)	1 (2.9)	2 (7.1)	29 (100.0)
공공사업체	13 (41.4)	13 (41.4)	1 (3.6)	2 (7.1)	0.0)	(0.0)	(0.0)	(0.0)	1 (2.9)	1 (3.6)	31 (100.0)
기타	2 (50.0)	1 (25.0)	(0.0)	1 (25.0)	0.0)	(0.0)	(0.0)	(0.0)	(0.0)	0 (0.0)	4 (100.0)

원료 구입 용이성이 주요한 사업체 입지 요인인 만큼 원료를 직접생산(37%)하거나 지역 내에서 구입하는(35%) 업체가 많다. 원료를 타지역에서 조달(8%)하거나 수입하는 경우(2%)는 10%에 그친다. 직원을 고용하는 일도 대부분 직접 일하거나(54%), 지역 내에서만 고용하며(38%), 지역 밖에서만 직원을 고용하는 업체는 전체의 2%에 불과하다.

원료 구입이나 직원 고용 형태의 지역별 편차는 크지 않다.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사업체의 경우, 원료 구입 면에서 지역 외 조달비중 (15%)이 다른 사업체에 비해 다소 높지만, 지역 내 원료의 비중(25%)보다 높지는 않다. 즉, 전체적으로 사업체 유형에 상관없이 원료 구입 및 직원 채용시 지역 내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에서 농업 관련 경제활동의 지역과의 연관성은 매우 높다고 하겠다. 하지만 그 형태는 매우 단순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사례 지역별로 별다른 차이를 나타내 보이지 않고 있다. 경제활동주체의 연고지나, 원료 농산물이 생산지와 같은 우연적인 요소의 영향력이 큰 편이다. 노동의 질이나 거래 관계, 기술 개발여건 등 전문적인 경제활동 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관계들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표 5-26. 원료 구입 및 직원 채용시 지역 내 자원 활용 비중

원료 구입시	전 체	등록사업체	직원 채용시	전 체
본인이 직접 생산 지역 내 구입 지역 안팎에서 구입 지역 외 구입 수입 및 기타	128 (36.8) 122 (35.1) 57 (16.4) 28 (8.0) 13 (4.0)	17 (25.4) 24 (35.8) 15 (22.4) 10 (14.9) 1 (1.5)	본인이 직접 일함 지역 내에서 고용 지역 안팎에서 고용 지역 밖에서 고용	187 (54.0) 131 (37.9) 23 (6.6) 5 (1.4)
합 합 계	348 (100.0)	67 (100.0)	합 계	346 (100.0)

이는 지역 내의 특화 자원, 기술인력, 지역의 문화 및 역사 자원, 지역의 경관 등과 연계되어 농업관련 경제활동의 지역간 차이가 발생할수 있다는 일부 주장 등이 우리나라 농촌지역에서는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2.2.5. 지역 내 산업 연관 관계

사례지역 대부분에서 농업 관련 경제활동이 지역 내에서 수직적 결합과 수평적 결합을 통해 지역 내에서 부가가치를 최대화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는 미약하다. 생산품 판매 시 지역 내 업체에 중간원료로 공급하는 비율은 전체의 약 5%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일반유통 (37%)이나 농협계통판매(30%), 직거래(13%) 등을 통해서 지역 밖으로이출되어, 지역 내 전방 관련 산업이 발달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농산물 생산 및 가공 시 투입재(비료, 농약, 포장재, 비닐, 묘목 등) 대부분이 외부에서 유입되고 있어 지역 내 후방 관련 산업의 발달도 미진한 실정이다.

다만 성주군과 순창군의 경우 지역 특산품(참외, 고추장) 업체들을

	업체수		
중간원료로 공급	지역 내외 거래업체의 중간원료로 공급 - 지역 내 평균 공급 비중 : 54%	28	(4.6)
판매	일반유통시장 판매 농협계통 판매 직거래 판매 수출 및 기타	226 185 81 92	(36.9) (30.2) (13.2) (15.0)
	합 계	612	(100.0)

표 5-27. 생산제품의 판매처(복수응답)

중심으로 미약하지만 지역 내 산업연관관계가 부분적으로 발견된다. 심층 조사를 통해 드러난 사례 지역의 지역 내 거래 관계는 크게 다음 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 A타입

사례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농업관련 경제활동 대부분은 이 경우에 해당한다. 생산을 위해 필요한 투입재, 즉 비료, 농약, 비닐, 포장재 등을 외부에서 이입한다. 생산품 대부분은 가공도가 낮은 상태로역외로 이출되어 지역 내 귀속되는 부가가치나 고용 창출 효과가 미미하다. 퇴비 등 일부 투입재에 대해서 이입대체 노력이 이루어지는경우도 있지만 그 정도는 매우 미약하다. 생산 과정에서 생산 주체간의 자발적인 기술개발 노력과 거래 관계도 활발하지 못한 편이다. 따라서 지역내 경제활동 주체간의 네트워크는 미약한 편이다.

역외 무입재 역외 이슬

그림 5-1. 지역 내 거래 관계. A타입

■ B타입

지역 내 주산지가 형성되어 지역 외 투입재 중 일부가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성주군의 경우, 참외 주산지가 형성되면서 군내 필름공장 1개, 퇴비공장 2개 등이 입지하여 역외 투입을 역내 투 입으로 대체하고 있다. 또한 지원 산업(택배 및 화물회사, 종묘상, 농 약상, 비료상, 기타 농구상)도 발달된 상태다. 다수의 참외 생산자들이 존재하며, 생산 및 판매 과정에서 공동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신선과채류라는 품목이 특성상 지역 내 거래 관계를 통하여 산업 간 수직적 결합이나 이출대체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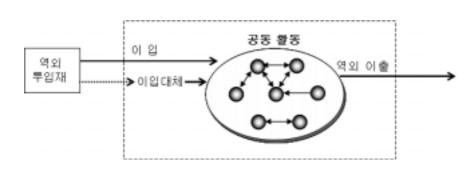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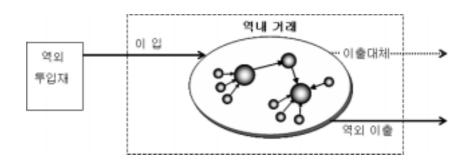
그림 5-2. 지역 내 거래 관계, B타입

⁵⁶ 성주군 참외 생산량은 2005년 120,803톤으로 전국 생산량의 49%에 해당한다. 이처럼 성주군이 참외 주산지로서 명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1940년대부터 이어져 온 재배 기술의 축적과 인적 자본 형성을 들 수 있다. 참외생산 농가들 간의 기술교류 활동은 여느 지역보다 활발하여 참외 농협에만도 기술교류 생산자조직이 33개가 존재하며, 생산기술 및 유통 정보에 관한교육을 위해 생산자 조직 스스로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강연을 주최하거나,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최근에는 참외 품질 차별화를 위해 환경농업 쪽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한데, 저농약 퇴비위주의 생산기술 뿐만 아니라 미생물농법 개발을 위한 연구 및 실험을 생산자조직에서 직접 실시하기도 한다. 이러한 생산자 조직 중심의 기술 개발 노력의 성과로 게르마늄 참외, 맥반석 참외, 꿀벌 참외, 키토산 참외 등다양한 기능성 참외들이 생산되고 있다.

■ C타입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지역 내 거래 관계를 통해 산업 간 수직적 결합이 일부 나타나는 유형이다. 순창지역 고추생산농가와 고추장 가공업체간 거래 관계, 해남지역 배추 생산 농가와 김치가공공장간 거래관계 등에서 C타입의 지역 내 산업연관이 일부 확인되고 있다. 주로지역 내 산업 간 수직적 결합으로서 원료 생산 농가와 가공업체간의계약 재배 등이 이루어지고, 소수이지만 역내에 거래지원 업체가 등장한다. 하지만 결합 정도는 높지 않은 수준이다. 또한 역외 투입재의역내대체도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지역 내 동종업자간의 공동 활동은왕성하지는 않은 편이다.

그림 5-3. 지역 내 거래 관계, C타입



※ D 타입(참고)

한편 사례지역에서는 발견되지 않지만 지역내에서 전후방 산업이 집적하여 산업클러스터로서 기능하는 보다 발전된 형태가 있다. 이 형 태에서는 역외 투입재의 지역 내 대체가 이루어지며, 원료 산출물은 지역내의 거래 관계를 통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가공품으로 제조되어 지역외로 이출된다. 이 과정에서 지역 내 거래를 지원하는 전문 업체들도 다수 등장한다. 동종업종는 물론 이종업종이 지역내에서 거래관계를 형성하여 산업클러스터로서 발전하는 것이다.

이 타입은 우리나라 농촌에서는 몇 개 발견되지 않는데 대표적인 것이 금산의 인삼산업이라 할 수 있다.57 금산군에는 인삼관련 전방연 관산업과 후방연관산업이 지역내에 입지하며 지역 내 동종업자(인삼 농가, 가공업체, 상인, 한의원)는 물론 이종업자(음식업, 숙박업, 관광 업 종사자 등)와도 자발적인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인삼 관 런 부가가치의 지역내 실현을 최대화하고 있다.

⁵⁷ 금산군에는 인삼 관련 전방연관산업으로서 백삼과 홍삼 등을 제조하는 1차 가공업체 689개소와 홍삼액이나 정과, 인삼주 등을 제조하는 2차 가공업체 150여 개소가 존재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들을 포함하면 금산 군내 인삼가공업체는 1,000여 개소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금산읍내 에는 1,254개의 인삼 약초 점포가 입지하고 있다. 이들 점포 외에도 점포 없이 중개업을 하는 상인(일명 중상), 5일장에서 노점판매를 하는 상인(일 명 앞자리상) 등의 형태로 인삼 거래에 종사하는 이들도 1,500명 정도에 이 른다. 후방연관산업은 인삼을 생산 또는 가공에 필요한 투입재 산업으로 차광망, 묘삼, 지주목, 가공설비, 포장지 등의 생산업체들이 이에 해당한다. 수입 지주목 등 지역 외부에서 들여오는 투입재들이 대부분이지만, 차광망, 가공설비, 포장재 등은 점차 지역 내에서의 공급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 러한 전후방 산업의 발달로 인해 인삼의 생산, 가공, 판매, 기술 및 행정지 원 등에 종사하는 인구는 6,000명 정도로 금산군 경제활동인구의 14% 정 도에 해당한다고 한다. 금산군청에서는 2003년의 금산군 관내 인삼거래액 을 약 4,4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는 2003년 금산군 전체 물동량의 3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금산군 인삼산업에 대해서는 이 연구 과제의 2004년도 보고서(이동필 등 2004)에 자세히 실려 있다.

역외 무임재 이입대체 역외 이출 역외 이출

그림 5-4. 지역 내 거래 관계, D타입

2.2.6. 농업 관련 경제활동주체의 혁신 노력

가. 혁신수용태세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대해 응답자의 64%가 적극적이라고 답변하였다. 지역별로는 해남과 순창에서 80% 정도로 높고 성주, 함안, 평창은 중간이며 당진은 45.7%로 매우 낮았다. 해남이 높은 것은 농업관련 경제활동 여건이 좋지 않아 변화를 꾀하고자 하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당진이 낮은 것은 미작농업지대에서 흔히 발견되는 변화에 대한 보수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하지만 혁신 수용 태세가 경제활동의 성과로 직결되지는 않는 것 같다. 경제활동성과가 높은 업체(83%)일수록 혁신 수용 태세가 강하 게 나타나기는 했지만, 경제활동성과가 낮은 업체(58%)에서도 혁신 수용 태세가 높은 편이다. 이는 한 작물만을 재배하면서도 오랫동안 안정된 소득이 보장되던 지역보다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 새로운 시 도가 빈번한 것과 같은 이치일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드러나는 혁신

구 분 매출 증가 매출 감소 매출 유지 전 체 65 (57.0) 45 (33.6) 새로운 것을 빨리 받아들임 33 (32.0) 143 (40.7) 비교적 빨리 받아들임 32 (23.9) 30 (26.3) 21 (20.4) 83 (23.6) 신중히 받아들임 10 (8.8) 37 (27.6) 22 (21.4) 69 (19.7) 예전 것을 고수함 7 (6.1) 16 (11.9) 20 (19.4) 43 (12.3) 잘 모르겠음 2(1.8)4 (3.0) 7 (6.8) 13 (3.7) 합 114 (100.0) 134 (100.0) 103 (100.0) 351 (100.0) 계

표 5-28. 사업체 대표의 혁신수용태세

수용 태세보다는 실제 혁신을 꾀하였는지, 그렇다면 그 혁신의 내용은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나. 혁신 노력

농업 관련 업체들이 최근 3년간 수행한 혁신노력을 살펴보면, 선진지 시찰(24%)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지역 내 공부 모임(20%), 사업체 또는 조직 내 연구모임(16%) 순이다. 연구소(12%)나 기업체(7%)에서 기술연수를 받은 비중도 29%에 달한다.

이러한 노력들은 지역별로 큰 차이는 나지 않지만 사업체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무등록 사업체나 작목반은 주로 선진지 시찰과 지역내 공부 모임, 조직 내 연구 모임이 많고, 등록 개인사업체는 판매 방법개선, 연구소 및 기업체 기술연수 등 보다 실질적인 혁신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혁신 활동들은 매출액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 매출증가업체는 그렇지 않은 업체에 비해 판매 방법 개선이나 기술 향상을 위해 연구하는 횟수가 많았다.

구 분	연구소 기술 연수	선진지 시찰	기업체 기술 연수	지역 내 공부 모임	조직 내 연구 모임	홍보 활동	판매 방법 개선	기타	합계
전 체	101 (12.3)	200 (24.3)	61 (7.4)	167 (20.3)	129 (15.7)	37 (4.5)	95 (11.5)	33 (4.5)	825 (100.0)
무등록 개인사업체	21 (11.0)	50 (27.3)	16 (10.2)	37 (21.3)	18 (11.8)	9 (5.7)	16 (10.2)	4 (2.5)	171 (0.0)
등록 개인사업체	18 (13.7)	27 (20.6)	12 (9.2)	18 (13.7)	19 (14.5)	8 (6.1)	27 (20.6)	2 (1.5)	131 (1.5)
영농조합법인	20 (13.3)	31 (21.1)	7 (4.8)	23 (16.2)	25 (20.4)	5 (4.1)	18 (12.9)	9 (7.1)	138 (0.0)
작목반	33 (9.3)	73 (21.7)	25 (8.6)	74 (24.0)	57 (20.5)	7 (2.6)	21 (8.2)	14 (5.0)	304 (0.0)
회사법인	6 (13.2)	8 (20.1)	1 (2.8)	7 (19.4)	5 (17.4)	3 (9.0)	3 (9.7)	3 (8.3)	36 (0.0)
공공사업체	3 (9.0)	9 (20.7)	0 (0.0)	7 (18.2)	5 (12.1)	3 (9.3)	9 (30.7)	0 (0.0)	36 (0.0)
기타	0 (0.0)	2 (33.3)	0 (0.0)	1 (16.7)	0 (0.0)	2 (33.3)	1 (16.7)	0 (0.0)	6 (0.0)

표 5-29. 사업체 유형별 최근 3년간 혁신 노력(복수응답)

다. 홈페이지, 특허 출원 유무 및 직거래 시행여부

홈페이지 여부나 특허 출원 여부, 직거래 시행 여부 등은 경제활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혁신의 성과로서 평가가 가능하다. 홈페이지보유율(19%), 특허 출원율(14%), 직거래 시행률(22%)은 전체적으로낮은 편이지만, 지역적으로는 순창군과 평창군이, 사업체 중에서는 공공사업체와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 사업체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순창군은 고추장 가공업체가 평창군은 농촌관광 경영체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58

홈페이지 보유 특허출원 직거래 시행 전체 응답 젉 체 68 (19.0) 50 (14.0) 81 (22.6) 358 (100.0) 평창군 17 (23.9) 5 (7.0) 19 (26.8) 71 (100.0) 당진군 6 (10.2) 6 (10.2) 7 (11.9) 59 (100.0) 순창군 16 (37.2) 14 (32.6) 15 (34.9) 43 (100.0) 해남군 11 (16.7) 6 (9.1) 18 (12.9) 66 (100.0) 성주군 11 (17.7) 9 (14.8) 8 (24.6) 62 (100.0) 함안군 7 (12.3) 10 (17.5) 14 (22.6) 57 (100.0) 무등록 개인사업체 12 (18.5) 2 (3.1) 18 (27.7) 65 (100.0) 등록 개인사업체 17 (25.4) 13 (19.4) 27 (40.3) 67 (100.0) 영농조합법인 13 (22.0) 13 (22.0) 59 (100.0) 9 (15.3) 작목반 12 (9.2) 12 (9.2) 16 (12.3) 130 (100.0) 회사법인 4 (23.5) 17 (100.0) 2 (11.8) 3 (18.8) 공공사업체 17 (100.0) 11 (64.7) 10 (58.8) 2 (11.8) 기타

1 (50.0)

1 (50.0)

2 (100.0)

1 (50.0)

표 5-30. 지역별·사업체 유형별 홈페이지, 특허출원, 직거래 여부

⁵⁸ 평창군의 농촌관광수요에 대응하여 평창군내 21개의 민박농가들은 2003년 10월 자발적으로 농박협회를 결성하였다. 현재는 지역 내 66개 업체가 참 여하고 있다. 월례 정기모임을 통해 경영노하우 및 체험 프로그램 등의 정 보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농박 포털사이트를 개설하여 공동의 홍보·마케 팅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홈페이지를 통해 농가민박 회원의 숙박예약・ 사후연락 체계를 갖춤으로써 영세한 농가민박의 시장 점유력을 신장시키고 있다. 또한 평창군 농박의 차별화된 이미지를 개발하여 로고 및 인증 간판 을 제작하고 인증에 걸맞은 체계적인 서비스 품질 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키 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규모 농박업체가 진행하기 어려운 공동의 체험 행사를 운영하고 숙식을 여러 업체가 분담하여 제공하는 공동 활동도 이루 어지고 있다. 2005년 5월에는 농박협회를 비롯한 지역 내 관광농원, 농촌체 험마을, 레저스포츠업체 등 농촌관광 관련 82개 업체가 모여 평창군연합그 린투어사업단을 구성했다. 사업단은 2005년 신활력사업 예산으로 2명의 상 근 직원(마케팅 전문가, 홈페이지 관리자)을 고용하여 지역 브랜드 강화, 마일리지 마케팅, 개별기업과 농박업체간 제휴, 온라인 쇼핑몰 활동 등 공 동의 활동 영역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구 매출 증가 매출 감소 매출 유지 합 계 체 135 (38.1) 전 114 (32.2) 105 (29.7) 354 (100.0) 홈페이지 있음 38 (56.7) 17 (25.4) 12 (17.9) 67 (100.0) 홈페이지 없음 46 (22.9) 77 (38.3) 78 (38.8) 201 (100.0) 앞으로 만들 예정임 30 (34.9) 41 (47.7) 15 (17.4) 86 (100.0) 특허 출원 있음 29 (58.0) 10 (20.0) 11 (22.0) 50 (100.0) 특허 출원 없음 84 (27.7) 125 (41.3) 94 (31.0) 303 (100.0) 직거래 시행함 36 (45.6) 21 (26.6) 22 (27.8) 79 (100.0) 직거래 시행 안함 78 (28.4) 114 (41.5) 83 (30.2) 275 (100.0)

표 5-31. 홈페이지, 특허출원, 직거래 여부와 최근 매출 실적

표 5-32. 홈페이지 보유업체의 직거래 판매 여부

구 분	직거래 판매 실시	직거래 판매안함	합 계
홈페이지 보유업체	28 (41.2)	40 (58.8)	68 (100.0)
홈페이지 미보유업체	32 (15.9)	169 (84.1)	201 (100.0)
홈페이지 제작예정업체	21 (23.6)	68 (76.4)	89 (100.0)

홈페이지를 보유한 업체, 특허 출원을 한 업체, 직거래를 하는 업체가 그렇지 않은 업체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최근 3년간 매출 실적이좋다. 또한 홈페이지를 보유한 업체는 그렇지 않은 업체에 비해 직거래 시행 빈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2.7. 네트워킹

농업 관련 경제활동주체들의 모임 활동은 열심인 편이다. 전체 응답 자의 72%가 사업과 관련된 연구모임에 참여하고 있으며, 49%는 모임 활동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임활동의 지역적 차이는 크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업체 중에서는 무등록 개인사업체 (83%), 영농조합법인(83%) 등의 모임 참여율이 특히 높다. 반면 사업 체 등록을 한 개인 사업체는 절반 정도만이 모임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적극적이지 않다.

모임은 주로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지만(76%) 전국적으로 모이는 경 우(12%)도 다소 있다. 순창군(22%), 함안군(18%)이 타 지역에 비해 전 국 단위 모임이 많은 편이며,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 사업체도 도내 (24%)나 전국(22%) 모임이 잦다. 반면 작목반(86%), 회사법인(88%), 공공사업체(86%) 등은 주로 지역 내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심층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역 내 모임들은 주로 지역의 공공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1년에 2~3차례 군

체 99 (27.9) 81 (22.9) 174 (49.2) 354 (100.0) 전 평창군 9 (12.7) 22 (30.9) 40 (56.3) 71 (100.0) 당진군 19 (32.2) 12 (20.3) 28 (47.5) 59 (100.0) 순창군 14 (23.3) 10 (23.8) 18 (42.9) 42 (100.0) 해남군 13 (20.0) 15 (23.1) 37 (56.9) 65 (100.0) 성주군 15 (25.0) 18 (30.0) 27 (45.0) 60 (100.0) 함안군 16 (28.1) 17 (29.8) 24 (42.1) 57 (100.0) 무등록 개인시업체 11 (17.0) 18 (27.7) 36 (55.3) 65 (100.0) 등록 개인사업체 28 (42.4) 10 (15.2) 28 (42.5) 66 (100.0)

13 (22.0)

33 (26.0)

5 (29.4)

1 (5.9)

1 (50.0)

표 5-33. 지역별·사업체 유형별 모임 활동 정도 가끔 모임 참여

적극 모임 참여

36 (61.0)

58 (45.7)

7 (41.2)

8 (47.1)

1 (50.0)

합 계

59 (100.0)

127 (100.0)

17 (100.0)

17 (100.0)

2 (100.0)

구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기타

회사법인

공공사업체

분

거의 모임 없음

10 (17.0)

36 (28.4)

5 (29.4)

8 (47.1)

0 (0.0)

지역 내 모임 도내 모임 전국 모임 계 체 243 (75.7) 40 (37) 37 (11.5) 320 (100.0) 평창군 44 (74.6) 10 (16.9) 5 (8.5) 59 (100.0) 당진군 45 (90.0) 4 (8.0) 1(2.0)50 (100.0) 순창군 22 (61.1) 6 (16.7) 8 (22.2) 36 (100.0) 해남군 38 (64.4) 12 (20.3) 9 (15.3) 59 (100.0) 성주군 55 (91.7) 4(6.7)60 (100.0) 1 (1.7)함안군 39 (68.4) 7 (12.3) 10 (17.5) 56 (100.0) 무등록 개인사업체 50 (78.1) 6 (9.4) 7 (10.9) 63 (100.0) 등록 개인사업체 12 (22.2) 54 (100.0) 29 (53.7) 13 (24.1) 영농조합법인 34 (64.2) 9 (17.0) 10 (18.9) 53 (100.0) 작목반 100 (86.2) 11 (9.5) 5 (4.3) 116 (100.0) 회사법인 15 (88.2) 1 (5.9)1 (5.9)17 (100.0) 공공사업체 14 (100.0) 12 (85.7) 0 (0.0)2 (14.3)

표 5-34. 지역별·사업체 유형별 모임 지역

주: 기타 의견 제외

기타

또는 농업기술센터, 농협 등에서 주최하는 강연회, 영농 교육 등에 참가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체의 공공기관의 교육 효과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농업기술센터, 군청, 농협 등의 지원이 경제활동에 약간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는 정도이다. 동종업체에 대한 평가도 비슷하며, 전문가나 중앙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는 조금 더 부정적이다. 한편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사업체들은 농업기술센터보다 동종업체의 기여도를 더 높이 평가했다.

0 (0.0)

(0.0)

2 (100.0)

2 (100.0)

농업 관련 경제활동주체들의 모임 활동이 활발한 만큼, 사업상 정보는 대체로 지역 내 모임(25%)에서 얻고 있다. 하지만 매출이 증가하는 업체와 일반 업체들을 비교해 보면, 매출증가업체는 지역 내 모임

(2.4학 (2.59) (3.3학) 공합보험부 경학 (2.42) (2.57) (3.22) 전문가 기술센터 군합 전문가 기술센터 공합 3 4 5 대우 도움일 약간 도움함 그저 그런 별로 도움만집 전혀 도움만집

그림 5-5. 관련 기관의 경제활동 기여도

(18%) 뿐만 아니라 소비자(15%)나 지역 밖의 업체(12%) 등을 주요 정보원으로 꼽았다. 즉, 대부분 업체들이 모임 활동을 하고 있지만, 네트워킹의 대상 및 내용은 질적으로 차이가 나며, 그 차이가 간접적으로나마 경제활동성과와 관계를 가짐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전반적으로 농업 관련 경제활동주체들의 네트워킹은 원활한 편이지만, 그 결과가 반드시 경제활동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경영 성과가 좋은 편인 사업체 등록을 한 개인 사업체의 네트워크 활동이 오히려 저조한 것이 이를 말하여 주고 있다). 그 이유로는 모임이 사업상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 외부로부터 주어진 기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모임활동 내용도 관련 업체들과 함께 일회적으로 선진지를

구 분	지역 내 모임	지역 내 업체	사업체 내부	각종 매스컴	소비 자	지역밖 업체	연구 기관	해외 업체	기타	합 계	
전 체	156 (24.9)	103 (16.4)	86 (13.7)	84 (13.4)	67 (10.7)	55 (8.8)	45 (7.2)	16 (2.6)	15 (2.4)	627 (100.0)	
매출증가업체	37 (18.1)	24 (11.5)	28 (13.3)	28 (13.5)	30 (14.7)	25 (12.0)	19 (9.5)	9 (4.5)	6 (2.9)	206 (100.0)	

표 5-35. 매출증가업체의 정보원

견학하거나(21%), 단순히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15%) 경우가 많은 것도 이유이다. 경제적인 성과를 올리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연합마케팅(6.0%), 공동홍보활동(4.0%)과 같은 공동활동은 저조한 편이다<표5-36>.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체가 공동의 활동 및 네트워킹을 통해

표 5-36. 지역별·사업체 유형별 업체들간 공동의 활동

구 분	선진지 공동 견학	시설 공동 이용	공동선 별,공동 계산제	영향력 공동 행사	공동 사업 계획	강연회 개최	공동 자금 조달	연합 마케 팅	공 홍보 활동	기타	합 계
전 체	148 (21.1)	102 (14.6)	89 (12.7)	87 (12.4)	71 (10.1)	68 (9.7)	47 (6.7)	42 (6.0)	32 (4.6)	14 (2.0)	700 (100.0)
평창군	19 (18.0)	6 (4.3)	12 (9.3)	21 (20.6)	17 (20.2)	12 (9.7)	2 (2.8)	11 (9.5)	6 (5.6)	0.0)	106 (100.0)
당진군	15 (15.9)	19 (17.8)	9 (8.8)	16 (21.1)	11 (16.0)	3 (3.1)	6 (7.1)	7 (9.1)	1 (1.1)	(0.0)	87 (100.0)
순창군	15 (20.1)	15 (15.9)	8 (9.8)	7 (11.1)	8 (13.6)	7 (9.2)	2 (2.7)	4 (5.2)	5 (6.2)	5 (6.2)	76 (100.0)
해남군	22 (16.5)	26 (17.4)	15 (10.6)	18 (14.1)	15 (12.1)	16 (11.1)	8 (6.4)	6 (4.3)	9 (6.3)	2 (1.3)	137 (100.0)
성주군	37 (25.0)	17 (10.8)	26 (15.8)	15 (11.3)	14 (11.6)	16 (10.8)	9 (6.9)	7 (4.6)	5 (3.1)	0.0)	146 (100.0)
함안군	40 (27.1)	19 (12.7)	19 (12.8)	10 (6.8)	6 (4.1)	14 (9.5)	20 (13.6)	7 (4.7)	6 (4.0)	7 (4.7)	148 (100.0)
무등록 개인사업체	44 (29.7)	19 (11.6)	16 (9.7)	18 (13.4)	11 (8.1)	15 (9.3)	9 (7.0)	10 (6.4)	2 (1.4)	5 3.4)	149 (100.0)
등록 개인사업체	15 (18.4)	11 (9.7)	5 (4.7)	12 (14.8)	9 (14.2)	10 (9.4)	6 (8.6)	9 (8.3)	10 (9.8)	2 (1.9)	89 (100.0)
영농조합 법인	19 (16.9)	20 (15.8)	12 (10.4)	14 (12.9)	11 (10.5)	11 (9.3)	11 (10.3)	6 (5.5)	7 (5.9)	3 (2.5)	114 (100.0)
작목반	62 (20.5)	42 (4.2)	51 (15.6)	39 (13.3)	35 (12.9)	27 (8.7)	18 (6.7)	15 (5.0)	11 (3.6)	3 (1.0)	303 (100.0)
회사법인	4 (14.2)	7 (24.2)	2 (8.3)	2 (10.8)	4 (23.3)	2 (8.3)	1 (4.2)	1 (6.7)	(0.0)	(0.0)	23 (100.0)
공공사업체	4 (20.6)	1 (4.8)	3 (15.1)	(0.0)	1 (11.1)	1 (11.1)	2 (11.1)	1 (5.6)	2 (9.5)	1 (11.1)	16 (100.0)
기타	0 (0.0)	1 (100.0)	0(0.0)	1 (50.0)	0 (0.0)	1 (25.0)	0 (0.0)	0(0.0)	0(0.0)	0(0.0)	3 (100.0)

실질적 도움을 얻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매출증가업체의 네트워킹 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공동의 활동 및 네트워킹이 경제활동에 기여할수 있는 측면은 분명 존재한다 할 것이다.

3. 분석 결과의 종합

이상에서는 6개 사례지역의 지역경제 현황과 농업관련 경제활동의 실태를 살펴보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물 음에 대한 답변으로 종합될 수 있을 것이다.

3.1. 일자리 창출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발견되지만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농업 부문의 종사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 농업분야의 고용감소를 지역 의 타 산업에서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느냐에 따라 지역 경제의 활성 화와 지역의 인구 감소 정도가 결정되는 것이다.

사례 지역의 예만 가지고 말할 때 농업을 대신할 만한 주력 산업으로는 제조업이 가장 중요하며 다음이 지역자원과 연계가 된 서비스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주력 산업의 발달 없이는 지역에서 창출되는 일자리 수는 매우 한정되고 또한 산업 구조도 취약하며 지역경제 전 반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력 산업의 발달은 주로 외생적인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그 예로서 제조업이 발달한 당진군과 함안군은 외부에서 주어진 기업체의 입지수요에 대응하여 정부 지원에 의해 공업단지 조성이 이루어진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지역의 기업은 외부로부터 이식된 기업들이 주를 형성하고 있다. 외생적인 힘에 의해서 지역의 산업구조가 바뀌고 지역의 기반산업이 형성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평창군과같이 지역 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이 새로운 주력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이것도 외부 자본에 의한 대규모 리조트 개발이 촉매가 되어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농촌지역에서의 고용 창출은 1차로 외생적인 요인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농업 관련 경제활동이 지역의 고용 창출에 이바지 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하겠다. 농업 관련 경제활동이 지역의 신규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바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농업 관련 경제활동을 통해 농촌지역 노동력이 농업 부분에서 다른 산업 부문으로이동하는 것을 억제하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2. 농업 관련 다원적 경제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가

농업 관련 다원적 경제활동이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근교, 공업지역과 같은 지역의 입지적 특성, 농업활동과 결합할 수 있는 자원의 존재 여부,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농특산품의유무 등이 농업에 바탕을 둔 다원적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함안군과 같이 도시근교 또는 제조업이 발달한 지역에서는 농업 관련 경제활동 역시 다양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또한 평창군과 같이 관광자원이 뚜렷한 지역에서는 농업과 관광을 결합하는 경제활동이 농업 부문 내부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농업 관련 경제활동은 지역 농업의 특성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주요 농산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신선 농산물, 가공 농산물 중 어떠한 형태로 출하하는지 등에 따라 농업 관련 경제활동의 내용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참외 주산지인 성주군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이 중심이 되는 단순 경제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는 반면, 순창군은 장류 가공을 주로 하는 다원적 경제활동이 비교적 활발하다.

한편, 농업관련 다원적 경제활동은 주민의 기술 개발 노력, 공동 마케팅 노력, 조직화 능력에 따라 영향을 받지만 그 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성주군에서는 주민 스스로의 기술개발 노력이 어느 지역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신선과채류라는 참외의 특성상 농업관련 경제활동은 다른 지역에 비해 오히려 단순한 편이다.

농업관련 다원적 경제활동은 개별 경영주체의 경영능력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 사업체에서 다원적 경제활동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이를 말하여 준다. 이들은 다른 경영주체에 비해인터넷을 활용한 상거래나 마케팅 능력 등에도 뛰어난 편이었다.

3.3. 경제활동 주체의 혁신 노력이 농업관련 경제활동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가

사례 조사에서 농업 관련 경제활동 주체들이 지역 내외적으로 왕성 한 네트워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상 모임도 매우 활발하며 관련 업체들과 함께하는 경제활동들도 다양하다. 일견 혁신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관련 업체들간 자발적인 기술개발활동이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지역도 있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모임활동량에 비해 경제활동 및 성과는 미미한 편이다. 특히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각종 모임들은 농업 관련 경제활동 성과를 올리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 내 농업인 보다는 지역 밖 관련 업체, 소비자 등과의 네트워크가 농업 관련 경제활동에 실질적인 성과를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네트워킹은 공공기관 등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보다사업체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3.4. 농산업 클러스터 형성 가능성이 있는가

농업 관련 경제활동을 통하여 지역내에 산업 연관 관계를 형성하고 농산업 클러스터로서 발전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사례지 역 모두에서 역내 가치사슬체계(value chain system)가 제대로 작동되 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대체로 지역 내 농업 관련 경제활동주체들간의 거래 관계가 미약하고, 후방관련산업 (이입대체), 전방관련산업(이출대체)의 발달도 미약한 편이다. 거래 관 계 자체가 미약하기 때문에 산업 클러스터로서의 발전 조건인 거래비 용의 감소현상도 발견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산지라 할 수 있는 성주군의 경우에도 일부 이입대체 산업이 출현하고 있지만 관련 산업의 지역내 집적을 이루지 는 못하고 있다(앞에서도 말 한바와 같이 이것은 품목의 특성에도 연 유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농산품가공이라 할 수 있는 순창 의 고추장 제조에서도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의 지역내 시현 현상이일부 발견되지만 거래비용의 감소, 관련자의 공동 활동이 활발하지 못한 편이다.

제1차 년도에서 밝힌 금산군 인삼 산업과 같은 농업 관련 산업의 지역내 집적은 우리나라에서 매우 특수하게 발견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3.5. 기존 산업의 활성화와 신산업 창출 가능성은 있는가

농산업 클러스터로의 발전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최근 농업 관련 경제활동의 전개 양상을 살펴보면 기존 산업을 재활성화하거나 지역 자원을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해 나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순창군의 고추장 같이 원래부터 지역에 존재하던 산업을 바탕으로 최근 수요에 맞추어 기존 기술과 기능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지역 내 산업을 재조직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또한 평창군의 농촌관광과 같이 지역 내 자원이나 노동력을 활용하여 새로운 산업을 창출해 가려는 노력이 있어, 향후 농업 관련 경제활동의 새로운 모델이 될가능성이 보인다.

3.6. 농업 관련 경제활동의 촉진이 지역발전의 대안이 되는가

마지막으로 내생적 지역발전의 관점에서 농업 관련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것이 농촌지역 지속가능발전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틈새시장 전략으로서 유효성이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겠다. 농업

관련 경제활동이 지역의 산업구조를 변화시키면서 주력 산업으로 자리잡을 정도는 아니지만, 지역 농업을 활성화하고 소규모나마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해낸다는 측면에서 지역 발전의 대안 전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보완적인 지역발전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농업관련 경제활동 촉진 전략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외생적인 지역발전 전략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사례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지역의 인구를 유지시키는 힘은 농업 외 분야의 외생적인 노력에 의해서 판가름이 난다고 할 수 있다.

제 6 장

요약 및 결론

이 장은 이 연구의 결론부로서 각 장의 연구 결과를 정책적인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종합·정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아울러이 연구의 한계를 밝히며 제3차년도의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1. 주요 연구 결과 요약

1.1. 농촌발전 접근방법의 검토와 연구 관점의 정리

경제활동의 농촌 지역간 차이를 규명하는 것은 복잡하고 광범위한 문제를 안고 있다. 문제의 핵심을 간추리고 연구 범위를 설정하며, 선 진국과의 비교를 통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제2장에서는 이론과 접근 방법을 검토하였다. 외생적인 접근 방법과 내생적인 접근 방법, 최근 대두되고 있는 혁신이론과 그리고 유럽의 농촌지역의 사례 를 연구한 '유럽연합 농촌지역에서 농업과 고용(RUREMPLO)' 연구 결과 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선행 연구 등에 기초하여 이 연구의 전편에 일관할 몇 가지

의 연구질문을 상정하였다. 우리나라 농촌지역간의 경제활동기회 차이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접근 방법은 무엇인지, 내생적인 관점에서의 농촌지역 발전전략이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적합한지, 혁신이론 등에서 주장하는 농촌발전요소가 우리의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지 등이 물음의 주요 내용이었다.

1.2. 시·군의 소득 격차는 주로 외생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

제3장에서는 이용 가능한 시·군 자료를 활용하여 시·군 지역에서 소득 격차가 어떠한 요인에 의해 발생되는가를 실증적으로 밝혔다. 이부분은 경제활동기회의 농촌지역간 차이를 거시적 차원에서 조망해본 다는 의미가 있었다. 이를 위해 지역소득 결정에 관한 국내외 기존 문헌을 고찰하고 문헌 연구에서 선택된 변수들을 중심으로 지역소득 결정에 관한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회귀분석 결과를 근거로 성장 요인을 지역별로 분석했다. 회귀분석을 통해 성장에 중요한 변수들의 유의성과 그 중요도를 관찰했으며, 성장 요인 분석을 통해 각 변수들이 성장에 미친 기여도를 추정할 수 있었다.

추정 결과, 먼저 지역경제이론에서 전통적으로 강조되어 온 집적경제(제조업 고용자 수와 사업체 수, 주변 지역 경제력)는 우리나라의경우에도 지역 소득에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탄력성 추정치에서는 주변 지역 경제력이 가장 높은 값을보여주고 있었으며, 시·군의 성장 요인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제조업고용자수의 증가와 주변 지역 경제력이 성장 기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주환경여건 변수를 추가하여 추정한 결과에 의하면

정주환경과 지역 소득과는 유의할 만한 상관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산업구조 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농업 비중은 음(-) 으로 유의하게 추정되어, 농업 비중 증가가 지역소득의 증가에 부(-) 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를 해석하면 농촌지역간의 경제활동 차이는 지역 내에 내재하는 문제보다는 외생적으로 주어진 도시와의 거리, 제조업의 발 달 정도, 농업 비중 등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3. 제조업의 발달이 농촌 지역 고용창출의 중요 요인

제4장에서는 농촌지역에서의 고용기회가 지역별로 어떻게 다르고 그 차이가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통계청의 전국적인 통계자료를 사용하여 농촌지역의 고용시장의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노동부의 고용보험DB 원자료를 이용하여 지역별로 일자리는 어떻게 창출되고 소멸되는지 그리고 일자리의 변화는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지역별 고용기회의 차이를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어떠한 것이 있는지 이들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계량경제학적 통계분석도 시도하였다. 그리고 전국 범위의 통계자료에서 규명되지 않는 부분이나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을 개별 사례의 구체적인 사실로부터 새롭게 해석하기 위해 사례 조사를 실시하였다.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지역별 일자리 창출과 소멸을 추계한 결과에 의하면 지역별 편차가 컸다. 구미시, 평택시, 아산시, 거제시, 이천시, 울주군처럼 최근 3년간 평균 5,000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는 농촌 지역이 있는가 하면, 울릉군, 양구군, 영양군,

용진군, 장수군, 화천군, 진도군 등과 같이 고용 창출 규모가 200명 이하인 농촌 지역도 있다. 일자리 창출이 많은 지역이 일자리 소멸도 많아 이들 지역에서 경제활동이 역동적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3년 평균 순고용 변화도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었다.

농촌지역간에 고용 창출이 많은 차이를 보이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계량 분석 모형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에서 알 수 있었던 사실 중 인구가 일을 끌어 오는 효과보다 일이 인구를 불러오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결과는 고용기회의 확보가 농촌지역개발의 중요한전제 조건이라는 사실을 알려 주었다. 또한 인근 지역의 상황(인구를 대리변수로 한 경우)이 고용기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제2장에서 살펴본 외생적인 요인에 의해 지역의 고용이 영향을 받는 것과 맥을 같이하고 있었다.

함안군의 사례 조사에서는 농촌지역의 기업 입지 요인이 지역 밖에서의 압출(push)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농촌 지역의 장소적 이점(원료 자원, 기술노동력, 기타 지역자원)을 좇아 입지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함안군의 사례를 전국에 일반화시키기는 어렵겠지만, 농촌지역에 기업이 입지하는 데는 도시 근교라는 입지특성이나, 저임금이나 저렴한 지가 같은 저비용 요인이 주되게 작용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4. 농업 관련 경제활동만으로 지역 발전은 제한적

제5장에서는 실제 사례 조사를 통해서 농업 관련 경제활동이 지역에서 어떻게 차이 나고 있으며 그 요인은 무엇인지를 밝혀 보고자 하였다. 사례 지역은 전국 군 지역 중 농업활동이 왕성하면서 나름대로

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 평창군, 당진군, 순창군, 해남군, 함안군, 성주군을 선정하였다.

사례 지역 연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농업부문 종사자 수가 감소하고 있었다. 농업분야의 고용감소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주력 산업이 지역내에 발달하느냐에 따라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인구 감소 정도가 결정된다고 하겠다. 주력 산업의 발달 없이 지역에서 창출되는 일자리 수는 매우 한정적이며 산업 구조도 취약하여 지역경제 전반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농촌지역에서의 고용 창출은 외생적인 요인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는 제3장과 제4장의 연구 결과는 제5장에서의 사례 연구를 통해서도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당진군과 함안군은 외생적인 힘에 의해서 공업단지가 조성되면서 기업이 입지하여 지역의 산업구조가 바뀌고 지역의 기반산업이 형성되고 있다. 평창군이 지역 자원을 활용한관광산업이 새로운 주력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이것도 외부 자본에 의한 대규모 리조트 개발이 촉매가 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수 있다.

농업 관련 경제활동은 지역적으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그것은 지역의 입지적 요인, 지역농업 특성, 농업외 산업의 발달정도, 농업과 결합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만한 자연 자원 소유 여부 등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농업 관련 경제활동이 지역의신규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정도는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사례 지역 모두에서 농업 관련 경제활동주체들이 지역 내·외 적으로 나름의 네트워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활 동에 비해서 성과는 미미한 편이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모임들은 농업 관련 경제활동업체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공한 사업체의 경우를 볼 때 지역 내 모임보다는 지역 밖 관련 업체, 소비자 등과의 네트워크가 실질적인 성과로 가시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네트워킹은 공공기관 등에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보다 사업체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농업 관련 경제활동이 지역 내에서 산업간 연관관계를 형성하여 농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그러나 순창군의 고추장 같이 원래부터 지역에 존재하던 산업을 바탕으로 최근수요에 맞추어 기존 기술과 기능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지역 내 산업을 재조직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평창군의 농촌관광과 같이 지역내 자원이나 노동력을 활용하여 새로운 산업을 창출해 가려는 노력이 있어, 향후 농업 관련 경제활동의 새로운 모델이 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전반적으로 농업 관련 경제활동의 지역간 차이가 나타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인해 지역의 경제력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음을 알 수 있 었다. 농업관련 경제활동은 지역의 경제활동을 보완하는 일종의 틈새 시장이라 할 수 있겠다.

2. 종합 및 시사점

2.1. 국토 정책과 농촌지역의 성장

우리나라 농촌 발전의 원동력은 지역 외부의 힘에 의해 크게 좌우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싶다. 계량분석 모델의 결과에서 도시와의거리가 농촌지역의 경제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제조업 발달이여전히 지역 성장을 견인함이 드러났다. 대도시 인근 및 대규모 공업단지 주변 지역에서 고용 창출이 높다는 제3장의 분석결과 역시 이를 뒷받침해 준다. 함안군의 기업체 조사에서 농촌지역 제조업의 입지가지역의 장소적 매력(pull 요인)보다는 낮은 비용을 찾아 도시로부터 벗어나는 압출(push)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해 준다.

이는 농촌지역의 성장이 지역 밖에서 이루어지는 외생적 요인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는 외생적 발전론이 우리나라의 경우 매우 유효하다는 것을 실증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다른 측면에서 농촌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점도 알려 준다.

그 동안 농촌지역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농업 또는 농촌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정책이 수행되었지만 그 효과가 높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러한 요인에 기인할 것이다. 결국 농촌지역의 경제 성장은 국토발전정책의 큰 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이 점과 관련하여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은 농촌지역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유효한 전략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외생적인 전략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 내부에서

나름대로의 성장 요인을 발굴하고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용하고 자 하는 노력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하겠다. 농업에 바탕을 둔 경제활동은 농업부문의 유휴노동력을 지역 내에 유지하여 지역경제의 쇠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농업관련 경제활동은 지역 내의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때문에 다른경제활동보다도 지역경제에의 파급효과가 높다.

2.2. 혁신 노력의 한계

다음으로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 정도에 따라 지역 경쟁력이 좌우된다는 선진국의 경험은 우리나라에서는 제한적으로 적용 가능하다. 평창군과 성주군과 같은 일부 예가 나타나고 있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혁신 주체의 형성이 미약하고 이들의 노력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정도에 이르고 있지는 않다는 판단이다. 기술개발 노력과 각종모임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부분이 행정에의해서 주관되고 있어 활동량에 비해 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행정의 도움을 받지 않고 개별적으로 지역 내·외의 동종업자및 소비자와의 네트워킹을 통해 혁신을 창조하는 개별 사업가의 노력이 돋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결국 이러한 기업가 정신을 갖춘 주체들이 해당 지역 내에 많이 존재하는 것이 그 지역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혁신체계 구축은 지금과 같이 행정이 중심이 되는 네트워크 만들기가 아니라 기업가 정신을 갖춘 경영자 육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시장에서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혁신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혁신체계 구축

의 정책적 유용성은 기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2.3. 농산업 클러스터정책의 신중한 접근

선진국의 경험에서는 별다른 산업 기반을 갖지 못한 농촌지역에서는 농업에 기반한 농가의 다원 활동의 수행과 연관 산업의 개발 노력이 지역발전의 중요한 과제였다. 우리의 경우도 그 필요성에서는 마찬가지이지만 결과에 있어서는 선진국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제5장의 사례 연구에서는 우리의 경우 농업 관련 경제활동이 다양하지 못하며 지역 내에 연관 산업을 형성할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순창 고추장처럼 정책적인 노력에 의해서 지역내에서의 거래 관계가 일부 형성되고 있지만, 전후방 관련 산업의 지역내 집적 단계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지역내 관련 산업의 집적으로 거래비용의 감소가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며, 이것이 점차 확대 재생산되는 메커니즘이 발견되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지역 클러스터 성립의 기본 여건이 충족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이는 사례지역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농촌 지역 전반에서 발견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현상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책적인 지원에 의해 농업클 러스터를 육성하고자 한다. 클러스터의 형성 가능성은 정책적으로 만 들어지는 시스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살아남는 경제활동이 지역 내에 존재하고 그것이 산업으로서 기능하 고 있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클러스터 정책은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제반 요소에 관한 것보다는 클러스터로서 성장 가능할 수 있는 품목 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품목을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 여건 이 무엇인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2.4. 내생적 발전론의 한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내생적 발전론을 순수하게 자립적인 지역발전모델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유럽의 RUREMPLO 사례에서 보듯이 선진국이라 할지라도 순전히 내생적 자원에 의지하는 것만으로는 농촌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 주어진 외부 여건을 어떻게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는지, 필요한 외부 자원을 어떻게 동원하고 적절하게 이용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1일 생활권으로 전국이 통합되고 중앙의 재량이 강력한 국가에서의 지역개발 전략은 외생적인 발전 전략과 내생적인 발전 전략을 적절하게 혼합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각 지역이 모색할 발전 방향도 그러한 구도 속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거점개발의 파급효과가 농촌지역에 성장을 우선 견인하고 지역의 장소적 매력에 기초한 발전 전략이 틈새시장으로서의 지역발전을 보 완하는 형태가 보다 현실적인 농촌지역발전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우 리나라의 농촌지역발전은 농업과 농촌지역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 가의 경제정책 및 국토정책 전반의 문제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이 연구는 여러 기관이 참여하였기 때문에 각 참여 기관이 수행해야 할 과제를 계획 및 조정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참여 기관 간

연구 결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였다. 또한 전체 연구 보고서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였다. 이 때문에 연구 설계, 조사, 조사 결과의 분석 과정에서 전체 연구 목적과 일관될수 있도록 연구 협의, 공동조사 등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당초 목적한바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발견되고 있다. 이 점 전적으로 주관 연구기관의 책임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힌다.

연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었다는 점도 아울러 밝혀둔다. 제3장의 시·군 소득 격차 발생요인 분석은 통계의 미비로 인해 변수 유용성의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생산요소중 가장 중요한 시·군내의 민간자본을 지역 소득 결정식 추정에 투입할 수 없었던 점이 가장 아쉬웠다. 사회간접자본의 총량도 투입할 수없어 도로연장이라는 대리변수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내생적 성장이론을 나타내는 인적자본 변수도 시계열의 한계로 적절한 변수를 구성할 수 없었다.

제4장에서도 자료상의 제약으로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 그리고 순고용변화를 종속변수로 하고, 지역적 특성을 설명변수로 한 회귀분석에서도 유효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시·군 통계자료의 정비와 함께이러한 한계가 극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부 정보들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것들로서 그 자체가 농촌지역의 경 제활동 실상을 파악하는 데 매우 유익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 다. 예를 들어서 시·군별 고용보험데이터는 농촌지역의 경제활동격 차를 보다 선명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시·군 자료 를 활용한 지역 성장 회귀식에서 도출한 결과는 지금까지 막연하게 생각하였던 시·군 간 소득격차 발생요인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유 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 연구는 3개년 연구 과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3차 연도의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제3차 연도는 전체 연구를 마무리하는 해로서 농촌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전략과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농촌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전략은 1차 연도와 2차 연도의 연구 결과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3차 연도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고 정책으로구체화하는 노력이 이루어질 것이다.

정책방안으로서는 기존 정책의 개선방안도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3차 연도 연구에서는 몇몇 중요 정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3차 연도에서도 다양한 분야의 다른 연구자간의 협동 연구가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부록 1

지역 소득 결정요인에 관한 회귀분석 자료

부표 1-1. 회귀분석 사용변수의 지역별 기초통계량

단위: 십만원, 명, 개, km, ha, %

버스	트레카	경기	강원	경북	경남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기타
변수	통계량	75	75	115	95	50	75	65	105	10	25
주민세	평균	10,9000	3,590	6,740	7,420	3,680	5,860	27,800	3,970	2,280	9,360
구인세	표준편차	13,800	4,440	13,300	10,800	2,590	7,210	30,800	7,060	737	10,500
제조업	평균	21,800	2,396	9,140	14,100	6,960	8,379	4,545	3,174	1,350	12,700
노동자수	표준편차	17,400	2,685	16,100	21,700	5,710	12,100	6,032	3,858	386	12,000
제조업	평균	1,062	137	324	509	205	201	140	113	79	361
사업체수	표준편차	992	210	441	800	161	239	152	70	17	370
도로	평균	402	477	421	539	519	418	446	390	695	382
연장	표준편차	125	142	165	144	183	187	81	154	62	423
은행 점포수	평균	16	12	18	23	11	15	14	11	12	11
점포수	표준편차	13	15	22	27	7	12	14	12	2	8
고등학교	평균	5,513	3,853	5,229	6,877	3,778	5,633	4,676	3,761	3,021	3,452
학생수	표준편차	3,584	4,229	6,186	7,201	2,750	4,039	4,573	3,924	1,372	2,762
15-64세	평균	125,000	61,500	84,900	109,000	61,800	86,900	73,400	61,200	61,600	64,800
인구	표준편차	75,900	59,800	84,600	102,000	40,300	59,900	66,100	50,600	7,978	39,000
병원수	평균	62	30	40	57	33	49	41	30	28	28
0 6 1	표준편차	45	37	47	62	26	41	43	30	9	18
공무원수	평균	915	667	1,050	905	664	742	676	858	623	541
	표준편차	292	310	526	394	213	214	348	352	51	86
복지	평균	2	2	2	2	1	2	3	2	2	1
기관수	표준편차	2	2	2	2	1	2	3	2	0	1
여행	평균	15	10	13	19	10	16	15	11	5	4
업체수	표준편차	9	14	17	22	10	14	16	15	5	3
사설 .	평균	229	109	117	230	86	153	127	87	63	
학원수	표준편차	153	136	141	251	66	150	166	126	8	
경지	평균	12,500	7,631	12,900	9,404	13,000	17,100	16,300	15,700	22,700	
면적	표준편차	6,535	3,123	6,456	3,615	4,132	5,685	7,635	7,286	1,801	
농업 비중	평균	0.202	0.250	0.326	0.284	0.349	0.335	0.372	0.397	0.431	
	표준편차	0.090	0.098	0.148	0.171	0.133	0.104	0.132	0.121	0.037	
고매출	평균	0.167	0.149	0.160	0.104	0.153	0.143	0.153	0.111	0.218	0.098
농가비중	표준편차	0.046	0.087	0.075	0.068	0.034	0.051	0.072	0.052	0.089	0.053
영농후계	평균	0.144	0.110	0.082	0.109	0.088	0.109	0.090	0.098	0.144	0.135
농가비중	표준편차	0.033	0.038	0.045	0.044	0.035	0.029	0.053	0.048	0.001	0.038
서비스업	평균	0.174	0.215	0.175	0.179	0.183	0.181	0.172	0.174	0.146	0.175
비중	표준편차	0.023	0.022	0.036	0.023	0.031	0.013	0.024	0.032	0.000	0.039

주 1. 기타지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 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 울주군을 포함하며, 이 지역의 농업인구와 사설학원수의 통계는 없음.
2. 증평출장소와 계룡출장소는 통계 미비로 제외함.

부표 1-2. 한국 군 소득 결정요인의 회귀분석(종속변수: 주민세)

		ī	1	ī	1	ī	
설명팀	변수	모형 부1	모형 부2	모형 부3	모형 부4	모형 부5	모형 부6
제조약	h	0.089		0.092		0.087	
고용지	사수	$(0.002)^*$		(0.025)*		(0.025)*	
제조업			0.062		0.062		0.056
사업치	-		(0.028)**		(0.028)**		(0.030)***
주변5		0.713	0.718	0.715	0.719	0.716	0.722
	트시크 복*(1/거리)	$(0.109)^*$	$(0.110)^*$	(0.109)*	$(0.110)^*$	(0.109)*	(0.110)*
		-0.344	-0.342	-0.347	-0.343	-0.346	-0.344
주변5		1					
경제 대	복*(1/거리) ²	(0.058)*	(0.059)*	(0.058)*	(0.059)*	(0.058)*	(0.059)*
도로인	녀 잣	0.065	0.082	0.067	0.083	0.069	0.086
	_ 0	(0.031)**	(0.030)*	(0.031)**	(0.030)*	(0.031)**	(0.031)*
은해진	험포수	0.009	0.006	0.011	0.006	0.011	0.005
	141	(0.040)	(0.042)	(0.040)	(0.042)	(0.040)	(0.042)
인적지	사본			-0.755	-0.264	-0.059	-0.043
	, _	0.000	0.005	(0.855)	(0.855)	(0.057)	(0.060)
특허출	출원수	0.090	0.097	0.084	0.095	0.085	0.094
		(0.026**	(0.026)*	(0.027)*	(0.027)*	(0.026)*	(0.027)*
	경 기	7.577 (0.380)*	7.722 (0.392)*	7.271 (0.515)*	7.614 (0.526)*	7.757 (0.417)*	7.835 (0.422)*
		7.733	7.883	7.429	7.775	7.917	7.998
	강 원	(0.381)*	(0.393)*	(0.514)*	(0.525)*	$(0.419)^*$	(0.425)*
	경 북	7.435	7.590	7.111	7.476	7.604	7.696
71	76 五	$(0.367)^*$	(0.378)*	(0.519)*	$(0.529)^*$	$(0.401)^*$	$(0.406)^*$
지	경 남	7.412	7.547	7.085	7.431	7.597	7.663
	·	(0.370)*	(0.383)*	(0.524)*	(0.537)*	(0.410)*	(0.416)*
역	충 북	7.736 (0.376)*	7.948 (0.387)*	7.416 (0.522)*	7.836 (0.531)*	7.931 (0.419)*	8.071 (0.423)*
		7.696	7.878	7.382	7.767	7.892	8.000
더	충 남	(0.370)*	(0.385)*	(0.514)*	(0.527)*	(0.415)*	(0.421)*
	전 북	9.799	9.948	9.469	9.831	9.977	10.05
미	건 ㅋ	(0.363)*	(0.378)*	(0.521)*	(0.535)*	$(0.401)^*$	$(0.408)^*$
	전 남	7.314	7.457	6.988	7.341	7.497	7.571
	·	(0.373)*	(0.386)*	(0.525)*	(0.537)*	(0.412)*	(0.418)*
	제 주	7.363 (0.404)*	7.477 (0.420)*	7.059 (0.531)*	7.368 (0.548)*	7.537 (0.437)*	7.582 (0.445)*
	33	8.216	8.391	7.903	8.281	8.395	8.504
	기 타	(0.371)*	(0.382)*	(0.513)*	(0.523)*	(0.406)*	(0.413)*
	\overline{R}^{2}	0.754	0.749	0.754	0.749	0.754	0.749
	$\chi^{2}(6)$	136.0*	127.7*	136.8*	127.8*	137.2*	128.2*
	$\chi^{2}(9)$	597.8*	590.8*	596.2*	589.1*	598.5*	590.4*
	/ (0)					<u> </u>	

주: 표본은 광역시·도, 일반시 및 통합시를 제외한 전국의 89개 군이며, 기타 사항은 <표 3-2>과 동일함.

부표 1-3. 한국 통합시 • 군 소득 결정요인의 회귀분석(종속변수: 주민세)

설명	변수	모형 부7	모형 부8	모형 부9	모형 부10	모형 부11	모형 부12
 제 <i>조</i>	- 업	0.215		0.072		0.213	
고용	- -자수	(0.021)*		(0.022)*		(0.021)*	
제조		(111/	0.086	,,,,,,,,,,,,,,,,,,,,,,,,,,,,,,,,,,,,,,,	-0.000	,,,,,,,,,,,,,,,,,,,,,,,,,,,,,,,,,,,,,,,	0.093
사업	체수		(0.026)		(0.022)		(0.026)
	도시의	0.803	0.969	0.571	0.607	0.824	0.985
경제	력*(1/거리)	(0.093)*	(0.098)*	(0.084)*	(0.086)*	(0.093)*	(0.098)*
주변	[도시의	-0.393	-0.463	-0.274	-0.287	-0.404	-0.472
경제	력*(1/거리) ²	(0.049)*	(0.052)*	(0.045)*	(0.045)*	(0.049)*	(0.052)*
	연장	0.118	0.210	0.032	0.052	0.121	0.211
		(0.031)* 0.170	(0.031)* 0.180	(0.028) 0.010	(0.028)*** -0.081	(0.030)* 0.171	(0.031)* 0.185
은행]점포수	$(0.036)^*$	(0.040)	(0.034)	(0.036)	(0.035)*	$(0.040)^*$
<u> </u>	1 -1 H	(0.000)	(0.040)	2.932	3.288	0.0001	0.0001
인스	자본			(0.221)	$(0.199)^*$	$(0.00004)^*$	$(0.00004)^*$
	경 기	6.889	6.625	-9.765 (1.222)*	-11.96	6.903	6.684
	- ,	(0.333)* 6.997	(0.368)* 6.637	(1.290)* -9.681	(1.172)* -11.92	(0.331)* 7.104	(0.366)* 6.703
	강 원	$(0.316)^*$	$(0.354)^*$	(1.289)*	$(1.167)^*$	(0.315)*	(0.352)*
	충 북	6.855	6.623	-9.496	-11.65	6.873	6.689
지	- '	(0.318)*	(0.357)*	(1.265)*	(1.151)*	(0.317)*	(0.355)*
	충 남	6.955 (0.315)*	6.674 (0.356)*	-9.459 (1.269)*	-11.64 (1.154)*	6.973 (0.314)*	6.742 (0.354)*
역	-기 ㅂ	9.000	8.640	-7.337	-9.536	9.019	8.712
'	전 북	(0.309)*	$(0.347)^*$	$(1.262)^*$	$(1.143)^*$	$(0.307)^*$	(0.346)*
더	전 남	6.683	6.304	-9.574 (1.250)*	-11.77	6.700	6.374 (0.354)*
니		(0.317)* 6.805	(0.356)* 6.506	(1.258)* -9.609	(1.139)* -11.79	(0.316)* 6.825	6.573
,	경 북	(0.306)*	(0.342)*	(1.267)*	$(1.149)^*$	(0.305)*	(0.341)*
미	경 남	6.744	6.397	-9.701	-11.90	6.761	6.464
		(0.319)* 6.618	(0.355)* 6.077	(1.272)* -10.007	(1.152)* -12.30	(0.317)* 6.629	(0.354)* 6.146
	제 주	(0.358)*	(0.397)*	(1.293)*	(1.166)*	(0.357)*	(0.395)*
	기 타	7.399	7.109	-9.131	-11.32	7.416	7.173
		(0.316)*	$(0.353)^*$	$(1.278)^*$	(1.160)*	(0.315)*	$(0.351)^*$
	\overline{R}^{2}	0.716	0.679	0.774	0.770	0.718	0.683
	$\chi^{2}(6)$	302.9*	219.2*	462.9*	452.0*	310.5*	229.3*
	$\chi^{2}(9)$	791.7*	731.6*	926.6*	919.5*	797.6*	739.7*

주: 관찰치수는 광역자치단체와 일반시를 제외한 전국의 138개 통합시·군이며, 다른 모든 사항은 <표 3-2>의 경우와 동일함.

부록 2

농촌 노동시장 특성에 관한 지역별 비교

부표 2-1. 고용보험 피보험자 업종별·지역별 비중

					단위: %
	역	제조업	건설업	숙박 및	금융 및
	1.	714	Сен	음식점업	보험업
충북	충주시	80.28	2.62	0.68	1.63
충북	진천군	79.48	2.90	0.33	0.91
전남	함평군	78.50	4.46	0.66	1.54
충북	영동군	78.32	5.30	0.35	1.96
전남	완도군	77.76	3.55	0.62	2.01
경북	구미시	75.26	2.90	0.84	0.92
충북	보은군	74.90	2.96	0.67	0.92
충남	금산군	74.77	4.82	0.28	2.55
충남	논산시	74.65	6.24	1.65	1.65
제주	남제주군	74.61	4.56	0.98	1.49
경남	김해시	73.54	2.44	0.38	1.15
경남	함안군	73.51	3.26	0.51	1.09
전북	고창군	73.39	2.71	0.79	1.82
경기	남양주시	71.79	5.91	1.89	1.77
전북	김제시	71.75	5.49	0.54	3.24
경북	봉화군	71.58	5.14	1.58	2.01
경북	상주시	71.21	8.20	0.17	3.60
경북	영주시	70.11	4.75	0.64	1.64
전남	신안군	67.78	4.53	0.94	0.75
전북	완주군	67.37	3.37	0.93	1.12
경북	청도군	67.33	9.51	0.88	3.46
경기	이천시	67.10	5.42	1.18	3.37
전북	임실군	66.11	5.64	0.95	2.32
경북	울진군	66.09	4.76	0.51	2.82

부표 2-1. 고용보험 피보험자 업종별 비중 - 계속

	〒並 2⁻1. ュ	<i>1</i> 공모임 피모		10 11-1	단위: %
7	시역	제조업	건설업	숙박 및	금융 및
	\	세조표	신원표	음식점업	보험업
경북	영양군	65.44	9.07	0.40	3.50
경북	김천시	64.24	7.63	1.40	1.57
경북	성주군	63.48	3.69	0.86	1.18
강원	홍천군	63.41	5.26	1.17	1.68
강원	인제군	62.48	6.90	0.64	2.80
충남	당진군	61.84	6.66	1.08	5.27
경북	경산시	60.82	12.17	1.00	5.53
강원	정선군	60.66	9.06	1.42	7.25
경남	통영시	60.49	6.39	1.52	1.81
충남	천안시	59.87	5.52	4.65	2.22
경북	경주시	57.12	14.72	0.90	6.77
경기	파주시	56.84	8.15	1.37	4.09
경기	김포시	56.46	8.80	1.92	4.78
충북	옥천군	55.69	12.55	1.01	4.70
경남	거창군	54.34	6.25	1.09	0.97
충북	단양군	53.59	10.10	1.58	5.41
경남	함양군	53.23	9.58	1.44	5.93
경남	사천시	53.04	11.73	3.96	3.99
전남	고흥군	52.53	5.58	0.60	1.49
전남	해남군	51.91	5.58	1.52	2.27
강원	춘천시	50.44	8.89	1.66	1.86
경북	군위군	48.95	18.92	0.91	8.23
전남	무안군	47.94	16.18	1.47	5.72
경북	칠곡군	47.09	13.25	1.74	9.14
충남	서산시	47.07	10.15	1.02	4.36
경기	양주시	46.71	8.13	1.34	2.80
전남	나주시	46.06	10.85	1.21	6.02
전북	순창군	45.56	9.19	1.41	5.49
전남	장흥군	41.07	11.29	11.98	4.24

부표 2-1. 고용보험 피보험자 업종별 비중 - 계속

					근 1. //
7)	역	제조업	건설업	숙박 및	금융 및
\sim	1 7	세소립	신설립	음식점업	보험업
 경북	안동시	40.52	27.06	1.25	5.05
 전북	무주군	39.01	17.62	0.76	8.56
 경남	의령군	38.41	8.71	4.24	4.98
 전북	익산시	38.39	19.18	0.38	11.54
 충남	공주시	38.28	23.40	2.24	8.56
 경남	양산시	37.14	15.38	3.40	8.70
경기	가평군	36.64	15.45	1.74	6.24
 전남	강진군	36.49	14.85	1.10	9.09
경기	용인시	33.31	23.94	0.41	12.91
 충남	홍성군	33.30	26.03	0.41	6.38
 경남	거제시	31.71	12.78	2.29	2.96
 전남	순천시	30.15	17.68	1.99	13.57
 강원	영월군	29.36	16.53	0.97	9.09
 경남	창녕군	29.11	10.31	2.55	5.03
충북	괴산군	28.30	16.69	1.94	8.23
 경기	양평군	28.02	31.18	0.38	9.57
경북	울릉군	27.89	11.65	1.86	3.81
 경남	합천군	27.60	10.27	3.59	8.15
 강원	삼척시	27.20	12.76	1.15	9.01
 전남	담양군	27.18	18.63	0.94	13.62
 전남	장성군	26.84	27.18	0.11	13.64
 경남	밀양시	26.60	25.64	1.67	11.68
경북	예천군	26.49	16.29	2.58	7.85
 전남	광양시	26.37	4.55	6.20	12.55
 전북	남원시	25.98	16.74	1.99	5.44
경북	문경시	25.31	19.48	0.47	22.75
제주	북제주군	24.79	12.88	7.34	9.21
전남	구례군	24.33	11.69	1.38	4.02
경남	산청군	24.27	20.08	0.76	8.07

부표 2-1. 고용보험 피보험자 업종별 비중 - 계속

					근기. /0
7] 역	제조업	건설업	숙박 및	금융 및
^	17	세조됩	七宣音	음식점업	보험업
 충남	부여군	22.75	17.69	3.00	14.70
 강원	횡성군	22.42	13.61	2.58	9.46
충북	제천시	22.38	19.40	1.83	13.91
 부산	기장군	22.24	13.45	3.16	5.82
 충남	보령시	21.61	17.46	1.01	9.43
 경기	광주시	21.39	13.19	3.81	3.58
 강원	철원군	20.66	17.00	3.64	13.23
 경북	영천시	20.17	30.71	0.31	17.84
 전남	보성군	19.00	21.98	2.81	15.19
 전북	진안군	18.77	16.83	9.44	6.07
 전북	장수군	18.56	25.95	2.67	7.05
 전남	영광군	16.77	22.06	1.07	13.51
 전남	여수시	16.51	21.87	1.17	16.46
 경남	진주시	16.21	21.46	1.13	13.12
 강원	양양군	15.35	15.74	2.03	3.94
 경기	여주군	15.33	13.06	5.78	7.12
 경북	의성군	13.94	27.32	2.04	13.75
 전북	정읍시	13.86	41.86	0.61	4.42
 전남	진도군	13.50	25.14	1.77	13.44
 경기	연천군	13.33	21.98	2.07	0.41
경남	남해군	13.18	23.29	0.33	14.69
	고성군	12.80	21.70	22.13	9.14
충남	청양군	12.79	47.87	0.22	9.74
충남	서천군	12.65	6.43	4.52	17.99
충북	음성군	12.41	14.20	2.35	3.92
경남	마산시	11.82	14.99	19.64	10.47
인천	강화군	11.74	14.74	0.37	6.97
전남	영암군	11.61	20.72	10.24	9.06
경기	포천시	11.32	28.51	14.37	8.36
				•	

부표 2-1. 고용보험 피보험자 업종별 비중 - 계속

	〒並 2−1. ⊥	<u> 1</u> 용보염 피모	.험사 업송멸	미궁 - 계곡	단위: %
				숙박 및	금융 및
ス	역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보험업
 울산	울주군	11.29	13.46	2.73	6.37
 경기	화성시	10.19	18.83	9.78	10.39
 강원	평창군	10.14	16.69	5.20	10.78
대구	달성군	10.11	27.87	1.70	13.95
 경북	영덕군	9.91	21.17	1.18	15.27
 경기	평택시	23.93	22.50	0.59	12.43
전북	군산시	45.49	17.29	1.47	6.50
충남	연기군	45.38	6.65	1.67	2.89
경남	고성군	45.34	12.14	6.66	8.07
충남	아산시	44.90	10.26	0.87	4.86
인천	옹진군	44.85	16.93	0.87	10.62
강원	화천군	44.18	9.31	1.99	4.16
전남	곡성군	43.70	5.08	1.10	5.95
경북	포항시	43.57	12.21	1.72	6.20
충남	태안군	43.26	10.14	0.99	5.92
경남	창원시	43.10	7.51	0.65	7.25
강원	강릉시	42.86	12.63	0.93	6.16
충북	증평군	42.67	10.20	1.52	3.01
강원	양구군	8.55	21.67	3.32	17.23
전남	화순군	8.41	38.30	0.89	14.09
경북	청송군	7.91	13.68	1.52	2.19
충남	계룡시	7.66	25.70	0.78	16.94
충남	예산군	6.83	19.61	32.62	8.05
강원	원주시	6.11	27.85	0.26	22.37
경북	고령군	5.51	33.98	0.48	14.72
전북	부안군	5.22	20.50	1.18	26.20
경기	안성시	3.03	33.73	1.73	3.91
경남	하동군	2.23	53.47	0.04	22.69
충북	청원군	0.84	29.31	2.11	27.50

부표 2-2. 최근 3년간 평균 일자리 창출 순위

						단위: 명
 순위	시・도	시・군	2002년	2003년	2004년	3년 평균
	,		창출	창출	창출	창출
1	경북	구미시	12,527	16,478	21,297	16,767
2	경남	창원시	16,613	14,826	14,875	15,438
3	경기	화성시	14,501	14,909	16,213	15,208
4	경기	용인시	12,515	13,901	16,474	14,297
5	충남	천안시	12,582	14,531	15,750	14,288
6	경남	김해시	12,098	12,565	12,239	12,301
7	경기	평택시	10,339	10,752	9,937	10,343
8	경북	포항시	7,003	7,409	7,137	7,183
9	충남	아산시	5,881	5,879	8,989	6,916
10	경기	김포시	6,570	6,698	7,427	6,898
11	경기	광주시	6,676	6,553	6,588	6,606
12	경남	거제시	4,865	7,268	7,226	6,453
13	경남	양산시	5,678	6,231	6,259	6,056
14	경기	파주시	5,557	5,545	6,924	6,009
15	경기	이천시	4,771	5,908	6,506	5,728
16	경남	마산시	6,464	5,046	4,979	5,496
17	울산	울주군	4,584	5,733	5,482	5,266
18	경북	경주시	4,993	4,665	5,782	5,147
19	전북	익산시	4,888	4,384	5,209	4,827
20	강원	원주시	5,075	4,521	4,569	4,722
21	경북	경산시	4,859	4,415	4,606	4,627
22	경기	남양주시	4,597	4,441	4,672	4,570
23	충북	청원군	4,139	3,898	4,813	4,283
24	경기	포천시	4,165	4,033	4,166	4,121
25	경기	양주시	3,797	4,027	4,125	3,983
26	경북	칠곡군	4,003	3,823	4,112	3,979
27	전북	군산시	3,512	4,532	3,834	3,959
28	경남	진주시	3,924	4,050	3,822	3,932
29	전남	여수시	4,295	3,614	3,584	3,831
30	경기	안성시	3,366	3,524	3,990	3,627
31	강원	춘천시	3,247	3,242	3,675	3,388
32	강원	강릉시	3,705	3,035	2,773	3,171
33	충북	음성군	3,206	3,129	2,906	3,080
34	전남	순천시	2,962	2,896	3,064	2,974
35	대구	달성군	2,728	2,568	2,863	2,720
		-	,	<u> </u>		·

부표 2-2. 최근 3년간 평균 일자리 창출 순위 - 계속

						단기. 경
순위	시・도	시・군	2002년 창출	2003년 창출	2004년 창출	3년 평균 창출
36	충북	충주시	2,944	2,317	2,647	2,636
37	충북	<u> </u>	2,314	2,757	2,542	2,538
38	충남	 서산시	1,898	2,757	2,438	2,364
39	충남	연기군	1,979	1,607	3,146	2,244
40	전남	광양시	2,121	2,127	2,328	2,192
41	경북	김천시	1,968	2,047	2,124	2,046
42	충남	당진군	1,493	1,568	2,716	1,926
43	경북	안동시	1,802	1,713	2,001	1,839
44	경북	영천시	1,938	1,649	1,873	1,820
45	전북	완주군	1,613	1,942	1,807	1,787
46	경남	함안군	1,741	1,757	1,700	1,733
47	경기	여주군	1,908	1,622	1,589	1,706
48	경남	통영시	1,872	1,436	1,608	1,639
49	충남	공주시	1,479	1,426	1,732	1,546
50	충남	논산시	1,486	1,541	1,562	1,530
51	충북	제천시	1,468	1,631	1,454	1,518
52	전남	나주시	1,483	1,423	1,638	1,515
53	전남	화순군	1,366	1,644	1,370	1,460
54	전북	김제시	1,344	1,437	1,592	1,458
55	강원	정선군	787	2,360	1,135	1,427
56	전남	영암군	1,312	1,404	1,505	1,407
57	전북	정읍시	1,211	1,224	1,497	1,311
58	부산	기장군	1,265	1,225	1,402	1,297
59	경남	사천시	1,433	1,085	1,362	1,293
60	경남	밀양시	1,147	1,282	1,397	1,275
61	충남	금산군	1,248	1,178	1,302	1,243
62	충남	보령시	1,160	1,353	1,158	1,224
63	경북	상주시	1,036	1,413	897	1,115
64	전남	담양군	1,101	1,064	976	1,047
65	제주	북제주군	805	1,016	1,296	1,039
66	경북	영주시	1,053	1,004	1,036	1,031
67	충남	홍성군	989	991	1,096	1,025
68	전북	남원시	1,102	820	889	937
69	충남	예산군	1,042	898	868	936
70	경북	고령군	1,079	901	796	925

부표2-2. 최근 3년간 평균 일자리 창출 순위 - 계속

						단위: 명
 순위	시・도	시・군	2002년	2003년	2004년	3년평균
-	,		창출	창출	창출	창출
71	강원	평창군	945	1,002	776	908
72	강원	삼척시	1,364	734	592	897
73	충북	옥천군	839	998	846	894
74	강원	홍천군	724	816	1,076	872
75	경북	성주군	878	849	816	848
76	전남	장성군	895	772	860	842
77	충남	부여군	920	895	631	815
78	경기	양평군	750	800	775	775
79	충남	서천군	752	925	633	770
80	경남	창녕군	727	716	770	738
81	경남	고성군	699	830	607	712
82	경북	문경시	779	650	576	668
83	경남	거창군	873	564	546	661
84	전남	무안군	635	673	618	642
85	강원	횡성군	621	653	611	628
86	경남	의령군	437	713	727	626
87	전남	해남군	594	657	620	624
88	경기	가평군	555	706	598	620
89	제주	남제주군	638	637	518	598
90	충북	영동군	656	562	551	590
91	충북	단양군	733	509	511	584
92	경북	의성군	616	637	469	574
93	경기	연천군	547	486	609	547
94	전북	부안군	603	551	450	535
95	전남	영광군	555	478	568	534
96	강원	영월군	588	514	492	531
97	충남	태안군	501	537	542	527
98	경북	울진군	404	508	642	518
99	충북	증평군	550	410	554	505
100	인천	강화군	389	517	577	494
101	경북	청도군	528	496	456	493
102	경남	하동군	542	541	392	492
103	전남	고흥군	456	416	595	489
104	강원	철원군	565	479	410	485
105	경남	합천군	554	390	485	476
		- '			!	

부표 2-2. 최근 3년간 평균 일자리 창출 순 - 계속

부표 2-3. 최근 3년간 평균 순고용 변화

	•	2-3. 최근		균 순고용	인외	
		-				단위: 명
순위	시・도	시・군	2002년	2003년	2004년	3년 평균
	<u> </u>		순고용변화		순고용변화	변화
1	경북	구미시	2,440	8,546	9,441	6,809
2	충남	천안시	4,442	7,066	6,736	6,081
3	경기	화성시	6,231	5,123	6,528	5,961
4	경기	용인시	5,034	5,533	7,244	5,937
5	경남	거제시	1,137	4,548	5,006	3,564
6	충남	아산시	2,066	1,897	4,282	2,748
7	경남	김해시	2,894	2,853	2,233	2,660
8	경기	평택시	4,009	4,142	-357	2,598
9	경기	광주시	2,826	2,244	1,783	2,284
10	경기	파주시	1,279	1,916	2,818	2,004
11	충북	청원군	1,866	898	1,758	1,507
12	경기	김포시	1,596	1,396	1,522	1,505
13	울산	울주군	573	1,990	1,892	1,485
14	경기	이천시	427	1,052	2,858	1,446
15	경남	창원시	2,878	4,249	-2,969	1,386
16	경기	안성시	1,435	760	1,891	1,362
17	경기	남양주시	1,194	1,027	1,310	1,177
18	경북	칠곡군	1,403	738	1,250	1,130
19	충남	서산시	345	1,631	1,404	1,127
20	충북	진천군	1,018	1,097	783	966
21	강원	원주시	817	679	1,091	862
22	전남	광양시	541	612	1,331	828
23	경북	포항시	88	1,229	1,154	824
24	강원	정선군	204	1,969	111	761
25	경남	진주시	475	983	698	719
26	충남	연기군	200	188	1,756	715
27	전북	완주군	663	811	582	685
28	경남	양산시	169	865	904	646
29	충북	음성군	1,123	469	314	635
30	경북	김천시	585	461	769	605

부표 2-3. 최근 3년간 평균 순고용 변화 - 계속

단위: 명 순위 시·도 시·군 2002년 순고용변화 순고용변화 순고용변화 변화 31 경기 포천시 1,004 210 523 579 32 전남 순천시 257 348 1,010 538 33 전남 여수시 160 486 885 510 34 전남 화춘군 267 868 370 502 35 강원 춘천시 -19 326 1,158 488 36 전남 영암군 183 422 797 467 37 제주 북제주군 225 470 617 437 38 전남 나주시 349 336 592 426 39 충남 당진군 73 428 744 415 40 강원 평창군 411 530 265 402 41 강원 강룡시 758 -59 446 382 42 경기 여주군 344 420 305 356 43 충남 본산시 258 401 379 346 44 충남 본산시 258 401 379 346 45 충남 보령시 177 470 391 346 46 경남 함안군 453 442 141 345 47 전북 검제시 317 309 391 339 48 경북 경산시 655 1 233 296 49 강원 홍천군 94 217 533 81 50 경북 경주시 -639 509 946 272 51 경남 말양시 161 182 449 264 52 충남 공산군 339 145 224 236 56 경북 안동시 -58 230 524 232 57 전남 남양군 418 153 90 220 60 중남 의량군 418 153 90 220 61 경북 양란군 458 161 107 279 249 54 경기 양평군 276 187 265 243 55 충남 금산군 339 145 224 236 56 경북 안동시 -58 230 524 232 57 전남 남양군 418 153 90 220 60 중남 의량군 273 286 148 226 58 경남 의량군 273 286 148 226 58 경남 의량군 273 256 148 226 58 경남 의량군 273 256 148 226 59 충북 양주시 339 290 26 218 62 전북 무주군 71 489 94 218 63 경남 항동군 29 259 400		부표 2-3	3. 최근 3년	년간 평균	순고용 변화	화 - 계속	
변위 시·노 시·단 순고용변화 순고용변화 순고용변화 변화 31 경기 포천시 1,004 210 523 579 32 전남 순천시 257 348 1,010 538 33 전남 여주시 160 486 885 510 34 전남 화순군 267 868 370 502 35 전원 춘천시 -19 326 1,158 488 36 전남 영암군 183 422 797 467 37 제주 북제주군 225 470 617 437 38 전남 나주시 349 336 592 426 39 충남 당진군 73 428 744 415 40 강원 평창군 411 530 265 402 41 강원 경통사 758 -59 446 382 42 경기 여주군 344 420 305 356 43 충남 공주시 176 228 639 348 45 충남 보령시 177 470 391 346 46 경남 한안군 453 442 141 345 46 경남 한안군 453 442 141 345 47 전북 김제시 317 309 391 339 48 경북 경소시 655 1 233 296 49 강원 홍천군 94 217 533 81 50 경북 경주시 665 1 233 296 56 34 36 34 36 34 36 34 36 34 36 34 36 34 36 35 35 35 35 35 35 35 35 35 35 35 35 35							단위: 명
Table Tab		ון ד	,1 7	2002년	2003년	2004년	3년 평균
32 전남 순천시 257 348 1,010 538 33 전남 여수시 160 486 885 510 34 전남 화순군 267 868 370 502 35 강원 춘천시 -19 326 1,158 488 36 전남 영암군 183 422 797 467 37 제주 북제주군 225 470 617 437 38 전남 나주시 349 336 592 426 39 충남 당진군 73 428 744 415 40 강원 평창군 411 530 265 402 41 강원 강통시 758 -59 446 382 42 경기 여주군 344 420 305 356 43 충남 농산시 258 401 379 346 44 충남 논산시 258 401 379 346 45 충남 보령시 177 470 391 346 46 경남 함안군 453 442 141 345 47 전북 김제시 317 309 391 339 48 경북 경산시 655 1 233 296 49 강원 홍천군 94 217 533 81 50 경북 경주시 -639 509 946 272 51 경남 밀양시 161 182 449 264 52 충남 흥성군 29 259 503 264 53 전남 장성군 361 107 279 249 54 경기 양평군 276 187 265 243 55 충남 급산군 339 145 224 236 56 경북 안동시 -58 230 524 232 57 전남 담양군 273 256 148 226 58 경남 의령군 167 257 239 221 59 충북 대량군 418 153 90 220 60 충남 예산군 236 248 180 220 61 경북 상주시 339 290 26 218 62 전북 무주군 71 489 94 218 63 경남 하동군 257 249 104 203	七刊	시・노	시・군	순고용변화	순고용변화	순고용변화	변화
33 전남 여수시 160 486 885 510 34 전남 회수군 267 868 370 502 35 강원 춘천시 -19 326 1,158 488 36 전남 영암군 183 422 797 467 37 제주 북제주군 225 470 617 437 38 전남 나주시 349 336 592 426 39 충남 당진군 73 428 744 415 40 강원 평창군 411 530 265 402 41 강원 강릉시 758 -59 446 382 42 경기 여주군 344 420 305 336 43 충남 공주시 176 228 639 348 44 충남 논산시 258 401 379 346 45 충남 보령시 177 470 391 346 46 경남 한안군 453 442 141 345 47 전북 김제시 317 309 391 339 48 경북 경산시 655 1 233 296 49 강원 홍천군 94 217 533 81 50 경북 경주시 -639 509 946 52 충남 홍성군 29 259 503 264 53 전남 장성군 361 107 279 249 54 경기 양평군 276 187 265 243 55 충남 급산군 339 145 224 236 56 경북 안동시 -58 230 524 232 57 전남 담양군 273 256 148 226 58 경남 의령군 167 257 239 221 59 충북 단양군 418 153 90 220 60 충남 예산군 236 243 180 220 61 경북 상주시 339 290 26 218 62 전북 무주군 71 489 94 218 63 경남 하동군 257 249 104 203	31	경기	포천시	1,004	210	523	579
33 전남 여수시 160 486 885 510 34 전남 화순군 267 868 370 502 35 강원 춘천시 -19 326 1,158 488 36 전남 영양군 183 422 797 467 37 제주 북제주군 225 470 617 437 38 전남 나주시 349 336 592 426 39 충남 당진군 73 428 744 415 40 강원 평창군 411 530 265 402 41 강원 장롱시 758 -59 446 382 42 경기 여주군 344 420 305 356 43 충남 농산시 258 401 379 346 45 충남 보령시 177 470 391 346 46 경남 함안군 453 442 141 345 47 전북 김제시 317 309 391 339 48 경북 경산시 655 1 233 296 49 강원 홍천군 94 217 533 81 50 정북 경주시 -639 509 946 272 51 경남 밀양시 161 182 449 264 52 충남 홍성군 29 259 503 264 53 전남 장성군 361 107 279 249 54 경기 양평군 276 187 265 243 55 충남 급산군 339 145 224 236 56 정북 안동시 -58 230 524 232 57 전남 담양군 273 256 148 226 58 경남 의량군 167 257 239 221 59 충북 단양군 418 153 90 220 60 충남 예산군 236 243 180 220 61 정북 상주시 339 290 26 218 62 전북 무주군 71 489 94 218 63 경남 아동군 257 249 104 203	32	전남		257	348	1,010	538
35 강원 춘천시 -19 326 1,158 488 36 전남 영암군 183 422 797 467 37 제주 북제주군 225 470 617 437 38 전남 나주시 349 336 592 426 39 충남 당진군 73 428 744 415 40 강원 평창군 411 530 265 402 41 강원 강릉시 758 -59 446 382 42 경기 여주군 344 420 305 356 43 충남 논산시 258 401 379 346 45 충남 보령시 177 470 391 346 46 경남 한안군 453 442 141 345 47 전북 김제시 317 309 391 339 48 경북 경산시 655 1 233 296 49 강원 홍천군 94 217 533 81 50 경북 경주시 -639 509 946 272 51 경남 밀양시 161 182 449 264 52 충남 홍성군 29 259 503 264 53 전남 장성군 361 107 279 249 54 경기 양평군 276 187 265 243 55 충남 금산군 339 145 224 236 56 경북 안동시 -58 230 524 232 57 전남 담양군 418 153 90 220 60 충남 예산군 236 243 180 220 61 경북 상주시 339 290 26 218 62 전북 무주군 71 489 94 218 63 경남 하동군 257 249 104 203	33	전남	여수시	160	486		510
36 전남 영암군 183 422 797 467 37 제주 북제주군 225 470 617 437 38 전남 나주시 349 336 592 426 39 충남 당진군 73 428 744 415 40 강원 평창군 411 530 265 402 41 강원 강릉시 758 -59 446 382 42 경기 여주군 344 420 305 356 43 충남 당전시 258 401 379 346 45 충남 보령시 177 470 391 346 46 경남 함안군 453 442 141 345 47 전북 김제시 317 309 391 339 48 경북 경산시 655 1 233 296 49 강원 홍천군 94 217 533 81 50 경북 경주시 -639 509 946 272 51 경남 밀양시 161 182 449 264 52 충남 홍성군 29 259 503 264 53 전남 장성군 361 107 279 249 54 경부 안동시 -58 230 524 232 57 전남 담양군 273 256 148 226 58 경남 의량군 418 153 90 220 60 충남 예산군 236 243 180 220 61 경북 상주시 339 290 26 218 62 전북 무주군 71 489 94 218 63 경남 마주군 71 489 94 218	34	전남	화순군	267	868	370	502
37 제주 북제주군 225 470 617 437 38 전남 나주시 349 336 592 426 39 충남 당진군 73 428 744 415 40 강원 평창군 411 530 265 402 41 강원 강릉시 758 -59 446 382 42 경기 여주군 344 420 305 356 43 충남 농산시 258 401 379 346 45 충남 보령시 177 470 391 346 46 경남 함안군 453 442 141 345 47 전북 김제시 317 309 391 339 48 경북 경산시 655 1 233 296 49 강원 홍천군 94 217 533 81 50 경북 경주시 -639 509 946 272 51 경남 발양시 161 182 449 264 52 충남 홍성군 29 259 503 264 53 전남 장성군 361 107 279 249 54 경기 양평군 276 187 265 243 55 충남 라안군 339 145 224 236 56 경북 안동시 -58 230 524 232 57 전남 담양군 273 256 148 226 58 경남 의령군 167 257 239 221 59 충북 단양군 418 153 90 220 60 충남 예산군 236 243 180 220 61 경북 상주시 339 290 26 218 62 전북 무주군 71 489 94 218 63 경남 마동군 257 249 104 203	35	강원		-19	326	1,158	488
38 전남 나주시 349 336 592 426 39 충남 당진군 73 428 744 415 40 강원 평창군 411 530 265 402 41 강원 강릉시 758 -59 446 382 42 경기 여주군 344 420 305 356 43 충남 당전시 258 401 379 346 45 충남 보령시 177 470 391 346 46 경남 함안군 453 442 141 345 47 전북 김제시 317 309 391 339 48 경북 경산시 655 1 233 296 49 강원 홍천군 94 217 533 81 50 경북 경주시 -639 509 946 272 51 경남 밀양시 161 182 449 264 52 충남 홍성군 29 259 503 264 53 전남 장성군 361 107 279 249 54 경기 양평군 276 187 265 243 55 충남 금산군 339 145 224 236 56 경북 안동시 -58 230 524 232 57 전남 담양군 273 256 148 226 58 경남 의령군 167 257 239 221 59 충북 단양군 418 153 90 220 60 충남 예산군 236 243 180 220 61 경북 상주시 339 290 26 218 62 전북 무주군 71 489 94 218	36	전남	영암군	183	422	797	467
39 중남 당진군 73 428 744 415 40 강원 평창군 411 530 265 402 41 강원 강릉시 758 -59 446 382 42 경기 여주군 344 420 305 356 43 중남 공주시 176 228 639 348 44 충남 논산시 258 401 379 346 45 충남 보령시 177 470 391 346 46 경남 함안군 453 442 141 345 47 전북 김제시 317 309 391 339 48 경북 경산시 655 1 233 296 49 강원 홍천군 94 217 533 81 50 경북 경주시 -639 509 946 272 51 경남 밀양시 161 182 449 264 52 충남 홍성군 29 259 503 264 53 전남 장성군 361 107 279 249 54 경기 양평군 276 187 265 243 55 충남 금산군 339 145 224 236 56 경북 안동시 -58 230 524 232 57 전남 담양군 273 256 148 226 58 경남 의령군 167 257 239 221 59 충북 단양군 418 153 90 220 60 충남 예산군 236 243 180 220 61 경북 상주시 339 290 26 218 62 전북 무주군 71 489 94 218	37	제주	북제주군	225	470	617	437
40 강원 평창군 411 530 265 402 41 강원 강통시 758 -59 446 382 42 경기 여주군 344 420 305 356 43 충남 공주시 176 228 639 348 44 충남 논산시 258 401 379 346 45 충남 보령시 177 470 391 346 46 경남 함안군 453 442 141 345 47 전북 김제시 317 309 391 339 48 경북 경산시 655 1 233 296 49 강원 홍천군 94 217 533 81 50 경북 경주시 -639 509 946 272 51 경남 밀양시 161 182 449 264 52 충남 홍성군 29 259 503 264 53 전남 장성군 361 107 279 249 54 경기 양평군 276 187 265 243 55 충남 금산군 339 145 224 236 56 경북 안동시 -58 230 524 232 57 전남 담양군 273 256 148 226 58 경남 의령군 167 257 239 221 59 충북 대산군 236 243 180 220 60 충남 예산군 236 243 180 220 61 경북 상주시 339 290 26 218 62 전북 무주군 71 489 94 218 63 경남 하동군 257 249 104 203	38	전남	나주시	349	336	592	426
41 장원 장롱시 758 -59 446 382 42 경기 여주군 344 420 305 356 43 충남 공주시 176 228 639 348 44 충남 논산시 258 401 379 346 45 충남 보령시 177 470 391 346 46 경남 함안군 453 442 141 345 47 전북 김제시 317 309 391 339 48 경북 경산시 655 1 233 296 49 강원 홍천군 94 217 533 81 50 경북 경주시 -639 509 946 272 51 경남 밀양시 161 182 449 264 52 충남 홍성군 29 259 503 264 53 전남 장성군 361 107 279 249 54 경기 양평군 276 187 265 243 55 충남 금산군 339 145 224 236 56 경북 안동시 -58 230 524 232 57 전남 담양군 273 256 148 226 58 경남 의령군 167 257 239 221 59 충북 단양군 418 153 90 220 60 충남 예산군 236 243 180 220 61 경북 상주시 339 290 26 218 62 전북 무주군 71 489 94 218 63 경남 하동군 257 249 104 203	39	충남	당진군	73	428	744	415
42 경기 여주군 344 420 305 356 43 충남 공주시 176 228 639 348 44 충남 논산시 258 401 379 346 45 충남 보령시 177 470 391 346 46 경남 함안군 453 442 141 345 47 전북 김제시 317 309 391 339 48 경북 경산시 655 1 233 296 49 강원 홍천군 94 217 533 81 50 경북 경주시 -639 509 946 272 51 경남 밀양시 161 182 449 264 52 충남 홍성군 29 259 503 264 53 전남 장성군 361 107 279 249 54 경기 양평군 276 187 265 243 55 충남 금산군 339 145 224 236 56 경북 안동시 -58 230 524 232 57 전남 담양군 273 256 148 226 58 경남 의령군 167 257 239 221 59 충북 대왕군 236 243 180 220 60 충남 예산군 236 243 180 220 61 경북 상주시 339 290 26 218 62 전북 무주군 71 489 94 218 63 경남 하동군 257 249 104 203	40	강원	평창군	411	530	265	402
43 총남 공주시 176 228 639 348 44 총남 논산시 258 401 379 346 45 총남 보령시 177 470 391 346 46 경남 함안군 453 442 141 345 47 전북 김제시 317 309 391 339 48 경북 경산시 655 1 233 296 49 강원 홍천군 94 217 533 81 50 경북 경주시 -639 509 946 272 51 경남 밀양시 161 182 449 264 52 총남 홍성군 29 259 503 264 53 전남 장성군 361 107 279 249 54 경기 양평군 276 187 265 243 55 총남 금산군 339 145 224 236 56 경북 안동시 -58 230 524 232 57 전남 담양군 273 256 148 226 58 경남 의령군 167	41	강원	강릉시	758	-59	446	382
44 충남 논산시 258 401 379 346 45 충남 보령시 177 470 391 346 46 경남 함안군 453 442 141 345 47 전북 김제시 317 309 391 339 48 경북 경산시 655 1 233 296 49 강원 홍천군 94 217 533 81 50 경북 경주시 -639 509 946 272 51 경남 밀양시 161 182 449 264 52 충남 홍성군 29 259 503 264 53 전남 장성군 361 107 279 249 54 경기 양평군 276 187 265 243 55 충남 금산군 339 145 224 236 56 경북 안동시 -58 230 524 232 57 전남 담양군 273 256 148 226 58 경남 의령군 167 257 239 221 59 충북 단양군 418 153 90 220 60 충남 예산군 236 243 180 220 61 경북 상주시 339 290 26 218 62 전북 무주군 71 489 94 218 63 경남 하동군 257 249 104 203	42	경기	여주군	344	420	305	356
45 충남 보령시 177 470 391 346 46 경남 함안군 453 442 141 345 47 전북 김제시 317 309 391 339 48 경북 경산시 655 1 233 296 49 강원 홍천군 94 217 533 81 50 경북 경주시 -639 509 946 272 51 경남 밀양시 161 182 449 264 52 충남 홍성군 29 259 503 264 53 전남 장성군 361 107 279 249 54 경기 양평군 276 187 265 243 55 충남 금산군 339 145 224 236 56 경북 안동시 -58 230 524 232 57 전남 담양군 273 256 148 226 58 경남 의령군 167 257 239 221 59 충북 단양군 418 153 90 220 60 충남 예산군 236 243 180 220 61 경북 상주시 339 290 26 218 62 전북 무주군 71 489 94 218 63 경남 하동군 257 249 104 203	43	충남	공주시	176	228	639	348
46 경남 함안군 453 442 141 345 47 전북 김제시 317 309 391 339 48 경북 경산시 655 1 233 296 49 강원 홍천군 94 217 533 81 50 경북 경주시 -639 509 946 272 51 경남 밀양시 161 182 449 264 52 충남 홍성군 29 259 503 264 53 전남 장성군 361 107 279 249 54 경기 양평군 276 187 265 243 55 충남 금산군 339 145 224 236 56 경북 안동시 -58 230 524 232 57 전남 담양군 273 256 148 226 58 경남 의령군 167 257 239 221 59 충북 단양군 418 153 90 220 60 충남 예산군 236 243 180 220 61 경북 상주시 339 290 26 218 62 전북 무주군 71 489 94 218	44	충남	논산시	258	401	379	346
47 전북 김제시 317 309 391 339 48 경북 경산시 655 1 233 296 49 강원 홍천군 94 217 533 81 50 경북 경주시 -639 509 946 272 51 경남 밀양시 161 182 449 264 52 충남 홍성군 29 259 503 264 53 전남 장성군 361 107 279 249 54 경기 양평군 276 187 265 243 55 충남 금산군 339 145 224 236 56 경북 안동시 -58 230 524 232 57 전남 담양군 273 256 148 226 58 경남 의령군 167 257 239 221 59 충북 단양군 418 153 90 220 60 충남 예산군 236 243 180 220 61 경북 상주시 339 290 26 218 62 전북 무주군 71 <td>45</td> <td>충남</td> <td>보령시</td> <td>177</td> <td>470</td> <td>391</td> <td>346</td>	45	충남	보령시	177	470	391	346
48 경북 경산시 655 1 233 296 49 강원 홍천군 94 217 533 81 50 경북 경주시 -639 509 946 272 51 경남 밀양시 161 182 449 264 52 충남 홍성군 29 259 503 264 53 전남 장성군 361 107 279 249 54 경기 양평군 276 187 265 243 55 충남 금산군 339 145 224 236 56 경북 안동시 -58 230 524 232 57 전남 담양군 273 256 148 226 58 경남 의령군 167 257 239 221 59 충북 단양군 418 153 90 220 60 충남 예산군 236 243 180 220 61 경북 상주시 339 290 26 218 62 전북 무주군 71 489 94 218	46	경남	함안군	453	442	141	345
49 강원 홍천군 94 217 533 81 50 경북 경주시 -639 509 946 272 51 경남 밀양시 161 182 449 264 52 충남 흥성군 29 259 503 264 53 전남 장성군 361 107 279 249 54 경기 양평군 276 187 265 243 55 충남 금산군 339 145 224 236 56 경북 안동시 -58 230 524 232 57 전남 담양군 273 256 148 226 58 경남 의령군 167 257 239 221 59 충북 단양군 418 153 90 220 60 충남 예산군 236 243 180 220 61 경북 상주시 339 290 26 218 62 전북 무주군 71 489 94 218 63 경남 하동군 257 249 104 203	47	전북	김제시	317	309	391	339
50 경북 경주시 -639 509 946 272 51 경남 밀양시 161 182 449 264 52 충남 홍성군 29 259 503 264 53 전남 장성군 361 107 279 249 54 경기 양평군 276 187 265 243 55 충남 금산군 339 145 224 236 56 경북 안동시 -58 230 524 232 57 전남 담양군 273 256 148 226 58 경남 의령군 167 257 239 221 59 충북 단양군 418 153 90 220 60 충남 예산군 236 243 180 220 61 경북 상주시 339 290 26 218 62 전북 무주군 71 489 94 218 63 경남 하동군 257 249 104 203	48	경북	경산시	655	1	233	296
51 경남 밀양시 161 182 449 264 52 충남 홍성군 29 259 503 264 53 전남 장성군 361 107 279 249 54 경기 양평군 276 187 265 243 55 충남 금산군 339 145 224 236 56 경북 안동시 -58 230 524 232 57 전남 담양군 273 256 148 226 58 경남 의령군 167 257 239 221 59 충북 단양군 418 153 90 220 60 충남 예산군 236 243 180 220 61 경북 상주시 339 290 26 218 62 전북 무주군 71 489 94 218 63 경남 하동군 <t< td=""><td>49</td><td>강원</td><td>홍천군</td><td>94</td><td>217</td><td>533</td><td>81</td></t<>	49	강원	홍천군	94	217	533	81
52 충남 홍성군 29 259 503 264 53 전남 장성군 361 107 279 249 54 경기 양평군 276 187 265 243 55 충남 금산군 339 145 224 236 56 경북 안동시 -58 230 524 232 57 전남 담양군 273 256 148 226 58 경남 의령군 167 257 239 221 59 충북 단양군 418 153 90 220 60 충남 예산군 236 243 180 220 61 경북 상주시 339 290 26 218 62 전북 무주군 71 489 94 218 63 경남 하동군 257 249 104 203	50	경북	경주시	-639	509	946	272
53 전남 장성군 361 107 279 249 54 경기 양평군 276 187 265 243 55 충남 금산군 339 145 224 236 56 경북 안동시 -58 230 524 232 57 전남 담양군 273 256 148 226 58 경남 의령군 167 257 239 221 59 충북 단양군 418 153 90 220 60 충남 예산군 236 243 180 220 61 경북 상주시 339 290 26 218 62 전북 무주군 71 489 94 218 63 경남 하동군 257 249 104 203	51	경남	밀양시	161	182	449	264
54 경기 양평군 276 187 265 243 55 충남 금산군 339 145 224 236 56 경북 안동시 -58 230 524 232 57 전남 담양군 273 256 148 226 58 경남 의령군 167 257 239 221 59 충북 단양군 418 153 90 220 60 충남 예산군 236 243 180 220 61 경북 상주시 339 290 26 218 62 전북 무주군 71 489 94 218 63 경남 하동군 257 249 104 203	52	충남	홍성군	29	259	503	264
55 충남 금산군 339 145 224 236 56 경북 안동시 -58 230 524 232 57 전남 담양군 273 256 148 226 58 경남 의령군 167 257 239 221 59 충북 단양군 418 153 90 220 60 충남 예산군 236 243 180 220 61 경북 상주시 339 290 26 218 62 전북 무주군 71 489 94 218 63 경남 하동군 257 249 104 203	53	전남		361	107	279	249
56 경북 안동시 -58 230 524 232 57 전남 담양군 273 256 148 226 58 경남 의령군 167 257 239 221 59 충북 단양군 418 153 90 220 60 충남 예산군 236 243 180 220 61 경북 상주시 339 290 26 218 62 전북 무주군 71 489 94 218 63 경남 하동군 257 249 104 203	54	경기	양평군	276	187	265	243
57 전남 담양군 273 256 148 226 58 경남 의령군 167 257 239 221 59 충북 단양군 418 153 90 220 60 충남 예산군 236 243 180 220 61 경북 상주시 339 290 26 218 62 전북 무주군 71 489 94 218 63 경남 하동군 257 249 104 203	55		금산군	339	145	224	236
58 경남 의령군 167 257 239 221 59 충북 단양군 418 153 90 220 60 충남 예산군 236 243 180 220 61 경북 상주시 339 290 26 218 62 전북 무주군 71 489 94 218 63 경남 하동군 257 249 104 203	56	경북	안동시	-58	230	524	232
59 충북 단양군 418 153 90 220 60 충남 예산군 236 243 180 220 61 경북 상주시 339 290 26 218 62 전북 무주군 71 489 94 218 63 경남 하동군 257 249 104 203	57	전남		273	256	148	226
60 충남 예산군 236 243 180 220 61 경북 상주시 339 290 26 218 62 전북 무주군 71 489 94 218 63 경남 하동군 257 249 104 203	58			167	257	239	221
61 경북 상주시 339 290 26 218 62 전북 무주군 71 489 94 218 63 경남 하동군 257 249 104 203							
62 전북 무주군 71 489 94 218 63 경남 하동군 257 249 104 203							
63 경남 하동군 257 249 104 203		- '		339	290		218
					489		218
C4 기기 아즈기 005 170 100 001							
04 경기 왕구시 295 170 138 201	64	경기	양주시	295	170	138	201

부표 2-3. 최근 3년간 평균 순고용 변화 - 계속

	⊤≖ ∠ ¬	O. 컨 Jī	27.97	正工会 亞辛	-1 /11 -1	단위: 명
3.0		=	2002년	2003년	2004년	3년 평균
순위	시・도	시・군	순고용변화	순고용변화	순고용변화	변화
65	전북	부안군	268	254	58	193
66	경기	가평군	179	270	125	191
67	충남	부여군	322	282	-38	189
68	경남	창녕군	113	207	230	183
69	전남	고흥군	183	76	279	179
70	전남	무안군	176	171	183	177
71	충남	태안군	102	210	217	176
72	경남	함양군	183	188	154	175
73	전남	해남군	53	155	311	173
74	충북	영동군	271	79	163	171
75	강원	고성군	176	208	86	157
76	강원	삼척시	205	252	10	156
77	전남	보성군	220	105	126	150
78	전북	남원시	259	-81	272	150
79	경남	사천시	171	-37	315	150
80	충북	제천시	36	165	244	148
81	경남	거창군	164	188	83	145
82	제주	남제주군	238	199	-12	142
83	경남	통영시	482	-46	-38	133
84	전남	곡성군	39	188	166	131
85	대구	달성군	318	-145	215	129
86	경북	- 영천시	425	-201	158	127
87	충북	증평군	93	42	245	127
88	경남	남해군	158	25	183	122
89	충북	옥천군	-10	192	177	120
90	전북	고창군	90	40	222	117
91	전남	함평군	1	60	276	112
92	경북	 성주군	291	87	-50	109
93	경북	봉화군	243	-23	99	106
94	경북	 청송군	158	68	87	104
95	전남	신안군	200	-27	137	103
96	강원	<u>_</u> 인제군	2	159	145	102
				100	1.0	

부표 2-3. 최근 3년간 평균 순고용 변화 - 계속

						단기. 경
 순위	시・도	시・군	2002년	2003년	2004년	3년 평균
正刊	시・노	시・证	순고용변화	순고용변화	순고용변화	변화
97	경북	영덕군	196	124	-18	101
98	경북	영주시	52	39	210	100
99	경북	군위군	149	187	-35	100
100	충남	계룡시	57	256	-17	99
101	경북	청도군	227	90	-22	98
102	전북	임실군	204	159	-71	97
103	전북	순창군	153	112	17	94
104	경북	고령군	215	65	-13	89
105	전남	강진군	96	85	86	89
106	전북	진안군	149	1	117	89
107	전남	완도군	87	81	95	88
108	경남	합천군	200	-38	97	86
109	전남	장흥군	100	0	159	86
110	강원	양양군	253	20	-25	83
111	전남	구례군	44	133	60	79
112	전북	정읍시	36	-74	269	77
113	강원	철원군	238	-113	93	73
114	전남	진도군	39	54	124	72
115	경남	산청군	175	145	-113	69
116	인천	옹진군	84	68	55	69
117	충남	서천군	-158	157	201	67
118	전북	장수군	65	36	99	67
119	충남	청양군	-23	32	167	59
120	경북	문경시	133	20	-13	47
121	전북	군산시	-903	781	252	43
122	충북	보은군	71	47	5	41
123	인천	강화군	-85	26	170	37
124	전북	익산시	9	-694	795	37
125	경기	연천군	19	-68	155	35
126	경북	예천군	79	-84	101	32
127	강원	화천구	6	29	60	32
128	경북	영양군	78	23	-25	25
129	충북	괴산군	137	-83	18	24

부표 2-3. 최근 3년간 평균 순고용 변화 - 계속

순위	시·도	시・군	2002년 순고용변화	2003년 순고용변화	2004년 순고용변화	3년 평균 변화
130	전남	영광군	-268	66	265	21
131	경북	울릉군	-1	-27	91	21
132	강원	양구군	7	6	42	18
133	경북	의성군	161	-46	-99	5
134	강원	영월군	44	-329	196	-30
135	강원	횡성군	-65	106	-187	-49
136	부산	기장군	-154	-175	176	-51
137	충북	충주시	321	-483	6	-52
138	경남	고성군	-333	214	-68	-62
139	경북	울진군	-1,438	133	217	-363
140	경남	마산시	355	-1,783	-1,980	-1,136

부표 2-4. 최근 3년간 평균 순고용 변화율

			2002년	2003년	2004년	3년 평균
순위	지역	지역	순고용	순고용	순고용	순고용
			변화율	변화율	변화율	변화율
1	강원	정선군	4.13	38.28	1.56	14.66
2	전북	무주군	4.89	32.09	4.67	13.88
3	강원	평창군	11.15	12.94	5.73	9.94
4	인천	옹진군	12.79	9.18	6.80	9.59
5	경남	거제시	3.17	12.30	12.06	9.18
6	제주	북제주군	5.14	10.21	12.16	9.17
7	경남	함양군	9.99	9.33	6.99	8.77
8	충남	서산시	2.84	13.04	9.93	8.60
9	경남	의령군	6.67	9.63	8.17	8.16
10	강원	인제군	0.16	12.93	10.44	7.84
11	충남	천안시	6.12	9.18	8.01	7.77
12	경북	청송군	12.58	4.81	5.87	7.75
13	경남	하동군	10.39	9.12	3.49	7.67
14	경북	구미시	2.81	9.57	9.64	7.34
15	충남	아산시	5.73	4.98	10.71	7.14
16	강원	고성군	8.54	9.30	3.52	7.12
17	경기	화성시	7.86	5.99	7.20	7.01
18	경기	용인시	6.24	6.46	7.94	6.88
19	충북	진천군	7.66	7.67	5.09	6.81
20	경기	광주시	8.99	6.55	4.88	6.80
21	전북	완주군	7.00	8.00	5.32	6.77
22	전남	신안군	13.32	-1.59	8.18	6.64
23	전남	보성군	10.06	4.36	5.02	6.48
24	전북	부안군	9.48	8.20	1.73	6.47
25	충북	청원군	8.51	3.77	7.12	6.47
26	전북	순창군	10.78	7.12	1.01	6.31
27	경기	파주시	4.16	5.98	8.30	6.14
28	경기	안성시	6.85	3.39	8.17	6.14
29	전북	진안군	10.54	0.06	7.48	6.03
30	경기	양평군	7.15	4.52	6.13	5.93

부표 2-4. 최근 3년간 평균 순고용 변화율 - 계속

						인기. 70
			2002년	2003년	2004년	3년 평균
순위	지역	지역	순고용	순고용	순고용	순고용
			변화율	변화율	변화율	변화율
31	전남	구례군	3.45	10.09	4.14	5.89
32	전북	장수군	6.02	3.15	8.39	5.85
33	충남	계룡시	3.44	14.94	-0.86	5.84
34	경남	남해군	7.82	1.15	8.31	5.76
35	경북	칠곡군	7.54	3.69	6.03	5.75
36	전남	진도군	3.24	4.35	9.58	5.72
37	경북	울릉군	-0.25	-6.67	24.07	5.72
38	충남	연기군	1.57	1.45	13.36	5.46
39	전북	임실군	11.59	8.10	-3.34	5.45
40	전남	화순군	2.98	9.41	3.67	5.35
41	전남	고흥군	5.71	2.24	8.05	5.33
42	강원	홍천군	1.79	4.07	9.61	5.16
43	충남	태안군	3.13	6.24	6.07	5.15
44	전남	영암군	2.08	4.69	8.47	5.08
45	전남	장성군	7.68	2.11	5.40	5.06
46	경기	가평군	4.90	7.05	3.05	5.00
47	경기	남양주시	5.25	4.29	5.25	4.93
48	충남	홍성군	0.55	4.92	9.12	4.87
49	충북	단양군	9.54	3.19	1.82	4.85
50	경북	봉화군	11.18	-0.95	4.14	4.79
51	전남	강진군	5.40	4.54	4.39	4.78
52	전남	무안군	4.89	4.53	4.64	4.68
53	충북	영동군	7.64	2.07	4.18	4.63
54	전남	나주시	3.93	3.64	6.19	4.59
55	전남	장흥군	5.46	0.00	8.23	4.56
56	전남	해남군	1.42	4.09	7.88	4.46
57	경북	영덕군	8.82	5.13	-0.71	4.41
58	경북	김천시	4.38	3.31	5.34	4.34
59	전북	고창군	3.44	1.48	8.07	4.33
60	전남	함평군	0.04	2.35	10.56	4.32

부표 2-4. 최근 3년간 평균 순고용 변화율- 계속

						단 기. 70
			2002년	2003년	2004년	3년 평균
순위	지역	지역	순고용	순고용	순고용	순고용
			변화율	변화율	변화율	변화율
61	충남	보령시	2.27	5.90	4.63	4.27
62	충북	증평군	3.22	1.41	8.11	4.25
63	경남	김해시	4.74	4.47	3.35	4.19
64	경기	평택시	6.64	6.43	-0.52	4.18
65	경남	거창군	4.89	5.35	2.24	4.16
66	제주	남제주군	7.13	5.57	-0.32	4.13
67	전북	김제시	3.96	3.71	4.53	4.07
68	경기	김포시	4.42	3.70	3.89	4.00
69	경북	군위군	6.04	7.15	-1.25	3.98
70	울산	울주군	1.57	5.38	4.85	3.93
71	전남	담양군	4.82	4.31	2.39	3.84
72	강원	양양군	11.71	0.83	-1.03	3.84
73	경남	창녕군	2.41	4.31	4.59	3.77
74	경기	여주군	3.68	4.34	3.02	3.68
75	충남	당진군	0.66	3.85	6.45	3.66
76	경북	상주시	5.72	4.63	0.40	3.58
77	경남	산청군	8.79	6.69	-4.89	3.53
78	경남	함안군	4.78	4.45	1.36	3.53
79	전남	완도군	3.57	3.21	3.65	3.48
80	충남	부여군	6.04	4.99	-0.64	3.46
81	충남	논산시	2.64	4.00	3.63	3.42
82	충남	금산군	5.05	2.06	3.11	3.41
83	강원	화천군	0.65	3.12	6.26	3.34
84	강원	삼척시	4.47	5.26	0.20	3.31
85	충남	공주시	1.70	2.16	5.93	3.26
86	전남	곡성군	0.99	4.71	3.97	3.22
87	전남	광양군	2.16	2.40	5.09	3.22
88	경북	청도군	7.45	2.75	-0.65	3.18
89	경남	밀양시	1.98	2.20	5.30	3.16
90	충북	음성군	5.72	2.26	1.48	3.15

부표 2-4. 최근 3년간 평균 순고용 변화율 - 계속

문위: % 전위 지역 지역		부표 2-4.	최근 3년	간 평균 순	고용 변화	율 - 계속	
순위 지역 소고용변화율 순고용변화율 순고용변화율 선화율 선화율 선화율 변화율 13 92 경기 20 0.94 2.30 6.12 3.12 3.12 3.02 3.06 3.08 3.07 3.07 3.05 3.05 3.05 3.05 3.05 3.05 3.05 3.07 3.07 3.07 3.07 3.07 3.07 2.21 2.78 3.07 3.07 3.07 2.21 2.78 2.47 99 경납 천주시 4.62 0.92 2.28 2.61 100 3.01 2.42 1.01 3.02 4.62 1.70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단위: %</td>							단위: %
92 경기 이천시 0.94 2.30 6.12 3.12 93 강원 철원군 9.82 -4.25 3.65 3.08 94 강원 원주시 2.98 2.40 3.77 3.05 95 전남 순천시 1.48 1.97 5.61 3.02 96 충남 예산군 3.07 3.07 2.21 2.78 97 경기 포천시 4.62 0.92 2.28 2.61 98 전북 남원시 4.30 -1.29 4.39 2.47 99 경남 진주시 1.67 3.39 2.33 2.46 100 경북 성주군 6.56 1.84 -1.04 2.45 101 경북 양양군 7.24 1.99 -2.12 2.37 102 강원 춘천시 -0.09 1.50 5.25 2.22 103 충남 청양군 -0.85 1.19 6.15 2.16 104 충북 옥천군 -0.16 3.12 2.79 1.92 105 경북 안동시 -0.48 1.92 4.29 1.91 106 강원 양구군 0.68 0.58 4.02 1.76 107 강원 강릉시 3.53 -0.27 2.01 1.76 108 경북 고령군 4.13 1.20 -0.24 1.70 109 경남 통영시 6.08 -0.55 -0.45 1.69 110 경북 예천군 3.77 -3.86 4.83 1.58 111 전남 여주시 0.48 1.44 2.58 1.50 112 충북 제천시 0.36 1.66 2.41 1.48 113 경남 사천시 1.61 -0.34 2.92 1.40 114 충북 보은군 2.41 1.56 0.16 1.38 115 경북 영주시 0.70 0.52 2.79 1.34 116 경남 양산시 0.35 1.80 1.85 1.34 117 충남 서천군 -3.03 3.10 3.85 1.31 118 경남 창원시 2.47 3.57 -2.41 1.21 119 경기 연천군 0.63 -2.25 5.24 1.21	순위	지역	지역	순고용	순고용	순고용	순고용
93 강원 철원군 9.82 -4.25 3.65 3.08 94 강원 원주시 2.98 2.40 3.77 3.05 95 전남 순천시 1.48 1.97 5.61 3.02 96 충남 예산군 3.07 3.07 2.21 2.78 97 경기 포천시 4.62 0.92 2.28 2.61 98 전북 남원시 4.30 -1.29 4.39 2.47 99 경남 진주시 1.67 3.39 2.33 2.46 100 경북 영주군 6.56 1.84 -1.04 2.45 101 경북 양양군 7.24 1.99 -2.12 2.37 102 강원 춘천시 -0.09 1.50 5.25 2.22 103 충남 청양군 -0.85 1.19 6.15 2.16 104 충북 옥천군 -0.16 3.12 2.79 1.92 105 경북 안동시 -0.48 1.92 4.29 1.91 106 강원 양구군 0.68 0.58 4.02 1.76 107 강원 강릉시 3.53 -0.27 2.01 1.76 108 경북 고령군 4.13 1.20 -0.24 1.70 109 경남 통영시 6.08 -0.55 -0.45 1.69 110 경북 예천군 3.77 -3.86 4.83 1.58 111 전남 여수시 0.48 1.44 2.58 1.50 112 충북 제천시 0.36 1.66 2.41 1.48 113 경남 사천시 1.61 -0.34 2.92 1.40 114 충북 보은군 2.41 1.56 0.16 1.38 115 경북 영주시 0.70 0.52 2.79 1.34 116 경남 양산시 0.35 1.80 1.85 1.34 117 충남 서천군 -3.03 3.10 3.85 1.31 118 경남 창원시 2.47 3.57 -2.41 1.21	91	경남	합천군	7.32	-1.30	3.35	3.13
94 강원 원주시 2.98 2.40 3.77 3.05 95 전남 순천시 1.48 1.97 5.61 3.02 96 충남 예산군 3.07 3.07 2.21 2.78 97 경기 포천시 4.62 0.92 2.28 2.61 98 전북 남원시 4.30 -1.29 4.39 2.47 99 경남 진주시 1.67 3.39 2.33 2.46 100 경북 성주군 6.56 1.84 -1.04 2.45 101 경북 양양군 7.24 1.99 -2.12 2.37 102 강원 순천시 -0.09 1.50 5.25 2.22 103 충남 청양군 -0.85 1.19 6.15 2.16 104 충북 옥천군 -0.16 3.12 2.79 1.92 105 경북 안동시 -0.48 1.92 4.29 1.91 106 강원 양구군 0.68 0.58 4.02 1.76 107 강원 강릉시 3.53 -0.27 2.01 1.76 108 경북 고령군 4.13 1.20 -0.24 1.70 109 경남 통역시 6.08 -0.55 -0.45 1.69 110 경북 예천군 3.77 -3.86 4.83 1.58 111 전남 여주시 0.48 1.44 2.58 1.50 112 충북 제천시 0.36 1.66 2.41 1.48 113 경남 사천시 1.61 -0.34 2.92 1.40 114 충북 보은군 2.41 1.56 0.16 1.38 115 정북 영주시 0.70 0.52 2.79 1.34 116 정남 양산시 0.35 1.80 1.85 1.34 117 충남 서천군 -3.03 3.10 3.85 1.31 118 정남 창원시 2.47 3.57 -2.41 1.21	92	경기	이천시	0.94	2.30	6.12	3.12
95 전남 순천시 1.48 1.97 5.61 3.02 96 충남 예산군 3.07 3.07 2.21 2.78 97 경기 포천시 4.62 0.92 2.28 2.61 98 전북 남원시 4.30 -1.29 4.39 2.47 99 경남 진주시 1.67 3.39 2.33 2.46 100 경북 성주군 6.56 1.84 -1.04 2.45 101 경북 양양군 7.24 1.99 -2.12 2.37 102 강원 순천시 -0.09 1.50 5.25 2.22 103 충남 청양군 -0.85 1.19 6.15 2.16 104 충북 옥천군 -0.16 3.12 2.79 1.92 105 경북 안동시 -0.48 1.92 4.29 1.91 106 강원 양구군 0.68 0.58 4.02 1.76 107 강원 강릉시 3.53 -0.27 2.01 1.76 108 경북 고령군 4.13 1.20 -0.24 1.70 109 경남 통영시 6.08 -0.55 -0.45 1.69 110 경북 예천군 3.77 -3.86 4.83 1.58 111 전남 여주시 0.48 1.44 2.58 1.50 112 충북 제천시 0.36 1.66 2.41 1.48 113 경남 사천시 1.61 -0.34 2.92 1.40 114 충북 보은군 2.41 1.56 0.16 1.38 115 경북 영주시 0.70 0.52 2.79 1.34 116 경남 양산시 0.35 1.80 1.85 1.31 118 경남 사천진 -3.03 3.10 3.85 1.31 118 경남 창원시 2.47 3.57 -2.41 1.21 119 경기 연천군 0.63 -2.25 5.24 1.21	93	강원	철원군	9.82	-4.25	3.65	3.08
96 충남 예산군 3.07 3.07 2.21 2.78 97 경기 포천시 4.62 0.92 2.28 2.61 98 전북 남원시 4.30 -1.29 4.39 2.47 99 경남 진주시 1.67 3.39 2.33 2.46 100 경북 성주군 6.56 1.84 -1.04 2.45 101 경북 양양군 7.24 1.99 -2.12 2.37 102 강원 춘천시 -0.09 1.50 5.25 2.22 103 충남 청양군 -0.85 1.19 6.15 2.16 104 충북 우천군 -0.16 3.12 2.79 1.92 105 경북 안동시 -0.48 1.92 4.29 1.91 106 강원 양구군 0.68 0.58 4.02 1.76 107 강원 강릉시 3.53 -0.27 2.01 1.76 108 경북 고령군 4.13 1.20 -0.24 1.70 109 경남 통영시 6.08 -0.55 -0.45 1.69 110 경북 예천군 3.77 -3.86 4.83 1.58 111 전남 여수시 0.48 1.44 2.58 1.50 112 충북 제천시 0.36 1.66 2.41 1.48 113 경남 사천시 1.61 -0.34 2.92 1.40 114 충북 보은군 2.41 1.56 0.16 1.38 115 경북 영주시 0.70 0.52 2.79 1.34 116 경남 양산시 0.35 1.80 1.85 1.34 117 충남 서천군 -3.03 3.10 3.85 1.31 118 경남 창원시 2.47 3.57 -2.41 1.21	94	강원	원주시	2.98	2.40	3.77	3.05
97 경기 포천시 4.62 0.92 2.28 2.61 98 전북 남원시 4.30 -1.29 4.39 2.47 99 경남 진주시 1.67 3.39 2.33 2.46 100 경북 성주군 6.56 1.84 -1.04 2.45 101 경북 양양군 7.24 1.99 -2.12 2.37 102 강원 춘천시 -0.09 1.50 5.25 2.22 103 충남 청양군 -0.85 1.19 6.15 2.16 104 충북 옥천군 -0.16 3.12 2.79 1.92 105 경북 안동시 -0.48 1.92 4.29 1.91 106 강원 양구군 0.68 0.58 4.02 1.76 107 강원 강릉시 3.53 -0.27 2.01 1.76 108 경북 고령군 4.13 1.20 -0.24 1.70 109 경남 통영시 6.08 -0.55 -0.45 1.69 110 경북 예천군 3.77 -3.86 4.83 1.58 111 전남 여수시 0.48 1.44 2.58 1.50 112 충북 제천시 0.36 1.66 2.41 1.48 113 경남 사천시 1.61 -0.34 2.92 1.40 114 충북 보은군 2.41 1.56 0.16 1.38 115 경북 영주시 0.70 0.52 2.79 1.34 116 경남 양산시 0.35 1.80 1.85 1.34 117 충남 서천군 -3.03 3.10 3.85 1.31 118 경남 창원시 2.47 3.57 -2.41 1.21	95	전남	순천시	1.48	1.97	5.61	3.02
98 전북 남원시 4.30 -1.29 4.39 2.47 99 경남 진주시 1.67 3.39 2.33 2.46 100 경북 성주군 6.56 1.84 -1.04 2.45 101 경북 양양군 7.24 1.99 -2.12 2.37 102 강원 춘천시 -0.09 1.50 5.25 2.22 103 충남 청양군 -0.85 1.19 6.15 2.16 104 충북 옥천군 -0.16 3.12 2.79 1.92 105 경북 안동시 -0.48 1.92 4.29 1.91 106 강원 양구군 0.68 0.58 4.02 1.76 107 강원 강릉시 3.53 -0.27 2.01 1.76 108 경북 고려군 4.13 1.20 -0.24 1.70 109 경남 통영시 6.08 -0.55 -0.45 1.69 110 경북 예천군 3.77 -3.86 4.83 1.58 111 전남 여수시 0.48 1.44 2.58 1.50 112 충북 제천시 0.36 1.66 2.41 1.48 113 경남 사천시 1.61 -0.34 2.92 1.40 114 충북 보은군 2.41 1.56 0.16 1.38 115 경북 영주시 0.70 0.52 2.79 1.34 116 경남 양산시 0.35 1.80 1.85 1.31 118 경남 창원시 2.47 3.57 -2.41 1.21 119 경기 연천군 0.63 -2.25 5.24 1.21	96	충남	예산군	3.07	3.07	2.21	2.78
99 경남 진주시 1.67 3.39 2.33 2.46 100 경북 성주군 6.56 1.84 -1.04 2.45 101 경북 양양군 7.24 1.99 -2.12 2.37 102 강원 춘천시 -0.09 1.50 5.25 2.22 103 충남 청양군 -0.85 1.19 6.15 2.16 104 충북 옥천군 -0.16 3.12 2.79 1.92 105 경북 안동시 -0.48 1.92 4.29 1.91 106 강원 양구군 0.68 0.58 4.02 1.76 107 강원 강릉시 3.53 -0.27 2.01 1.76 108 경북 고려군 4.13 1.20 -0.24 1.70 109 경남 통영시 6.08 -0.55 -0.45 1.69 110 경북 예천군 3.77 -3.86 4.83 1.58 111 전남 여수시 0.48 1.44 2.58 1.50 112 충북 제천시 0.36 1.66 2.41 1.48 113 경남 사천시 1.61 -0.34 2.92 1.40 114 충북 보은군 2.41 1.56 0.16 1.38 115 경북 영주시 0.70 0.52 2.79 1.34 116 경남 창원시 0.35 1.80 1.85 1.31 118 경남 창원시 2.47 3.57 -2.41 1.21 119 경기 연천군 0.63 -2.25 5.24 1.21	97	경기	포천시	4.62	0.92	2.28	2.61
100 정복 성주군 6.56 1.84 -1.04 2.45 101 정복 양양군 7.24 1.99 -2.12 2.37 102 강원 춘천시 -0.09 1.50 5.25 2.22 103 충남 청양군 -0.85 1.19 6.15 2.16 104 충북 옥천군 -0.16 3.12 2.79 1.92 105 정북 안동시 -0.48 1.92 4.29 1.91 106 강원 양구군 0.68 0.58 4.02 1.76 107 강원 강릉시 3.53 -0.27 2.01 1.76 108 정북 고령군 4.13 1.20 -0.24 1.70 109 정남 통영시 6.08 -0.55 -0.45 1.69 110 정북 예천군 3.77 -3.86 4.83 1.58 111 전남 여수시 0.48 1.44 2.58 1.50 112 충북 제천시 0.36 1.66 2.41 1.48 113 정남 사천시 1.61 -0.34 2.92 1.40 114 충북 영주시 0.70 0.52 2.79 1.34 116 정남 양산시 0.35 1.80 1.85 1.31 118 정남 창원시 2.47 3.57 -2.41 1.21 119 정기 연천군 0.63 -2.25 5.24 1.21	98	전북	남원시	4.30	-1.29	4.39	2.47
101 경북 양양군 7.24 1.99 -2.12 2.37 102 강원 춘천시 -0.09 1.50 5.25 2.22 103 충남 청양군 -0.85 1.19 6.15 2.16 104 충북 옥천군 -0.16 3.12 2.79 1.92 105 경북 안동시 -0.48 1.92 4.29 1.91 106 강원 양구군 0.68 0.58 4.02 1.76 107 강원 강릉시 3.53 -0.27 2.01 1.76 108 경북 고령군 4.13 1.20 -0.24 1.70 109 경남 통영시 6.08 -0.55 -0.45 1.69 110 경북 예천군 3.77 -3.86 4.83 1.58 111 전남 여수시 0.48 1.44 2.58 1.50 112 충북 제천시 0.36 1.66 2.41 1.48 113 경남 사천시 1.61 -0.34 2.92 1.40 114 충북 보은군 2.41 1.56 0.16 1.38 115 경북 영주시 0.70 0.52 2.79 1.34 116 경남 양산시 0.35 1.80 1.85 1.31 118 경남 창원시 2.47 3.57 -2.41 1.21 119 경기 연천군 0.63 -2.25 5.24 1.21	99	경남		1.67	3.39	2.33	2.46
102 장원 춘천시 -0.09 1.50 5.25 2.22 103 충남 청양군 -0.85 1.19 6.15 2.16 104 충북 옥천군 -0.16 3.12 2.79 1.92 105 경북 안동시 -0.48 1.92 4.29 1.91 106 강원 양구군 0.68 0.58 4.02 1.76 107 강원 강릉시 3.53 -0.27 2.01 1.76 108 경북 고령군 4.13 1.20 -0.24 1.70 109 경남 통영시 6.08 -0.55 -0.45 1.69 110 경북 예천군 3.77 -3.86 4.83 1.58 111 전남 여수시 0.48 1.44 2.58 1.50 112 충북 제천시 0.36 1.66 2.41 1.48 113 경남 사천시 1.61 -0.34 2.92 1.40 114 충북 보은군 2.41 1.56 0.16 1.38 115 경북 영주시 0.70 0.52 2.79 1.34 116 경남 양산시 0.35 1.80 1.85 1.34 117 충남 서천군 -3.03 3.10 3.85 1.31 118 경남 창원시 2.47 3.57 -2.41 1.21	100	경북	성주군	6.56	1.84	-1.04	2.45
103 충남 청양군 -0.85 1.19 6.15 2.16 104 충북 옥천군 -0.16 3.12 2.79 1.92 105 경북 안동시 -0.48 1.92 4.29 1.91 106 강원 양구군 0.68 0.58 4.02 1.76 107 강원 강릉시 3.53 -0.27 2.01 1.76 108 경북 고령군 4.13 1.20 -0.24 1.70 109 경남 통영시 6.08 -0.55 -0.45 1.69 110 경북 예천군 3.77 -3.86 4.83 1.58 111 전남 여수시 0.48 1.44 2.58 1.50 112 충북 제천시 0.36 1.66 2.41 1.48 113 경남 사천시 1.61 -0.34 2.92 1.40 114 충북 보은군 2.41 1.56 0.16 1.38 115 경북 영주시 0.70 0.52 2.79 1.34 116 경남 양산시 0.35 1.80 1.85 1.34 117 충남 서천군 -3.03 3.10 3.85 1.31 118 경남 창원시 2.47 3.57 -2.41 1.21	101	경북	양양군	7.24	1.99	-2.12	2.37
104 충북 옥천군 -0.16 3.12 2.79 1.92 105 경북 안동시 -0.48 1.92 4.29 1.91 106 강원 양구군 0.68 0.58 4.02 1.76 107 강원 강릉시 3.53 -0.27 2.01 1.76 108 경북 고령군 4.13 1.20 -0.24 1.70 109 경남 통영시 6.08 -0.55 -0.45 1.69 110 경북 예천군 3.77 -3.86 4.83 1.58 111 전남 여수시 0.48 1.44 2.58 1.50 112 충북 제천시 0.36 1.66 2.41 1.48 113 경남 사천시 1.61 -0.34 2.92 1.40 114 충북 보은군 2.41 1.56 0.16 1.38 115 경북 영주시 0.70 0.52 2.79 1.34 116 경남 양산시 0.35 1.80 1.85 1.34 117 충남 서천군 -3.03 3.10 3.85 1.31 118 경남 창원시 2.47 3.57 -2.41 1.21	102	강원	춘천시	-0.09	1.50	5.25	2.22
105 경북 안동시 -0.48 1.92 4.29 1.91 106 강원 양구군 0.68 0.58 4.02 1.76 107 강원 강릉시 3.53 -0.27 2.01 1.76 108 경북 고령군 4.13 1.20 -0.24 1.70 109 경남 통영시 6.08 -0.55 -0.45 1.69 110 경북 예천군 3.77 -3.86 4.83 1.58 111 전남 여수시 0.48 1.44 2.58 1.50 112 충북 제천시 0.36 1.66 2.41 1.48 113 경남 사천시 1.61 -0.34 2.92 1.40 114 충북 보은군 2.41 1.56 0.16 1.38 115 경북 영주시 0.70 0.52 2.79 1.34 116 경남 양산시 0.35 1.80 1.85 1.31 117 충남 서천군 -3.03 3.10 3.85 1.31 118 경남 창원시 2.47 3.57 -2.41 1.21 119 경기 연천군 0.63 -2.25 5.24 1.21	103	충남	청양군	-0.85	1.19	6.15	2.16
106 강원 양구군 0.68 0.58 4.02 1.76 107 강원 강릉시 3.53 -0.27 2.01 1.76 108 경북 고령군 4.13 1.20 -0.24 1.70 109 경남 통영시 6.08 -0.55 -0.45 1.69 110 경북 예천군 3.77 -3.86 4.83 1.58 111 전남 여수시 0.48 1.44 2.58 1.50 112 충북 제천시 0.36 1.66 2.41 1.48 113 경남 사천시 1.61 -0.34 2.92 1.40 114 충북 보은군 2.41 1.56 0.16 1.38 115 경북 영주시 0.70 0.52 2.79 1.34 116 경남 양산시 0.35 1.80 1.85 1.34 117 충남 서천군 -3.03 3.10 3.85 1.31 118 경남 창원시 2.47 3.57 -2.41 1.21 119 경기 연천군 0.63 -2.25 5.24 1.21	104	충북	옥천군	-0.16	3.12	2.79	1.92
107 강원 강릉시 3.53 -0.27 2.01 1.76 108 경북 고령군 4.13 1.20 -0.24 1.70 109 경남 통영시 6.08 -0.55 -0.45 1.69 110 경북 예천군 3.77 -3.86 4.83 1.58 111 전남 여수시 0.48 1.44 2.58 1.50 112 충북 제천시 0.36 1.66 2.41 1.48 113 경남 사천시 1.61 -0.34 2.92 1.40 114 충북 보은군 2.41 1.56 0.16 1.38 115 경북 영주시 0.70 0.52 2.79 1.34 116 경남 양산시 0.35 1.80 1.85 1.34 117 충남 서천군 -3.03 3.10 3.85 1.31 118 경남 창원시 2.47 3.57 -2.41 1.21 119 경기 연천군 0.63 -2.25 5.24 1.21	105	경북		-0.48	1.92	4.29	1.91
108 경북 고령군 4.13 1.20 -0.24 1.70 109 경남 통영시 6.08 -0.55 -0.45 1.69 110 경북 예천군 3.77 -3.86 4.83 1.58 111 전남 여수시 0.48 1.44 2.58 1.50 112 충북 제천시 0.36 1.66 2.41 1.48 113 경남 사천시 1.61 -0.34 2.92 1.40 114 충북 보은군 2.41 1.56 0.16 1.38 115 경북 영주시 0.70 0.52 2.79 1.34 116 경남 양산시 0.35 1.80 1.85 1.34 117 충남 서천군 -3.03 3.10 3.85 1.31 118 경남 창원시 2.47 3.57 -2.41 1.21 119 경기 연천군 0.63 -2.25 5.24 1.21	106			0.68	0.58	4.02	1.76
109 경남 통영시 6.08 -0.55 -0.45 1.69 110 경북 예천군 3.77 -3.86 4.83 1.58 111 전남 여수시 0.48 1.44 2.58 1.50 112 충북 제천시 0.36 1.66 2.41 1.48 113 경남 사천시 1.61 -0.34 2.92 1.40 114 충북 보은군 2.41 1.56 0.16 1.38 115 경북 영주시 0.70 0.52 2.79 1.34 116 경남 양산시 0.35 1.80 1.85 1.34 117 충남 서천군 -3.03 3.10 3.85 1.31 118 경남 창원시 2.47 3.57 -2.41 1.21 119 경기 연천군 0.63 -2.25 5.24 1.21	107		강릉시	3.53	-0.27	2.01	1.76
110 경북 예천군 3.77 -3.86 4.83 1.58 111 전남 여수시 0.48 1.44 2.58 1.50 112 충북 제천시 0.36 1.66 2.41 1.48 113 경남 사천시 1.61 -0.34 2.92 1.40 114 충북 보은군 2.41 1.56 0.16 1.38 115 경북 영주시 0.70 0.52 2.79 1.34 116 경남 양산시 0.35 1.80 1.85 1.34 117 충남 서천군 -3.03 3.10 3.85 1.31 118 경남 창원시 2.47 3.57 -2.41 1.21 119 경기 연천군 0.63 -2.25 5.24 1.21	108	경북	고령군	4.13	1.20	-0.24	1.70
111 전남 여수시 0.48 1.44 2.58 1.50 112 충북 제천시 0.36 1.66 2.41 1.48 113 경남 사천시 1.61 -0.34 2.92 1.40 114 충북 보은군 2.41 1.56 0.16 1.38 115 경북 영주시 0.70 0.52 2.79 1.34 116 경남 양산시 0.35 1.80 1.85 1.34 117 충남 서천군 -3.03 3.10 3.85 1.31 118 경남 창원시 2.47 3.57 -2.41 1.21 119 경기 연천군 0.63 -2.25 5.24 1.21	109			6.08	-0.55	-0.45	1.69
112 충북 제천시 0.36 1.66 2.41 1.48 113 경남 사천시 1.61 -0.34 2.92 1.40 114 충북 보은군 2.41 1.56 0.16 1.38 115 경북 영주시 0.70 0.52 2.79 1.34 116 경남 양산시 0.35 1.80 1.85 1.34 117 충남 서천군 -3.03 3.10 3.85 1.31 118 경남 창원시 2.47 3.57 -2.41 1.21 119 경기 연천군 0.63 -2.25 5.24 1.21	110			3.77	-3.86	4.83	1.58
113 경남 사천시 1.61 -0.34 2.92 1.40 114 충북 보은군 2.41 1.56 0.16 1.38 115 경북 영주시 0.70 0.52 2.79 1.34 116 경남 양산시 0.35 1.80 1.85 1.34 117 충남 서천군 -3.03 3.10 3.85 1.31 118 경남 창원시 2.47 3.57 -2.41 1.21 119 경기 연천군 0.63 -2.25 5.24 1.21							
114 충북 보은군 2.41 1.56 0.16 1.38 115 경북 영주시 0.70 0.52 2.79 1.34 116 경남 양산시 0.35 1.80 1.85 1.34 117 충남 서천군 -3.03 3.10 3.85 1.31 118 경남 창원시 2.47 3.57 -2.41 1.21 119 경기 연천군 0.63 -2.25 5.24 1.21							
115 경북 영주시 0.70 0.52 2.79 1.34 116 경남 양산시 0.35 1.80 1.85 1.34 117 충남 서천군 -3.03 3.10 3.85 1.31 118 경남 창원시 2.47 3.57 -2.41 1.21 119 경기 연천군 0.63 -2.25 5.24 1.21							
116 경남 양산시 0.35 1.80 1.85 1.34 117 충남 서천군 -3.03 3.10 3.85 1.31 118 경남 창원시 2.47 3.57 -2.41 1.21 119 경기 연천군 0.63 -2.25 5.24 1.21	114			2.41	1.56	0.16	
117 충남 서천군 -3.03 3.10 3.85 1.31 118 경남 창원시 2.47 3.57 -2.41 1.21 119 경기 연천군 0.63 -2.25 5.24 1.21	115			0.70	0.52	2.79	
118경남창원시2.473.57-2.411.21119경기연천군0.63-2.255.241.21	116			0.35	1.80	1.85	
119 경기 연천군 0.63 -2.25 5.24 1.21	117			-3.03	3.10	3.85	
				2.47			
120 경북 포항시 0.13 1.77 1.64 1.18					-2.25	5.24	
	120	경북	포항시	0.13	1.77	1.64	1.18

부표 2-4. 최근 3년간 평균 순고용 변화율- 계속

	-	Ţ				
순위 지	지역	지역	2002년 순고용 변화율	2003년 순고용 변화율	2004년 순고용 변화율	3년 평균 순고용 변화율
121 ং	<u>민</u> 천 :	강화군	-2.40	0.75	4.88	1.08
122 7	병북 -	문경시	3.00	0.44	-0.28	1.05
123 7	병북 '	영천시	3.44	-1.57	1.26	1.04
124 ব	년북 :	정읍시	0.40	-0.82	3.02	0.87
125 7	병기 '	양주시	1.28	0.73	0.59	0.87
126 7	경북 :	경산시	1.91	0.00	0.67	0.86
127 73	병북 :	경주시	-1.77	1.44	2.63	0.77
128 ਵੈਂ	· 북	괴산군	4.10	-2.39	0.53	0.75
129 E	H구 '	달성군	1.28	-0.58	0.86	0.52
130	선남 '	영광군	-4.95	1.28	5.09	0.47
131 7	병북 :	의성군	4.66	-1.27	-2.78	0.21
132	년북 -	군산시	-3.20	2.85	0.90	0.19
133	선북 (익산시	0.03	-1.98	2.31	0.12
134 ਵੈਂ	등북 -	충주시	1.80	-2.66	0.03	-0.28
135 부	부산 :	기장군	-1.07	-1.23	1.25	-0.35
136 7	강원 '	영월군	1.11	-8.19	5.31	-0.59
137 7	당원 :	횡성군	-1.10	1.81	-3.14	-0.81
138 7	경남 .	고성군	-5.69	3.88	-1.19	-1.00
139 7	형남 1	마산시	0.73	-3.64	-4.20	-2.37
140 7	병북 -	울진군	-30.41	4.04	6.34	-6.68

부록 3

유럽의 RUREMPLO 프로젝트 개요

1. 서론

- EU에서 농촌지역간 격차의 실태와 원인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종합적인 비교 연구로 'EU 농촌지역에서 농업과 고용 (RUREMPLO)'이라는 명칭의 연구프로젝트가 1997년부터 1999년까지 3년간 지속되었음.
 - EU의 9개 회원국가, 18개 지역을 사례로 비교 분석한 이 연구는 각각의 사례 지역을 대상으로 동일한 형태로 조사하였음.
 - 25명의 EU 학자들이 참여한 이 연구프로젝트는 EU 내의 선도농 촌지역과 낙후농촌지역의 격차와 그 실태, 원인 그리고 발전 방 안을 포괄하는 대표적인 학제간 종합연구임.
- 이 연구는 농촌지역을 "상대적으로 낮은 인구밀도와 지역경제 내 에 한 두 개의 타운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음.
 - 기본적으로 지난 10여 년간의 (1980-1997)지역 내 비농업 부문 고용의 증감을 기준으로 '선도농촌지역(leading rural region)'과 '낙후농촌지역(lagging rural region)'을 구분하고 그 실태와 원인을 분석하고 함의를 도출하였음.
 - 이론적으로 Lowe et al.(1995)의 내생적 발전과 외생적 발전이 결합한 '혼합적 농촌발전'에 관한 주장을 근거로, 이 연구는 농촌지역에서 고용의 성장과 관련된 12가지 이슈를 제기하고 이를 근거로 가 사례 지역별로 SWOT 분석을 행하고 있음.
- 경제활동기회의 농촌지역간 차이 분석에 관한 해외 사례로서

RUREMPLO 연구의 대상 지역 중 선진지역으로 분류된 9개 지역에서 고용 창출의 요인과 농가의 대응 형태에 대해서 살펴봄.

2. 고용 창출 요인

- RUREMPLO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분야에서 고용 창출의 요인을 발견함. 지역자원, 경제활동, 구성주체의 활동. 세 가지 분야와 관련되어 제기된 이슈는 다음의 표와 같음.
- 이하에서는 선진사례지역에서 이러한 12가지 이슈들이 어떻게 지역의 고용증가에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봄.

분야	주요 이슈
지역부존 자원	1) 고용 창출에 대한 부존자원의 영향 평가 2) 하부구조를 포함해서 고용 창출에 중요한 부존자원의 발견
경제활동	3) 분공장의 종류와 고용증감에 미치는 영향 4) 경제활동의 다양성이 고용증감에 미치는 영향 여부 평가 5) 고용이 어떤 규모 (소, 대)기업에서 창출되었는가 6) 고용이 기존 또는 새로운 기업에서 창출되었는가
발전요인1 (노동공급 분석)	7) 노동력의 교육수준의 고용증감에 대한 영향
발전요인2 (노동시장 분석)	8) 노동시장의 제도적 구조의 고용 저해성 여부 평가
발전요인3 (발전전략 분석)	9) 행위자의 능력이 고용증감에 미치는 영향 10) 고용증감에 대한 내적/외적 네트워크의 역할과 네트워크간 또는 내부에서 파워를 행사하는 행위자에 대한 분석 11) 고용유지 및 증가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방안의 발견과 지역별실시 방안 평가 및 제시 12) 농가가 농업부문 고용감소에 어떻게 적응하는가? 그리고 농장관광, 경관보존, 농가 다원활동의 전망.

2.1. 지역 부존자원의 영향

1) 농촌의 쾌적성

- 좋은 경관과 쾌적한 농촌환경은 지역고용의 증가에 영향을 미침.
 - 모든 지역이 모두 이렇게 좋은 조건을 가진 것은 아니며 대부분 일정 지역에서만 이런 경관이나 환경적 자원을 갖고 있음.
 - 이러한 경관 및 환경자원은 관광객만이 아니라 지역의 통근자, 기업가, 은퇴자 그리고 지역에 별장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을 지 역에 유입시키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지역의 자원을 이용한 임업 등에 이용하기도 함.
- 선진지역에서 도로는 대부분 매우 잘 발달되어 있지만 산악지역의 경우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음.
 - 이는 전반적인 도로망의 발달정도가 지역 사업자의 경제활동에 크게 장애 요인이 되지는 않지만 상품이나 서비스의 교역을 원활히 하거나 외부 기업의 입주결정에 영향을 미침.
 - 따라서 도로망의 발달은 지역고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함(이는 도로망의 발달정도가 발전 격차의 요인이 될 정도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함).
 - 그러나 도로망의 미흡한 발달은 낙후지역 발전에 큰 장애 요인이 됨.

2) 대도시 접근성

○ 대도시와의 접근성도 고용의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원거리 농촌지역이라고 할지라도 선진지역으로 분류. 이는 대도시와의 접근성이 고용증가에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것을 나타냄.

3) 기후

○ 관광업 분야에서 고용이 증가한 지역은 좋은 기후를 지녔음. 그러나 기후가 좋다고 해서 모두 관광업이 발전한 것은 아니며 선진지역 중에 인근의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기후가 좋지 않은 지역도있음. 따라서 기후가 고용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음.

4) 지역의 대학

○ 지역 내 또는 인근 지역에 대학의 존재는 지역 고용의 창출, 연구 개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기업의 입지결정에 유리하게 작용 함.

2.2. 경제활동에 있어서의 차이

1) 산업별 경제활동의 역할

- 각 산업별 활동이 고용에 미치는 역할은 국제경쟁에 노출된 정도에 따라서 변화가 심한 경우, 안정적인 경우 그리고 노동집약적인 경우, 노동절약적인 경우로 나누어서 볼 수 있음.
 - 선진지역에서 산업별 경제활동은 고용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가장 많은 고용의 증가는 공동체 서비스, 도소매업, 식당, 호텔, 제조업 순으로 이루어졌으며, 금융분야의 고용증가가 가장 적었음.
 - 이는 고용증가가 특정 산업부문에 집중된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냄.

- 하지만 가장 많은 고용이 발생하는 것은 노동집약적인 특성을 가진 분야였음. 또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농업부분은 고용이 감소했음.
- 결국, 선진지역에서도 고용의 증가는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서로 혼합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특정한 경향을 발견하기 어려움. 즉, 9개 지역 중 6개 지역에서는 농업과 제조업 종사자 비율이 국가 평균보다 높기 때문에 당연히 증가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임. 따라서 고용의 증가는 지역의 활력과 활성화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며 특정 산업분야가 주도하는 것은 아님.

2) 기업의 규모

○ 지역에 따라 고용을 주로 증가시키는 기업의 규모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경향은 없음. 다만, 고용을 증가시킨 대규모 기업(종업원 100인이상)은 보조금을 받고 있는 제조업체나병원, 교육기관 등임.

3) 신생기업과 기존기업의 역할

○ 대부분의 선진지역에서 고용은 주로 신생기업에 의해서 발생하였지만, 9곳 중 2곳에서는 대다수 고용이 기존 기업에서 발생하였음. 따라서 일정한 추세와 경향이 있는 것은 아님.

4) 산업구조(규모별)의 현황

○ 선진지역의 산업구조는 지역의 전통적인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그 경향과 영향을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움.

5) 전문화와 다원화

○ 이탈리아 페사로 지역처럼 가구산업에 특화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산업종사자 수에서 보면 대부분 다원화된 특성을 갖고 있 음.

6) 산업부문간 수평적, 수직적 협력

- 페사로 같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직적 계열화는 나타나고 있지 않음.
- 또한 전반적으로 기업의 수가 적기 때문에 수평적 협력도 나타나고 있지 않음. 다만 페사로 지역은 예외적으로 전통적인 가족기업을 중심으로 한 수평적 협력이 강하게 존재함.

2.3. 노동공급 측면 분석

1) 교육수준 및 숙련도

- 대부분의 선진지역 노동자의 교육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그러나 고용구조가 이런 노동자를 원하고 있고, 비숙련노동력의 풍부함은 이들 지역에 기업을 입주시키는 유인요소가 되고 있음.
 - 숙련노동력이 필요할 경우, 이 문제는 직업훈련원, 기업 내 훈련, 또는 이주노동자로 해결하고 있음.
 - 그러나 특정 지역의 경우는 고학력 노동력의 부족인 고기술 첨단 산업의 입주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음.

2) 실업률

○ 실업률과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은 국가별로 특정 패턴을 갖고 있고, 일반화하기 어려움.

- 다만, 연구 과정에서 선진지역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대부분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고, 특히 여성 노동력의 참가율이 두드러지게나타남.

2.4 노동시장 분석

○ 여기서의 중심주제는 고용이 노동시장의 제도적 구조에 의해 제약 되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그 분석은 최소임금제가 고용의 성 장을 억제하는지 그리고 고용이 관련 기관들의 노동 수요와 공급 을 연결하는 방법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를 점검함으로써 수행 가 능함.

1) 임금정책의 영향 여부

○ 최저임금제와 같은 임금정책은 국가정책 차원에서 실시되고, 지역 별 격차가 없기 때문에 특정 지역의 고용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친 다고 볼 수 없음.

2) 노동 수요와 공급의 연결

- 직업훈련원(소개소) 등의 역할이 노동의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것은 선진지역에서도 각기 다르게 나타났으며 그 형태는 다음 세 가지임.
 - 구인·구직 연결 기관이 적절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
 - 구인·구직 연결 기관의 역할이 미흡한 지역
 - 구인·구직이 대부분 비공식적인 경로, 즉, 개인간의 추천과 소 개 형식으로 진행됨으로써 공식적인 구인·구직 연결 기관의 역 할을 감소시키는 지역
- 따라서 구인구직연결기관의 역할이 고용의 증가에 결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요소는 아니라고 판단됨.

2.5. 구성주체의 능력 분석

1) 정책 결정자의 능력

- 이탈리아와 그리스의 선진지역만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선진지역에서 지역 내 정책 결정자의 능력은 고용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그들의 능력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남.
 - 지역 내 주민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정책을 수행하는 것.
 - 공공예산을 획득하거나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능력
 - 기업의 정착을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을 조성하는 것.
- 그러나 이탈리아와 그리스 지역에서는 지역 내 정책 결정자들이 적절한 행정체계를 형성하거나, 정책을 형성하고 운영하는 데 있 어서 미흡한 능력을 보이고 있음.

2) 기업가의 능력

- 선진지역에서 기업가의 능력을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 들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높은 능력을 보임.
 - 전통산업의 위기에 대처하면서 새로운 기업, 특히 소규모 사업체를 창업하는 능력이 뛰어남.
 - 이들 신생기업들은 대부분 지역과 국제시장에서 잘 경쟁하고 있음.
- 그러나 선진지역 중 몇몇 지역(네덜란드의 Drenthe, 오스트리아의 Osttirol)은 기업가들이 매우 조심스럽고 위험 회피적이며 덜 혁신 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음.
 - 대신 이들 지역에서는 외부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일종의 혁신적 인 그룹의 역할을 함.

3) 노동자의 능력

○ 모든 선진지역에서 노동자의 능력을 상당히 높게 나타났음. 이들의 특성은 '농촌의 자세'라고 불릴 정도로 매우 근면하고 열심히일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2.6. 네트워크 현황 분석

1) 내부 네트워크

- 중점적인 부분은 서로 달라도, 대부분의 선진지역은 매우 강한 내 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음.
 - 몇몇 지역에서 내적 네트워크는 지역의 강한 정체성에 대한 인식에 기반하고 있으며 따라서 정책 담당자가 정책운영의 상위레벨에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고 있음.
 - 산업지구와 같은 지역에서의 비공식적 내적 네트워크는 매우 전 형적임.
 - 상대적으로 범위가 적은 지역에서는 대부분의 내적 네트워크 구성원들이 서로 안면이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원활함.

2) 외부 네트워크

- 외부 네트워크의 이용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짐.
 - 지역, 국가, EU 차원으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정책 적 관계)
 - 수출을 목적으로(시장관계)
 - 다국적 기업과의 관계 유지(지역 내 지사가 존재하거나 기업유치 위해)(기업적 관계)
- 이탈리아의 페사로 지역에서는 주로 시장관계에 중점을 두고 있으

나 그 이외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외부 네트워크가 세 가지 관계기 능에서 모두 잘 나타나고 있음.

3) 고용 창출에 대한 네트워크의 영향

- 내부 네트워크는 지역 주체들의 동원과 조직 및 지역 내부의 발전 잠재력을 자극하는 데 매우 유용함.
- 외부 네트워크는 내부 네트워크와 일정한 상호관계를 가지면서 정보, 서비스, 상품, 투자 등의 거래(교역)를 지향함.
- 따라서 내부와 외부 네트워크의 상호 작용은 서로 연결되는 과정 으로 보아야 함.

4) 고용을 창출하는 요인들

- 모든 지역에서 고용의 성장은 내생적 요인과 외생적 요인이 상호 혼합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음(내생적 요인이 중요 요인인 이탈리 아 페사로 지역은 제외).
 - 즉, 대부분의 지역에서 내생적 요인에 의해서 우선 고용성장과정 이 시작되고 그 후에 외생적 요인에 의해서 강화됨.
 - 반대의 경우는 오직 스페인에서만 나타났고, 초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것이 내생적 요인인지 외생적 요인인지 불분명한 경우도 있음(서로간의 균형적 역할이 있었다고 판단됨).

2.7. 고용 창출과 유지에 효과적인 정책과 전략

1) 정책 담당자의 정책과 전략

○ 대부분의 선진지역에서 고용유지 및 창출을 위한 정책 담당자의 전략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은 공단지역과 관련 하부구조를 조성하 는 것이었음.

- 이를 통해 기업유치를 위한 조건을 조성하고 건설 과정에 임시직 업을 창출할 수 있음.
-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이들 공단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토지를 싸게 제공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음.
- 기업의 집중은 서비스와 정보의 교환 및 네트워킹을 촉진함으로 써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킴.
- 이들 지역에서 병원과 교육 같은 공공서비스의 개설도 고용을 증가시킴.
- 인구와 경제활동이 일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다른 약한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을 사용하여 이들 지역 의 지속성을 강화시킴.
- 정책의 주요 초점은 교육수준과 노동의 숙련도를 높이는 것임.

2) 기업가의 정책과 전략

- 기업은 직접적인 고용을 만들지만, 이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고용 창출이 아니라 이윤을 증가시키는 것임. 다만, 이들은 생존을 위해 서 시장 변화에 적극적이고 신축적으로 반응해야 함.
 - 선진지역 기업의 전략은 전문화와 다원화의 두 가지로 구분
- 이탈리아 페사로와 같은 지역은 전문화를 통해서 고급제품을 만들고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있음.
- 다른 대부분의 지역은 다원화 전략을 사용하고 있음.
 - 이들 지역은 고품질,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공급함으로써 저임금 국가와의 경쟁에 대처하고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전통산업보다도 더 높은 교육을 받은 노동력이 필요함.
 - 따라서 지역경제의 요구에 적합한 지역적 교육 및 훈련시스템을

조성하도록 상공회의소에 로비 등을 하기도 함.

3) 노동자의 정책과 전략

- 선진지역은 대부분 직업 또는 거주상의 유리성으로 인해서 1980-90년대 동안에 인구 유입이 증가한 지역이었음. 그러나 실제 유입 또는 유출된 인구의 구조와 특성을 보면 지역별로 서로 다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룩셈부르크, 페사로, 드렌테는 높은 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서 고 학력 청년들이 유출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 다른 지역에서는 총인구의 증가가 학생층의 유입에 의해서 이루 어졌으며 실제 고령 경제활동인구는 유출되는 현상이 있음.
- 노동의 수요에 반응하는 노동자의 전략은 다양함.
 - 신축적인 노동 수요에 반응하기 위해서 임시직, 인근 도시로 출퇴근하는 직업, 노동자 자신이 다른 기술을 익히는 것, 자영업을 시작하는 것 등이 가장 일반적인 노동자의 전략임.

2.8. 농가의 전략

○ 농가의 전략에 대해서는 적응적 전략(농업지속전략), 다원적 전략 (농외활동중심전략)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특별히 농업관광과 자연보존활동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살펴봄.

1) 농가의 적응적 전략과 행위

- 선진지역에서 인근 농가의 폐업은 자신의 농업활동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함.
- 대부분의 지역에서 적응적 전략을 취한 농가의 주요 행위는 토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농장을 구입 또는 임대하여 농장을

확대하는 것임.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지역의 특성상 몇 가지 차이가 있음.

- 오스티롤 지역은 자연적 조건 때문에 여유 토지가 없어서 규모를 증가시키는 전략을 불가능함.
- 페사로 지역에서 농가의 적응적 전략은 대규모 농장에 의한 규모 의 경제 증가로 나타남. 이들은 토지소득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협동조합, 기계 서비스 제공업체 및 기타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 음.
- 한편, 알바세테 지역에서는 관개시스템의 도입으로 토지생산성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지하수의 부족을 유발하는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하였음.
- 기타 적응적 전략에 따른 행위는 대량생산에서 벗어나 지역적 특성을 가진 농산물로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것, 고품질 농산물이나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것 등임.
- 몇몇 지역(니더바이에른, 알바세테, 페사로)에서 이러한 적응적 전략은 한편으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집약적인 농업생산을 초래하기도 하였음.

2) 농가의 다원활동

- 다원활동농가의 비율은 선진지역에서 15%에서 50%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남.
 - 이러한 다원활동 농가의 비율은 지역의 전통적인 특성이나 국가 정책이 주로 농장의 지속성에 중점을 두었을 경우는 낮게 나타 나고, 고용기회가 많은 경우는 높게 나타남.
 - 그리스의 코린시아와 같이 다원활동의 비율이 높은 경우는 인근

- 의 산업과 서비스업으로부터 많은 일자리가 제공되기 때문이고, 알프스의 산악지역과 같은 곳은 인구도 희박하고 비농업 부문에 서 제공되는 일자리가 적기 때문에 다원활동 농가비율이 낮음.
- 다원활동 농가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는 농장에서 직접 판매되는 가공품에 대한 수요의 정도, 농장관광과 같은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정도 등임.
- 가장 일반적인 다원활동의 세 가지 예를 들면, 농업관광(Agrotourism), 농산물과 임산물의 가공 및 판매활동
 - 코린시아, 알바세테, 페사로 지역에서 농가의 농장 내 다원활동 은 매우 낮음.
 - 룩셈부르크, 니터바이에른, 드렌테, 오스티롤 지역에서는 농업관 광이 다원활동의 주요 행위임.
 - 기타 지역에서 농업관광에 종사하는 농가의 수는 매우 적은데, 이는 투자할 재정적인 여력이 없거나 교육과 노동시간의 부족 때문임.

3) 농업관광과 자연보존 활동의 전망

- 모든 지역에서 농업관광을 위한 공급을 현 수준에서 유지하거나 숙소의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정도로 농업관광의 전망은 밝음.
 - 농업환경 프로그램에 대한 농가의 참여율이 오스티롤, 니더바이 에른, 룩셈부르크에서는 높지만, 코린시아, 알바세테, 페사로 지역에서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이들 지역에서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농업환경 프로그램의 적용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임.

- 향후 이들 지역에서 농가의 농업환경 프로그램 참여율은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달라질 것임. 참여에 따른 소득 감소분을 충분히 보상하거나 이들 보상금이 농장의 유지에 크게 기여한다고 판단되면, 농민들은 농업환경 프로그램에 좀 더 참여하고자 할 것임.

부록 4

경제활동기회의 농촌지역간 차이에 관한 사례 연구 우편 조사표

농업 관련 경제활동에 관한 일반 조사표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농촌 정책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국책연구 기관입니다. 이번에 국무총리실의 예산지원으로 농촌-도시간 소득 격차 완화 방 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일환으로 단국대학교, 전남대 학교, 밀양대학교와 함께 농촌지역간 경제활동 차이에 관한 사례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을 사례 지역으로 삼아 농업 관련 경제활동에 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오니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조사의 결과는 향후 우리나라 농촌 지역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귀중한 기초 자료로서 활용될 것입니다.

조사표에 기입하시는 사항은 연구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개인에 관한 사항은 일체 공개되지 않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단국대학교/ 전남대학교/ 밀양대학교

이 조시표와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박시현 (02-3299-××××) 또는 (00대학교 교수 (000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경제활동의 일반적 현황

여기에서는 귀하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일반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서 '사업'이라 함은 생업을 위한 경제활동 모두를 지칭하는 것으로 개별적으로 농사를 짓는 것도 사업에 포함합니다.

1.1. 사업체의 일	!반 현황				
가. 사업체명 :					
나. 조직 형태 :	()				
① 사업자등록	을 하지 않	는 사업체나 농가	② 사업기	자 <mark>등록을</mark> 한 사업체니	나 농가
③ 영농조합법	날 인		④ 작목	반	
⑤ 회사법인(유	한회사, 합자회/	사, 주식회사 등)	⑥ 공공(원	s·협, 행정기관)이 운영하	는 시업처
⑦ 기타 사업	체(마을공동	운영사업체 등)			
다. 설립연도 :	<u> Է</u>	<u> </u>			
라. 상근직원의	수:	<u>명</u>			
(또한 영농:	조합법인, 직	목반인 경우 회	원 수는? :	<u>명</u>)	
마. 상근직원의	평균 연령 :	세	_		
1.2. 귀 사업체어	서는 주로	무엇을 합니까?			
(주요 활동만을	표기하되,	복수일 경우 중요	L순대로 3 <i>7</i>	배까지만 표기하여 ²	주세요)
제1순위 ()	제2순위 ()	제3순위 ()
① 농산물의 생	산 및 판매		② 농	산물의 저장	
③ 농산물의 선	별 및 포장		④ 농	산물의 가공 및 판매	ᅫ
⑤ 농산물 및 능	5가공품 수출	ž E	⑥ ス]	역 특산품의 제조 및	및 판매
⑦ 민박 및 음식	식물 판매		⑧ 주	말농원 및 체험농장	운영
⑨ 농업 지원 시	네니스 활동(투입재공급, 포정	· 강재공급, 운	·송 등)	
⑩ 일반물품 제	조업		① 7	EH()

1.3. 귀 사업체는 홈페이지를 운영히	·고 있습니까?	()
① 있다 (홈페이지 주소는? <u>http:/</u> ② 없다	③ 현재는 없지만 앞으로 만들) 틀 예정이	마
1.4. 최근 3년간 특허 출원이나 상표 ① 있다	E등록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② 없다	()
1.5. 최근 3년간 매출액은 어떻게 변	현했습니까?	()
① 대체로 증가하였다 ③ 변함이 없다	② 대체로 감소하	였다	
1.5.1 매출액이 증가했다면, 그 원	원인은 무엇입니까?	()
 1 새로운 작목의 도입 또는 신제 3 새로운 설비의 도입 5 경영방식의 개선 		은 시장 :)	개척
1.6. 앞으로 매출액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① 계속 늘어날 것이다 ③ 점차 줄어들 것이다	② 지금과 비슷할 ④ 알 수 없다	것이다	
1.7. 최근 3년간 직원수는 어떻게 변	현했습니까?	()
① 대체로 증가하였다 ③ 변함이 없다	② 대체로 감소하	였다	
1.8. 앞으로 직원수를 늘릴 계획입니] <i>7</i> }?	()
① 늘릴 것이다 ③ 현재 상태를 유지하겠다	② 점차 줄일 생 ² ④ 모르겠다	감이다	

1.9 새롭게 추진하려는 사업이 있습니?	7 }?		()
① 있다	② ed	다		
1.9.1 만약 있다면, 새로운 사업 분여	야는 무엇입니까	} ?	()
① 농산물의 생산 규모 확대 ③ 친환경 농법의 도입 ⑤ 농산물 및 농가공품의 판매 확 ⑥ 농산물 및 농가공품의 수출 ⑧ 농업 지원 서비스 활동(투입자 ⑨ 지역 특산품의 제조 및 판매 ① 기타 (④ 농산품 가 라대(직거래, 인트 ⑦ 만박 음식물: 기공급, 포장재공	공사업 확대 넷판매 등) 판매, 체험농장 등 급, 운송 등)	농촌관광시	입
2. 경제활동과 지역과의 관계				
여기에서는 귀하의 사업체와 지역의 하의 사업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반다를 미치는지를 알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군과 시·군은 다르지만 지리적으로 가까	배로 귀하의 사업 '지역 내'라 함	l이 지역경제어 은 귀하가 살고	에 어떤 그 있는	효고
2.1. 귀 사업체가 이 지역에 자리 잡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 2개만) 7			(`
(기장 설정적인 이유 2개인) 기 ① 본인 또는 회원이 원래부터 이 지 ② 핵심이 되는 원료를 구하기가 쉬워 ③ 종업원을 구하기기 쉬워서 ④ 생산된 제품의 판매에 유리해서 ⑤ 거래하는 사업체가 이 지역에 집을 ⑥ 행정 서비스가 좋아서 ⑦ 대학, 연구소 등이 입지하여 기술 ⑧ 교통, 주거 등의 생활 여건이 좋으 ⑨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부지 확보기 ⑩ 기타 (역에 살거나 연 워서 중 분포되어 개발 여건이 좋 바서	고가 있어서)
₩ /I-L ()			

2.	2. 귀 사업체의 주요 원료는 어디에서 구하수 (농산물만을 생산하는 경우 농산물을 원료.		()
	① 본인 혹은 회원이 직접 생산 ③ 타 지역에서 조달 ⑤ 일부는 지역 내, 일부는 타 지역에서 구입 (그 비 ⑥ 기타 (④ 수입 원료를	를 사 용	<u>%</u>)
2.3	. 귀 사업체의 종업원은 어디에서 구하십니까	ት ?	()
	① 종업원을 두지 않고 본인 또는 회원이 직접 ② 지역 내에서 구함 ③ 타 지역에서 구함 ④ 일부는 지역 내, 일부는 지역 밖에서 구함 (그 비율		<u>《</u> 지역 외	<u>%</u>)
2.4	. 귀 사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은 어떻게 판매 ① 고파자 드메샤 테리저 등 이라 오토기자	(비중 큰	, 순서대로 27) 개만)
	① 공판장, 도매상, 대리점 등 일반 유통시장이 ② 인터넷, 회원제 주문 판매 등 직거래	11 판배		
	③ 파머스마켓 등 지역 내에서 판매			
	④ 거래업체(공장 등)에 중간원료로 공급 (그 비 ⑤ 농협 등을 통한 계통 판매	율은? 지역 내	<u>%</u> , 지역 외	<u>%</u>)
	⑥ 수출 ⑦ 기타 ()		
2.5	. 지역 내 동일 업종 종사자 또는 관련자끼 하거나 하신 적이 있습니까? (가장 도움된 것			동을)
	 시설의 공동 이용, 공동방제 또는 공동시비 공동 선별, 공동출하 또는 공동계산제 등 연합 마케팅 소비자 초청, 전시회 개최 등 공동홍보활동 세미나, 기술 강연회 공동 개최 공동 선진지견학 			

⑦ 공동으로 행정기관, 농협 등○⑧ 공동으로 자금 조달⑨ 공동으로 사업계획 수립	게 영향력 행사		
⑩ 기타 ()		
3. 경제활동의 주체			
여기에서는 지역 내 경제활동 관다양한 경제활동을 위하여 어떠한 ! 특히 경제활동 주체의 혁신에 대한합니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알아보	보고자 합니다	라 .
3.1. 귀하는 새로운 기술이나 혁신을	· 어떻게 받아들이는 편입니까?	()
② 새로운 성공 사례를 접하고 b ③ 대다수에게 보편화되면 함께			
3.2. 귀 사업체는 최근 3년간 다음	· 중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가정	· 도움된 것 3개만) (,	,)
① 대학, 연구소 등 전문교육기관 ② 관련분야 선진지역, 선진기업 ③ 관련 기업체 등의 기술 연수 ④ 지역 내 관련자들과 공부모임 ⑤ 조직 내의 직원들끼리 연구모 ⑥ 소비자 초청, 전시회 개최, 인	시찰 님이나 정보 교류모임 활동 그임 활동 l터넷 홍보 등의 홍보활동		
⑦ 인터넷 판매, 직거래 등 판매⑧ 기타 (방법 개선)		
· ' ' '	,		

3.3. 귀 사업체는 신제품 개발, 어디에서 정보나 아이디어를			: 새로운	· 시도를 현	할 때 주로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	만) (,)
① 사업체 내부 사람들로부터 ③ 지역 내 각종 모임에서 ⑤ 박람회 및 텔레비전, 잡지 등 경기 대학, 연구소, 행정기관 등이 ⑨ 기타 (각종 매스컴	④ 서울 등 님에서	등 지역 ! ⑥ 소비.	밖의 관련 약 자로부터	넙체로부터
3.4. 귀 사업체는 최근 3년간 미 습니까?	배출액 중	얼마정도			. 투자하셨 <u>%</u>)
3.5. 다음의 사람 또는 기관의 목	활동이 귀	사업체이	∥ 어느	정도 도 움	을 주고 있
습니까?		(해당	되는 번호	호에 √표 천	해 주세요)
1) 지역 내 동일 업종 종사자					
	매우 도움된다	약간 도움된다	그저 그렇다	별로 도움안된다	전혀 도움안된다
2) 군청	1	2	3	4	(5)
	매우 도움된다	약간 도움된다	그저 그렇다	별로 도움안된다	전혀 도움안된다
3) 농협	1	2	3	4	5
	매우 도움된다	약간 도움된다	그저 그렇다	별로 도움안된다	전혀 도움안된다
4) 농업기술센터, 품질관리원	1	2	3	4	(5)
	매우 도움된다	약간 도움된다	그저 그렇다	별로 도움안된다	전혀 도움안된다

	매우 도움된다	약간 도움된다	그저 그렇다	별로 도움안된다	전혀 도움안된디
6) 중앙정부 정책	1	2	3	4	(5)
	매우 도움된다	약간 도움된다	그저 그렇다	별로 도움안된다	전혀 도움안된디
3.6. 공공기관(군청, 농협, 정부 적으로 도움이 된 것은 무	엇입니까?	?			업에 실질
	(가장	도움된 기	선 2개만) (,)
① 정책 및 시장 동향 소개, 전 ② 시설 및 운영 자금 지원 ③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 시 ④ 각종 인·허가 등에서 행정 ⑤ 홈페이지 구축, 팸플릿 제절 ⑥ 강연회 개최, 교육·훈련· ⑦ 관련자들의 조직 또는 갈등 ⑧ 생산 제품의 판매 대행 ⑨ 기타 (⑩ 도움된 것이 없다	설 설치 성 편의 제 작, 전시회 연수 기호	공 개최 등	홍보 활	동	보 제공
 3.7. 귀하는 새로운 경영정보나 활동하고 계십니까? ① 가입하지 않았다 ② 가입은 되어 있지만 모임여 ③ 가입한 상태며 가끔씩 모임 ④ 가입한 상태며 자주 모임여 	세 거의 안 님에 나간다	간다	하는 모	.임에 참여 (해서 적극)

⑤ 가입한 상태며 주요한 역할(임원 등)을 담당하여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5) 대학교수, 연구소 전문가 ① ② ③ ④ ⑤

3.7.1	위 문항 3.7에서 귀하가 활동하는 조직의	구성원은	어디에	거주하
	고 있습니까?		()
① 주:	로 지역 내 혹은 인근 지역에 거주한다			
② 같	은 도내에 거주한다			
③ 전	국 각지에 거주한다			
4 7 E	타 ()		
3.8. 귀하의	사업에 도 움을 준 지방 또는 중앙정부의 시	엄이 있었	[습니까?	
			()
① 있었다 ② 없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 또는 사업입니까?)
Ш ЖМ				
4. 응답지	인적사항			
가. 나이 :	만 세			
나. 성별 :	① 남 ② 여			
다. 학력 :	① 국졸이하 ② 중졸 ③ 고졸 ④ 대	돌이상		
라. 출신 :	① 이 지역출신 ② 이 지역출신이지만 다른 ③ 외지출신	른 지역에 설	살다가 다	시 귀향
*	②, ③인 경우, 이 지역에 이주한 마지막 연	도:	년	-
마. 거주지	:			

부록 5

경제활동 기회의 농촌지역간 차이에 관한 사례 연구 심층면접 조사표

농업 관련 경제활동에 관한 심층 조사표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농촌 정책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국책연구기관입니다. 국무총리실의 예산지원으로 농촌-도시간 소득 격차 완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일환으로 단국대학교, 전남대학교, 밀양대학교와 함께 농촌지역간 경제활동 차이에 관한 사례 연구를 진행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을 사례 지역으로 선정· 농업 관련 경제활동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조사의 결과는 향후 우리나라 농촌지역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귀중한 기초 자료로서 활용될 것입니다.

조사표에 기입하시는 사항은 연구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개인에 관한 사항은 일체 공개되지 않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단국대학교 전남대학교/밀양대학교

주 소: 연락처:

이 조사표와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박시현 (02-3299-×××) 또는 00대학교 교수 000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경제활동의 일반적 현황

1.1. (일반조사표 1.2.의 심층 조사) 주요 생산 품목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1.2. 최근 3년간의 매출액 및 종업원 변화 추이

※ 작목반의 경우 작목반 전체의 매출액을 기입

	2002년	2003년	2004년
연간 매출액			
상근직원수			

1.3. 매출액이 증가 또는 감소 할 것으로 전망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4. 새롭게 추진하려는 사업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경제활동과 지역과의 관계

2.1. (일반 2.1의 심층 조사) 이 지역에 있는 요인으로 일반조사표에 나타나지 않는 특기사항을 기술

2.2. 이 사업체의 핵심 자원은 무엇인지를 다음을 참고로 하여 기술

- ※ 지역의 locality가 사업의 핵심자원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을 보기 위한 것으로 보기를 참조하되 원료, 사람, 기술, 자연 등의 관점과 지역고유성 또는 보편성 의 관점에서 기술
 - ① 높은 기술력을 가진 지역 내 우수한 인적 자원
 - ② 지역의 특화 농산물
 - ③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전통 기술
 - ④ 지역의 (경관 등) 자연 자원
 - ⑤ 지역의 문화・역사 자원
 - ⑥ 기타 지역고유의 자원
 - ⑦ 지역성이 중요치 않는 일반 자원
 - ⑧ 지역성이 중요치 않는 인적 자원
 - ⑨ 기타 보편적인 자원

2.3. 거래 관계의 파악

※ 사업상 거래하는 업체 또는 농가를 지역 내·외로 구분하여 표기

단 계	지역구분	업체수	거래규모 (원/년)	특기사항
트이(이크 이글 코디/디닝)	지역내			
투입(원료·인력조달)단계	지역밖			
게 프 새 샤다나게	지역내			
제품생산단계	지역밖			
판매단계	지역내			
선메인계	지역밖			
기타	지역내		_	
(금융,수출,기술개발등)	지역밖			

2.4. (후방 관련 산업) 투입재(원료 및 부자재)의 조달 방법을 보다 자세히 표기

- ※ 원료 조달 과정에서 지역 내에서 특수한 거래 관계가 형성되며 더 나아가서 관련 산업이 집적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함.
- ※ 거래 방법은 하청업체에 대한 주문, 계약 재배, 회원 농가 거래 등과 같은 특수 거래인지, 일반 시장에서 구매하는 것인지 등을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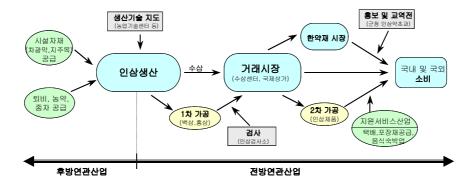
	투입재	조달지역 (지역내/외)	거래방법	비고
1				
2				
3				
4				
5				

2.5. (일반조사표 2.4의 심층 조사)생산된 제품의 처리(판매)경로를 구체적으로 기입

- ※ 생산된 제품이 지역 내에서 원료로서 사용되어 부가가치를 높이는지 아니면 낮은 가공단계로 지역 밖으로 이출되어 버리는지, 판매 방법에서도 직거래 등을 통하여 유통마진을 지역 내에 창출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함.
- ※ 일반 조사표 2.4의 보기를 참고 하되 보다 자세하게 기술하여 판매단계에서의 부가가치 창출 노력 및 관련 산업의 지역 내 집적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함.

2.6. 앞의 거래 관계에 기초하되 다음 그림을 참고하여 전후방 산업연관관계 를 그림으로 표시

<참고> 금산군 인삼 관련 산업의 집적



전후방 산업연관	관계

2.7. 사업체의 부가가치 및 지역 내 귀속분 계산

구 분	총액	지역내	지역외	비고
① 총 매출액(판매액)				
② 중간 원료비				
③ 제반 경비				
부가가치액(①-② - ③)				
- 인건비				
- 경영이윤				
- 기 타				

2.8. 사업 이익금(표에서 경영이윤)의 주 사용처

※ 경영이윤을 주로 어디에 사용되며 어느 지역(지역내 지역 밖)에 귀속되는가?

2.9.	재	투	ス	시	홪

- 1) 사업을 하면서 재투자를 하고 있는가?
- 2) 재투자를 한다면 어디에(지역내 지역 밖) 투자하는가? 그리고 그 이유는?

3) 그 재원은? (경영이윤, 정책자금 또는 금융기관 대출금, 기타 자금)

2.10. (일반조사표 2.5의 심층 조사)지역내 동일 업종 종사자 또는 관련자(거래 사업체) 등과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술

2.11. 지역 내 공동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이 있다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술

3. 혁신 활동

3.1. 최근 3년간 연구 개발 활동(일반조사표 3.2의 심층조사) **실적**

연구개발활동	내용	총회수 (3년간)	1회 참석자수 및 범위	사업에의 도움정도	기타 (지속여부등)
1) 자발적인 연구 모임 개최					
2) 공공(군청, 기술센터, 농협) 이 주체하는 연구 모임 참석					
3) 자발적으로 외부 전문가 초빙					
4) 전문가에 연구용역 의뢰					
5) 자발적인 시장조사					
6) 외부 연구 모임 참여					

※ 조사표 작성요령

- 가. 내용은 예를 들면 토양개선, 홈페이지 관리 같이 구체적인 사항을 열거
- 나. 총횟수는 3년간 횟수를 기록하되 최근의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함. 예를 들면 3년 전에는 열심히 하였는데 지금은 하지 않고 있을 경우 그 상황과 이유 등을 기타란에 기입
- 다. 1회 참석자수는 평균 개념으로 계산, 참여 범위는 해당 작목반원, 연합작 목반원, 기타 관련자 등으로 표시
- 라. 사업에의 도움 정도는 각 모임별로 차이가 날 수 있도록 ①많은 도움이 된다 ②약간 도움이 된다 ③그저 그렇다 ④도움이 안 되는 편이다 ⑤전혀 도움이 안 된다로 표시

3.2. 현재 활동하고 있는 모임(단체)을 모두 기입

	모임명	지역내외 구분	회원 수 및 구성원	모임횟수 (회/년)	참가빈도 (회/년)
1					
2					
3					
4					
5					
6					

3.3. 이상의 모임 중 사업에 가장 도움이 되는 모임 활동과 그 이유?

1) 모임 활동

2) 그 이유

3.4. (일반 조사표 3.4의 심층 조사) 관련 기관의 혁신 활동

※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의 고용 창출, 그리고 민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내 관련 기관이 잘하고 있는 것과 잘못하고 있는 것을 기술

관련 기관	잘하고 있는 점	못하고 있는 점
군청		
군의회		
농협		
농업기술센터		
기타 공공기관		
지역 내 단체		
동일 업종 종사자(농민)		

4. 응답자 인적사항

※ 일반 조사표에 기입

참고 문 헌

- 구재운. 1996. "금융과 성장: 지역간 연구." 「지역연구」. 제12권. 제1호. pp. 115-126.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편. 「세계의 지역혁신체계」. 서울: 한울아카데미.
- 김명수. 1997. "인적자본형성과 지역경제성장."「지역연구』. 제13권. 제1호. pp. 15-25.
- 김상호. 1997. "사회간접자본의 생산효과, 현황 및 문제점." 「한국지역개발 학회지」. 제9권. 제1호. pp. 39-53.
- 김상호, 이영훈, 구재운. 1997. "사회간접자본과 제조업 생산의 효율성."「계량경제학보』 제8권. pp. 1-25.
- 김성태, 정초시, 노근호. 1991. 한국지역경제력 격차. 「경제학연구』. vol. 39. no. 2. pp. 363-89.
- 김영용, 박진석. 1996. 「한국의 경제성장과 지역소득격차」. 「한국지역개발학회지」 8(2).
- 김용웅. 1999. 「지역개발론」. 서울: 법문사.
- 김정호, 이병훈. 2005. 「농업총조사 통계에 의한 지역농업의 역량분석』. 한 국농촌경제연구원.
- 김현호. 2002. "정보기술산업의 장소특성적 입지에 관한 연구: 서울시를 사례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형국. 1996. '국토개발의 이론연구.. 서울: 박영사
- 김형국. 2002. '고장의 문화판촉: 세계화시대에 지방이 살길.. 학고재.
- 다카노 도시후미. 2002. "일본 가나자와사의 지방발전연구와 그 한국적 함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경. 2002. 「일본 농산촌지역의 내생적 발전.. 「농정연구.. 통권 제2호. 농 정연구포럼.

- 박경 등. 2000. "지역혁신 능력과 지역혁신체계." 『공간과 사회』. 제13호. 서울: 한울. pp.12-45.
- 박광재. 1997. 「교육투자가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서울 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상우. 1986. "집적이익의 특성과 관련 국토개발 문제점의 인식." 「국토계획.. 제21권. 제3호. pp. 21-33.
- 박시현 등. 2003. 「우리나라 농촌관광 발전 방향 및 방안」. 한국농촌경제연 구원.
- 박진도, 박경. 2000. 「일본의 내발적 지역개발에 관한 연구: 농산촌 지역의 내발적 발전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사회경제평론」 제14호. 한국 사회경제학회. 한울.
-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진홍공단. 2003. 「농공단지 현황』.
- ______ 2004. 「농공단지 현황」.
- 성주인, 송미령. 2003. "지역유형구분과 농촌지역의 유형별 특성." 「농촌경제』. 제26권 제2호.
- 이동필 등. 2004. 「도농간 소득 및 발전 격차의 실태와 원인 분석 . 한국농 촌경제연구원.
- 이성우. 2001. "지역특성이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 계속이동과 회귀이동."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3권 3호. pp. 19-44.
- 이철우. 2001. 「신산업환경과 지역혁신시스템.. 영남대학교 지역발전연구소 「영남지역발전연구」. 27권. pp. 205-216.
- 장육. 2000. "생산적 실업대책 형성에서 민관 파트너십의 역할에 관한 연구: '경제살리기수원시민협의회'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 학원 석사학위 논문.
- 중앙고용정보원. 2000. 「고용보험데이터베이스 원자료」.
 _____. 2001. 「고용보험데이터베이스 원자료」.
 _____. 2002. 「고용보험데이터베이스 원자료」.
 _____. 2003. 「고용보험데이터베이스 원자료」.

. 2004. 「고용보험데이터베이스 원자료」. 지경배. 2003. 「내발적 발전론에 의한 지역정책의 전개를 위한 소고: 일본의 이론과 정책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7권 제 3호. 한국정책과학학회. 통계청. 1985. 「인구주택 총조사」. ____. 1995. 「주민등록인구통계」. . 2003. 「주민등록인구통계」. ___. 1999. 「시·군·구 주요 통계』. . 2000.「시・군・구 주요 통계』. ___. 2001.「시・군・구 주요 통계』. _____. 2002. 「시・군・구 주요 통계』. . 2002. 「시・군・구 100대 지표」 . 2003. 「시・군・구 주요 통계」. 함안군 지역경제과. 2005. 함안군 지역경제 현황자료. 홍성웅. 1986. "공간적 집적과 형평." 「국토연구」. 제5권. pp. 1-18. 宮本憲一. 1989. 「環境經濟學」. 岩波書店.(同韓譯. 1994. 「환경경제학」. 주민 자치사). . 横田茂. 中村剛治郎 編. 1990. 「地域經濟學」. 有斐閣. 宮本憲一 等. 1998.「地域經營と內發的發展」. 農産漁村文化協會.

鶴見和子,川田侃. 1989. 「內發的發展論」. 東京大學出版會.

鶴見和子. 1996. 「內發的發展論の展開」. 築摩書房.

保姆武彦. 1996. 「內發的發展論と日本の農山村」. 岩波書店.

佐々木雅辛. 1994.「都市と農村の内發的發展」.自治体研究社.

清成忠男. 1978. "內發的地域開發を考える."「地域開發』1978.7月号

總合研究開發機構. 1990. 「NIRA研究叢書- 内發的産業形成に關する調査研究 - 地域産業おこしの理念とプロセス」.

Amin, A. 1993. "The regional development potential of inward investment in the less favoured regions of the European Community." Paper

-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n Cohestion and Conflict in the Single Market. Newcastle upon Tyne.
- Amin, A. 1998. "An institutionalist perspective on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Paper presented for OECD conference on regional development.
- Brunori and Rossi. 2000. "Synergy and Coherence through Collective Action: Some Insights from Wine Routes in Tuscany." Sociologia Ruralis. Vol. 40, No. 4, pp.409-423.
- Amos, O. M. and J. R. Wingender. 1993. "A Model of the Interaction between Regional Financial Markets and Regional Growth."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23. pp. 85-110.
- Becattini, G. 1987. "Il distretto industriale marshalliano: cronaca di un ritrovamento." Mercatoeforze locali. Il Mulino.
- Bencivenga, V. R. and B. D. Smith. 1991. "Financial Intermediation and Endogenous Growth." Review of Economic Studies. pp.195-209.
- Benhabib, J. and M. M. Spiegel. 1994. "The role of human capital in economic development: Evidence from aggregate cross-country data."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vol. 34. pp. 143-173.
- Brunori and Rossi. 2000. "Synergy and Coherence through Collective Action: Some Insights from Wine Routes in Tuscany." Sociologia Ruralis. Vol. 40, No. 4, pp.409-423.
- Camagni, P. 1995. "Global networks and local milieux: towards a theory of economic space." in Conti, S., E. Malecki and P. Oinas (eds.), The industrial enterprise and its environment: Spatial perspective, Aldershot:Avebury.
- Capello, R. 1996. "Industrial enterprises and economic space: the network paradigm." European Planning Studies 4(4), pp. 485-498.
- Carlino, Gerald A. and Edwin S. Mills. 1987. "The Determinants of County

- Growth." Journal of Regional Science, Vol. 27 No. 1, Feb., pp. 39-54.
- Costa, J. da Silva, Richard W. Ellson and Randolph C. Martin. 1987. "Public Capital Regional Output, and Development: Some Empirical Evidence." Journal of Regional Science, vol. 27, pp. 419-437.
- Davis, Stenven J. and John Haltiwanger, 1999. "Gross Job Flows." in Ashenfelter, O. and D. Card (eds.), Handbook of Labor Economics, Vol. 3, Amsterdam: Elsevier Science B. V., pp.2711-2805.
- Dequist, C. 1997. Systems of Innovation, Printer Publishers, London.
- Eberts, R. 1990. "Public Infrastructure and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Economic Review, Federal Reserve Bank of Cleveland. Quarter 1, pp. 15-27.
- Edmiston, Kelly D. 2004. "The Net Effects of Large Plant Locations and Expansions on County Employment." Journal of Regional Science, Vol. 44 No. 2, May, pp. 289-319.
- Edquist. 1997. Systems of Innovation. London: Printer Publishers.
- Eisner, Robert. 1991. "Infrastructure and Regional Economic Performance," New England Economic Review. Federal Reserve Bank of Boston, pp. 47-58.
- Esposti, R. and F. Sotte. 2002. "Institutional Structure, Industrialization and Rural Development: An Evolutionary Interpretation of the Italian Experience." Growth and Change 33(1). pp.3-41.
- Friedmann and Douglass. 1978.
- Garcia-Mila, T. and T. McGuire. 1992. "The Contribution of Publicly Provided Inputs to States' Economies."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vol. 22. No. 2.
- Garofoli, G. 1992. "Diffuse industrialisation and small firms: the Italian pattern in the 1970s." in G. Garolofoli(ed.). Endogenous

- Development and Southern Europe. Avebury. pp.83-102.
- Goldsmith, R. 1969. Financial Structure and Development, New He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Costa, J. da Silva, Richard W. Ellson and Randolph C. Martin. 1987. "Public Capital Regional Output, and Development: Some Empirical Evidence," Journal of Regional Science, vol. 27, pp. 419-437.
- Greenwood, J. and B. Jovanovic. 1990. "Financial Development, Growth, and the Distribution of Incom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pp.1076-1107.
- Hirschman, A. O. 1958. The Strategy of Economic Development. New Heaven. Yale University Press.
- Iacoponi, L., G. Brunori and M. Rovai, 1995. "Endogenous development and the agroindustrial district, in J.D. van der Ploeg and G. van Dijk (eds.), Beyond modernization: The impact of endogenous rural development, Assen:Van Gorcum.
- Koo, J. and Kim, S. 1999. "Finance, Production Efficiency, and Growth: Evidence from the Korean Manufacturing Industries." Seoul Journal of Economics, vol. 12, pp. 127-141.
- Kim, S., J. Koo and Y. H. Lee. 1999. "Infrastructure and Production Efficiency: An Analysis on the Korean Manufacturing Industry." Contemporary Economic Policy, vol. 17, pp. 390-400.
- Knapp, T. A. and N. E. White. 1992. "Migration Decision and Site-Specific Attributes of Public Policy: Microeconomic Evidence from the NLSY." Review of Regional Studies, vol. 22, pp. 169-184.
- Lowe, P., J. Murdoch and N. Ward. 1995. Networks in rural development beyond exogenous and endogenous models, in J.D. van der Ploeg and G. van Dijk (eds.), Beyond modernisation: The impact of endogenous rural development. Assen: Van Gorcum.

- Lucas, R. E. 1988. "On the Mechanism of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vol. 22, pp.3-42.
- Lundvall, B. 1992. National Systems of Innovation towards a Theory of Innovation and Interactive Learning, Francis Printer.
- Mankiw, N. G. et al. 1992. "A Contribution to the Empirics of Economic Growth."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07, pp.407-437.
- Morgan, K. and C. Nauwelaers. 2003. A Regional Perspective on Innovation: From Theory to Strategy. in K. Morgan and C. Nauwelaers (eds.). Regional Innovation Strategy: The Challenge for Less-Favoured Region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pp,1-18.
- Munnell, A. H. 1990. "How Does Public Infrastructure Affect Regional Economic Performance?" New England Economic Review, pp. 11-32.
- OECD. 2000.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Outlook.
- OECD. 1999 Cultivating rural amenities: an economic development by OECD. 김정섭 오현석 역. 「어메니티와 지역개발』. 새물결.
- Pezzini, M. 2003. Cultivating Regional Development: Main Trends and Policy Challenges in OECD Regions. 김선배 등(역). 2004. 「OECD 국가의 지역발전정책 동향과 사례.. 산업연구원.
- Picchi, A. 1994. The relations between central and local powers as context for endogenous development, in J.D. van der Ploeg and A. Long (eds.), Born from within: Practice and perspectives of endogenous rural development, Assen:Van Gorcum.
- Ray, Christopher. 2000. "The EU LEADER Programme: Rural Development Laboratory." Socialogia Ruralis 40(2), pp.163-171.
- Romer, Paul M. 1986. Increasing returns and long run growt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4. pp. 1002-1037.
- Romer, Paul M. 1990. Endogenous technological chang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8, pp. 71-102

- Saraceno, E. 1994. "Alternative readings of spatial differentiation: The rural versus the local economy approach in Italy." European Review of Agricultural Economics. pp. 451-474.
- Salai-i-Martin, X. X. 1997. I have just run two million regressions. American Economic Review 87, pp. 178-183.
- Slee, B. 1994. Theoretical aspects of the study of endogenous development,in J.D. van der Ploeg and A. Long (eds.), Born from within: Practice and perspectives of endogenous rural development, Assen: Van Gorcum.
- Solow, Robert M. 1957 Technical change and the aggregate production function.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39, pp. 312-320.
- Schumpeter, J. A. 1911.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Terluin, Ida J. and Post, Jaap H. 1999. Employment in leading and lagging rural regions of the EU: summary report of the RUREMPRO project.

 Agricultural Economics Research Institute(LEI).
- Terluin, Ida J. et al.(eds.). 1999. Comparative analysis of employment dynamics in leading and lagging rural regions of the EU, 1980-1997. Agricultural Economics Research Institute(LEI).
- Terluin, Ida J. et al.(eds.). 2003. "Differences in economic development in rural regions of advanced countries: an overview and critical analysis of theories." Journal of Rural Studies 19. pp. 327-344.

박시현

shpark@krei.re.kr

전남대학교 경제학과, 교토대학교 경제학 박사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 지역개발분야 전문위원 규제개혁위원회 농림해양분과위원

주요 연구실적 및 저서

「우리나라 농촌관광 발전 방향 및 방안』(2003) 「농촌지역종합개발사업의 추진 방향과 사업화 방안』(2004)

성주인

jiseong@krei.re.kr

서울대학교 조경학과, 서울대학교 도시계획학 석사

주요 연구실적 및 저서

「국토계획체계 변화에 따른 농촌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2003) 「주민참여형 마을개발사업의 평가와 모형 정립 (2004)

신은정

ejshin@krei.re.kr

경북대학교 환경공학과, 서울대학교 도시계획학 석사

주요 연구실적 및 저서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도농간 소득격차 완화방안」(2004) "전문가와 지역민간 상호담론적 이해를 위한 지역적 지식의 발견". 「교보환경논문집」(2004)

이승렬

yeesy@kli.re.kr

연세대학교 경제학 박사,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일본 도쿄대학 일본경제국제공동연구센터 연구원

주요 연구실적 및 저서

「산재근로자의 노동이동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5) "요양종결 이후 산재근로자의 취업기간 분석" 「노동경제론집 27(3) (한국노동경제학회 2004)

김상호

shkim@honam.ac.kr

Michigan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호남대학교 경상대학 부교수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자문교수, 광주광역시 발전전략 연구단 연구 위원

주요 연구실적 및 저서

"Identifying and Estimating Sources of Technical Inefficiency in Korean Manufacturing Industries,", *Contemporary Economic Policy* 21(1) (2003)

허숭욱

swheo@dankook.ac.kr

단국대학교 박사,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조교수 한국유기농업학회 이사, 충남 농업기술원 겸임연구관

주요 연구실적 및 저서

「친환경농산물 지불의사금액 분석과 그린마케팅 전략 (2004)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만족도 및 추가비용규모 추정 (2005)

나주몽

najumong@chonnam.ac.kr

Kyushu University (Ph. D.)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지역개발전공 전임강사 한국지역개발학회 총무이사, 화순군 도시계획위원

주요 연구실적 및 저서

「클러스터 전략」(2005)

「지역혁신조사데이터를 이용한 지역혁신활동의 특성과 공간적 패턴」 (2008)

이한성

lhs@mnu.ac.kr

오클라호마주립대학교 농업경제학 박사 밀양대학교 산업경제학과 부교수, 밀양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장

주요 연구실적 및 저서

- "지방박물관 건립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한국지역개발학회지』
- 14(2) "Analysis of Japanese Consumers' Purchasing Behavior and Preference by Origin of Bell Pepper." 「농업경제연구』43(4)

연구보고 R499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도농간 소득격차 완화방안 ② 경제활동기회의 농촌지역간 차이 분석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05. 12.

발 행 2005. 12.

발행인 최정섭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전화 02-3299-4000 팩시밀리 02-959-6110

http://www.krei.re.kr

인쇄처 태광인쇄

전화 02-468-9430 http://www.tprint@hanmail.net

ISBN 89-89225-93-0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